연구보고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책임연구원 김지경
공동연구원 변금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책임연구원_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변금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연구보조원_ 이민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청년기본법」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법률 제정 이후 청년정책이 제정 법률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이제까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온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을 체감도 높게 지지하는 사회정책으로서 안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청년기본법」제정 이후 수립되는 청년정책이 이제까지 개별 법률 하에서 제 각각 전개되고 추진되어온 기존의 청년정책의 한계를 넘어, 청년이라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들의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부터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러한 인식은 지난 십여 년 간 청년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정책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얻은 성과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의 청년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방향 도출의 필요성까지 이어졌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그러한 청년정책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틀에 기반하여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연구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과 청년정책을 연계하는 문헌고찰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실증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지난 십여 년 간 청년 이슈가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과정에 참여하였던

이들 14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제까지의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현행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당사자 평가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어 다음 단계에서는 현재 청년정책거버넌스 참여자 39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델파이 조사를 통해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방향과 앞으로의 청년정책의 수립 방향을 도출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해 그 간 청년이슈가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세 가지의 성과(①문제제기 이슈의 정책 제도화, ②청년정책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 ③청년정책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발굴)와 네 가지의 한계(①정책 방향 설정의 한계와 청년에 대한 몰이해, ②청년활동가의 소진과 정책도구화, ③청년 세대 내 격차와 배제의 문제 표면화, ④'다음'이 그려지지 않는 내용의 정책 추진)가 발견되었다. 면접조사의 한계로 밝혀진 사항들은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평가인 설문조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 근거들로 확보되었다.

예컨대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도움정도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정책인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정책인지의 수준은 대졸이상의 청년여성, 그리고 청년정책거버넌스에 참여 유경험자들이 높으며, 특히 청년정책거버넌스 참여 여부는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책 또는 수혜율이 낮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큰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제적 계층에 따른 청년집단 내 다층의 분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낮은 청년들은 학자금지원이나 신용회복, 그리고 고용안전망 정책에 대한 욕구가 높고 수혜율도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 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나 역량개발 정책에 대한 정책욕구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청년들이 다층의 다분화된 상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책은 ①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②주거지원, ③일터에서의 안전 보장과 같은, 일명 '생활안전

망'이라는 범주로 묶어 낼 수 있는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청년세대가 인지하는 '일터에서의 안전'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산업재해로부터의 안전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의 갑질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조직·문화적인 측면을 포괄한다는 점이다.

이어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점 파악과 더불어 향후 청년정책의 추진방향을 도출하고자 실시했던 총 3단계의 정책델파이에서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청년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이른바 '격차(disparity)'이며,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체로서의 청년'이라는 점이 도출되었다. 아울러 이후 추진되는 청년정책은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으로 추진되고 안착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청년정책 추진의 개선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개입의 점을 발견하고, 그에 기초하여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년 정책의 목표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 및 미래사회정책으로의 안착"이며, 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네 가지 정책추진 방향은 ①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 ②청년세대의 기본적인 삶을 지지하는 보편정책, ③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정책, ④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시민 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네 가지 전략 목표(①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 재정립 및 재구조화, ②이행기 청년세대 특성과 욕구기반의 정책 보편성 강화, ③세대 내 다양한 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통합 강화, ④민주시민 정책으로서 당사자 참여 주도성 강화) 하에 총 12개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 포용국가, 사회정책, 청년정책, 청년기본법,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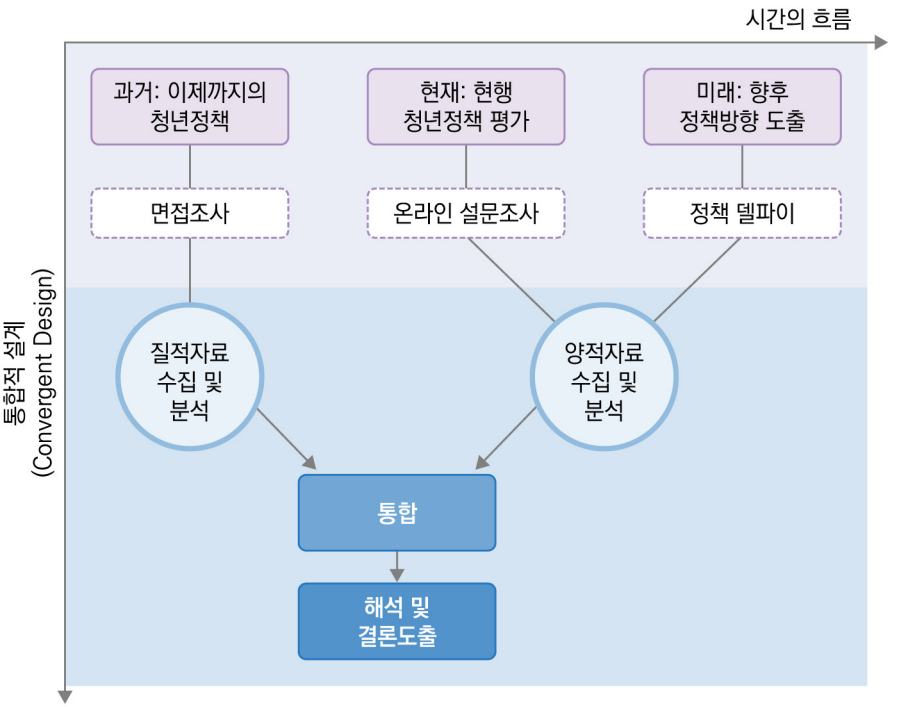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청년기본법」제정 이후, 제정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될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을 체감도 높게 지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음.
-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 비전으로 제시된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관점에서 청년정책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 중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이제까지 청년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 현행 정책지원에 대한 당사자 의견 분석, 그리고「청년기본법」제정 이후 추진되어야 할 청년정책의 방향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2.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하나로 청년정책이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 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음.
- 기본적으로 통합적 연구 설계(convergent research design)를 바탕으로, 연구의 내용은 '시간의 흐름' 개념을 활용한 횡축에, 연구 방법은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를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ology)'을 활용한 종축에 배열되었음.



- 각 단계별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의 기본 토대가 되는 문헌고찰과 정책자료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지난 십여 년 간 청년문제가 이슈화되고 정책화되는 과정에 참여했던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 14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그 간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가 분석되었음.
- 보다 구체적인 청년정책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19세~34세 7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인식 및 평가 수준이 조사·분석되었고,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정책의 추진 방향 도출을 위하여 청년정책 거버넌스 현재 참여자 40여명 대상으로 3단계 정책델파이가 실시되었음.
- 이외, 각 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정책 밀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가 이루어졌음.

3. 주요 결과

1) 단계별 주요 실증 결과

● 그 간의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면접조사

[성과] 1 문제제기 이슈의 정책 제도화

2 조례제정을 통한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빠른 확산

3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발굴

[한계] 1 정책 방향설정의 한계와 청년에 대한 몰이해

- '청년=약자' 프레임의 한계와 청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 다층화된 청년집단에 대한 이해와 분석 부족
- 정책추진 주체의 청년집단에 대한 이해 부족

2 청년활동가의 소진과 정책도구화

- 소진되는 청년활동가: 문제의 대상에서 해결의 주체로
- 이해관계에 따른 대표성 문제제기
- 정책주도의 불평등: 당사자 참여 정책과정의 도구화

3 청년 세대 내 격차와 배제의 문제 표면화

- 청년당사자 집단의 약한 동력과 분화된 욕구
- 청년활동가와 일반 청년 간 정책욕구 격차
-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배제된 청년층 포착

4 '다음'이 그려지지 않는 내용의 정책 추진

- '구조'보다는 '사업' : 장기플랜이 부재한 중앙정부 정책
- 자치단체장 주도 빠른 복제, 구색만 갖추려는 지방정부 정책

● 현행 12개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인식 및 평가: 온라인 설문조사

[1. 청년정책 인지 및 수혜 경험 분석 결과]

1 학자금지원, 구직 및 창업지원을 제외하고 청년당사자의 정책인지도 및 수혜경험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

2 대졸이상, 여성, 거버넌스 참여자의 정책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졸미만 비정규직 청년의 정책인지 수준이 낮음.

3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낮게 인식하는 청년들은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관련된 학자금, 신용회복, 고용안전망 인지 수준이 높고, 경제적 여건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청년들은 다양한 활동, 역량개발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 인지 수준이 높음.

⇓ ⇓

- 청년 세대 내 성별, 교육수준, 정규직여부, 경제적 여건 인식 수준,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른 정책인지 및 수혜경험 격차 확인
- 경제적 계층에 따른 관심 갖는 정책 영역의 인지 및 욕구 분화 확인

[2. 현행 청년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정도 분석 결과]

1 일상생활의 안정 및 안전과 관련된 정책(학자금, 주거, 건강, 일터 안전)에 대한 중요도와 도움정도 높게 인식

2 현재 상태에 따라 중요도와 도움정도 다르게 평가

- 재학생: 일터안전
- 미취업자: 건강지원, 구직 및 창업지원
- 취업자: 주거지원,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3 정책 인지도와 수혜율은 낮으나, 중요도와 도움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정책: 주거지원, 건강지원, 일터안전 정책

4 경제적 여건 수준에 따라 중요도와 도움정도 다르게 평가

5 정책인지 및 수혜경험이 정책 중요도 및 도움정도의 결정 요인

⇓ ⇓

- 청년의 정책 욕구가 과거 취업기회 및 고용안전망에서 그 외 삶의 영역, 특히 주거, 건강, 일터 안전 등으로 확장되었음을 확인
-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는 '인지→수혜→중요도 및 도움정도 평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같은 결과는 청년거버넌스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응답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기제가 될 수 있음.

[3. 현 시점 정책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1 생활안전망 관련 정책의 중요도 수준이 가장 높음.

2 포용국가 사회정책 3대 비전 중 '사회적 지속가능성', 9개 전략 중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가장 시급

3 남성과 대졸이상 청년은 '소득보장제도 개혁', 여성과 고졸이하 청년은 '고용안전망'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

-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우리사회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지만, 청년 특성에 따라 우선 추진 정책 선호의 차이를 보임.

● 청년정책 개선 방향 및 개선의 우선순위: 정책델파이

[현행 청년정책 개선 방향 및 개선의 우선순위]

1 현 시점 청년정책 설계에 있어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환경 여건은 '자산 격차 등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와 '지역 간 격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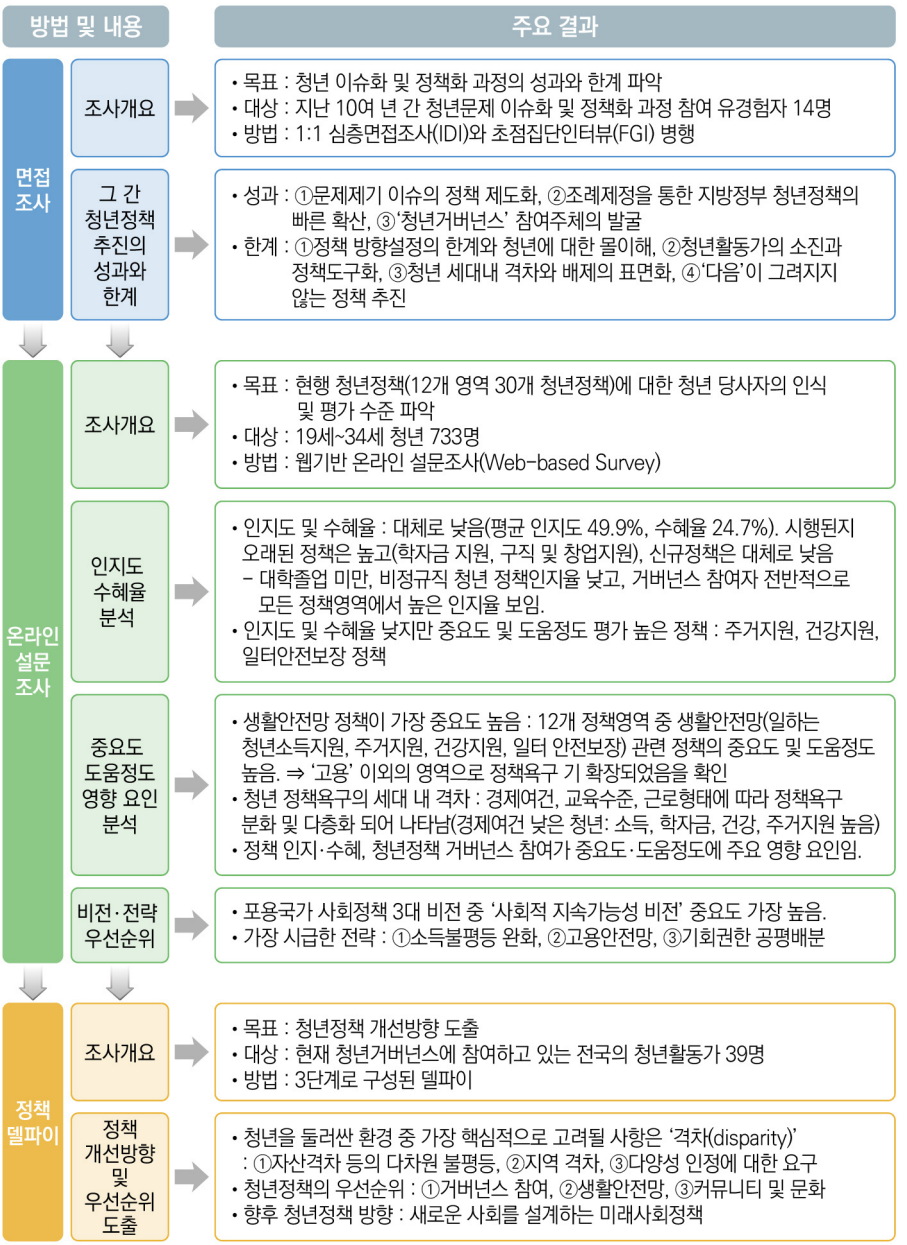
2 현 시점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청년거버넌스 참여와 생활안전망의 강화

3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며,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되지 않고, 당사자 체감도가 낮다는 것에서 기인함.

4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정책은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함.

⇓ ⇓

- 다양한 측면에서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산업이나 인구구조를 토대로 설계된 청년정책은 현 상황을 극복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됨.
-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당사자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균형감 있는 정책 설계가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과제임.
- 청년정책이 일자리정책이나 복지정책 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이 아닌,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으로 안착되어야 함.


방법 및 내용
주요 결과
면접 조사
조사개요
• 목표 : 청년 이슈화 및 정책화 과정의 성과와 한계 파악
• 대상 : 지난 10여 년 간 청년문제 이슈화 및 정책화 과정 참여 유경험자 14명
• 방법 : 1:1 심층면접조사(IDI)와 초점집단인터뷰(FGI) 병행
그 간 청년정책 추진의 성과와 한계
• 성과 : ①문제제기 이슈의 정책 제도화, ②조례제정을 통한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빠른 확산, ③'청년거버넌스' 참여주체의 발굴
• 한계 : ①정책 방향설정의 한계와 청년에 대한 몰이해, ②청년활동가의 소진과 정책도구화, ③청년 세대내 격차와 배제의 표면화, ④'다음'이 그려지지 않는 정책 추진
온라인 설문 조사
조사개요
• 목표 : 현행 청년정책(12개 영역 30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인식 및 평가 수준 파악
• 대상 : 19세~34세 청년 733명
• 방법 : 웹기반 온라인 설문조사(Web-based Survey)
인지도 수혜율 분석
• 인지도 및 수혜율 : 대체로 낮음(평균 인지도 49.9%, 수혜율 24.7%). 시행된지 오래된 정책은 높고(학자금 지원, 구직 및 창업지원), 신규정책은 대체로 낮음
– 대학졸업 미만, 비정규직 청년 정책인지율 낮고, 거버넌스 참여자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영역에서 높은 인지율 보임.
• 인지도 및 수혜율 낮지만 중요도 및 도움정도 평가 높은 정책 : 주거지원, 건강지원, 일터안전보장 정책
중요도 도움정도 영향 요인 분석
• 생활안전망 정책이 가장 중요도 높음 : 12개 정책영역 중 생활안전망(일하는 청년소득지원, 주거지원, 건강지원, 일터 안전보장) 관련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정도 높음. ⇒ '고용' 이외의 영역으로 정책욕구 기 확장되었음을 확인
• 청년 정책욕구의 세대 내 격차 : 경제여건, 교육수준, 근로형태에 따라 정책욕구 분화 및 다층화 되어 나타남(경제여건 낮은 청년: 소득, 학자금, 건강, 주거지원 높음)
• 정책 인지·수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가 중요도·도움정도에 주요 영향 요인임.
비전·전략 우선순위
• 포용국가 사회정책 3대 비전 중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중요도 가장 높음.
• 가장 시급한 전략 : ①소득불평등 완화, ②고용안전망, ③기회권한 공평배분
정책 델파이
조사개요
• 목표 : 청년정책 개선방향 도출
• 대상 : 현재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청년활동가 39명
• 방법 : 3단계로 구성된 델파이
정책 개선방향 및 우선순위 도출
• 청년을 둘러싼 환경 중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격차(disparity)'
: ①자산격차 등의 다차원 불평등, ②지역 격차, ③다양성 인정에 대한 요구
• 청년정책의 우선순위 : ①거버넌스 참여, ②생활안전망, ③커뮤니티 및 문화
• 향후 청년정책 방향 :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

2) 주요 실증결과 및 정책 개선 방향의 도출

● 본 연구는 단계별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 사항을 총 여덟 가지로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음.

(1) 청년정책의 개념 부재 : 청년정책 체계화

주요 결과	• 사회구조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청년 세대 내 격차 확대 • 수직적 다층화 수평적 분화된 청년집단의 정책 욕구 대응의 한계 • 청년정책의 합의된 개념의 부재 및 취약한 체계성

정책 ⇓ 개선

개선 방향	• 포용적 사회정책의 핵심대상으로서 청년 및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 수직적 다층화, 수평적 다분화 청년에 대한 이해수준 향상

● 청년정책의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간 정책이 추진되었던 탓에,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이 추진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이 본 연구의 제3장 면접조사 및 제5장 정책델파이조사에서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청년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구조적 사회 환경을 고려하고, 청년이 직면한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청년정책의 개념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정책 체계화하는 작업이 요구됨.

(2) 정책 배제된 청년집단: 고졸이하, 비정규직 청년 정책 포용성 강화

주요 결과	• 청년정책에서 배제된 집단 존재 • 세대 내 상당한 정책인지 및 수혜율 격차 확대 가능성 큼 • 욕구수준은 높으나, 실제 정책지원 수혜율은 낮은 정책(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신용회복지원)들 발견

정책 ⇓ 개선

개선 방향	• 고졸이하, 비정규직 청년 정책정보 접근성 및 리터러시 함양 지원 • 수요와 욕구에 기반 정책 수립 강화

● 오랫동안 사회정책에서 배제되어온 청년, 특히 고졸이하 청년과 비정규직 취업 청년들이 청년지원 정책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음이 본 연구의 제2장 면접조사와 제4장 청년정책 당사지 평가 및 인식 조사·분석을 통해 확인됨.

● 이들 취약 청년들은 정보 접근성 제약과 더불어 정책 리터러시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됨.

(3) 청년정책의 지역 격차 : 지역균형을 고려한 청년정책 추진

주요 결과	•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방향성 부재와 지방자치단체장 주도에 따른 청년정책의 빠른 확대로 인한 지역 격차 발생 •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과 청년당사자 집단 동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상당한 격차가 기 발생되어 확대되고 있음.

정책 ⇓ 개선

개선 방향	• 중앙정부의 지역 격차 완화 정책 개입 필요 • 지역의 여건과 상황 고려 및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될 시행계획 평가와 연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

● 본 연구의 제2장 면접조사와 제5장 정책델파이 조사에서 청년정책의 지역 격차가 이미 상당 수준임이 확인되었음.

● 그 간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던 과정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도 중앙정부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없이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옴에 따라 지역 여건과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주도하에 지역 청년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 내 기반과 동력 차이로 인한 격차도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중장기 청년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함에 있어서 지역 여건과 상황, 그리고 정책추진의 역량을 고려해야 하며, 향후 추진될 시행계획평가와 연계한 지원이 요구됨.

(4) 생활안전망에 대한 높은 욕구 : 청년 생활안정보장 강화

주요 결과	• 청년들이 인식하는 생활안전망의 범위는 기존의 일 또는 소득과 같은 측면이 중심이 된 사회안전망의 개념 범위를 초과하여 일터안전과 같은 일상생활 전반의 안전을 포괄하는 범위로 이미 확장되었음. • 생활안전망과 관련된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이나 주거지원, 건강지원, 일터안전 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도움정도 인식 수준이 높음.

정책 ⇓ 개선

개선 방향	• 시대변화를 고려한 청년대상 사회안전망 정책을 '생활안전망' 정책으로 대응해야 함. • 일터에서의 갑질 문화나 위계에 의한 부당행위 등 생활환경 여건 조성에 대한 정책도 청년정책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져야 함.

● 기존의 '사회안전망'과는 다소 개념 범주에서 차이가 있는 '생활안전망'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대한 지원 욕구가 본 연구의 실증연구 제3장부터 제5장까지 전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분석되어 나타남.

● 본 연구의 제3장 면접조사에서는 과거세대와 달리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은 다양한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제4장 '청년정책 당사자 평가 및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주거지원, 건강지원 그리고 일터안전보장 정책에 대한 인지율 및 수혜율은 낮지만, 중요도와 도움정도가 청년전체 집단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고, 제5장의 정책델파이 조사에서도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으로 응답되었음.

● 이에 따라 청년을 위한 생활안전망은 경제적 사회보장을 넘어, 다양한 삶의 안정성을 포괄하는 생활보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수립될 청년정책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이 핵심 사항으로 반영되어야 함.

(5) 청년 정책욕구의 다층적 분화와 계층화 : 다양한 층위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주요 결과	• 청년 특성에 따라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름. • 재학생은 일터안전보장정책, 미취업자는 건강지원과 구직 및 창업지원, 취업자는 주거지원과 일하는 청년소득지원에 대한 욕구 수준이 높음. • 경제적 여건 수준이 낮은 청년들은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학자금, 소득, 주거, 신용회복, 일터안전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만, 경제적 여건 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고용안전망이나 다양한 역량개발에 대한 중요도 평가가 더 높음.

정책 ⇓ 개선

개선 방향	•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욕구가 분화되어 나타나므로, 상태중심의 청년정책 추진의 강화 • 경제적 여건 수준에 따라 다층화 되어 나타나는 정책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시, 목표 집단 설정 및 설계 강화하고 시행계획 평가에 반영 검토

● 본 연구의 실증분석 전반에서 청년의 정책 욕구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수직적으로 다층화 되어 나타나고, 동시에 경제적 여건 이외 다양한 특성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단계에서 확인된 바 있음.

● 제4장의 12개 정책영역의 중요도와 도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과 성별, 현재 상태, 교육수준에 따라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정도를 평가한 결과가 다르고, 동시에 경제여건에 따른 다층화 경향도 명확하게 확인됨.

● 이에 따라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년의 정책 욕구에 관한 정교한 실증자료 분석이 요구되며, 이를 기초로 정책의 확대 또는 조정해야 할 내용과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의 대상 효율성을 높여야 함.

(6) 정책 인지 및 수혜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 대상자 확대

주요 결과	•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도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정책인지와 수혜경험 여부임. • 정책인지 여부가 정책지원의 수혜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두 요인이 청년당사자가 인식하는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됨.

정책 ⇓ 개선

개선 방향	• 정책인지가 지원 수혜의 전제가 되며, 정책 체감과 효능감 향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조를 확인 • 확대 가능한 정책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 및 수혜자 규모 확대 검토

● 본 연구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청년정책 체감도는 정책 인지와 수혜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층화되고 다분화된 청년욕구에 대응하는 정책 표적화(targeting)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전반적으로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지원정책의 수혜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정책욕구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확대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7) 거버넌스 참여자의 높은 정책인지 및 체감도 : 청년당사자 정책리터러시 함양

주요 결과	• 전반적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율 및 수혜율이 비참여 청년들에 비해 높음. • 특히 정책사업이나 제도가 도입 된지 얼마외지 않은 신규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서 그 격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정책 ⇓ 개선

개선 방향	• 일반 청년들의 정책인지 함양이 이루어져야 정책 체감도 파악이나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참여와 운영도 정책인지가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년당사자 정책리터러시 함양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본 연구의 제4장의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영역 또는 정책 사업은 거버넌스 참여에 따른 큰 차이는 없으나, 도움정도로 파악될 수 있는 정책 체감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평가 수준이 더 높고, 영향력 또한 비참여자의 2배를 상회함.

● 이에 따라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도와 도움정도에 주요 영향 요인이 되는 정책 인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이를 위한 일반 청년들의 정책리터러시 함양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8) 사회적 지속가능성, 소득불평등 완화, 기회·권한의 배분 선호 : 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 추진

주요 결과	• 포용국가 사회정책 3가지 비전(사회통합,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회혁신) 중 청년들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음. • 포용국가 사회정책 9가지 전략 중 ①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②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정책, ③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이 상위 우선순위로 응답

정책 ⇓ 개선

개선 방향	• 단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청년들이 이행기에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기회불평등 해소 방향으로 정책 추진 •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그리는 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 추진'과 같은 명확한 비전 제시 필요

● 본 연구의 제4장과 제5장의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당사자들은 청년정책이 소득불평등 완화하고, 불균등한 기회와 권한을 배분하는 정책으로 기능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제5장 정책델파이 조사에서는 청년정책이 미래사회정책으로 안착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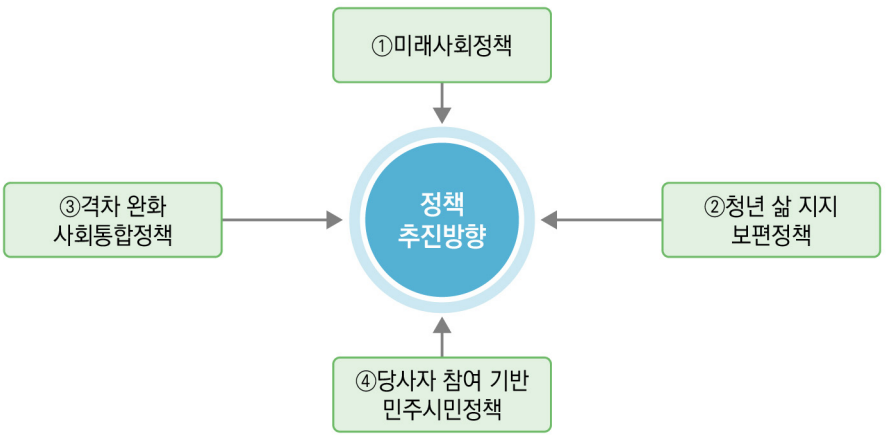
4. 정책제언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 본 연구에서는 실증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정책 개입 방향을 토대로,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수립될 청년정책의 목표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 및 국가 미래사회정책으로의 안착'으로 설정함.

정책 목표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 • 국가 미래사회정책으로의 안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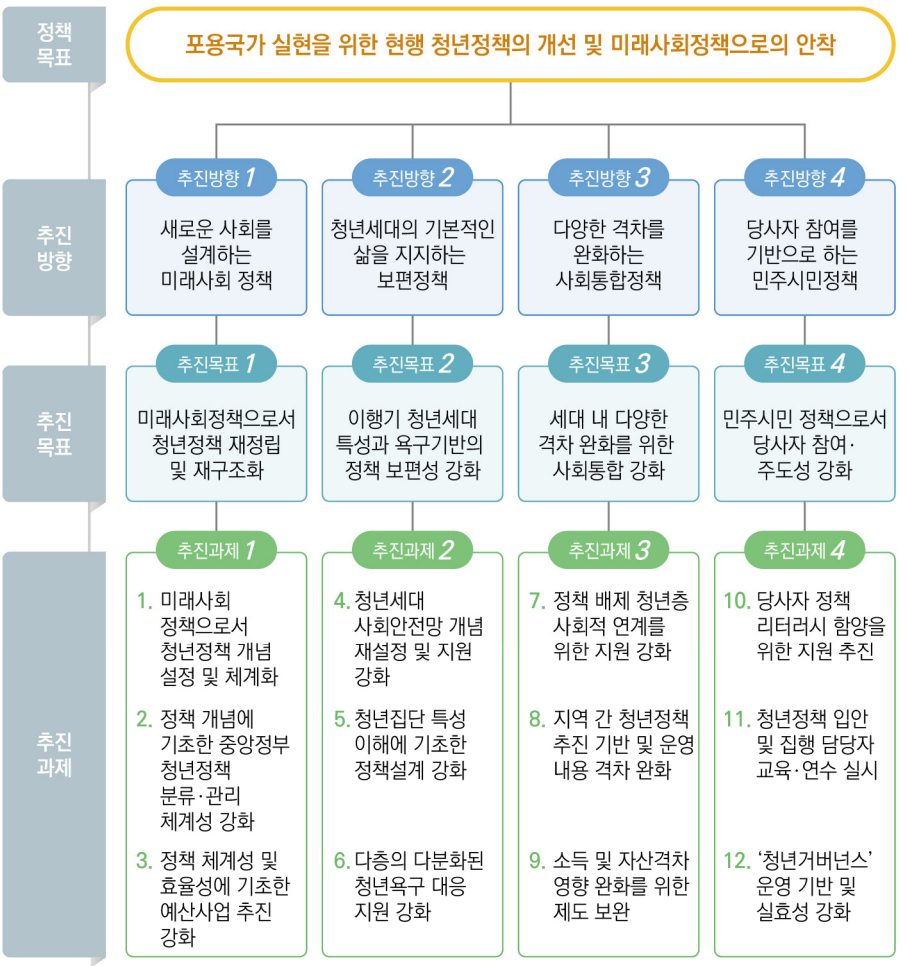
● 이에 따르는 국가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은 네 가지로, 즉 ①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 ②청년의 삶을 지지하는 보편정책, ③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정책, ④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시민 정책으로 도출됨.



2)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

●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추진 방향 각각에 대응하는 추진 목표를 설정하였고, 설정된 추진 목표 하에 세 가지씩 총 12개의 추진과제가 도출되었음.

● 도출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의 기본체계는 다음과 같음.



차 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연구보고 19-R06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7
3.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 19

Ⅱ. '포용국가 실현' 관점에서의 청년정책 고찰 ····· 23

1.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 수립의 배경 ····· 25
2. 포용국가 실현에 있어서 청년정책의 중요성 ····· 31
3. 청년정책의 과거와 현재 ····· 61

Ⅲ. 그간 청년 이슈 정책화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면접조사 ····· 87

1. 면접조사 개요 ····· 89
2. 청년 이슈 의제화 및 정책화 과정에서의 변화와 한계 ·· 97
3. 소결: 기존 한계를 넘어 앞으로의 방향 ····· 133

Ⅳ.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의견 설문조사 ····· 139
1. 조사 개요 ····· 141
2. 특성별 현행 청년정책 당사자 인지도 및 수혜율 ····· 158
3.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평가 ····· 202
4.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회정책 비전의 중요성 및 추진 정책의 우선순위 ····· 272
5. 소결 : 청년 당사자들의 청년정책 평가와 추진 방향 ·· 290

Ⅴ. 청년정책 개선방향 및 개선의 우선순위 도출: 정책델파이 ····· 297
1.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실시 개요 ····· 299
2. 단계별 조사 결과 ····· 317
3. 소결: 청년정책, 미래사회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 ·· 339

Ⅵ. 청년정책 개선 방향 및 추진 과제 ····· 343
1.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 345
2. 청년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설정 ····· 374
3.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 383

참고문헌 ····· 427

부 록 ····· 443

Abstract ····· 481

표 목차

표 Ⅰ-1「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3대 비전, 9대 전략 … 4
표 Ⅰ-2 연구 1단계 내용의 구성 …… 11
표 Ⅰ-3 연구 2단계 내용의 구성 …… 12
표 Ⅰ-4 청년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 면접조사 방법 …… 13
표 Ⅰ-5 연구 3단계 및 4단계 내용의 구성 …… 14
표 Ⅰ-6 설문조사 및 정책델파이 조사개요 …… 15
표 Ⅰ-7 연구 5단계 내용의 구성 …… 16
표 Ⅰ-8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추진 내용 …… 17
표 Ⅰ-9 정책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 18
표 Ⅱ-1 주요 고용지표 변화 …… 47
표 Ⅱ-2 15세~29세 청년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별 분포 …… 49
표 Ⅱ-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54
표 Ⅱ-4 청년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직면한 현실, 그리고 정책 요구 … 60
표 Ⅱ-5 청년문제 프레임과 청년정책 : 김대중정부~박근혜정부 …… 62
표 Ⅱ-6 제1차 기초보장계획 중 청년 관련 정책 개요 …… 66
표 Ⅱ-7 주거복지로드맵 중 청년 관련 정책 개요 …… 67
표 Ⅱ-8 제3차 직업능력기본계획 중 청년 관련 정책 개요 …… 67
표 Ⅱ-9 청년일자리대책 주요 내용 …… 69
표 Ⅱ-10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및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개요 …… 71
표 Ⅱ-11 청년 희망사다리 주요 내용 …… 72
표 Ⅱ-12 문재인정부 주요 청년정책 현황 …… 73
표 Ⅱ-13 사회통합 비전 관련 주요 청년정책 …… 75
표 Ⅱ-14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청년정책 개요 …… 79
표 Ⅱ-15 사회혁신 비전 관련 청년정책 개요 …… 82
표 Ⅱ-16 청년정책의 변화와 추진 방향 …… 86
표 Ⅲ-1 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기준 …… 91

표 Ⅲ-2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 93
표 Ⅲ-3 면접조사 주요 조사 내용 ····· 94
표 Ⅲ-4 면접조사 방법 ····· 95
표 Ⅲ-5 지방정부 청년정책 추진 기반 현황 집계 ····· 102
표 Ⅲ-6 그간 청년정책 이슈화 및 정책화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요약 ·· 134
표 Ⅲ-7 청년이슈 정책과 과정에서의 한계 ····· 134
표 Ⅳ-1 최소 표본 구성 및 할당 ····· 143
표 Ⅳ-2 조사 내용의 구성 ····· 144
표 Ⅳ-3 설문 문항 및 문항작성의 근거 ····· 148
표 Ⅳ-4 청년정책 당사자 인식조사 분석 내용 및 방법 ····· 155
표 Ⅳ-5 분석 대상자 특성: 전체 ····· 160
표 Ⅳ-6 집단별 개인 특성 ····· 163
표 Ⅳ-7 재학생, 미취업자, 취업자 집단별 특성 ····· 166
표 Ⅳ-8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른 특성 비교 ····· 170
표 Ⅳ-9 현행 청년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 173
표 Ⅳ-10 학자금 지원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 187
표 Ⅳ-11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 188
표 Ⅳ-12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 191
표 Ⅳ-13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정책의 인지여부 영향 요인 ····· 192
표 Ⅳ-14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 194
표 Ⅳ-15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 196
표 Ⅳ-16 주거지원, 신용회복, 건강지원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 197
표 Ⅳ-17 다양한 역량개발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 199
표 Ⅳ-18 고용안전망과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 200
표 Ⅳ-19 사회정책 비전 관련 청년정책의 중요도 평가 ····· 204
표 Ⅳ-20 청년정책의 중요도 평가 : 현재 상태별 비교 ····· 206
표 Ⅳ-21 청년정책의 중요도 평가 :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 ·· 207
표 Ⅳ-22 학자금 지원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 209
표 Ⅳ-23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 209
표 Ⅳ-24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 210
표 Ⅳ-25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 211

표 Ⅳ-26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 212
표 Ⅳ-27 주거지원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 213
표 Ⅳ-28 신용회복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 214
표 Ⅳ-29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 215
표 Ⅳ-30 건강지원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 216
표 Ⅳ-31 다양한 역량개발 활동 지원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 217
표 Ⅳ-32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 218
표 Ⅳ-33 고용안전망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 219
표 Ⅳ-34 정책인지 및 수혜경험에 따른 중요도 인식 차이 ····· 220
표 Ⅳ-35 사회정책 비전에 따른 청년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 222
표 Ⅳ-36 청년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 상태별 비교 ····· 223
표 Ⅳ-37 사회통합 비전 관련 청년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 ····· 225
표 Ⅳ-38 학자금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 227
표 Ⅳ-39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 227
표 Ⅳ-40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 228
표 Ⅳ-41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 229
표 Ⅳ-42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 229
표 Ⅳ-43 주거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 231
표 Ⅳ-44 신용회복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 232
표 Ⅳ-45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 233
표 Ⅳ-46 건강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 234
표 Ⅳ-47 다양한 역량개발 활동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 235
표 Ⅳ-48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 235
표 Ⅳ-49 고용안전망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 236
표 Ⅳ-50 정책인지 및 수혜경험에 따른 도움 정도 인식 차이 ····· 237
표 Ⅳ-51 학자금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 239
표 Ⅳ-52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 242
표 Ⅳ-53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 유형별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 244
표 Ⅳ-54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 246
표 Ⅳ-55 내일채움공제, 근로장려세제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 249
표 Ⅳ-56 청년동행카드 및 청년 희망키움통장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 250
표 Ⅳ-57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 252
표 Ⅳ-58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 255
표 Ⅳ-59 청년 활동공간 및 사회서비스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 257
표 Ⅳ-60 주거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 259
표 Ⅳ-61 신용회복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 262
표 Ⅳ-62 건강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 264
표 Ⅳ-63 다양한 역량개발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 266
표 Ⅳ-64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 268
표 Ⅳ-65 고용안전망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 270
표 Ⅳ-66 사회정책 3대 비전의 중요도 인식 수준 ····· 273
표 Ⅳ-67 특성별 사회통합 비전 중요도 인식 차이 ····· 275
표 Ⅳ-68 특성별 현시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청년 정책 분포 : 1순위~3순위 종합 ····· 281
표 Ⅳ-69 특성별 현시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청년 정책 1순위 ····· 286
표 Ⅳ-70 청년정책 우선순위 결정요인 다항로짓 분석결과 (전체) ··· 289
표 Ⅴ-1 정책델파이와 일반 델파이 기법의 비교 ····· 302
표 Ⅴ-2 정책델파이와 일반 델파이 기법의 기본 원칙 비교 ····· 302
표 Ⅴ-3 정책델파이 참여자 구성 ····· 306
표 Ⅴ-4 정책델파이 조사 내용의 구성 ····· 309
표 Ⅴ-5 정책델파이 측정 문항 및 항목 ····· 310
표 Ⅴ-6 정책델파이 응답자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비율(CVR) 최솟값 ·· 315
표 Ⅴ-7 정책델파이 1단계 결과: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 318
표 Ⅴ-8 정책델파이 1단계 결과: 현시점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 320
표 Ⅴ-9 정책델파이 1단계 결과: 현행 청년정책 평가 ····· 321
표 Ⅴ-10 정책델파이 1단계 결과: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 ····· 322
표 Ⅴ-11 정책델파이 2단계 결과: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 324
표 Ⅴ-12 정책델파이 2단계 결과: 현 시점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 327
표 Ⅴ-13 정책델파이 2단계 결과: 현행 청년정책 평가 ····· 330
표 Ⅴ-14 정책델파이 2단계 결과: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 ····· 332
표 Ⅴ-15 정책델파이 3단계 결과: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 334
표 Ⅴ-16 정책델파이 3단계 결과: 현 시점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 335
표 Ⅴ-17 정책델파이 3단계 결과: 현행 청년정책 평가 ····· 336
표 Ⅴ-18 정책델파이 3단계 결과: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 ····· 337
표 Ⅴ-19 정책델파이 최종 결과 ····· 341
표 Ⅵ-1 청년정책 개념 부재와 청년에 대한 이해 부족 ····· 356
표 Ⅵ-2 청년정책으로부터의 배제 ····· 358
표 Ⅵ-3 정책 욕구의 불일치와 청년 특성별 분화 ····· 359
표 Ⅵ-4 청년정책의 지역 격차 ····· 361
표 Ⅵ-5 생활안전망 정책의 필요성 ····· 362
표 Ⅵ-6 생활안전망 관련 정책의 높은 중요도와 도움 정도 ····· 363
표 Ⅵ-7 청년 특성별 중요도, 도움 정도가 높은 정책 ····· 365
표 Ⅵ-8 면접조사와 정책델파이조사에서 발견된 청년의 욕구 분화 ·· 366
표 Ⅵ-9 중요도 및 도움정도 영향요인 및 인지여부, 수혜경험의 영향력 ·· 368
표 Ⅵ-10 인지도 및 수혜율이 낮은 정책의 거버넌스 참여여부에
따른 도움 정도 차이 ····· 370
표 Ⅵ-11 청년 특성별 가장 중요한 청년 정책 비전과 전략 순위 ··· 372
표 Ⅵ-12 청년정책의 방향성 ····· 373
표 Ⅵ-13 주요 실증결과에 기초한 정책 개입 방향 ····· 373
표 Ⅵ-14 캐나다 청년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 ····· 379
표 Ⅵ-15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직무/전문 교육과정에 청년정책과정
추가 신설(안) ····· 420
표 Ⅵ-16 지자체 청년참여기구 조례 반영 달성률 목표(안) ····· 422
표 Ⅵ-17 정책 추진 과제 요약 ····· 424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의 기본 설계 ····· 8
그림 Ⅰ-2 연구 내용의 단계별 구성 ····· 10
그림 Ⅰ-3 연구 추진체계 ····· 19
그림 Ⅰ-4 단계별 추진 일정 및 내용 ····· 21
그림 Ⅱ-1 국제기구의 포용사회 및 포용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27
그림 Ⅱ-2 포용적 사회정책이 사회의 혁신능력 향상에 미치는 경로 ·· 29
그림 Ⅱ-3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방향 및 영역 재구성 ····· 30
그림 Ⅱ-4 한국사회의 불평등 재생산 구조 ····· 33
그림 Ⅱ-5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 비교 : OECD 국가 ····· 36
그림 Ⅱ-6 2007년과 2017년 청년(15세~29세) 니트 비율 ····· 36
그림 Ⅱ-7 2007년과 2017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변화 ··· 37
그림 Ⅱ-8 사업체 규모 및 정규직 여부별 시간당 임금 비율 변화 : 2014년~2018년 ····· 38
그림 Ⅱ-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 39
그림 Ⅱ-10 1998년~2016년 지니계수 변화 ····· 40
그림 Ⅱ-11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추이 ····· 41
그림 Ⅱ-12 자산 유형별 점유율 및 임대료 부담률(RIR) ····· 42
그림 Ⅱ-13 도시가구의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변화 ····· 43
그림 Ⅱ-14 19세~34세 청년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인구 변화 추계 ·· 44
그림 Ⅱ-15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률 ····· 46
그림 Ⅱ-16 청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 46
그림 Ⅱ-17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의 변화: 청년층과 전체 비교 ·· 48
그림 Ⅱ-18 고등교육 진학률 : 1990년~2018년 ····· 51
그림 Ⅱ-19 연령별 역량 수준(언어능력 점수) 국제비교 ····· 52
그림 Ⅱ-20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 53
그림 Ⅱ-21 연령별 주관적 건강 '좋음', '매우 좋음' 응답자 비율 ····· 55
그림 Ⅱ-22 15세~49세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 변화: OECD 국가 비교 ·· 58

그림 Ⅱ-23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 현황 ····· 65
그림 Ⅲ-1 연구추진 단계에서 면접조사의 활용 ····· 90
그림 Ⅳ-1 설문조사 추진과정 ····· 142
그림 Ⅳ-2 조사문항 개발 과정 ····· 146
그림 Ⅳ-3 온라인 조사도구 개발 과정 ····· 153
그림 Ⅳ-4 최종 수집 자료의 표본 구성 ····· 154
그림 Ⅳ-5 특성별 학자금 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 ····· 174
그림 Ⅳ-6 특성별 학자금 지원 정책의 수혜경험 차이 ····· 174
그림 Ⅳ-7 특성별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 ····· 175
그림 Ⅳ-8 특성별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수혜 경험 차이 ····· 176
그림 Ⅳ-9 특성별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인지여부 차이 ····· 176
그림 Ⅳ-10 특성별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수혜경험 차이 ···· 177
그림 Ⅳ-11 특성별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 ····· 178
그림 Ⅳ-12 특성별 청년 거버넌스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 ····· 179
그림 Ⅳ-13 특성별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수혜 경험 차이 ····· 179
그림 Ⅳ-14 특성별 주거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 ····· 180
그림 Ⅳ-15 특성별 주거지원 정책의 수혜경험 차이 ····· 181
그림 Ⅳ-16 특성별 신용회복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 ····· 181
그림 Ⅳ-17 특성별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 ····· 182
그림 Ⅳ-18 특성별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의 수혜경험 여부 ····· 183
그림 Ⅳ-19 특성별 건강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 183
그림 Ⅳ-20 특성별 다양한 역량개발 활동 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 184
그림 Ⅳ-21 특성별 다양한 역량개발 활동 지원 정책의 수혜경험 여부 ·· 185
그림 Ⅳ-22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 ····· 185
그림 Ⅳ-23 특성별 고용안전망 정책의 인지 여부 ····· 186
그림 Ⅳ-24 학자금 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 (Odds Ratio) ····· 188
그림 Ⅳ-25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영향요인 영향력 비교 (Odds Ratio) ····· 190
그림 Ⅳ-26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영향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192
그림 Ⅳ-27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정책의 인지 여부 영향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193
그림 Ⅳ-28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인지 여부 영향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195
그림 Ⅳ-29 청년 활동공간 및 서비스 정책의 인지 여부 영향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196
그림 Ⅳ-30 주거지원, 신용회복, 건강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영향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198
그림 Ⅳ-31 역량개발, 고용안전망 정책의 인지 여부 영향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201
그림 Ⅳ-32 정책영역과 정책별 중요도 평가 비교 ····· 204
그림 Ⅳ-33 학자금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241
그림 Ⅳ-34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243
그림 Ⅳ-35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248
그림 Ⅳ-36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254
그림 Ⅳ-37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256
그림 Ⅳ-38 청년 활동공간 및 사회서비스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258
그림 Ⅳ-39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260
그림 Ⅳ-40 주거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261
그림 Ⅳ-41 신용회복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263
그림 Ⅳ-42 건강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265
그림 Ⅳ-43 다양한 역량개발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267
그림 Ⅳ-44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269
그림 Ⅳ-45 고용안전망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 271
그림 Ⅳ-46 사회정책 3대 비전의 중요도 인식 수준: 현재 상태별 비교 ·· 274
그림 Ⅳ-47 사회정책 3대 비전의 중요도 인식 수준: 거버넌스
참여여부 비교 ····· 274
그림 Ⅳ-48 특성별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중요도 인식 차이 ····· 276
그림 Ⅳ-49 특성별 사회혁신 비전 중요도 인식 차이 ····· 277
그림 Ⅳ-50 사회정책 3대 비전 중요도 인식 수준 비교 ····· 278
그림 Ⅳ-51 특성별 현시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청년 정책 분포:
1-3순위 ····· 280
그림 Ⅳ-52 현시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청년 정책 분포:
1-3순위 _ 현재 상태 비교 ····· 282
그림 Ⅳ-53 현시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청년 정책 분포:
1-3순위 _ 거버넌스 참여여부 ····· 283
그림 Ⅳ-54 현시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청년 정책 1순위 ····· 284
그림 Ⅳ-55 현시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청년 정책 1순위:
현재 상태 비교 ····· 287
그림 Ⅴ-1 정책델파이 추진 절차 ····· 304
그림 Ⅴ-2 정책델파이 2단계 조사 내용 작성 절차 ····· 313
그림 Ⅴ-3 정책델파이 3단계 조사 내용 작성 절차 ····· 314
그림 Ⅴ-4 정책델파이 3단계 이전단계 결과 제시(예) ····· 314
그림 Ⅵ-1 주요 실증 결과 요약 ····· 353
그림 Ⅵ-2 종합결과의 도출 ····· 354
그림 Ⅵ-3 청년 특성별 정책욕구의 분화 ····· 367
그림 Ⅵ-4 4가지 정책 추진 방향 ····· 376
그림 Ⅵ-5 청년정책 개념화(안) ····· 385
그림 Ⅵ-6 청년정책 개념화 작업 이후 정책업무 반영 체계(안) ····· 386
그림 Ⅵ-7 청년정책 분류·관리 체계를 통한 사업관리 개선안 ····· 388
그림 Ⅵ-8 정책사업 분류·관리 체계 마련 및 업무 반영(안) ····· 389
그림 Ⅵ-9 정책사업 분류 'Layer'층 사업 청년정책예산 산정방식(안) ·· 391
그림 Ⅵ-10 정책사업 분석·평가를 활용한 예산사업 추진 체계성
강화 절차(안) ····· 392
그림 Ⅵ-11 변화된 청년세대 '생활안전망' 개념 및 범위 ····· 394
그림 Ⅵ-12 정신건강 증상 수준별 청년 심리·정서 지원사업의 배치(안) ·· 399
그림 Ⅵ-13 다층의 다분화된 청년특성 및 욕구기반 정책 추진 강화(안) ·· 405
그림 Ⅵ-14 지역별 청년정책 질적 격차 완화 방안(안) ····· 411

그림 Ⅵ-15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제도 보완제도 설계(안) ····· 415
그림 Ⅵ-16 청년정책 리터러시 함양 지원 체계(안) ····· 418
그림 Ⅵ-17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기본체계 ···· 423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1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난해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는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가 발표되었고,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었다. 문재인정부가 국가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사회,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닌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정책기획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18.09.06., pp.1-2).

이와 같은 국가 비전 발표의 배경에는 기존의 양적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었던 방식만으로는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빚어지는 전통적인 위기, 즉 빈곤과 실업, 질병과 노령과 같은 사회 문제 뿐만 아니라 빠르게 발전해 왔던 과정에서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 이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삶의 양식 변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등의 새로운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이 존재한다(정책기획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18.09.06., p.1; 관계부처합동, 2019.02.19., p.22).

또한 그러한 한계 인식과 더불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극복해야하는 시대적 과업, 그리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는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종합적인 국정 운영 계획의 특성(국정기획자

*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문위원회, 2017.07, p.5)이 그 간 양적 경제 성장 중심 하에 '최소주의'로 갇혀있던 사회정책을 재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사회정책이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주요 정책으로 전면에 배치되며 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제시된 비전은 3가지(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능력)이고, 각 비전별로 3가지 전략이 구성되어, 총 9개의 전략이 수립되었다.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①소득보장제도의 개혁, ②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그리고 ③지역균형발전의 세 가지 추진 전략이 설정되었고,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①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②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③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의 세 가지 전략, 그리고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은 ①인적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②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③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해당된다(정책기획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18.09.06., p.3; 관계부처합동, 2019.02.19., p.4).

표 Ⅰ-1「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3대 비전, 9대 전략

비전	9대 전략
사회통합의 강화	•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 사회서비스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사회혁신능력 배양	• 인적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고용안정망 구축

* 출처: 정책기획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2018.09.06.). 포용국가전략회의 개최 보도자료, p.3.
관계부처합동(2019.02.19.). 문재인정부「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p.4.

이와 같이 설정된 국가정책 비전을 볼 때,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역할이 그 어떠한 분야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시기와 대상은 생애주기에 있어 우리사회의 불평등이 중첩되고 집중되어 나타나는 청년기이며, 청년을 위한 정책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일명 '청년문제'라고 일컫는 현상들, 즉 청년세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심화된 불평등과 구조화된 다중격차 사회에서 생애주기 단계 상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시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우리사회 구조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전병유·신진욱, 2016; 김지경·이윤주, 2018; 김지경·정연순, 2015).

'취업난'으로 설명되는 노동시장 이행 지연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을 비롯하여 지난 십수년 간 청년문제에 대응 하는 정책은 일차적으로 청년실업률 완화를 위한 일자리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양극화된 불평등 사회구조 하에서 청년들이 감내하는 우리사회의 문제는 비단 일자리문제 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젠더, 심리·정서적인 측면까지 청년들의 삶 전반으로 확대된 상태이다. 각각의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부처에서는 기존 정책지원 사업의 대상을 청년으로까지 확대하거나 새로운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정책 대응은 청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들의 삶의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구조적으로 연계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즉 청년들의 삶을 지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십수년 간 청년문제가 이슈화되고, 이슈들이 의제화되고 정책화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미약하기는 하나 청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시선의 변화, 정책영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출현과 다양한 지원사업의 발굴, 청년 당사자들의 공식적 참여 기회의 증가, 그리고 청년정책의 빠른 확산과 같은 발전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청년정책이 갖는

의미가 부재하였고, 정책대상 설정에서의 배제와 청년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일부 청년들이 타자화 되었으며, '청년' 자체와 청년문제 발생 배경의 몰이해에 따른 정책의 비포괄성, 그리고 고용정책과 일자리 정책으로의 정책쏠림 등의 한계(고함20, 2016.08.23.)가 청년 당사자 집단에서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해 보고자 20대 국회에서 2018년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05.21.)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안으로 발의하였으나, 바로 제정될 것 같았던 법안이 현 시점까지 여전히 제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청년의 삶을 지지하는 국가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의 동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정책기획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18.09.06., p.1), 그러한 국정 운영 방향을 반영하여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에 이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이 발표된 정책 환경 하에서, 생애단계에서 중첩된 불평등의 상황에 놓이는 청년들과 그들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은 마땅히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사회정책의 하나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문재인정부가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자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해야하는 대상은 청년이 되어야 하며,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문제 해소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본법」의 신속한 제정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이제까지 청년문제라 일컬어지는 정책 이슈들이 정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한계와 개선점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국가 사회정책으로서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도출해 내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책

비전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청년기본법」 제정 후 체계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도 기존 청년정책 추진과정의 한계와 개선점의 파악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사회정책 비전으로 제시된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현행 청년정책의 좌표를 진단하고, 이제까지의 청년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 그리고 현행 정책에 대한 당사자 평가를 통해 포용적 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추진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청년기본법안」 제정 이후, 제정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수립될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을 체감도 높게 지지하고, 궁극적으로 포용적 사회 실현이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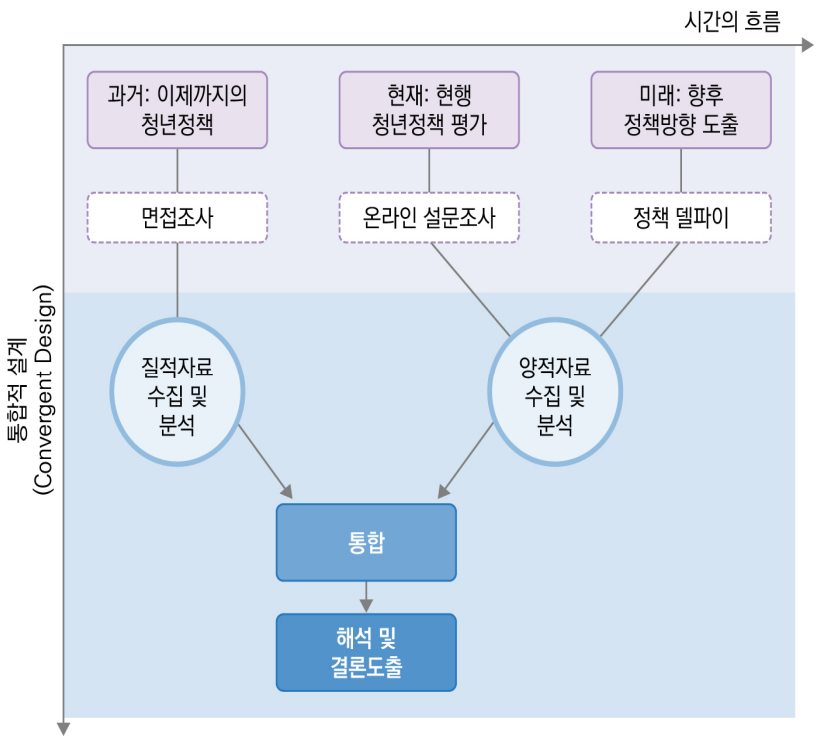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의 기본 설계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사회정책의 하나로 청년정책이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도출'이라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주요 내용은 '시간의 흐름' 개념을 횡축으로 연구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혼합 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의 하나인 통합적 설계(convergent design)를 종축으로 구조화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에 연구의 주요 내용을 구성한 것은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청년정책의 정책 형성 및 추진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과거부터 현재시점까지의 과정으로서 '과거'를 파악하고,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인식을 '현재'의 현황으로서 평가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이 이미 발표된 상황에서 향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핵심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을 위치시키고 안착시키기 위해 '미래'를 위한 개선의 방향과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가장 최적의 연구내용 구성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출처: Creswell, A Concise Introduction to Mixed Methods Research, 2014. p.37, Figure4-1 재구성.

그림 Ⅰ-1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의 기본 설계

이러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통해 제한된 연구기간과 예산 제약 하에서 연구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청년문제 이슈화 및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그 과정에 참여하였던 이들의 생생한 경험을 청취하는 방식을 통해 자료로 수집하고,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자료로 수집하였으며, 현행 청년정

책의 한계를 넘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으로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청년정책의 방향과 개선점들을 양적 자료 수집인 정책델파이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분석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각 연구내용과 방법들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의 의미는 종합적으로 해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의 개선방향과 개선을 위한 과제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통합 설계(convergent design)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의 구조와 과정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할 때 혼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데, 통합적 설계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설계의 하나이다. 대체로 양적연구는 현상의 '구조'를 밝히는데 적합하며, 질적연구는 '과정'을 밝히는데 보다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의 결과가 입증되었을 때 그 연구결과를 더욱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다(남궁근, 2017, pp.413-41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도출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내용 구성의 개념적 틀을 '시간의 흐름'으로, 그리고 연구방법 구성의 방법론적인 기본 틀을 통합 설계 모형으로 설정한 것이다.

2) 단계별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사회정책의 하나로 청년정책이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도출이라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내용을 단계적이고 연계성 있게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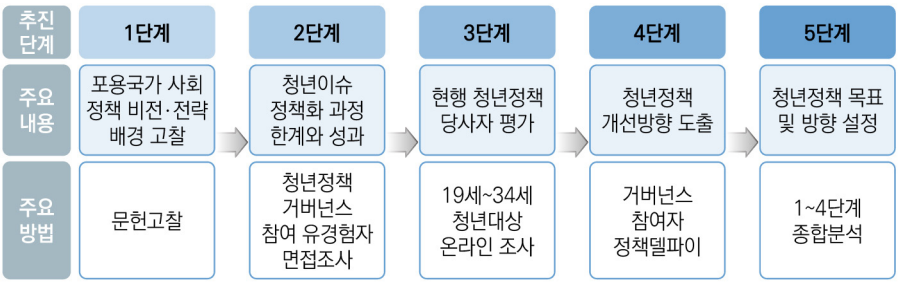


그림 Ⅰ-2 연구 내용의 단계별 구성

1) 1단계: 배경 고찰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책연구로서 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 논리적 타당성과 근거를 확보하고, 연구 추진의 방향과 연구 목적을 명료하게 설정하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기 위하여 기 발표된 정부정책 자료와 국내외 발간 자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 번째로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 수립의 배경이 되는 정부 발표 자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비전의 수립이 비단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국가경제 발전 기조의 변화에 근거 하고 있음을 OECD자료 등을 검토 하였다. 이와 같은 비전수립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두 번째로는 청년정책에 국가 비전으로 제시된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개념의 적용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기 발표된 통계분석 결과와 OECD 자료를 중심으로 실증 자료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어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전개 과정과 현황을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추진 목표 및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해 5단계 '청년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Ⅰ-2 연구 1단계 내용의 구성

구성	내용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 수립의 배경 고찰	• 포용국가 개념,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수립 배경을 정부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 •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이 OECD국가를 비롯한 세계의 국가경제 발전 기조의 변화에 근거하고 하고 있음을 고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자료 고찰
포용국가 실현에 있어서 청년정책의 중요성	• 포용적 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이론적 근거와 실증연구 등에 근거하여 논의 • 기 발표된 국내 통계자료와 OECD 자료 등을 토대로 청년이 직면한 사회구조적 환경과 현실을 검토함
포용과 혁신의 관점에서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과거와 현재 진단	•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전개 동향과 문재인정부 청년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청년정책 추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함

2) 2단계: 청년 이슈 정책화 과정에서의 변화와 한계 분석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청년문제로 이슈화되고 의제화를 거쳐 정책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사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의 성과는 무엇이며 해결되지 않는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 자료, 그리고 청년관련 심층보도 기사 등의 문헌자료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으며, 2010년 이후 최소 4년 이상 청년이슈 정책화 과정에 참여했던 당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면접조사를 통해 청취함으로써 문헌자료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그 간의 변화와 한계를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하였다.

표 Ⅰ-3 연구 2단계 내용의 구성

구성	내용
청년문제 의제화 및 정책화 과정에서의 변화와 한계 논의	• 지난 십수년 간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가 의제화되고, 의제가 정책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그 과정을 청년정책이 정책화되는 과정에 참여했던 이들의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 - 2010년 이후 5년 이상 거버넌스에 참여했던 활동가 우선 섭외(최소 4년 이상 유경험자) • 변화와 한계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을 도출

면접조사의 참여자는 14명 내외이며, 장기간 청년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이 첫 참여자를 섭외한 후 참여자들에게 지난 10여년 간의 청년정책 이슈화 과정 또는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활동가들을 추천 받는 눈덩이 표집 방식을 활용하여 추천자 풀을 구성하였다. 이후 연구진이 활동기간, 주요 활동 분야, 활동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우선 섭외 대상의 순서를 정하고,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면접조사에 참여의사와 동의를 확인을 거쳐 참여 일정과 면담 방식 및 장소 등을 협의 한 후 최종 정보제공 동의를 구한 후 확정하였다.

면접조사의 면담 방식은 기본적으로 1:1 심층면담으로 하되, 참여자의 선호와 요청에 따라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형태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단, 초점면접조사의 형태로 진행할 경우 조사 내용의 집중과 의견개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시 참여자수를 3명 이하로 제한하였다. 1회당 면담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고, 면담 내용은 녹음 후 전사하였으며, 면접조사를 위한 기획과 참여자 섭외를 비롯하여 자료 전사 후 분석의 전 과정은 연구진이 직접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의 결과는 본 연구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와 정책델파이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제4단계의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 방안 도출에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Ⅰ-4 청년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 면접조사 방법

주요 요소	내용
참여자 섭외과정	• 연구진 직접 섭외로 첫 참여자 면담 후 참여자의 눈덩이(snowballing) 추천 방식을 활용하여 섭외 • ①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②면접조사 참여 의사 및 동의 확인→③참여 일정, 면담 방식, 장소 협의→④사전 배경정보 제공 및 녹취에 대한 동의 후 최종 확정
참여자 구성 및 수	• 본 연구에서 설정한 참여자 구성 기준에 부합하는 2010년 이후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 14명 - 활동기간, 주요 활동 분야, 활동 지역, 지역 단위 고려하여 구성
면담방식	• 참여자 요청에 따라 1:1 심층면담 또는 초점집단면담 방식 병행 단, 초점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참여자 수 3명 이하로 제한
면담 시간 및 횟수	1회 당 1시간 30분 ~ 2시간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녹음 후 전사
면담자	연구진

3) 3단계: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평가 및 개선 방향 파악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분석·도출된 그 간 청년이슈 정책화 과정에서의 한계를 고려하여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인식 및 평가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 사항 및 개선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실시되는 정책델파이 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는 여·야 합의로 기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의 정책대상으로 명시된 연령, 즉 만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하였다. 응답 대상자의 선정은 표집 틀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 확률표집으로 표본을 선정할 수 없어 비확률표집의 할당표집의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할당표집에 있어 청년이 단일 성격을 갖는 집단이 아닌, 다분화된 집단으로 존재하

며 집단 내 격차가 작지 않다는 선행연구(김지경·정연순, 2015; 김지경·이상호, 2016; 김지경·이윤주, 2018)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재 상태, 성별, 거주 지역을 반영한 표본할당 방법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표 Ⅰ-5 연구 3단계 및 4단계 내용의 구성

구성	내용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평가에 관한 설문 조사	• 온라인 조사를 통해 733명의 응답자료 확보 및 결과 분석 • 분석된 결과는 정책델파이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현행 청년정책 개선 사항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정책델파이 실시	• 현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39명 참여 • 정책델파이 기법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동시에 개선의 우선순위 파악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현행 정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델파이에 앞서 구성한 이유는 청년 문제 이슈화와 정책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선도했던 청년활동가들과 일반 청년들 간의 이해 수준이 작지 않은 격차를 보인다는 사실이 최근 보고(김종진, 2018, pp.41-42)된 바 있으며, 앞서 2단계에서 분석된 청년거버넌스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단계로서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어떠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가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델파이의 경우,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가 낮은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2019년 7월 현재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을 참여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청년집단 내 정책욕구가 분화된 상태에 격차가 있고, 일반 청년들과 거버넌스 참여자들 사이에 정책욕구의 내용과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청년활동가들이 현행 청년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반 청년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그 격차 발생에서 오는 편의(bias)를 줄일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표 Ⅰ-6 설문조사 및 정책델파이 조사개요

일반 청년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연계 ⇒ 활용	현 청년거버넌스 참여자 대상 정책델파이	
모집단	전국 19세~34세 청년		모집단	2019년 7월 현재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표본 수	총 733여명			
표집 방법	존재하는 표집 틀이 없으므로 비확률 표집 방법 중 하나인 할당 표집 활용		참여자 수	조사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동의한 39명
표본 구성	현재 상태(재학, 미취업, 취업) 성별, 거주 지역(서울 및 수도권, 그 외)고려 할당		조사 방법	3단계로 현행 청년정책 개선점 도출, 일반 청년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참고로 활용
조사 시기	2019년 7월		조사 시기	2019년 7월~9월

정책델파이의 참여자는 본 연구의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의 2019년 현재 회원이면서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모집단이고, 본 연구의 정책델파이 참여자 수는 정책델파이 내용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친 후 참여의사를 밝힌 39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3단계로 구성된 델파이 과정을 거쳐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점과 개선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4) 5단계: 청년정책 개선 방안 도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세 번째 단계에서 정책델파이를 통해 파악된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앞선 각 단계에서 분석되었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점과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개선점에 기초하여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가 수립해야하는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고, 현행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Ⅰ-7 연구 5단계 내용의 구성

구성	내용
현행 청년정책 개선 및 보완점 도출	• 문헌고찰, 면접조사, 설문조사, 정책델파이 결과를 종합하여 현행 청년정책 개선점 도출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도출	• 도출된 개선점에 기초하여 현행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서의 보완점과 보완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5) 기타 연구 내용 및 방법

(1)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현행 청년정책이 포용국가의 사회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한 개선사항 도출이라는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보다 실효성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추진 단계별로 학계 및 정책 연구자, 현장의 청년정책 활동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하였다.

상반기에는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 구성, 정부 정책 대응의 현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가졌고, 하반기에는 진행되는 연구의 보완사항을 비롯한 전문가 검토, 설문조사 초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물인 청년정책 개선 방향 및 개선 과제에 대한 정책 전문가 및 청년정책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Ⅰ-8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추진 내용

횟수	자문 내용	자문진	개최시기
1	청년거버넌스 참여 청년단체 현황 및 참여 구조 「청년기본법」 제정관련 청년단체의 입장	청년단체 대표자 간담회	2/20(화)
2	실행계획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대한 검토	정책 연구자	2/22(목)
3	청년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 면접조사 참여자 추천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청취	청년단체 및 정책연구자	3/13(화)
4	현행 청년정책개선 정부 대응 현황	정책 연구자	4/19(금)
5	중간보고 심의내용관련 추가 논의 및 의견 청취	정책 연구자	5/11(화)
6	설문조사 내용 초안 검토	정책 연구자 및 청년정책사업 담당자	6/19(수)
7	청년정책 개선방향 및 개선 과제 검토	정책 연구자 및 청년정책 활동가	11/11(월)

(2) 정책실무협의회

연구주제의 시의성과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회 및 관계부처,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의 등의 청년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연구 추진의 단계별로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협의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청년기본법안」이 상반기까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안검토와 공청회가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계획과 내용에 대한 검토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와 함께 하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윤소하의원실과 법안 검토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청년TF단과 함께 진행되는 내용을 공유하고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며 진행하였다.

하반기에는 7월 30일 대통령령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으로 표류하던 정부의 청년정책을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 설치로 총괄·

조정하게 하고[1], 청와대에는 시민사회수석실 하에 '청년소통비서관'을, 국회에는 '청년미래연석회의'가 마련됨으로써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을 중심으로 연구의 내용을 공유하고 활용을 협의하며 진행하였다.

표 Ⅰ-9 정책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차수	주요내용	관계부처	개최 시기
1차	「청년기본법」 현안 대응 상황 공유 및 협력 사항 논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25(월)
2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소위의 「청년기본법」 검토 상황 파악 및 연계 협력할 청년 이슈 논의	국회 정의당 윤소하의원실	3/6(수)
3차	실행계획 내용에 대한 부처 의견 수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소위 「청년기본법」 공청회 추진사항 확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3/15(금)
4차~5차	정책기획위원회 청년TF 추진 내용과의 연계 협력 사항 논의 및 협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4/24(수), 4/30(화)
6차	청년정책을 둘러싼 지형 고찰: 문헌 및 청년거버넌스 참여자 면접조사에서 발견된 주요 내용 공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5/8(수), 5/22(수)
7차	저출산기본계획 및 추진과제 관련 청년정책 자료 공유 및 논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7/3(수)
8차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현가능 정책과제 논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활용 논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및 청와대	7/17(수)
9차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향후 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논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8/21(수)
10차	청년미래연석회의 청년정책 분류 작업 내용 공유 및 당내 청년정책 제안 내용 청취	국회 더불어민주당	9/17(화)
11차~13차	연구결과 공유 및 활용 방안 논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10/22(화)~11/28(화)

1)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9.7.30.)」 제24조(청년정책추진단) ①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을 둔다(이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10.16. 검색).

3.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1) 연구 추진체계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점 및 보완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추진될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과제 도출에 기초가 되는 실증자료를 제공하고자, [그림 Ⅰ-3]과 같은 연구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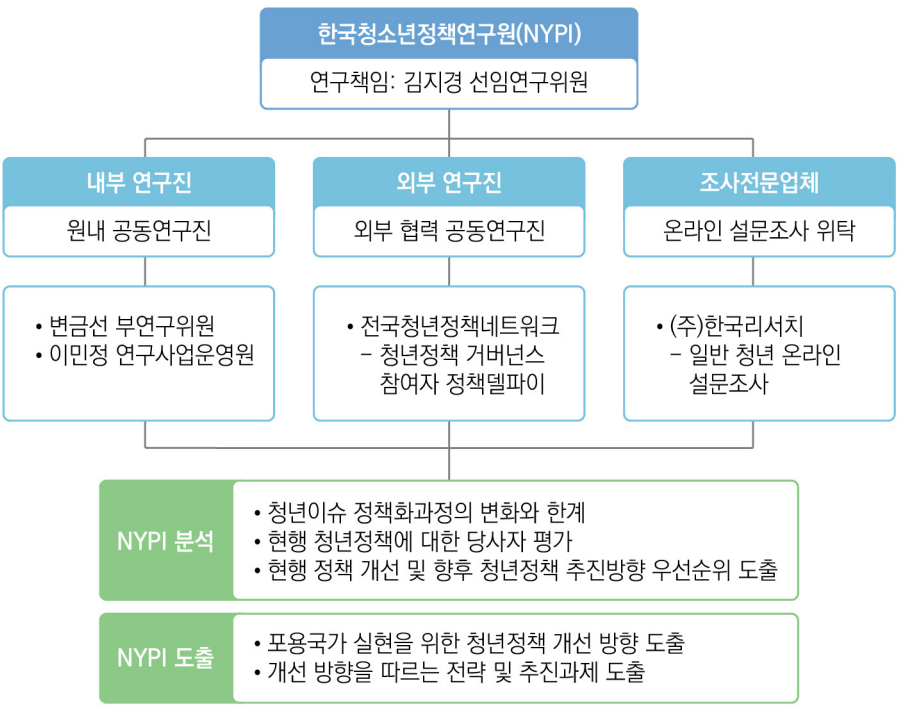


그림 Ⅰ-3 연구 추진체계

2) 연구 추진체계의 차별성: 청년 당사자의 연구 주체로서 참여

앞의 [그림 Ⅰ-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체계는 내부연구진과 외부연구진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전문업체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부 연구진으로 일반 연구자가 아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라는 청년단체를 하나의 추진 주체로 구성한 것은 기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청년이 조사의 대상으로 참여한 사례들은 적지 않으나, 청년당사자가 청년정책의 설계 및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책연구에 주체로서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포함하거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 대체로 청년이 대상화되고 청년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한 결과를 기성세대인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 결과 도출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빚어지는 청년당사자 집단과 기성 연구자의 기본적인 이해 차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무엇보다도 그 간 청년들이 정책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의 기회가 이전에 비해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청년들의 참여가 일부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설계와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책연구부터라도 '청년당사자주의'가 확대 실현될 필요가 있다. 그 간의 청년정책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현실적인 실험 또한 필요하다는 연구진의 반성적 사고에 기초하여 청년단체를 본 연구의 주요 추진체계로 구성한 것이다. 다만, 청년단체들 중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를 공동연구진으로 구성한 것은 전국단위로 다양한 영역의 청년단체들이 회원으로 존재하는 청년단체는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파악해 보았을 때, 이 단체가 유일하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활동을 지속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연구 참여 제안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본 연구의 공동연구진으로 참여 여부를 운영위원들의 논의와 검토 과정을 통해 결정하였음을 밝힌다.

3) 단계별 일정 및 내용

제한된 예산과 일정 하에서 효율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계적 추진절차를 설계하고 연구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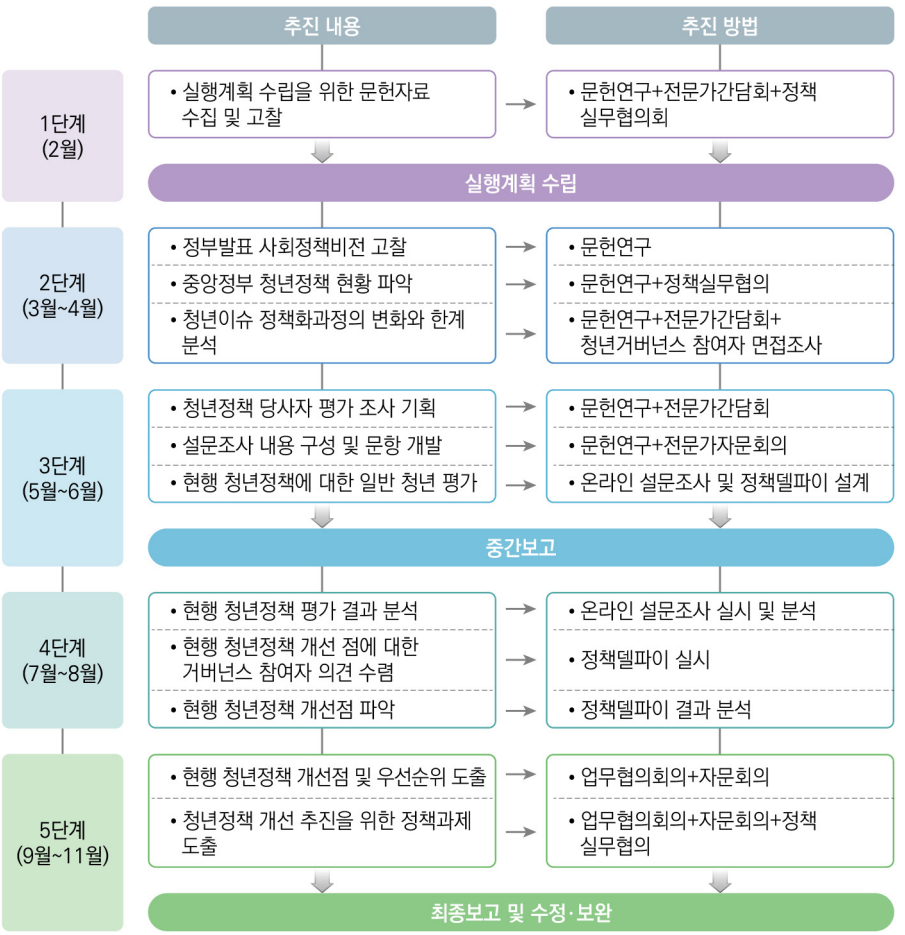


그림 Ⅰ-4 단계별 추진 일정 및 내용

제2장 '포용국가 실현' 관점에서의 청년정책 고찰

1.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 수립의 배경
2. 포용국가 실현에 있어서 청년정책의 중요성
3. 청년정책의 과거와 현재

2 ‘포용국가 실현’ 관점에서의 청년정책 고찰*

1.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 수립의 배경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포용국가’는 국가의 성장을 GDP와 같은 양적 경제성장에 집중한 결과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이 결국에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정책을 통하여 고용이나 문화와 같은 여건의 개선이 궁극적으로 혁신 발전을 가져온다는 개념임.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은 경제정책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가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하는 중심 축으로 내수경제의 촉진, 인적자본의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사회발전과 성장의 핵심요소임.
-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은 ‘사람’ 중심으로 분야별 사회정책을 재구성하고, 개인이 전 생애 걸쳐 직면하는 모든 일상을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사회정책과 연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1)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 수립의 배경

(1) ‘포용국가’의 개념

‘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 이 장의 내용 구성과 1.의 집필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2.와 3.은 변금선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19.0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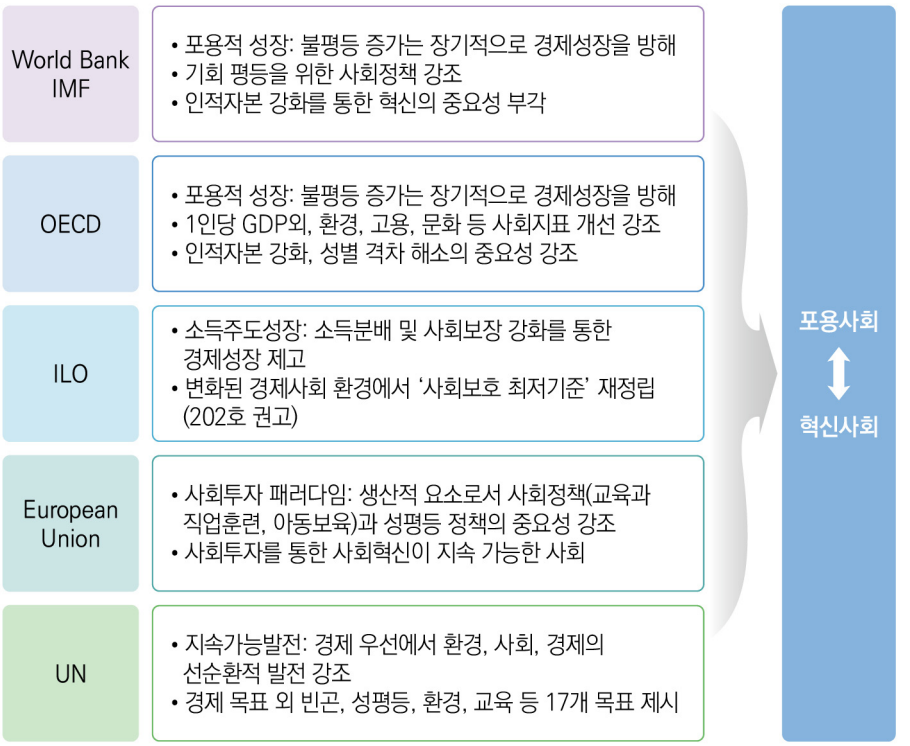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 목표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 전략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07., p.15), 2018년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 제시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의 목표는 ①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②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③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로 축약되어 설명된다.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정책기획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18.09.06.;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19.02.19.).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화시대의 '최소주의 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누리는 포용적 복지 체제와 혁신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정책기획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18.09.06.;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19.02.19.). 포용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 의료, 돌봄 등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경제성장의 과실이 사회 구성원에게 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09.11.;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19.02.19.; 보건복지부, 2019.02.12.).

(2) '포용국가' 비전 수립의 배경

'포용국가'라는 개념은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양적 성장에 집중한 결과,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것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8.09.11.;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19.02.19.).



* 출처: OECD(2014).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p.80.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09.11.).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p.11.

그림 II-1 국제기구의 포용사회 및 포용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국제사회에서는 OECD, IMF, WEF 등을 중심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그간 심화되어온 불평등을 해소해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development)'으로 향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OECD, 2014;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09.11.;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19.02.19.). OECD는 2018년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공동의 번역을 위한 사회정책: 포용적 미래'라는 정책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35개 회원국들이 포용적 사회정책이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였다(OECD, 2018.05.15.).

그와 같은 국제사회의 성장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성장 주요 지표였던 GDP(국내총생산) 뿐만 아니라 환경, 고용, 문화와 같은 사회정책 지표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사회정책을 통한 이들 지표의 개선이 경제성장을 위한 포용적 성장과 성장을 위한 혁신능력 배양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OECD, 2014;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0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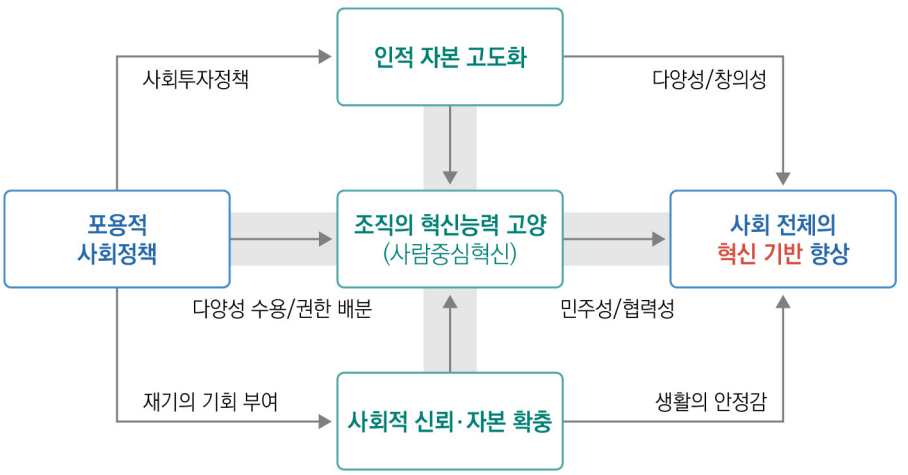
(3)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역할

2018년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 및 전략이 발표된 이후 후속조치로서 이듬해 2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이 추진계획(안)에는 문재인정부가 정의하는 포용국가의 핵심 개념이 단순한 포용적 관점이 아닌,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통한 혁신성장을 꾀하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는 것이 다시금 강조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의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은 경제정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가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하는 중요한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즉 포용국가 실현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정책은 내수 경제의 촉진, 인적자본의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성장을 뒷받침 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하나인 '소득주도성장' 달성에 포용적 사회정책이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인적자본의 확충은 우리사회 전반의 혁신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경제와 같은 비사회정책은 우리사회의 포용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 될 수 있다(정책브리핑 위클리 공감, 2019.01.07., p.2).

다시 말해,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와 고용·사회안전망 확대 등과 같은 사회정책의 추진은 가구소득의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국가가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인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해야할 '사람'에 대한 투자의 확대는 우리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혁신성장의 여건을 조성한다. 이에 더하여 정의와 공정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사회적 신뢰가 축적될 때, 개인의 창의성과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이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관계부처합동, 2019.02.19.,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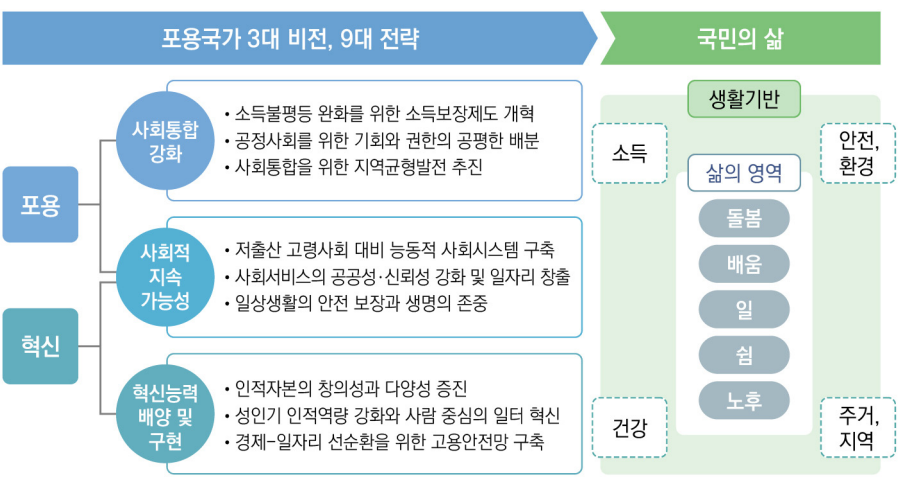


* 출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발표자료, 2018.09.11. p.15.

그림 II-2 포용적 사회정책이 사회의 혁신능력 향상에 미치는 경로

그렇다면 이러한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역할이 현실에서 실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할 것이고, 동시에 포용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하는 영역도 불가피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며,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관점에서 재구조화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즉 국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아가는데 각각의 정책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람'을 중심으로 분야별 사회정책을 재구성하고,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게 되는 일상을 삶의 영역과 생활 기반으로 분류한 후 기존의 사회정책과 연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현실의 삶의 영역을 돌봄, 배움, 일, 쉼, 노후로, 이를 뒷받침하는 생활기반을 소득, 안전·환경, 건강, 주거·지역으로 분류·재구성한 것이다(관계부처합동, 2019.02.19., p.4).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9.02.19.).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p.4.

그림 Ⅱ-3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방향 및 영역 재구성

2. 포용국가 실현에 있어서 청년정책의 중요성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생애발달과정 측면에서 청년은 포용적 사회정책의 핵심 대상임.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중간단계에 위치하며, 청년기는 생애초기라는 점에서 전생애 불평등 구조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침.
-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구조와 환경도 악화되고 있는데,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와 이중구조,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산,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로 요약될 수 있음.
- 노동시장 구조 불안정성으로 인해 다수의 청년들이 노동시장 이행이 지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하는 청년 다수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를 하고 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악화는 청년의 빈곤, 주거, 부채 문제를 심화시켜, 청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경제적 곤란을 넘어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 결혼과 출산의 기피, 심리정서적 건강 격차 확대, 공정성 인식의 계층적 분화가 포착됨.

사회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포괄한다. 과거 사회정책은 빈곤, 소득 불평등, 사회적 위험 등에서 취약한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소극적 역할에 집중하였으나(전병유 외, 2006; 남재욱·반가운, 2019 재인용), 최근에는 중첩적으로 상호연결된 사회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남재욱·반가운, 2019). 사회정책은 소득보장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중심의 소극적 정책에서 사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정책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이하 포용적 사회정책)은 이 같은 사회정책 기능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전통적 사회정책의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인적자본 개발과 역량 증진을 위한 사회투자 접근, 불평등의 세대간 이전을 끊기 위한 계층사다리 정책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다.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청년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서 살펴본 포용적 사회정책이 각 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청년정책

은 '청년'이라는 특정 대상을 목표 집단으로 하는 '대상자 중심'의 사회정책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포용국가 실현에 있어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청년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사회구조적 측면과 청년 개인이 처한 현실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1) 생애 발달과정 측면에서 청년의 의미

청년은 다양한 연령집단으로 정의되는데 통상적으로 10대 후반부터 20대에 이르는 연령대를 포괄한다. 그러나 최근 관측되는 성인이행기 과업의 이행 지체, 즉, 교육의 연장, 구직기간 연장, 결혼과 출산의 지연, 경제적·물리적 독립의 지연을 고려할 때 청년의 연령을 30대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게 되었으며(김수정, 2010; 문혜진, 2010; 이병희 외, 2010), 국내 청년정책도 그 대상을 30대까지 포괄하는 경향을 보인다(김기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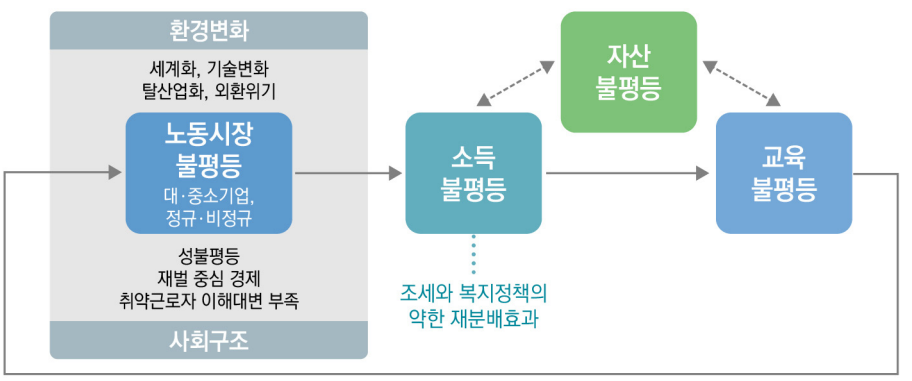
생애 발달단계에서 청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성인이행기에 놓여있는 집단이다. 생애 단계(life-stage)를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나눌 때, 청년은 아동-청소년-성인 중간에 놓여있는 '성인이행기(transition to adulthood)'에 위치한다. 생애과정(life-course) 관점에서 청년은 성인으로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 혹은 과업을 수행하며(Settersten, Furstenberg, & Rumbaut, 2005, p.3), 성인이행기의 주요 과업은 교육자격의 획득, 취업, 부모로부터의 독립, 자가의 소유, 결혼, 출산 등이 포함된다(남춘호·남궁명희, 2012).

이처럼 청년은 전 생애의 중간에서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사회구성원인 '성인'으로 이행해야 한다. 일찍이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청년의 시기를 '개인 생애를 발전시키는 일종의 과제를 수행하는 시기'로 정의하면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에 대해 성인으로 발전 및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로 접근한다. 또한, 청년을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서울시 청년허브 뉴스레터 #10, 2019.10.16.). 이러한 생애발달 단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은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혁신 능력의 배양 및 구현이라는 포용적 사회정책의 3대 비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대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청년은 성인 초기 경험을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구조를 형성한다. 노동경제학 관점에서 성인 초기에 경험하는 실업 등의 경험은 이후 노동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점 효과(scar effect)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병희, 2002; 강순희·안준기, 2010, Gangl, 2004). 생애과정 불평등 관점에서 성인 초기의 불리함(disadvantage)은 이후 생애에 누적되어 노년기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O'Rand, 1996).

사회 이동성(social mobility) 혹은 세대간 불평등 이전의 측면에서 성인 초기는 불평등 전이가 발생하는 시기이다. 청년은 본인이 속한 원가구의 자원을 기반으로 교육자격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사회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불평등 완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불평등 구조의 핵심 요소인 불평등의 세대 간 이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을 통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9.02.19.).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p.22.

그림 II-4 한국사회의 불평등 재생산 구조

또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청년은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비생산인구를 부양하고, 출산이라는 사회 재생산 역할을 수행한다. 근로연령대인 청년 인구의 감소는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경제적 불안정은 청년을 사회를 부양하는 집단이 아니라 부양받아야 하는 의존적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부모세대의 부담과 청년세대의 이후 생애 불안정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춰진 만큼 안정적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어 청년세대의 노후불안정을 높이고, 이후 이들을 부양해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도 가중시킨다. 청년 사회정책이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한시적, 임시방편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청년정책은 현세대, 미래세대를 포괄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사회정책이다.

혁신 능력 배양 및 구현 측면에서도 청년이 위치한 성인이행기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혁신 역량을 발휘하는 최적의 시기이다. 청년들은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견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기회를 찾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관련하여 직업탐색이론은 청년기에 경험하는 미취업 경험이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며, 청년이 이직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한다고 설명한다(Böheim & Taylor, 2002; Topel & Ward, 1992).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노동시장 분절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청년들이 소수에게만 허락된 안정적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한 '일자리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생활이 어려워 일자리 경쟁에 필요한 자격(스펙)을 갖추지 못한 일부 청년들은 본인의 역량과 상관없는 일자리에서 인적자본을 낭비한다.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를 위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청년은 생애발달 단계적 측면에서 전 생애의 중간단계에 위치하며, 교육자격을 기반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정착하고, 부모세대를 부양하고 미래세대를 재생산하며, 개인의 역량을 발견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을 발휘한다. 즉, 청년은 포용적 사회정책의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정부는 청년정책을 통해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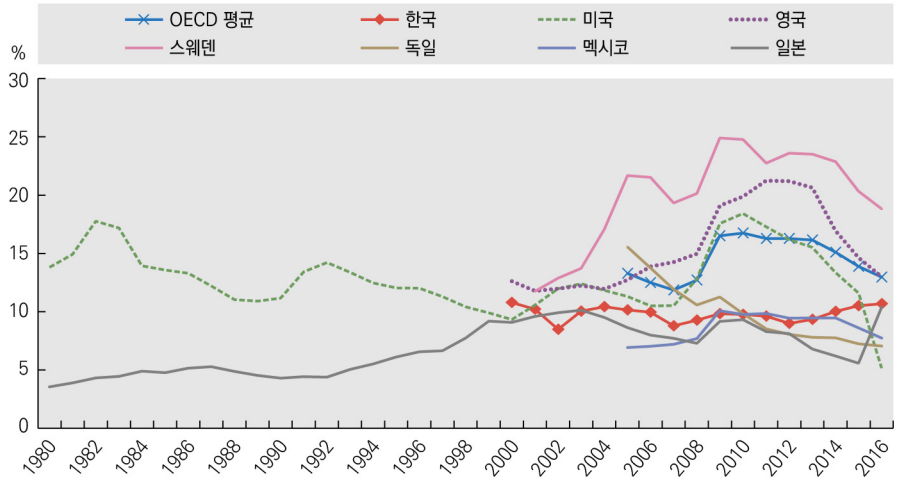
2) 청년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환경

여기서는 청년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환경을 노동시장, 경제적 불평등, 인구구조, 사회안전망(제도) 측면에서 확인하여 정책개입이 필요한 영역을 검토하였다.

(1) 청년 노동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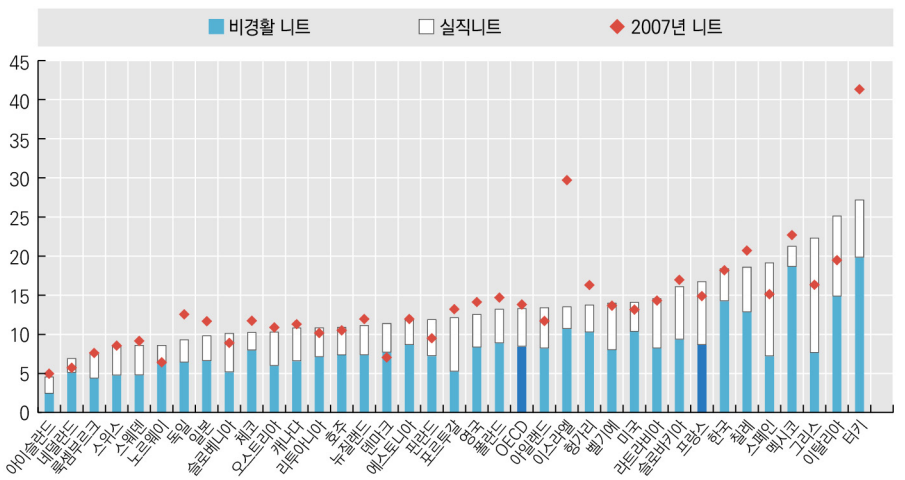
청년의 사회적 문제는 청년 실업, 니트 증가 고용지표 악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그림 Ⅱ-5]에 제시한 바와 같이, 1980년부터 2018년까지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15세~24세 청년층의 실업률 변화를 비교해보면,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011년 이후부터 증가해 그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한국의 니트(NEET) 규모는 2007년 18.2%에서 2017년 모두 18.4%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는 있으나, 이는 OECD 평균(13.4%)보다 높은 수준이다[2].

2) 2012년 현재 OECD 국가의 15세~29세 대학졸업 이상 고학력 니트 비율은 24.4%로, OECD 국가 평균인 12.9%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OECD, 2015; 변금선, 2018a, p.2 재인용).



* 자료: OECD (2019b), Youth unemployment rate (indicator). doi: 10.1787/c3634df7-en(2019.05.21. 추출).

그림 II-5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 비교 : OECD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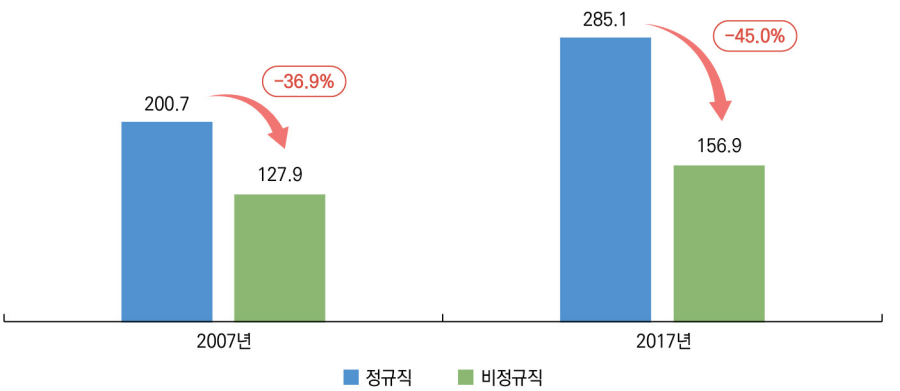
* 출처: OECD(2019a). Society at a Glance의 〈그림 5.5〉 발췌 (2019.05.21. 추출).
* 자료: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the OECD Education database.

그림 II-6 2007년과 2017년 청년(15세~29세) 니트 비율

둘째,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직이 어렵고,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간 격차 역시 커지는 경향도 보인다. 한국 노동시장은 성별, 학력, 기업의 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되어 있다(김유빈, 2017; 양재진, 2003; 정이환·김유선, 2011; 변금선, 2018a, pp.44-45 재인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점차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에 따르면 2007년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36.9% 낮았는데, 2017년에는 이 격차가 45.0%로 확대되었다(그림 II-7). 2018년 6월부터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55만 8천원, 정규직 근로자는 300만 9천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164만 4천원 수준이다. 전년대비 증가율도 정규직은 5.5%, 비정규직은 4.8%로 비정규직의 증가율이 더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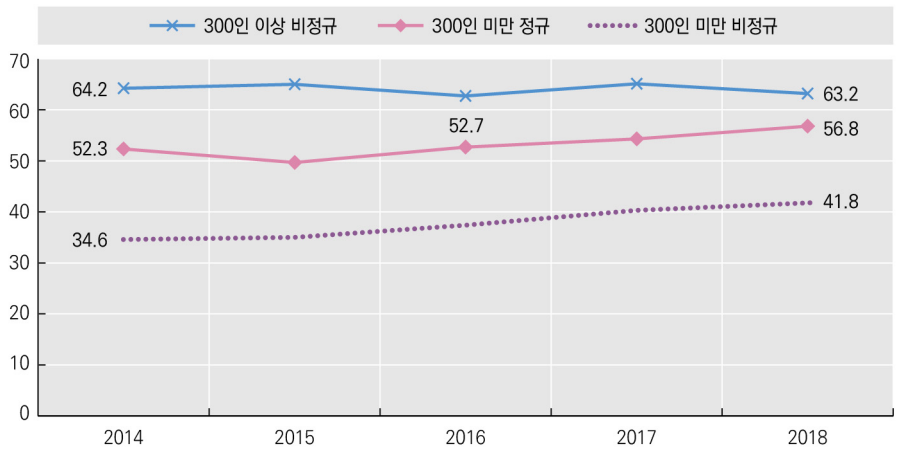
(단위: 만원)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2S&conn_path=I2 (2018.07.02. 추출).

그림 II-7 2007년과 2017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변화

임금격차는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의 '2017 임금근로자별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기업규모별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영리기업 중 대기업은 488만 원, 중소기업은 223만 원으로 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바 있다(통계청, 2019.01.30.). 또 고용노동부 '2018년 6월 기준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3만3,232원, 비정규직은 2만990원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1만8,873원, 비정규직 1만3,893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은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300인 이상 정규직 시간당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300인 이상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2018년 63.2% 이고, 300인 미만 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이보다 더 낮은 56.8% 수준이다. 2014년부터 대비 2018년에 그 격차는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임금수준보다 낮다(고용노동부, 2019.0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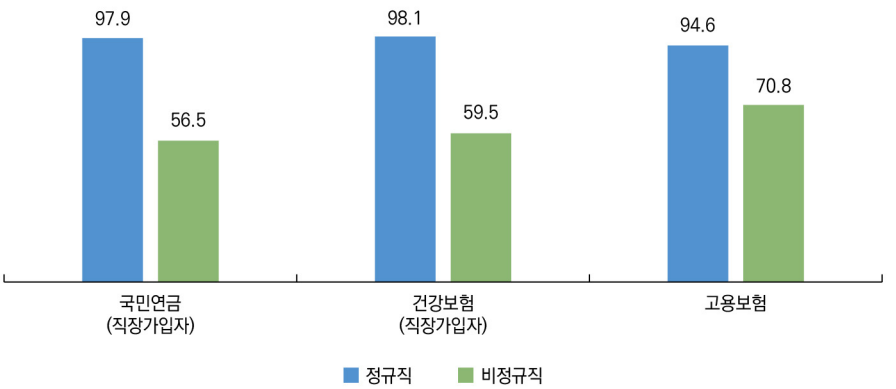


* 자료: 고용노동부(2019.04.25.) '2018년 6월 기준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발표', p.5 〈표〉 재구성.
* 주: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 상대적 비율임.

그림 II-8 사업체 규모 및 정규직 여부별 시간당 임금 비율 변화 : 2014년~2018년

이러한 노동시장 분절은 사회안전망의 약화로 이어져 결국에 사회안전망도 '이중화(dualization)'된다(Emmenegger, Häusermann, Palier, Seeleib-Kaiser, 2012).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사회보험, 일·가족 양립제도에서도 드러난다.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4.6%인 반면, 비정규직 가입률은 70.8%였으며,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 97.9%, 비정규직은 56.5% 수준이다(고용노동부, 2019.04.25., p.9). 또한, 2017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도입률은 각각 90.1%, 93.1%수준이나, 29인 이하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46.5%, 24.7%에 불과하다(통계청, 2017.12.15., p.29).

(단위: %)



* 자료: 고용노동부(2019.04.25.) '2018년 6월 기준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발표',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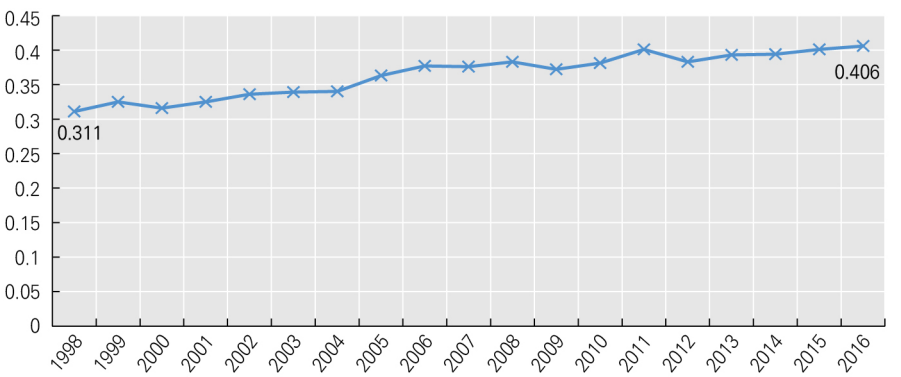
그림 II-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2) 사회경제적 불평등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대부분 국가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현상이다. OECD(2018b)의 'Broken Social Elevator'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지난 25년간 가처분소득 기준 상위 10%와 하위 10% 인구의 평균소득 차이는 7배에서 9.5

배로 격차가 더 커졌으며, 자산불평등도 악화되어 상위 10% 인구가 전체 부의 절반을 소유하고, 하위 40%는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사회이동성은 점차 줄어들어서, 하위계층이 상향이동 가능성은 줄어들고 상위계층이 계층을 유지할 가능성은 커졌다(OECD, 2018b, pp.3-4)[3].

한국 역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높아지다가 2010년 다소 감소했으나, 2015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김낙년, 2017; 변금선, 2018a, p.47에서 재인용). 홍민기(2017)가 고소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불평등 지표의 한계를 보완해 고소득 가구 표본을 반영해 보정한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기존 지니계수보다 13~18% 높았고, 그 경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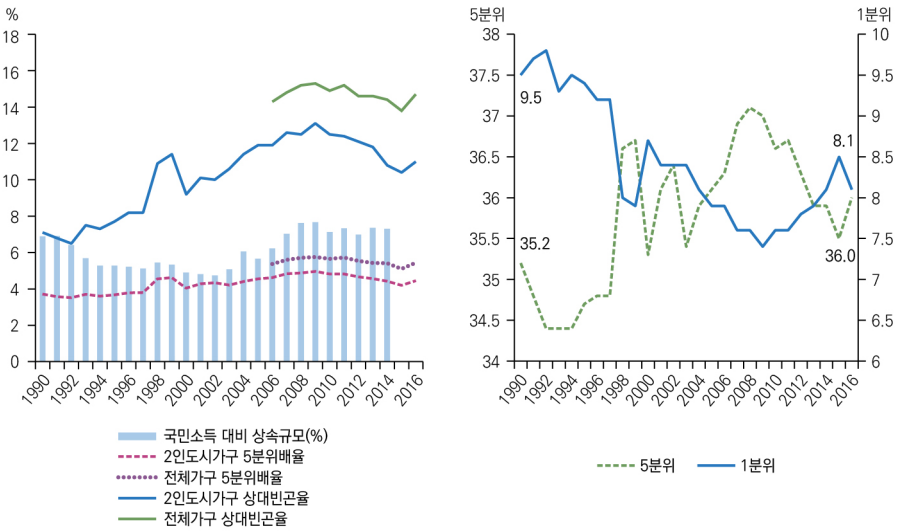


* 출처: 홍민기(2017)의 분석결과를 도식화함.
* 주: 가계동향조사의 가중치 조정, 고소득 가구 표본을 추가해 추정한 것으로 원래 지니계수보다 10~18%큼.

그림 II-10 1998년~2016년 지니계수 변화

3) 관련해 OECD(2018b)는 이러한 사회이동성의 경직성을 'sticky ceiling and floors'(끈적한 천장과 바닥)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과거에 비해 저소득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상위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상향이동 가능성 감소), 상위소득 집단이 계층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도 감소했다는 것이다(상위 계층유지 가능성 증가). 관련해 OECD가 소득하위 10%의 자녀가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으로 상향이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세대를 거쳐야 하는지 계산한 결과, OECD 평균은 4.5세대였으며 한국은 5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추정했다(OECD, 2018b, p.246).

소득과 더불어 자산불평등 수준도 악화되고 있다. 국민소득 대비 상속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김낙년, 2017), 소득 1분위의 소득점유율은 1990년 9.5%에서 2016년 8.1%로 감소했고, 5분위의 소득점유율은 35.2%에서 36.0%로 증가했다(통계청, 2017a; 변금선, 2018a, p.47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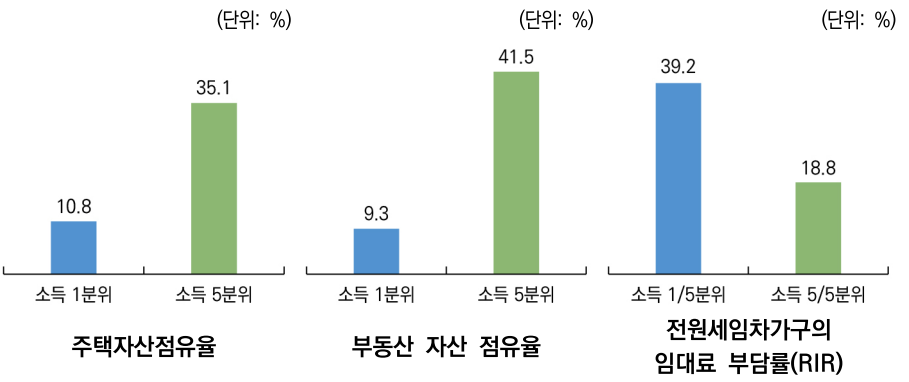
소득불평등 지표와 상속규모 추이 **5분위와 1분위의 소득점유율 추이**

* 출처: 변금선(2018a)의 p.47 〈그림 10〉 발췌.
* 자료: 국민소득 대비 상속규모 (김낙년, 2017), 소득분배 지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주: 1) 상속규모는 국세청 상속세 자료에 Piketty(2011) 방법을 적용해 김낙년(2017)이 추정함.
2) 소득분배 지표는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소득 기준.
3) 5분위와 1분위 소득점유율 추이는 2인이상 도시가구 처분가능소득과 균등화 소득 기준.

그림 II-11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추이

경제적 불평등은 부동산 자산 격차에서 보다 명료하게 확인된다. 소득5분위의 주택자산 점유율과 부동산 자산점유율은 각각 35.1%, 41.5%로 소득1분위 점유율보다 크다. 또 전월세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률(RIR)은 소득1분위가 39.2%로 소득5분위 0.188보다 크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2017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연소득만으로 집을 구매하기까지 12.8년이 소요되지만, 고소득층은 이보다 절반수준인 5.8년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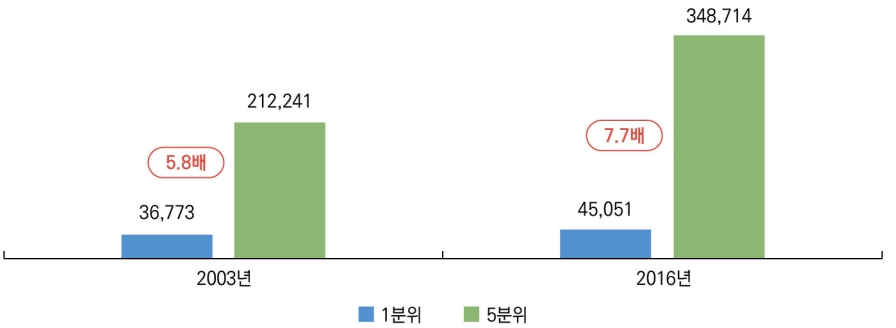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2017a).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Ⅱ-12 자산 유형별 점유율 및 임대료 부담률(RIR)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불평등의 세대간 이전에도 악역향을 미친다(Corak, 2013). 이경희(2017)는 부모소득과 자녀소득의 상관관계 계수가 197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 이후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최근 코호트에서 소득계층의 세대간 대물림이 커졌다(이경희, 2017; 변금선, 2018a, p.48 재인용). 계층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 영역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03년에는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5분위의 정규교육 이외의 사교육비 총액이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소득1분위의 5.8배였는데, 2016년에는 7.7배로 증가하였다(그림 Ⅱ-13).

(단위: 월간, 원)



* 자료: 통계청(2017b).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06&conn_path=I3 2018.07.09. 검색 및 인출.
* 주: 1) 소득5분위별 가계수지, 2인이상 가구.
2) 사교육비 : 학원 및 보습교육, 기타교육을 합한 금액.

그림 II-13 도시가구의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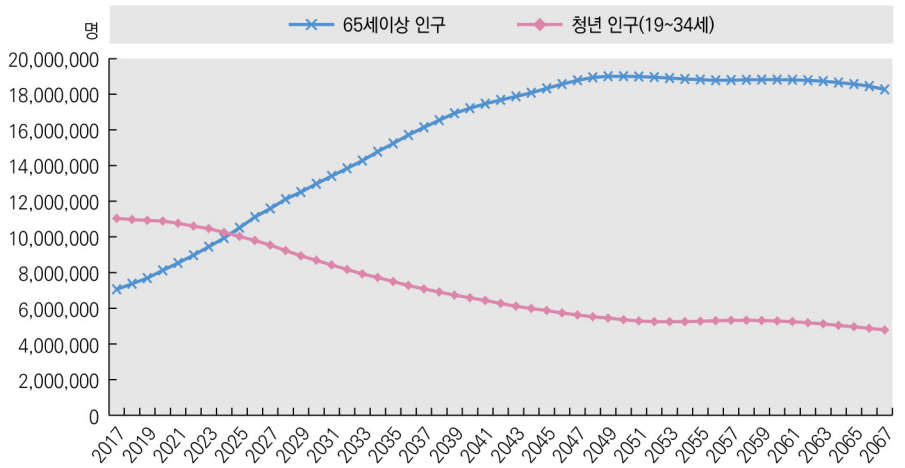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악화는 공정성(justice)[4]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대에서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김석호(2018)가 한국사회종합조사자료를 이용해 연령별 및 세대별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5년의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나, 2014년의 20대는 모든 연령대 중 상향이동 가능성 인식 수준이 가장 낮았다(김석호, 2018, p.11). 이러한 "사회이동성의 약화는 과거보다 상향이동 기회가 줄어든 환경, 즉 세대 간 공정성 약화와 청년세대 내의 기회가 부모세대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세대 내 공정성 약화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김석호, 2018, pp.9-10).

4) 공정성(justice)은 사회정의를 의미하며, 공정성 인식은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과 절차 공정성(procedural justice)으로 구분된다. 분배 공정성을 평가하는 원칙에는 형평원칙(능력기반 배분), 균등원칙(능력과 무관한 평등), 필요원칙(개인의 필요를 기준으로 한 배분) 등이 있다(이희정, 2018, p.126).

(3) 인구구조와 가족의 변화

초고령사회와 초저출산이 맞물린 인구구조의 변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대표되는 가족구조의 변화는 부양 부담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로서의 청년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현재 청년 인구는 1,104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707만 명보다 많지만, 2025년부터 역전되어 2067년 청년 인구는 479만 명, 노인 인구는 1,827만 명으로 노인 인구가 청년 인구의 4배 가까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9).



*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2019.07.27. 추출).

그림 II-14 19세~34세 청년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인구 변화 추계

이에 더해 1인 가구의 증가, 전통적 가족 기능의 약화와 가족의 변화는 가족을 통한 사적 이전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통계청, 2018.09.28.).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52.6%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남성은 30세, 여성은 27세와 83세이다(통계청, 2018.09.28., p.10). 34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수는 2000년 79만 4천 가구에서 2017년 154만 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통계청, 2018.09.28., p.12).

(4) 청년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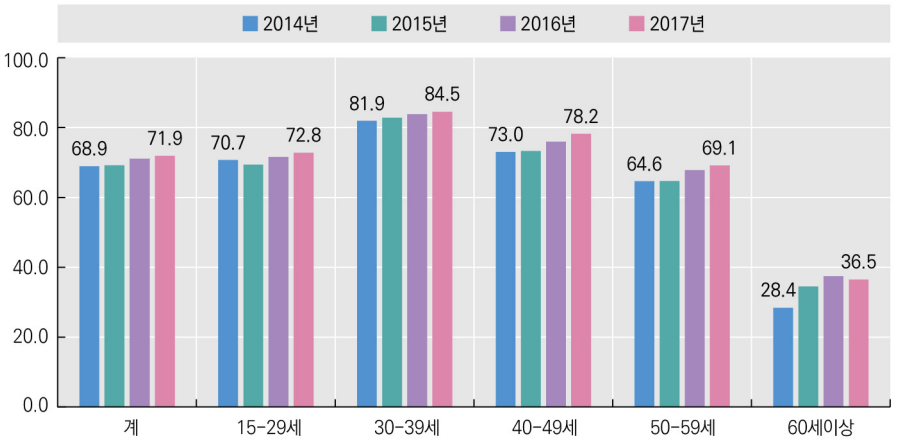
혁신의 원동력은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정성에 있다(최영준·윤성열, 2018). 그러나 오늘날 청년이 직면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청년들의 창의적, 혁신적인 도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증가하였는데, 1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7년 현재 72.8%로 50세 이상 중고령층에 이어 낮은 수준이다(그림 Ⅱ-15).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5]의 청년(15세~29세) 수급률은 2.8%로 매우 낮다.

연령 범주가 다르므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2016년 18세~25세 청년층의 빈곤율이 10.2%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빈곤한 청년 다수가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적지 않은 빈곤 청년들이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에게 엄격한 조건부 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 단위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청년이 수급자격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빈곤층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금, 현물급여를 지급한다.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선을 적용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로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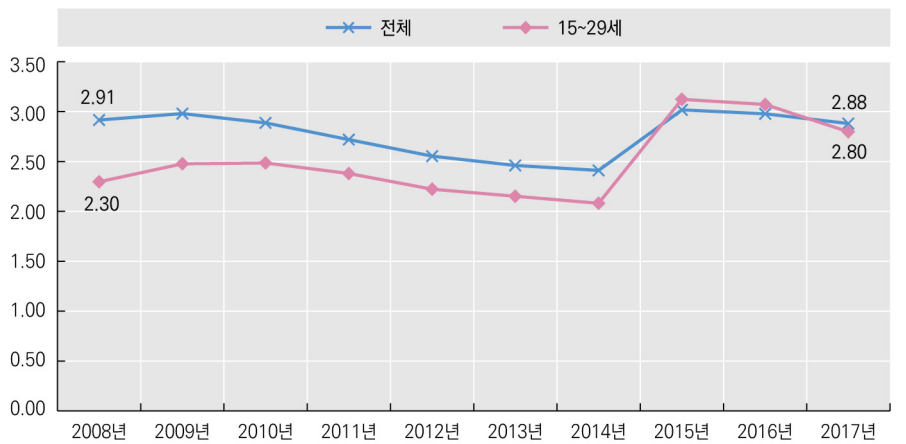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G02S&conn_path=I3 (2019.05.20. 추출).

그림 II-15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률

(단위: %)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각 연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conn_path=I3 (2019.05.21. 추출).

그림 II-16 청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3) 청년이 직면한 삶의 현실

(1) 노동시장 이행의 지체와 혁신성장 기회의 제약

① 노동시장 이행의 지체와 불안정 고용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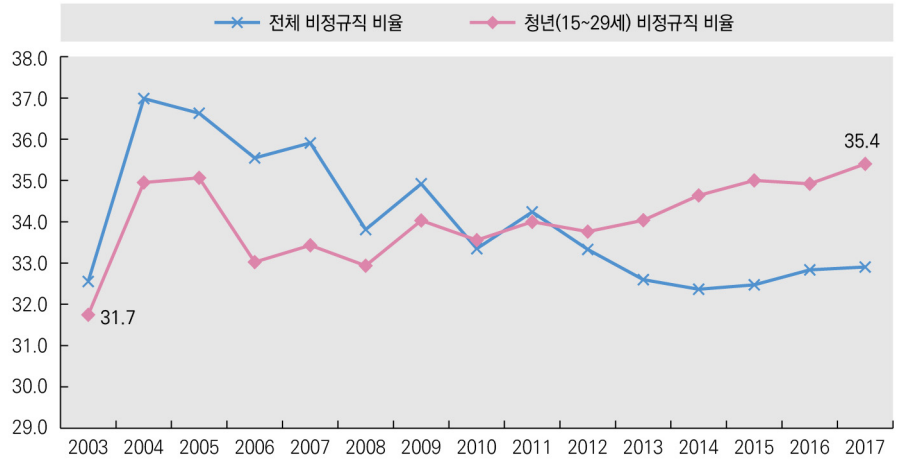
청년 실업과 니트의 증가는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행에 실패한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일하는 청년들의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세계적 경기침체와 노동 불안정성 증대로 인해 좋은 일자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30세~54세 연령집단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9.6%p 감소하였으나, 29세 이하 청년층의 저임금근로자의 감소 비율은 5.3%p 수준이다(표 Ⅱ-1).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규모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3년 31.7%에서 2017년 35.4%로 증가하였다(그림 Ⅱ-16).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에는 전체 비정규직 비율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1년 이후에는 청년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비정규직 비율을 역전하였다(변금선, 2018a, p.44).

표 Ⅱ-1 주요 고용지표 변화

(단위: %)

구분		2010년(A)	2015년	2018년(B)	%p 변화(B-A)
실업률	15세~29세	7.9	9.1	9.5	+1.6
	15세~64세	3.8	3.7	3.9	+0.1
고용률	15세~29세	40.4	41.2	42.7	+2.3
	15세~64세	63.4	65.9	66.6	+3.2
저임금 근로	29세 이하	27.1	28.2	21.8	-5.3
	30세~54세	20.2	13.1	10.6	-9.6

* 자료: 실업률, 고용률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저임금근로 비율은 김하영(2018)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함.



* 출처: 변금선(2018a)의 p.44 〈그림 9〉 발췌, 일부 수정.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주: 1) 청년은 만15세~29세를 의미하며, 전체는 만15세~64세 생산가능인구를 포함함.
2)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자 중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 근로를 포함함.

그림 II-17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의 변화: 청년층과 전체 비교

청년들이 경험하는 첫 일자리의 불안정성도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부가조사'에 따르면 15세~29세 청년들이 경험한 첫 직장의 근속기간은 1년 5.3개월이었으며, 첫 일자리 취업 당시 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45.3%에 달했다. 청년 고용률은 43.6%로 전년동월보다 0.9%p 높아졌으나,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0.8개월로 전년동월 대비 0.1개월 길어졌다(통계청, 2019.07.16.). 청년들이 경험한 첫 일자리 중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의 비중은 56.7%로 전년동월 대비 4.5%p 감소하였고,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일자리는 24.7%로 전년동월 대비 3.5%p 증가했다(통계청, 2019.07.16., p.16).

청년층의 높은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졸업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남재욱·김영민·한기명, 2018).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첫 일자리 취업 기간은 대학졸업 이상의 첫 일자리 취업 기간보다 길었다. 대학졸업 이상 청년이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8.0개월, 고졸 이하 청년은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1년 3.8개월이 소요되었다(통계청, 2019.07.16., p.13).

표 II-2 15세~29세 청년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별 분포

(단위: %)

			2018. 05.	2019. 05.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증감
〈 전 체 〉			100.0	100.0	-
임금근로자			97.9	97.6	-0.3
	계약여부	계약기간 정함	25.0	29.1	4.1
		1년 이하	21.2	24.7	3.5
		1년 초과	3.9	4.4	0.5
		계약기간 정하지 않음	72.9	68.6	-4.3
		계속근무 가능	61.2	56.7	-4.5
		일시적 일자리	11.7	11.8	0.1
	근무 형태별	전일제	81.1	78.3	-2.8
		시간제	16.9	19.3	2.4
자영업자			1.3	1.2	-0.1
무급가족종사자			0.8	1.1	0.3

* 출처: 통계청(2019.07.16.)의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p.16 〈표〉 발췌.

② 청년들의 역량 발휘 어려움 : 역량개발 기회의 제약과 혁신의 지체

4차 산업혁명과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일자리의 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와 불안정 고용의 증대를 고려할 때 미래세대 청년

들이 마주하게 될 노동시장은 더 절망적이다[6]. 기획재정부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적 잠재성장률이 2020년~2030년 2.6%에서 2050년~2060년엔 1.1%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했다(기획재정부, 2015.12.04., p2). 이는 성장의 주체인 청년인구의 감소와 역량의 지체가 모든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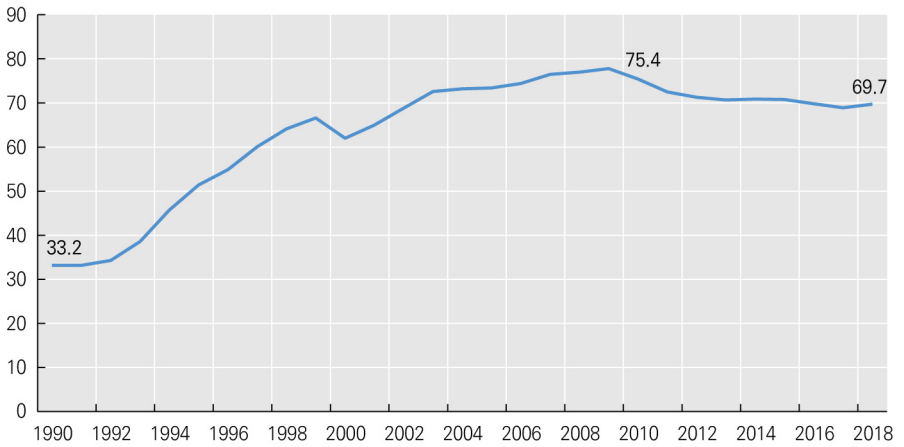
우리나라 청년들의 인적자본과 역량 수준은 매우 높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비중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고학력자의 고용률은 기대에 못 미친다. 1990년 33.2%에 불과했던 고등교육 진학률은 2010년 75.4%까지 증가한 후 소폭 감소하여 2018년에는 69.7%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Ⅱ-18).

그러나 2017년 기준 25세~34세 청년의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졸업자의 고용률은 75.0%로 OECD 평균인 84.0%보다 낮으며, 우리나라보다 청년 대졸자 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뿐이다(OECD, 2018a, pp.73-75). 이에 더하여 성별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청년 대졸 여성의 고용률은 69.0%, 남성의 고용률(81.0%)보다 12.0%p 낮으며(OECD, 2018a, p.74., OECD, 2018d), 2018년 현재 25세~34세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9%로 OECD 국가 평균인 72.8%보다 낮다(OECD, 2019c).

역량 활용의 제약은 다수의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자리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향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통계청(2019.07.16.)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9년 5월 현재 공무원, 교원을 준비하는 청년은 전체 취업시험 준비자의 34.9%이며, 고시 및 전문직, 언론사 및 공영기업체를 포함하면 51.5%에 이른다(통계청, 2019.07.16., p.18).

6) Goos, Manning, & Salomons(2014)는 중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복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고소득과 저소득이 증가하는 일자리의 양극화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최영준, 윤성열, 2018, p.9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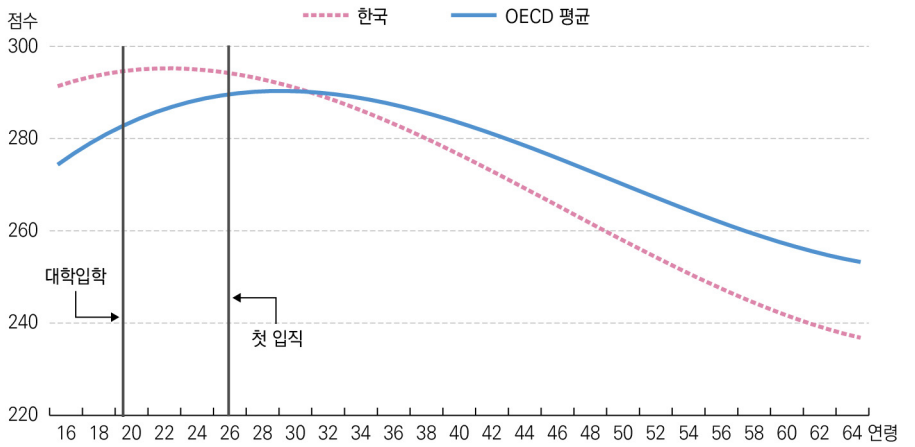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기본통계」각 연도 자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2019.05.20. 검색 및 인출.
* 주: 1) 고등교육기관진학률 = (고등교육기관 진학자 ÷ 고등학교 졸업자) ×100.
  2) 2000년부터 대학등록자 기준으로 보정된수치이며 그 이전은 대학합격자 기준임.
  3) 졸업자는 2월 졸업일 기준이며, 진학자는 4월 1일 기준임.

그림 II-18 고등교육 진학률 : 1990년~2018년

역량의 활용뿐만 아니라 역량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대까지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이 유지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역량 수준이 가파르게 감소한다(그림 II-19). 언어능력으로 측정한 역량은 대학에 진학하고 첫 일자리에 진입하기 전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노동시장 이행기부터 급격히 떨어진다. 이는 청년들이 아동, 청소년기에 누적한 역량을 대학재학 기간 동안까지는 유지를 하지만, 대학 졸업시기에 접어들어서는 능력을 발휘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지체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자료: OECD, PIAAC(The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원자료.

그림 Ⅱ-19 연령별 역량 수준(언어능력 점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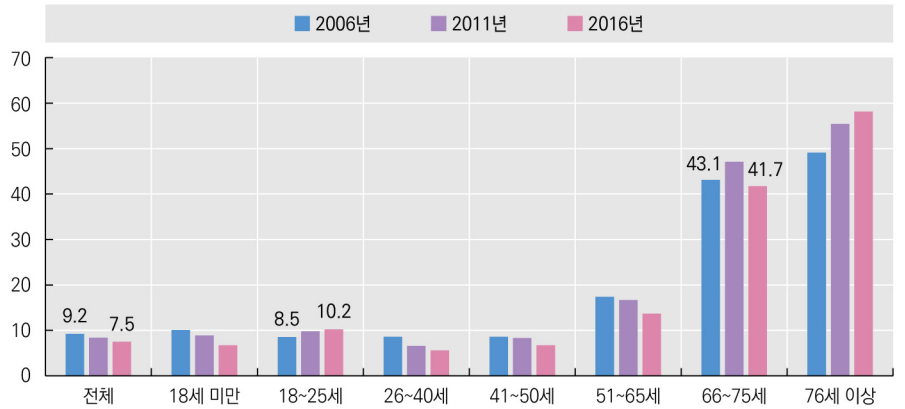
(2) 사회경제적 불평등 증가로 인한 삶의 격차 확대

① 경제적 어려움 : 빈곤, 주거, 부채 문제 심화

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체 빈곤율은 2006년 9.7%에서 2016년 7.5%로 감소했지만, 18세~25세 청년층의 빈곤율은 8.5%에서 10.2%로 증가하였다. 전체 연령대 중 빈곤율이 증가한 연령대는 청년층과 76세 이상 고령층이다[7](그림 Ⅱ-20).

7) 우리나라 청년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아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개인빈곤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빈곤율을 산출하면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아짐을 확인하고 있으며(김문길 외, 2017), 청년 가구의 빈곤위험이 최근 더 높아졌고 교육수준(대졸 이상)의 빈곤 예방 효과는 감소하고 실업의 빈곤위험 효과가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Byun, 2019).

(단위: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자료를 재구성해 도식화함.
* 주: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한 분석임. 상대적 빈곤율은 가처분 중위소득 50% 미만 개인을 의미함.

그림 II-20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청년층의 주거조건은 다른 연령층보다 열악하다. 국토교통부의 '2016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39세 청년의 1인가구 비중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청년 47%, 중장년층 18.0%, 노년층 42%),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이 64.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7.2%로 전체 평균인 5.4%보다 높다(국토교통부, 2016). 쪽방이나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도 10.1%에 달한다(관계부처합동, 2017.11.29., p.10). 청년층은 경력 형성 초기이므로 다른 연령대보다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RIR)도 전체 평균보다 높다(청년 19.5%, 전체 18.1%)(관계부처합동, 2017.11.29., p.10). 한편, 자녀와 함께 사는 청년부부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8] 비율은 16.9%로 장년가구주 13.7%보다 3.2%p 높은 수준이다(이태진 외, 2016, p.144).

8)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란, 방수기준과 면적 기준, 그리고 시설기준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미달인 가구를 의미한다(이태진 외, 2016, p.149).

표 II-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가구		13.88
청년가구주 가구		12.31
장년가구주 가구		13.71
청년 가구	전체 청년 가구	13.36
	청년 1인가구	14.17
	청년 부부가구	3.85
	청년 부부+자녀 가구	16.87
	부모+청년가구	13.81
	기타 청년가구	12.83

* 출처: 이태진 외(2015). 2014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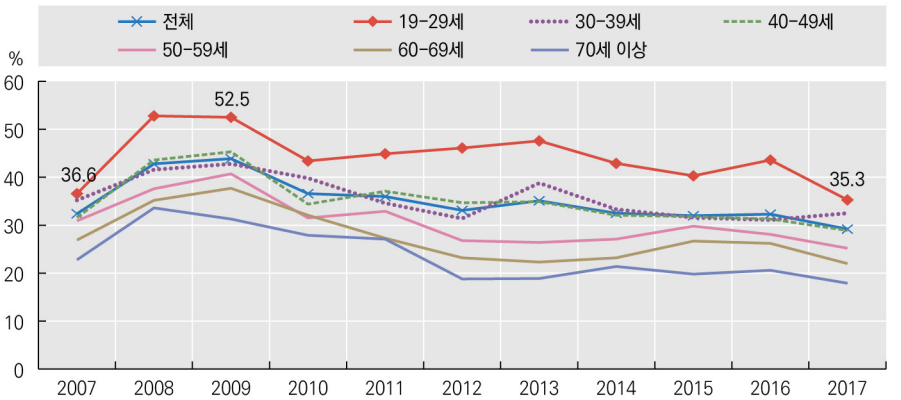
한편,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 채무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 중 채무가 있는 청년은 2016년 1만1,487명에서 2017년 1만1,831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개인회생 신청자는 7,165명에서 9,863명으로 증가했다. 대법원에 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2013년 58,951명에서 2016년 50,155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전체 연령집단 중 20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20대는 2016년 484명에서 743명으로 53.5% 증가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는 628명에서 730명으로 16.2% 증가하였다(금태섭의원실, 2017).

② 청년의 불건강(ill health) :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의 제약

내재화된 경쟁과 만연화된 불안정성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할 청년들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건강'조차 위협하고 있다. 청년은 모든 연령집단 중

가장 건강한 집단으로 간주 되어왔다. 이 때문에 청년은 건강정책에서도 주된 정책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불건강을 경험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9세~29세 청년 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5.3%로, 2009년 52.5%에서 크게 낮아졌다[9].

(단위: %)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5(2019.05.21.추출).
* 주: 조사대상자 중 주관적 건강상태에 건강상태 '좋음' 또는 '매우 좋음' 응답자 수 비율.

그림 II-21 연령별 주관적 건강 '좋음', '매우 좋음' 응답자 비율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진료를 받은 20대 우울증 환자는 9만8,434명으로 2012년(5만2,793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공황장애 환자도 8,024명에서 2만1,204명으로 증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김지경 외(2018)는 20대 청년의 심리·정서문제의 세대 내 격차와

9) 정부는 올해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20대~30대 청년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0세와 30세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검대상자 648만3261명 중 수검자는 162만906명으로 수검률이 25.0%였고,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검율은 12.23%로 전체 수검률의 절반에 그쳤다. 한편, 20세, 30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는 수검대상자의 26.4%로 4명 중 1명이 우울증 의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윤소하의원실, 2019.10.04.).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20대 청년의 7%가 심한 우울증 상태에 있으며, 8.6%는 심한 불안증을 경험하고 있었고, 우울·불안·자살생각 경험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고위험 비율은 11.1%에 달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경제여건이 낮고 경제적 박탈경험이 있는 청년이 고위험 집단에 속하는 것을 검증해 심리·정서 문제가 사회적 격차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김지경 외, 2018).

③ 노력의 불평등한 배신 : 공정성 인식의 계층분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의 경제적 곤란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들은 각자가 위치한 '출신배경'(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기회, 과정, 결과가 달라지는 고전적 '세습사회'를 마주하고 있다[10]. 다수의 실증연구에서는 노동생애 초기 노동시장 성과가 출신배경에 따라 계층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김종성·이병훈, 2014; 박미희·홍백의, 2014; 변금선, 2018b; 김연아·정원오, 2016; Byun, 2018). 90년대생의 삶의 질 수준도 출신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분석되었다(변금선·김기헌, 2019).

이 같은 정책적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는 청년을 특정한 생각을 공유하는 기존 세대와 구별되는 '청년세대'로 만들고 있다.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에 관한 청년들의 인식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인식격차를 극명히 보여준다. 2018년 2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9~59세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하는 일이 같다면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10) 박원익·조윤호(2019)는 90년대생 청년이 살고 있는 현재를 "'세습사회'라는 고전적 사회에 던져진 '공정세대'" 라고 묘사하고,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계층이동성이 차단된 세상', 즉 '업적주의'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라고 분석했다(박원익·조윤호, 2019, p.59).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은 81%였으나, '어렵게 취업을 준비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의 차등 대우는 불가피하다'는 것에 동의한 경우도 61.3%였다. 20대~30대 청년 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 청년들은 "먼저 들어갔다고 정규직화를 하면 내가 정규직이 되기 위해 노력한 '투자'는 누가 보상하나" 등의 이유로 '차등적 공정'을 지지하였다(한겨레, 2018.02.05.). 능력 기반 업적주의에 의해 자원과 기회가 배분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절차와 경쟁 없이' 이루어지는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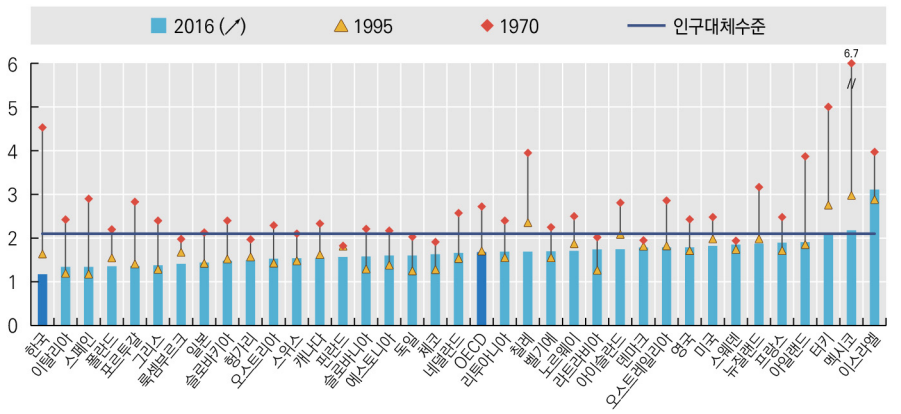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차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나타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2016년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형평원칙에 따른 공정성 인식)를 분석한 최근 연구(이희정, 2018)에 따르면,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고 하향 변화를 경험한 청년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

(3) 인구구조 변화의 결과

청년 인구의 감소와 가족의 변화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지연하거나 출산 자체를 하지 않는 결과, 즉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을 의미하는 인구대체수준은 2.1명인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감소해 인구대체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2018년 현재 합계출산률은 0.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통계청, 2019). 이러한 초저출산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비혼과 만혼,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출산을 미룬 결과이다. 최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사회재생산 역할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 된다[11].

이러한 인구감소는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의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이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한편으로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들이 자원, 기회, 나아가 사회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게 만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12]가 0.5미만인 지방소멸 위기 지역은 228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39.0%에 이르며, 읍면동 기준으로 위험지역은 1,503개로 전체 43.4%에 달한다(이상호, 2018).



* 출처: OECD(2019a). Society at a Glance의 〈그림 4.4〉 발췌.
* 자료: OECD(2018c), "SF2.1 Fertility rates", OECD Family Database, http://oe.cd/fdb.(2019.05.21.추출).

그림 II-22 15세~49세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 변화: OECD 국가 비교

청년 1인가구의 증가는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청년 1인가구는 기본적 주거, 소득상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2000년 20대~30대 1인 미혼가

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1992년~1996년생(2017년 현재 21세~25세)의 7.5%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6.6%로 다른 연령집단(1982년~1991년생, 2017년 현재 26세~34세)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변금선, 2019, p.45).

12) 20세~39세 가임여성인구를 65세 인구로 나눈 값으로, 가임여성인구가 노인인구보다 적으면 지방소멸 주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 지방소멸 위기인 것으로 구분한다(이상호, 2018, p.5).

구의 주거 점유형태는 전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가장 높고, 동시에 전체 연령대 중 월세 비중이 가장 높았다(통계청, 2018.09.28., p.26).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악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할 수 있는 근로연령집단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청년 1인 가구는 실직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필요성은 최근에서야 시작되기 시작하여 청년 1인 가구는 행정적인 가구분리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 사회안전망 확충이 요구되는 이유이다[13].

(4) 사회안전망의 공백과 사회적 위험의 계층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들은 '생애과정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미래세대 청년들이 개인의 역량을 발견하고 키워 혁신 역량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새로운 도전에서 비롯되는 실패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왔다. 사회정책이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부재는 취약한 위치에 놓인 청년들의 사회적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청년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다. 미숙련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인 청년들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2018년 김용균씨, 2016년 구의역 김씨 모두 청년이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생명을

13) 이는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대조적이다. 노인 1인가구의 증대는 노인빈곤과 노년기 소득불평등 악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구인회, 2019, p.196), 정부는 기초연금의 급여수준 인상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하고 노인일자리 수를 대폭 확대해 왔다.

잃은 근로자는 971명이었고, 이 중 94명이 18세~34세 청년이었다(고용노동부, 2018., p.18).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명 중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한 근로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51‰(퍼밀리아드)이었는데(고용노동부, 2018, p.1), 2015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사망사고만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멕시코(0.81‰), 터키(0.69‰)이며, 네덜란드는 0.05‰, 스웨덴은 0.07‰에 불과하다(ILO. 2018).

4) 청년의 현실 진단과 청년정책 대응 방향

이상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요약하면 청년들이 직면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와 역량 기반의 약화, 그리고 사회적 격차의 확장은 청년들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키우지 못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 일자리 감소와 불안정 일자리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재편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는 포용적 사회정책의 확충이 시급하다.

표 II-4 청년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직면한 현실, 그리고 정책 요구

사회구조적 환경	청년이 직면한 삶	청년의 정책 욕구
• 노동시장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행의 지연 불안정 고용(저임금, 비정규직) 역량발휘의 제약	양질의 일자리 역량발휘 기회 확대
• 사회경제적 불평등 소득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계층화 공정성 인식 악화	경제적 곤란 심화 불건강 격차 확대 공정성 인식 계층화	기회, 과정, 결과의 평등
• 인구구조 청년인구 감소 1인가구 증가	가족형성 지연 사회지속가능성 저하 (초저출산) 지역 격차 (지역인구 소멸)	최소한의 자립기반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 사회정책의 지체 청년이 배제된 사회정책	사회적 위험의 계층화	포용적 사회정책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3. 청년정책의 과거와 현재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청년정책은 '청년=근로능력집단'이라는 전통적 틀에 따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됨, 김대중정부에서 청년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 대응책 중 일부였고, 노무현정부 시기에 청년실업이 고착화되면서, 고용정책의 핵심 대상이 청년으로 부상하였으며, 이후 '고용'을 강조한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정책을 대폭 확대함.
-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문제는 고용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고용정책만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으나, 청년정책은 여전히 고용정책 중심으로 추진됨.
-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은 고용정책에서 포용적 사회정책으로 확장되었으나, 청년정책의 정의, 대상, 목표, 중장기적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위주로 청년정책을 추진해 청년 모두를 위한 사회정책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실정임.
-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기반으로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생활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되, 사회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응하는 거시적 전략도 병행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1) 청년정책의 전개 동향

(1) 청년정책 확대 과정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년들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사회경제적 구조의) '불평등', (역량개발과 발현의) '결핍'이라는 현실을 사회적 지원 없이 개개인별로 감내해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기성세대가 규정한 '젊고 건강하고 실패해도 괜찮은 청년'이라는 고정된 인식 속에서 청년정책을 구상하였고, 그 결과 고용정책 중심으로 정책이 확장되었다.

문재인정부 이전 역대 정부(김대중 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청년정책은 고용중심 청년정책의 확장과 그로 인한 한계를 안고 있다. 제시된 〈표 Ⅱ-5〉를 보면, 청년문제에 대한 언론 이슈의 프레임과 역대 정부별 청년정책의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표 II-5 청년문제 프레임과 청년정책 : 김대중정부~박근혜정부

시기	김대중정부 1998-2002	노무현정부 2003-2007	이명박정부 2008-2012	박근혜정부 2013-2017.04.
청년 프레임	청년이슈 태동기	청년문제 프레임 형성기	청년문제 프레임 분화기	청년문제 프레임 전환기
	ICT와 세계화 청년 참여와 활동 청년문화 콘텐츠 글로벌 청년문화	청년 정치참여 청년우울 청년실업 경제양극화	생애주기별 문제 일자리 창출·질 개선 글로벌 경제위기 청년 창업활동	일자리 문제 정치참여 대학 창업지원 경제 개혁 저출산 고령화 청년복지정책
청년 정책	실업대책위원회 청년 신규실업자	청년실업대책특위 청년 고용촉진	청년고용촉진특위 청년 고용촉진	청년고용촉진특위 청년 고용촉진
	정부 지원 인턴제 청년 점포임차지원	청소년직장체험 해외취업지원 기능사양성 훈련 고용정보망운영 청년고용촉진장려금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해외취업연수 바이오전문인력양성 신규직업자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버스(취업상담) 중소기업직업체험 내일채움공제 대학중심취업설명회 청년창업 2030정책참여단 해외취업정보제공

* 출처: 청년 프레임은 임성근 외(2018)에서 언론 보도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구조화한 〈표 2-20〉(p.42)을 발췌.
청년정책은 김기헌(2017)의 p.62〈표 3〉, 김기헌 외(2017), 국회입법조사처(2009), 노동부(2001)를 참조해 재구성함.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인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김대중 정부의 실업대책은 중장년 대량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청년실업은 그다지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청년실업이 문제가 된 것은 외환위기의 충격이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전이된 노무현정부시기라 볼 수 있다. 노무현정부는 청년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실업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청년 고용정책을 마련하였다(국회입법조사처,

2009)[14]. 세계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이명박정부는 '고용률 70%' 공약의 이행을 위해 청년 고용정책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그러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청년정책의 기조는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

(2) 성과와 한계

문재인정부 이전 청년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청년을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청년은 사회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은 사회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취약인구집단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물적 토대를 생산하는 사회의 핵심동력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 이후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청년을 사회정책 대상으로 편입시켰고, 비록 그 영역이 고용정책에서 확장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지원 대상으로서 청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한계 역시, '고용정책'에 국한된 청년정책의 확장에서 발견된다. 청년 당사자들의 현실은 단지 고용에 머물지 않고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청년문제의 영역은 일자리에서 복지, 저출산 고령화 등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다면적 어려움이 특정 집단에 가중되는 청년의 세대내 내적격차도 포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청년정책은 고용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청년이 '정책'안으로 편입되지 못하였고, 사회에서 배제된 청년들이 지원정책에서조차 배제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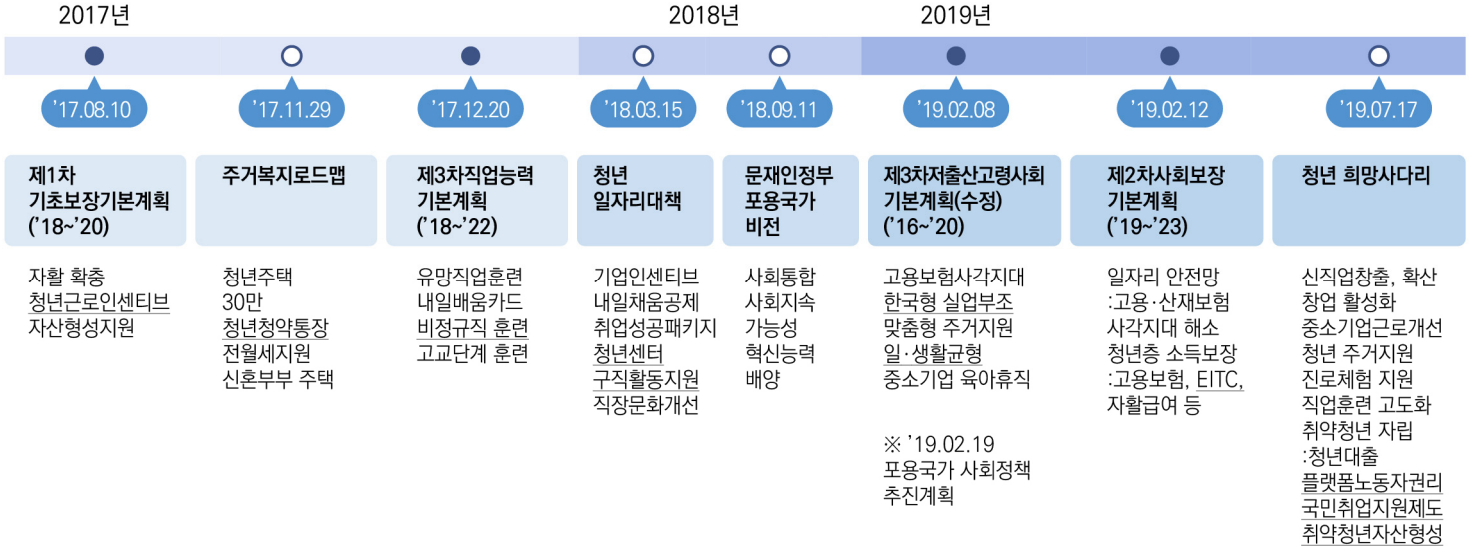
14) 1997년 이전에는 4%를 유지하던 청년실업률은 1998년 12.0%까지 급증했고, 2002년 7.0%까지 떨어졌다가 노무현정부 시기인 2004년 다시 8.3%로 증가했다(국회입법조사처, 2009, p.2, p.7).

2)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의 현황과 과제

(1) 문재인정부 청년정책 추진 경과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은 기존 정부에서의 청년정책이 고용정책에 집중되었던 것과는 달리, 포용적 사회정책의 비전에 맞게 삶의 전 영역과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Ⅱ-23]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정부 정책계획과 청년 관련 대책을 시간 순서대로 요약한 것이다. '포용적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기 전인 2017년에는 개별법의 사회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일부 포함되었으며, 청년 실업문제가 악화되면서 기존 청년 고용정책을 대폭 보완한 '청년 일자리대책'이 마련되었다. 2018년 '포용적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이 수립된 뒤에는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사회정책 비전을 토대로 정부의 사회정책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정되거나(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이 마련되었다.



* 주: ● : 법적 근거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 : 청년대상 시책 혹은 정부 정책 비전
밑줄은 문재인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한 정책

그림 II-23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 현황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에는 법에 기반한 분야별 기본계획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일부 반영되었으며, 청년이 정책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취약청년의 소득보장(빈곤가구 청년 근로인센티브 제고, 표 Ⅱ-6)(보건복지부, 2018.08.10.), 주거복지(청년 주택 공급, 청년청약통장, 표 Ⅱ-7)(관계부처합동, 2017.11.29.), 직업훈련(비정규직, 고졸자 직업훈련 확충, 표 Ⅱ-9) 분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7.12.20.).

표 Ⅱ-6 제1차 기초보장계획 중 청년 관련 정책 개요

<table>
<tr><th>구분</th><th colspan="4">내용</th></tr>
<tr><td>비전
및 전략</td><td colspan="4">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td></tr>
<tr><td></td><td colspan="4">- 청년 관련 전략 : 일하는 수급자 자립지원 강화</td></tr>
<tr><td rowspan="5">주요
정책</td><td>구분</td><td>주요 대상</td><td>특성</td><td>내용</td></tr>
<tr><td>근로소득
공제</td><td>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 수급자
* 20세~24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약 6만 9000명('17.12. 기준)</td><td>취업자
직접 지원</td><td>• 급여산정 소득에서 근로소득의 40만원 + 초과분의 30% 공제</td></tr>
<tr><td>자산형성
지원통장</td><td>만34세이하 청년 수급자
*5천명(누적 1만명), 190억원</td><td>취업자
직접 지원</td><td>• 정부 매칭 자산형성지원통장 3년 평균 1,440만원 적립 (최대 2,106만원)
※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0만 원)</td></tr>
<tr><td>부양부담
완화</td><td>부모부양의무 청년 1인 가구</td><td>취업자
간접 지원</td><td>• 월소득 250만원 이하 부양비 면제</td></tr>
<tr><td>학자금
지원</td><td>만30세 미만 대학생 부양의무자인 청년</td><td>재학생
직접 지원</td><td>• 등록금 지출액(급여산정 대상) 소득공제</td></tr>
</table>

* 자료: 보건복지부 (2018.08.10.).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년) 수립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표 II-7 주거복지로드맵 중 청년 관련 정책 개요

<table>
<tr><th>구분</th><th colspan="4">내용</th></tr>
<tr><td rowspan="2">비전
및 전략</td><td colspan="4">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td></tr>
<tr><td colspan="4">- 청년 관련 전략 :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td></tr>
<tr><td rowspan="4">주요
정책</td><td>구분</td><td>주요 대상</td><td>특성</td><td>내용</td></tr>
<tr><td>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공공기숙사)</td><td>만19세~39세 청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80%이하)</td><td>무주택청년
직접지원</td><td>• 대상확대(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자 등 포함, 지역 제한 완화)</td></tr>
<tr><td>청년우대형 청약통장</td><td>만29세 이하 총 급여 3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세대주)</td><td>취업자
간접지원</td><td>• 600만원 한도 금리 3.3% 청약통장 신설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td></tr>
<tr><td>전월세자금 지원</td><td>만19~34세</td><td>무주택청년
직접지원</td><td>• 전세대출 대상(19~25세 단독세대주 포함), 취업준비생 월세대출 금액 월30만에서 40만원 상향조정 및 상환원금 비율 하향 조정</td></tr>
</table>

*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7.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II-8 제3차 직업능력기본계획 중 청년 관련 정책 개요

<table>
<tr><th>구분</th><th colspan="4">내용</th></tr>
<tr><td rowspan="2">비전
및 전략</td><td colspan="4">미래 선도 인력양성 사람·노동중심 사회 구현</td></tr>
<tr><td colspan="4">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
포용과 사회통합의 직업능력 개발
평생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td></tr>
<tr><td rowspan="2">주요
정책</td><td>구분</td><td>주요 대상</td><td>특성</td><td>내용</td></tr>
<tr><td>신산업 과정</td><td>기술대학 특성화고 재학생</td><td>재학생
간접 지원</td><td>• 신산업 하이테크 과정(NSC) 신설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18 1,000명)</td></tr>
</table>

구분	내용			
	중소기업 노동자 장기유급휴가	중소기업 재직자	취업자 직접 지원	• 가칭 '훈련안식년' 지원 (6개월이상 장기유급훈련) : 훈련비, 인건비(최저임금 150%내) 지원. '18 20억원 시범사업 •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 설치
	비정규직 맞춤형 훈련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기간제, 시간제 자영업자	취업자 직접 지원	• 비정규직 교육훈련센터 설치(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 활용) • 내일배움카드 지원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연계 강화	구직자, 근로빈곤층	구직자 취업자 직접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상담단계에서 훈련비 지원, 생계비 등과 연계한 참여수당 설계
	실력중시·기술우대 사회기반 조성		구직자 기반 조성	• 블라인드 채용 민간기업 확대 • 찾아가는 블라인드 채용 상담
	청년층 숙련 강화 기회 확대	고교-전문대 통합과정 유니테크 참여자 (도제학교 졸업생 '18 2,200)	재학생 직접 지원	• 고숙련 일학습 병행제

* 자료: 관계부처합동(2017.12.20.).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2018년 상반기에는 '청년일자리대책'이 발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8.03.15.). 2017년 9.2%였던 청년실업률이 10.5%로 증가하면서 청년의 실업문제가 다시 정부의 우선 정책과제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청년일자리대책'에는 ①졸업이나 중퇴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만18세~34세 청년 대상 구직활동금 지원(월50만원, 6개월), ②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③EITC(근로장려세제) 대상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로 확대, ⑤온라인과 오프라인 청년센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표 II-9 청년일자리대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전 및 전략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청년구직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			
	기업청년 인센티브 패키지, 청년 취업준비 지원, 취업지원 인프라 개선			
주요 정책	구분	주요 대상	특성	내용
	기업 인센티브	만15세~34세 (고용증대세제는 29세)	취업자 구직자 간접지원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 대상, 지원 금액 확대) • 고용증대세제 : 기간 연장, 청년친화기업 500만원 추가 공제, 청년 정규직 1인당 최대 연간 300~1,600만원
	청년 소득지원	만15세~34세 저소득, 중소기업 취업 청년	취업자 직접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규취업자, 기존재직자 대상 확대 • 근로소득세 면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3년에서 5년간 근로소득세 70%에서 100% 면제, 연간 150만원 한도 • EITC : 만30세 미만 청년단독가구 확대 • 주거비 저리 융자 : 중소기업청년 주거임대료 3,500만원 저리(1.2%) 대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만18세~34세 청년 중 졸업 중퇴 후 2년이내 저소득가구 청년(근로시간 20시간 이내 미취업자) 8만명, 1,582억원	구직자 직접지원	• 월 50만원 클린카드 지급× 6개월 지원,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 일자리사업 개선	사업별로 유동적	구직자 직접지원	• 청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 비중 확대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고용위기지역 우선 선정
	취업 성공패키지	만 18세~34세 이하 청년 중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청년(취성패I) 소득 무관(취성패 II)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자영업자는 매출액 1.5억 미만인 경우	구직자 직접지원	• 1단계 직업상담(수당 20만원) • 2단계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 200, 300만원, 수당 최대 40만원, 6개월 • 3단계 취업알선: 취업성공금 150만원, 구직촉진수당 월30만원, 최대 3개월

*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03.15.). 청년 일자리 대책 종합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2018년 하반기에는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이 마련되었다. 문재인정부는 한국 사회정책의 발달궤적과 현실을 진단하였으며,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 혁신적 포용국가'로 정의하고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을 3대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정책 대상으로 '청년'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청년이 사회정책의 핵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2019년에는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 수정(안)」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하였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을 반영하고 기존에 발표된 청년 정책을 포함해 내용이 구성되었다.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 수정(안)」은 '출산장려'를 목표로 청년 고용 증진을 통한 결혼과 출산촉진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박근혜정부의 「3차 저출산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02.08.). 수정안은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명시하고,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중심으로 '일, 주거, 교육'의 조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①안정된 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②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청년구직수당 확대 개편), ③차별없는 일자리(임금격차 개선), ④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다양한 청년주택 공급 및 청년 임차가구 주거비 지원), ⑤교육혁신(교육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과 교육급여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구축,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사회보장제도 연계,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이 핵심전략으로 제시되었다(보건복지부, 2019.02.12.). 이는 앞서 발표했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기반한 첫 사회정책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분야의 성과목표와 함께 90개 핵심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90개 과제 중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한 정책은 ①교육격차 해소와 창의적 인재육성(중소기업 재직자 훈련, 취약학생 희망사다리), ②일자리 안전망(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실업부조, 중소기업재직자와 비정규직 대상 내일배움카드 지원), ③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일·생활균형(비정규직 정규직화, 여성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간 단축), ④근로연령층 소득보장(근로장려세제 확대, 구직활동지원금), ⑤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이 해당된다.

표 II-10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및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개요

구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19~'20)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
비전 및 전략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
	-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2040세대 안정적 삶의 기반(일, 주거, (자녀)교육) 조성	-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심 -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 보장 -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
청년 관련 정책	- 고용성과지표 : 청년 실업률 21년 (9.8%→8%이하), 청년 여성 고용률 22년 (58%→64%) - 일자리 정책 : 청년채용기업 인센티브, 고용보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일생활 균형 지원, 육아휴직 복귀시 인건비 세액공제, 고용평등 인프라(임금격차 개선) - 주거 :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공백 해소	- 저임금근로자 비중 축소 : 일자리 안전망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대상 확대, 평생학습체계, 인적자원 역량) - 상대빈곤율 완화 : 청년층 등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고용보험, EITC, 자활급여)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2019.02.08.).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보건복지부(2019.02.1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2019년 하반기에는 '청년 희망사다리'가 발표되었다(기획재정부, 2019.07.17.). '청년 희망사다리' 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취약청년 자립지원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통해 계층이동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그간 발표된 청년 대상 정책들을 보다 구체화해 실행계획이 담겼다. 이 계획에서 새롭게 제안된 정책은 ①차상위계층 취약청년 자산형성제도, ②플랫폼노동자권리증진정책 등이다. 취약청년 자산형성제도(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 저축한 금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자립을 돕는 것으로 2020년부터 추진 예정이다. 플랫폼노동자권리증진은 산재보호, 상해보험 가입지원,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II-11 청년 희망사다리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전 및 전략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계층이동성 강화
	- 창의와 도전 일자리 창출 -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지 - 역량강화 교육기회 확대 - 취약청년 자립 사회안전망
정책 개요	- 일자리 : 신직업창출, 확산 (신직업 making lab), 신직업 자격제 및 등록제 - 창업 활성화 : 청년전용 융자, 창업기업지원 바우처 확대 (연100만 2년, 1.5만개), 창업펀드, 농식품 청년창업(청년키움식당, 스마트팜 보육체계) -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 근무환경개선비, 플랫폼, 청년체험단, 청년내일채움공제 - 주거 : 공공청사 복합개발 청년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셰어하우스, 기숙사 공급 각종 주거대출지원 - 교육 : 장학금, 진로체험 지원, 직업훈련 고도화 - 취약청년 자립 : 청년대출,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청년 자산형성(청년희망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 일하는 차상위청년 청년저축계좌

* 자료: 기획재정부(2019.07.1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2) 문재인정부 추진 주요 정책사업

여기서는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주요 청년정책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앞에서 확인한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핵심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시행하겠다고 공표한 정책을 중심으로, 그리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에 따라 정책을 분류하였다.

표 II-12 문재인정부 주요 청년정책 현황

비전 및 전략		청년 정책
사회 통합	기회권한 배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소득불평등 완화	취업알선·창업 (대학일자리센터, 창업사관학교, 청년취업아카데미) 구직활동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내일채움공제, 근로장려세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동행카드)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고용증대세제)
	지역균형 발전	청년정책 거버넌스 (소통·의견수렴기구, 정책·수립심의기구)
사회적 지속 가능성	저출산 고령사회	주거정책(공공임대주택,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월세자금 지원, 공공기숙사)
		신용회복 지원(대학생·청년햇살론, 대출금 상환유예)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 활동 공간, 서비스 지원
	안전보장 생명존중	청년 건강검진(청년대상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온라인 자가 검진)
혁신 능력 배양 구현	창의성 다양성	다양한 활동 지원(문체부 지역사회 활동지원, 행자부 지역기반 일자리 지원)
	사람중심 일터혁신	직장내 갑질 규제, 비숙련 청년 산업안전 보장
	고용안전망 구축	1인영세사업장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완화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① 사회통합 비전 관련 청년정책

사회통합 비전 관련 청년정책을 살펴보았다. 첫째, 기회의 권한배분 관련 정책으로는 학자금 지원 정책을 들 수 있다. 학자금 지원 정책은 고등교육 기회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저소득가구 대학생은 연간 최대 520만원, 그 외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소 67.5만원~39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만35세 이하 학생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150만원)를 낮은 이자에 대출받을 수 있다(교육부, 2019.02.07.; 한국장학재단, 한눈에 보는 학자금 대출).

둘째, 소득불평등 완화 관련 정책으로는 구직 및 창업지원,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청년고용기업 인센티브 정책을 살펴보았다.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으로는 대학일자리센터, 창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다.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대학졸업생, 재학생,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턴트가 진로·취업·창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업사관학교는 최대 7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공간,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문재인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한 대표적 청년정책이다. 만18세~34세 청년 중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는 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11.15.).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정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세제(EITC) 등이 포함된다. 이 영역에 새롭게 도입한 정책은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업체에 취업한 청년에 월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동행카드가 있으며,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고용유지와 소득지원을

위한 것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2~3년간 200만원~300만원을 저축하면 총 1,600만원~3,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청년은 근로소득에 대해 정부가 매칭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년간 1,440만원~2,106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이 아니었던 30세 미만 단독가구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임금을 지원하거나,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11.12.;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청년희망키움통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 관련 정책으로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을 살펴보았다. 지자체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구를 마련해 청년들이 당사자로서 정책 결정 및 이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산청년플랫폼 부산광역시 청년위원회 설명자료; 서울청년포털 청년청 설명자료)

표 II-13 사회통합 비전 관련 주요 청년정책

비전	청년 정책				
	정책 명		대상	내용	비고
기회 권한 배분	학자금 지원	학자금 대출[1]	만35세 이하 소득 8구간 이내 (직전학기 최저 이수학점 12학점, C학점 이상)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대출,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상환기준 소득 이상 소득 발생전 원금, 이자 납부, 발생 후 기준소득 초과분 20%	교육부 (계속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2]	대학생	맞춤형 : 소득수준별 차등, 최대 520만원 지원 기타 : 다자녀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 지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교육부 (계속사업)

비전	청년 정책				
	정책 명		대상	내용	비고
소득 불평등 완화	구직 및 창업 지원	대학일자리 센터[3]	대학생, 졸업생 인근지역 청년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대학일자리센터 설치(최대 5년간 연 3억(대형) 또는 1억(소형)지원)	고용노동부 (계속사업)
		창업사관 학교[4]	만39세 이하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 (기술경력 보유자는 49세 이하 대표자)	총사업비 70% 1억원 이내 보조금 창업공간: 창업 사무실, 시제품 창업교육: 창업 실무 역량 전담코칭: 전담교수 1:1 코칭 연계지원: 융자, 투자 마케팅 등	중소벤처 기업부 (계속사업)
		청년취업 아카데미[5]	만34세 이하의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생, 졸업예정자	전공무관(연계)형 연수과정(교육 + 현장견학(탐방) + 취업 멘토)으로 200시간 ~ 600시간 편성 *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분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16년 기준 350개 과정) 직무분야별 교육과정 수: 정보통신(131), 경영·회계·사무(70), 기계(31), 문화·예술·디자인·방송(30), 영업 및 판매(21), 전기·전자(14), 기타	고용노동부 (계속사업)
		청년구직 활동지원금[6]	만18세~34세 청년 중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기준 중위소득 120%(4인월소득 553만원) 이하 생애 1회 주당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미취업자	월 50만원 클린카드 지급× 6개월 지원,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신규)
		취업성공 패키지[7]	만18세~34세 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취성패I)	1단계 직업상담(수당 최대 20만원) 2단계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 200, 300만원, 수당 최대 40만원, 6개월) 3단계 취업알선: 취업성공금 150만원, 구직촉진수당 월30만원, 최대 3개월	고용노동부 (계속사업)
	일하는 청년 소득 지원	청년 내일채움 공제[8]	만15세~34세 이하 (최고 만39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자	청년: 2~3년간 본인은 300~600만원 (월12만5천원~16만5천원) 적립시 2년 후 1600만원~3,000만원+이자 기업: 2~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7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 기업부 (계속사업)

비전	청년 정책				
	정책 명		대상	내용	비고
		희망 키움통장[9]	만15세~34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수급근로청년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해 저축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 3년 평균 1,440만원이 적립(최대 2,106만원) ※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0만 원)	보건복지부 (계속사업)
		근로장려 세제[10]	30세 미만 단독가구 포함 근로소득 단독 (2천만원미만) ~맞벌이(3600만원) 미만, 재산2억 미만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50만원~맞벌이 30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70만원)	국세청 (신규)
		청년동행 카드[11]	만15세~34세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월 5만원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발급)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산업 단지공단 (신규)
	청년 고용 기업 인센 티브	청년추가 고용장려금[12]	만15세~34세 정규직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고용노동부 (계속사업)
		청년고용 증대세제[13]	15세~29세 청년을 채용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 법인세 혹은 소득세 공제 1인당 기업 규모 별로 年 최대 400만원~1,200만원의 세액 공제	중소벤처 기업부 (계속사업)
지역 균형 발전	청년정책 거버넌스		지자체별 상이	서울 청년청[14]: 만19~39세 서울시 거주 청년들은 청년시민위원 선정, 청년의 현실과 욕구를 반영한 청년의제 발굴, 정책 기획, 예산 편성 부산[15]: 만18세~34세 이하 청년 청년 문화, 복지, 주거를 포괄하는 청년종합대책을 만드는데 참여	각 지자체 (계속사업)

* 자료:
  1) 교육부(2019.02.07.). '2019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 보도자료.
  2) 한국장학재단 한눈에 보는 학자금 대출 http://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2 (2019.06.09.검색 및 인출).
  3)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2.do (2019.06.09.검색 및 인출).
  4)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정보 https://www.mss.go.kr/site/smba/supportPolicy/supportPolicyDetailDiv do?cmm_code=BB020200&searchSeq=ST_000000001066125 (2019.06.10. 검색 및 인출).
  5) 한국산업인력공단(2018.11.15.). 2019년 청년취업아카데미 모집공고문.
  6)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2.do (2019.06.09.검색 및 인출).
  7)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개요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2019.06.09. 검색 및 인출).
  8)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do (2019.06.09.검색 및 인출).
  9)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청년희망키움통장)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4&searchCtgId=011&welnfSno=16438&pageGb=1&domainName=&firstIndex=1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19..06.10. 검색 및 인출).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8.11.12.).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핵심 내용 http://www.korea.kr/news/graphicsView.do?newsId=148855429 (2019.06.10. 검색 및 인출).
  11)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https://card.kicox.or.kr/main/main.do (2019.06.09. 검색 및 인출).
  12)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1.do (2019.06.09.검색 및 인출).
  13) 기획재정부(2018.12.28.).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p.150.
  14) 서울청년포털 청년청 소개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field_intro (2019.06.13.검색 및 인출).
  15) 부산청년플랫폼 부산광역시 청년위원회 사업개요 https://www.busan.go.kr/young/join21 (2019.06.13. 검색 및 인출).

②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청년정책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청년 정책을 각 비전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주거정책, 신용회복 지원 정책이 해당된다. 만19세~34세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최대 7천만원), 월세(2년간 총 1,200만원)를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며, 무주택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를 지원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8.12.11.; 금융위원회, 2019.05.22.) 또한, 신용상태가 안 좋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소액대출제도와 대출금 상환유예 지원 정책도 운영 중이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지원프로그램 홈페이지).

둘째,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정책으로는 청년 사회서비스 사업, 지자체의 청년 공간 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도에 청년 사회서비스 사업단을 설치

하여 청년들의 신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무중력지대를 설치하여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스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스터디, 미팅공간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8.12.17.;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홈페이지)

셋째, 안전보장 및 생명존중 전략 관련 정책으로는 청년 건강검진과 정신건강 온라인 자가검진 서비스 정책이 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가입자인 청년 누구나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19년부터 20세와 30세에는 생애주기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 정신건강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07.19.;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표 II-14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청년정책 개요

비전	청년 정책				
	정책 명		대상	내용	비고
저출산 고령 사회 대응	주거 정책	전월세 보증금 지원[1]	만19세~34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최대 7,000만원, 2년 또는 3년 평균금리 2.8% 내외	국토 교통부 (확대)
		월세 지원[1]	만19세~34세 소득 7천만원 이하	월세: 2년간 총 1,200만원, 월간 50만원 (은행이 임대인에 지급), 최대 8년거치 후 3년 또는 5년 분할 상환, 평균금리 2.6% 내외 (은행측 감면 0.3%p, 주택금융공사 0.3%p 반전세: 월세대출만 이용시 600만원 제한	
		공공 임대 주택[2]	대학재학생 혹은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소득활동 기간이 5년	6년~10년(거주중 취업, 결혼 시) 거주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울도심기준 보증금 6,000만원~7,000만원/ 임대료 24~70만원)	

비전	청년 정책				
	정책 명		대상	내용	비고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공공 기숙사[3]	만19세~39세 대학.대학원생	기숙사형 청년주택 '22까지 6만명 지원(월세 시세의 50%)	
	신용 회복 지원	대학생 청년 햇살론[4]	재(휴)학 중인 대학(원)생,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29세(군필자는 31세까지 가능,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보증원금 : 최대 800만원 (연간한도 300만원) 상환기간 : 최대 5년 (거치기간 4년) 대출이율 : 연 5.4% 수준 보증료율 : 연 0.1% 상환방법 : (거치후)원금균등분할상환(취급은행) 보증료는 보증신청 후 일시납입(위원회) ※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전환대출 1인 통합 한도 1,000만원	신용회복 위원회 (중단) *금융위 신규예정
		대출금 상환유예[5][6]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중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채무감면[5] : 개인워크아웃 기준 상환유예[6]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 상환 유예,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신청비용(5만원) 면제	신용회복 위원회 등 (계속 사업)
사회 서비스 일자리	청년사회서비스[7]		서비스 제공인력: 만19세~34세의 심리상담·체육학·영양학 등 전공자 대상: 만15세~39세의 청년층(소득기준 없음, 무료제공)	17개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에서 청년을 채용하여 청년대상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보건복지부 (신규)
	청년활동공간[8]		지자체별 상이	서울시 무중력 지대 등 청년활동공간	지자체

비전	청년 정책			
	정책 명	대상	내용	비고
안전 보장 생명 존중	국가건강검진[9]	20대~30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청년)	건강검진 실시 20, 30세에 정신건강 검사 실시	지자체 보건복지부 (신규)
	정신건강온라인 자가 검진[10]	20대~30대 청년	서울시 '블루터치' 등 온라인정신건강자가검진	지자체

* 자료:
1) 금융위원회(2019.05.22.).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방안.
2) 국토교통부(2018.12.11.). 행복주택 설명자료.
3) 관계부처합동(2018.07.05.).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4)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community/notice/view.do (2019.06.10. 검색 및 인출).
5)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http://www.ccfs.or.kr/support01.do (2019.06.10. 검색 및 인출).
6)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지원프로그램(대학생·미취업청년지원) https://www.ccrs.or.kr/debt/program/university/info.do (2019.06.10. 검색 및 인출).
7) 보건복지부(2018.12.17.). '2019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보도자료.
8)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http://youthzone.kr/ (2019.06.10.검색 및 인출).
9) 보건복지부(2018.07.19.). '내년(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보도자료.
10)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www.blutouch.net (2019.06.10. 검색 및 인출).

③ 사회혁신 비전 관련 청년정책

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에 관련된 정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사회 활동 지원, 행정자치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이 있다. 관광두레와 인문실험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와 실천 활동(100개팀, 지원금 200만원), 청년이 직접 지역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월 활동비 180만원 지급). 행정자치부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이 되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기반에서 일하거나 창업할 기회를 주고 2년간 연 2,400만원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06.05.; 행정자치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홈페이지).

둘째, 사람중심 일터 혁신을 위한 정책으로는 비숙련 청년을 위한 산재보험 확대, 직장 내 갑질 규제 방안 등이 있다. 직업계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의 현장실습생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였으며, 2019년 7월부터 직장동료나 사장님이 지위를 이용해 업무 이외의 일을 강요하거나,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용노동부, 2018.08.07.; 2018.09.11.; 관계부처합동, 2018.07.18.).

마지막으로 고용안전망 정책으로는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소규모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저소득 구직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됨으로서 고용보험 미가입구직자에게 구직활동금(6개월, 월50만원)이 지원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06.04.;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표 II-15 사회혁신 비전 관련 청년정책 개요

비전	청년 정책			
	정책 명	대상	내용	비고
창의성 다양성	지역사회 활동지원[1]	인문실험: 만39세 미만 관광두레 청년pd: 만34세 이하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와 실천 활동을 지원(100개팀, 지원금 200만원) 관광두레 : 청년이 직접 지역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지원(월 활동비 180만원 지급).	문화체육 관광부 (계속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2]	만39세 이하	청년들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역에서 일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2년간 연 2,400만원)을 지원	행정자치부 (확대)

비전	청년 정책			
	정책 명	대상	내용	비고
사람중심 일터혁신	직장내 갑질규제[3]	근로자 전체	직장내 갑질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노동부 (신규)
	현장실습 등 산업안전 보장[4]	현장실습생 (전문대, 4년제 대학생도 포함)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현장실습생, 대학생 포함	고용노동부 (확대)
고용 안전망 구축	산재보험 고용보험 대상 확대[5]	특수형태근로자, 1인자영업,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 : 1인 퀵서비스, 예술인, 요식업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창업 후 5년 이내로 확대	고용노동부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6]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 지원	근로복지 공단, 국민연금 공단 등
	한국형 실업부조[7]	고용보험 미가입 구직자	2020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구직자에게 구직활동금(6개월, 월50만원)도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 (신규)

* 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2019.06.05.). 작은 변화를 이끄는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공모전 실시 보도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산업단(2019.02.) 2019년 관광두레 청년 프로듀서 선정계획(안).
2) 행정자치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2019.06.11. 검색 및 인출).
3) 관계부처합동(2018.07.18.). '직장 등 괴롭힘 근절대책' 보도자료
4) 고용노동부(2018.09.11.). '현장실습생 22만명에 산재보험 적용' 보도자료.
5) 고용노동부(2018.08.07.). '특고종사자 예술인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보도자료.
6)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2019.06.11. 검색 및 인출).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06.04.). '국민취업지원지도' 내년 7월 시행.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1348 (2019.06.10. 검색 및 인출).

(3) 이제까지의 성과와 향후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은 기존 정부에서 청년정책이 고용정책 위주로 추진된 것과 대조적으로 청년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지원을 확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정책과 관련해 중장기 비전과 계획을 담고 있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서 '청년'이 아동, 노인, 여성 등과 더불어 정책의 주된 대상으로 다뤄진 것은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정책(재정투입 규모에 맞는 일부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15], 기존 고용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16]. 특히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고용을 넘어 전체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청년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정책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 청년정책의 근본적 한계는 중장기 목적과 비전 등 청년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방향키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된 것으로 수렴된다. 대상자 중심의 사회정책은 대체로 법을 기반으로 정책 대상자의 정책 욕구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정책계획이

15)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햇살론 유스(가칭)'는 저소득, 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금융위원회, 2019.09.20.). 이는 금융취약층인 일부 청년에게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청년의 부채부담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200억원이라는 예산제약으로 인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용회복지위원회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기금(3,300억원)이 고갈되면서 2019년 2월부터 대출이 중단되었다.

16) 청년 일자리 대책 중 하나인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소득을 높이고 취업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청년 당사자들의 평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BS, 2018.03.16., "돈 때문에 중소 안가나?" 경력 관리는 어떡하라고….).

수립되고 있다. 예컨대, 아동정책은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5년마다 '아동기본계획'을,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본법'을 기반으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의 경우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의 여야합의로 「청년기본법(안)」 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제정을 위한 국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17].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청년의 다면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비전과 전략,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은 사회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 상황에 놓인 소수의 청년을 위한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지원은 청년 모두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인구구조 변화, 생애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당사자의 정책효능감을 높이는 실생활중심적 접근을 취하돼, 사회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거시적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빈곤의 대물림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청년을 잇는 생애과정기반 접근, 그리고 노동시장 외부자와 내부자의 기회 불균형 및 내부자의 소득과 근로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고용-노동-복지-경제를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포용적 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인 청년과 청년정책의 정의를 명료히 해야 한다. 그간 청년은 '연령'으로 정의되어 왔다. 예컨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은 15세~29세, 주거정책이나 창업에서는 18세~39세 등 정책마다 포괄하는 연령이 제각각이었다(장민선 외, 2017). '구직자

17) 20대 국회에 제출된 「청년기본법제정안」은 총 7건이며, 여야가 합의한 「청년기본법제정안」은 청년을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문화활동 및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했다(대한민국국회, 2018.05.21.).

를 위한 고용정책', '대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신혼부부를 위한 내집마련 정책', '근로빈곤층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등으로 각기 다른 청년을 상정하고 분절적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은 '성인기 이행'에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정책으로 위치 지어져야 한다. 즉, 포용적 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인 초기, 중기, 후기 청년 모두를 포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별대상자가 아니라 생애과정의 연속선에서 다양한 상태와 결핍을 경험하는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표 II-16 청년정책의 변화와 추진 방향

	과거 청년정책	현재 청년정책	미래 청년정책 방향
비전	청년 취업 증진	청년 삶의 질 향상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전략	청년 실업 감소 전략	삶의 다양한 영역 포괄	보편적, 적극적(예방적) 정책
대상	청년 구직자	청년 구직자, 취업자, 저소득 청년	청년이 된 누구나
정책	고용정책 (취·창업지원)	고용, 주거, 소득 종합정책	포용국가 사회정책
한계 과제	- 청년 다양한 욕구 간과 - 구직자 이외 청년 배제 - 삶의 질 보장 미흡	- 중장기 비전, 목표 부재 - 청년정책 대상 모호 : (대졸)구직자와 취업자 중심 - 선별적, 한시적 대응 : (드러난) 현안 중심 대응	- 비전과 전략 마련 :「청년기본법」 제정 - 청년 모두를 위한 정책 : 이행기 청년 모두 포괄 - 지원정책 + 여건조성 정책 병행

제3장 그간 청년 이슈 정책화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면접조사

1. 면접조사 개요
2. 청년 이슈 의제화 및 정책화 과정에서의 변화와 한계
3. 소결: 기존 한계를 넘어 앞으로의 방향

3 그간 청년 이슈 정책화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면접조사*

1. 면접조사 개요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이른바 청년문제가 이슈화되고 정책화되는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그 과정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경험 청취를 통하여 도출하고자, 지난 십여년 간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참여자는 청년거버넌스 참여 활동시기 및 경력과 활동분야, 그리고 주요 활동의 지역 단위를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으로 설정 후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 4년 이상 참여한 유경험자를 섭외하였고, 최종 14명이 참여하였음.
- 면접조사 방식은 1:1 심층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참여자의 선호와 요청에 따라 3명 구성을 최대로 하는 초점집단 면접조사가 병행되었음.

1) 면접조사 실시의 배경 및 목적

앞의 제2장에서 국가 비전으로서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청년정책이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주요 축으로 주목되어야 하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청년정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현행 정책이 어떠한 양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한 정책 현황 진단만으로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 이 장의 면접조사의 설계, 자료의 분석을 통한 의미 도출과 집필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이를 위한 인터뷰 녹취자료의 전사 및 분류는 이민정 연구사업운영원이 수행하였음.

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자리매김하고, 중앙정부 사회정책의 중요 축으로 추진되기 위해 체계적 수립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파악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른바 청년문제가 단순히 학생운동의 이슈에 불과하였던 지난 십여년 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시점부터 청년문제가 의제화되고 정책화되는 과정을 비롯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의 성과 그리고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당시 청년 당사자로서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청년의 시기를 보냈던 청년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청년문제의 이슈화 및 정책화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청취하였고, 이를 시작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짚어내고자 하였다. 지난 십여년 간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의 실시는 본 연구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실효성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확보되어야 할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수집하는 첫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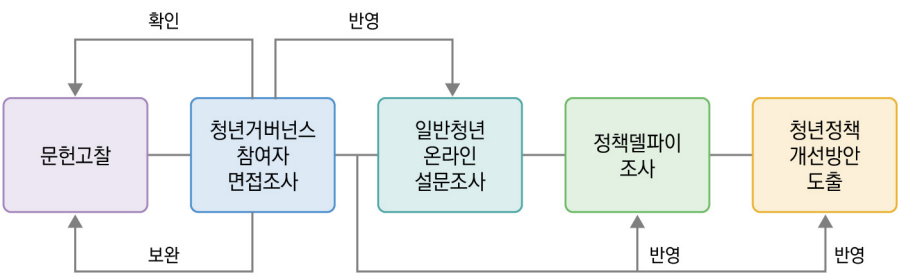


그림 Ⅲ-1 연구추진 단계에서 면접조사의 활용

청년거버넌스 참여자 면접조사는 연구추진 단계 상 문헌고찰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 십수년 간의 청년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에 대한 이해를 더한 후 실시되는 것이다. 연구 추진과정과 흐름선 상에서 본다면,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된 사항들

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이자 다음 단계에서 추진될 일반 청년 온라인 설문조사의 내용 구성 및 정책델파이 참여자들의 결정 과정에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의 생산과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면접조사의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이자 최종 단계인 현행 청년정책 개선방안 도출에 경험적 근거자료가 된다.

2) 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2019년 9월 2일 국회 법률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 검토가 완료되었고(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9.10.17. 검색),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청년기본법안」이 연내에 제정 된다면, 중앙정부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가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설정 및 정책과제 도출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되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제까지의 청년정책의 정책화 과정에 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거버넌스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면접조사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기준은 〈표 Ⅲ-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 가지 이다.

표 Ⅲ-1 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기준

구분	면접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
청년거버넌스 참여 활동 시기 및 경력	• 2010년 이후 청년 이슈 의제화 및 정책화 과정의 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 • 5년 이상 참여 유경험자 우선 섭외(최소 4년 이상 유경험자)
활동 분야	• 청년 이슈의 다양성을 고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로 구성 • 주요 활동 분야에 쏠림이 없도록 참여자 구성
주요 활동 단위	• 기초, 광역, 전국단위 중심의 참여자 균형 있게 구성 • 전국단위 정당 활동 경험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균형 있게 구성 • 정당 활동 유경험자의 경우 특정 정당에 쏠림이 없도록 구성

먼저 청년거버넌스 참여 활동시기와 경력으로, 청년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시기에 5년 이상 참여한 유경험자를 우선 섭외하고, 5년이 안될 경우 최소 4년이라는 하한의 기준을 가지고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두 번째 기준은 활동분야인데, 청년 이슈들이 취업과 같은 고용문제에서 촉발되기는 하였으나, 지난 십여년 간 삶의 영역 곳곳에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고, 비교적 빠르게 정책화된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그와 같은 다양성을 반영하여 특정 활동분야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활동분야를 구성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세 번째로는 주요 활동 단위인데, 우선 주로 전국단위의 청년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와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에 참여한 유경험자들도 고르게 구성하였고, 정당 활동의 경험 유무와 특정정당의 활동 경험자로 쏠리지 않게 구성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 참여한 참여자의 특성은 〈표 Ⅲ-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면접조사 참여자 수는 총 14명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 십여년 간 청년문제의 이슈화, 이슈의 의제화 및 정책화 과정에 청년당사자로서 거버넌스에 참여한 경험을 갖으며, 그 경험의 시간이 일시적이거나 짧은 기간이 아닌, 최소 4년 이상의 활동 경험이 있다. 성별로는 총 14명 중 11명이 남성이다.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체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다수이며, 가장 낮은 연령이 27세이고 가장 많은 연령은 44세 이다.

앞서 〈표 Ⅲ-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 참여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특정 활동분야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참여자들의 활동 분야와 활동 지역의 단위가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예컨대 도시재생과 네트워크, 공간지원, 청년 문화, 창업 등이며, 주요 활동했던 지역의 단위도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전국단위, 그리고 정당 활동까지 여러 층위의 경험을 갖는다. 이러한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특성은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청년문제의 이슈화 및 정책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변화, 그리고 현행 청년정책까지 이어지는 성과와 한계를 생생한 경험 속에서 포착할 수 있는 최적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표 Ⅲ-2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조사 형태	거버넌스 활동 경력	주요 활동 분야	주요 활동 단위
A1	남	32	1:1면접	7년	도시재생, 공간사업	기초, 광역지자체
A2	남	35	1:1면접	8년	일자리, 공간사업	광역지자체
A3	여	28	1:1면접	7년	청년복지정책	전국
A4	남	44	초점 집단면접	7년	청년지원사업	광역지자체, 정당
A5	남	29		7년	청년정책, 지원사업	광역지자체, 정당
A6	남	30	1:1면접	6년	청년문화	전국
A7	남	34	초점 집단면접	5년	청년창업	광역지자체
A8	여	33		6년	청년정책, 지원사업	전국, 정당
A9	남	27	1:1면접	4년	청년정책, 지역네트워크	광역지자체
A10	남	35	초점 집단면접	10년	공간사업, 전국네트워크	전국
A11	남	29		7년	협동조합, 전국네트워크	전국
A12	남	32	초점 집단면접	9년	청년정책	전국, 정당
A13	여	32		11년	청년정책	전국, 정당
A14	남	34		9년	청년지원사업	광역지자체

3) 조사내용 및 방법

(1) 면접조사 내용

지난 십여년간 청년이슈의 정책화 과정에 참여한 청년거버넌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은 연구진이 면접조사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미리 참여자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참여자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의 내용이 아닌 과거의 경험에 대한 내용이므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쉽게 회고할 수 있도록 조사의 내용을 청년문제와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부터 질문을 시작하였으며, 참여자에 따라 이야기하

고 싶은 내용이 많은 경우, 그 해당 내용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참여자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질의응답의 방식이 아닌, 함께 주제를 논의하는 형태로 면담의 내용을 구성하고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조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의 최소 구조화는 필요하기에 〈표 Ⅲ-3〉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여 모든 참여자의 경험을 청취하였다. 하나는 청년이슈 정책과 과정에서의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청년 이슈에 대한 정책대응의 개선점이다.

표 Ⅲ-3 면접조사 주요 조사 내용

1 청년이슈 정책화 과정에서의 경험	2 현행 청년이슈에 대한 정책대응의 개선점
• 구체적인 경험 내용 • 정책화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변화 • 정책화 과정에서 인식된 한계점	• 기 정책화된 청년정책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 – 지원 분야 및 내용, 중앙정부 vs 지자체 역할 • 새로이 추가되어야 할 지원

청년이슈 정책화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해서는 첫 참여 시점부터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청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식되는 변화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가가 질문되었다. 현행 청년이슈에 대한 정책대응의 개선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책화된 청년정책 중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고, 현 시점에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정책지원 사항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2) 면접조사 방법

설정된 참여자 구성 기준에 따라 앞서 제1장의 연구방법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들을 잘 알고 있는 연구진이 선정기준에 따라 면접조사

의 첫 참여자와 두 번째 참여자를 섭외한 후 참여자들에게 지난 10여년 간의 청년정책 이슈화 과정 또는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활동가들을 추천받는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ing sampling)'을 활용하여 추천자 풀을 구성하였다. 이후 연구진이 활동기간, 주요 활동 분야, 활동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우선 섭외 대상의 순서를 정하고, 전화와 이메일(e-mail)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면접조사 참여의사와 동의 및 확인을 거쳐 참여 일정과 면담 방식 및 장소 등을 협의하였다. 그 후 최종 정보제공 동의를 구하고 확정하였다.

표 Ⅲ-4 면접조사 방법

구분	내용
참여자 섭외 방법	1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들을 잘 알고 있는 연구진이 선정기준에 따라 첫 번째 조사 참여자와 두 번째 참여자를 섭외 2이후 첫번재 참여자와 두 번째 참여자가 복수로 청년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를 추천하고 연구진이 선정기준에 따라 섭외하는 눈덩이(snowballing) 표집 방식을 활용함.
참여자 확정	1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연구에 대한 설명 → 2면접조사 참여 의사 및 동의 확인 → 3참여 일정, 면담 방식, 장소 협의 → 4사전 배경 정보 제공 동의 후 최종 확정
면담 장소	참여자가 연구진의 연구실로 방문 또는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로 연구진이 방문
면담 방식	1참여자 요청에 따라 1:1 심층면담과 초점집단면접 방식 병행(단, FGI 경우, 한 그룹에 참여자 수 3명까지로 제한) 2면담을 시작하면서 말하기 꺼려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아도 되며,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음을 참여자들에게 알리고, 면담 중간에도 참여자가 원치 않는 대답은 하지 않을 수 있고,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안내함.
면담 횟수 및 시간	1회, 1시간 30분~2시간
기록 및 녹취	녹음 후 전사
면담자	연구진

면접조사의 면담 방식은 기본적으로 1:1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IDI)으로 하되, 참여자의 선호와 요청에 따라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의 형태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단, 초점면접조사의 형태로 진행할 경우 조사 내용의 집중도(quality)와 의견 개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시 참여자수를 3명 이하로 제한하였다. 1회당 면담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고,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 후 전사하였으며, 면접조사를 위한 기획과 참여자 섭외를 비롯하여 자료 전사 후 분석의 전 과정은 연구진이 직접 수행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연구진이 반복하여 읽고 분류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의미 도출 및 반복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청년이슈의 의제화 및 정책화 과정에 대한 경험들 속에서 참여자들이 인식한 변화와 성과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 과정에서 인식된 한계점이다. 물론 〈표 Ⅲ-3〉의 면접조사 주요 조사 내용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책 대응의 개선점도 분석되었으나, 이 내용은 본 장에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청년정책 개선방안 도출의 단계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된 면접조사의 결과는 다음 단계에서 추진된 일반 청년 온라인 실태조사의 표본 구성 및 내용 구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델파이 1단계 질문 내용 구성에도 활용하였다.

2. 청년 이슈 의제화 및 정책화 과정에서의 변화와 한계

주요 발견(Main Findings)

- 지난 십여년 간 청년 이슈의 의제화 및 정책화 과정에 참여했던 청년거버넌스 당시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발견된 변화와 성과는 크게 세 가지 의미, 즉 ①문제제기 이슈의 정책 제도화, ②조례제정을 통한 지방정부 청년 정책의 빠른 확산, ③'청년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발굴이 도출되었음.
- 발견된 성과의 이면에는 성과보다 더 많은 네 가지의 의미, 즉 ①정책 방향 설정의 한계와 청년에 대한 몰이해, ②청년활동가의 소진과 정책도구화, ③청년 세대 내 격차와 배제의 문제 표면화, ④'다음'이 그려지지 않는 내용의 정책 추진이 한계점으로 도출되었음.

1) 청년이슈 정책화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성과

(1) 문제제기 이슈의 제도화

청년들이 당사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집단적 목소리를 낸 대표적인 주제는 '등록금 투쟁'이다. 90년대 말 외화위기 이후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여 인상되었던 대학등록금이 연간 일천만원 정도가 되어 사교육과 더불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자, 대학생들과 언론에서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에 이르렀고,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인상률을 강제로 동결하는 조치를 하게 된 바 있다(교육부 공식블로그, 2019.10.17. 검색 및 인출).

이명박정부는 한국장학재단 설치 및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가장학금의 유형을 설계하는데 당시 등록금투쟁을 이끌었던 대학의 총학생회 참여자들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 참여시켰다. 당시 그 참여가 공식적인 정책거버넌스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실제 정책 의제설정(policy agenda setting)과 정책 결정(policy-making) 과정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은 그 경험을 응집의 동력을 키우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

"11년 반값등록금 시절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학교회장으로. 이주호 장관 정부 있었을 때 장학금제도를 협상하러 들어가서 지금의 일류형, 이류형 지금의 국가장학금제도를 모델 설계할 때 참여했었거든요. 그게 11년도에 예산 계획하고, 집행됨으로 시작하면서 학생회장들의 동력이 커졌거든요"(A12).

그러나 당시 대학생들은 장학금으로 메꿔내는 것은 등록금 인하가 아니므로 '반값등록금이라 말장난하지 말고, 등록금의 실질적인 명목 금액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 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요구를 하였다(서울대학교 교지 「관악」 제47호, 2019.10.17. 검색 및 인출).

이후 반값등록금 이슈는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소득연계 반값 등록금으로 박근혜 대선캠프 대선 공약으로 반영이 되었고, 박근혜정부가 이를 빠르게 제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슈를 제도화하는 주체로 나서고, 실제적으로 이슈가 정책제도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 당사자로서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제도화되었다는 성과를 맛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의제의 채택과 제도화 주체가 정부가 되면서 청년들의 정책의제 형성(policy formulation)의 동력은 급감하게 되기도 하였다.

"등록금 쪽은 많이 죽었죠. 등록금이 (그땐) 강했는데.. 대선 12년도 하면서 정부에서 그걸 받아줄게 하는 액션들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힘이 빠져졌죠. 12년도 과제가 등록금 문제였는데 정부나 장학금이나 수용되는 식으로 모양새가 갖춰져서. 실제로 뚜껑 깠을 때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받아줘서... 누군가는 성과였지만 누군가에겐 동력이 사라지는 시점이었죠."(A4)

"박근혜 정부 때 그 대선 공략으로 소득 연계 반값이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되고, 정부 창출되면서 제도로 갔잖아요. 그게 어찌되었든 가장 크게 변화되면서 느꼈던 정책화되는 과정.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게 가장 크게 변했다고 느꼈고, 그러면서 학생사회에서 변했던 건 등록금이 학교 내 학생회 공약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학생회도 시대흐름에 따라 도태되어 가고..."(A12)

이와 같은 경험을 '의제 설정 이론(agenda setting theory)'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생들이 문제제기한 과도한 부담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 및 정부가 반값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의제(public agenda)의 성격을 갖지만,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 주제를 빠르게 제도화한 것은 공공의제였던 것을 빠르게 공식의제(formal agenda)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설정 이론에서는 정책의제를 크게 공공의제와 공식의제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공공의제(public agenda)는 광범위한 이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고 있는 주제나 상당수 사람들에 의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문제, 그리고 구성원들이 정부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모든 이슈들을 말하며, 공식의제(formal agenda)는 일반 공중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공식적으로 또는 제도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이슈들을 의미한다(Cobb, Ross and Ross, 1976; 남궁근, 1994, p.40에서 재인용).

이 이론에 근거하여 등록금이라는 이른바 청년문제 이슈의 정책화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경험을 해석하면,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 공공의제화 된 상태에서 정책형성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한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청년들이 동력을 응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슈가 정책결정자가 주도하는 공식의제가 되면 오히려 청년들의 동력은 상실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등록금 이슈가 제도화되면서 더 이상 청년들 주도하에 제기되는 이슈로 등장하지는 않고, 그 사이 청년들의 삶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노동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청년유니온'이 등장하였고, 등록금만큼이나 청년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서울지역 대학생 중심의 주거문제가 이슈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이전의 등록금 이슈의 정책 제도화 과정과는 또 다른 경로의 정책의제 설정 및 결정과정을 경험하였고, 무엇보다도 명확한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으나 '민-관 거버넌스' 문제해결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물론 그 과정은 청년들이 주도하였기 보다는 '관'인 지방정부, 즉 서울시가 주도하고 주변에서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이 파트너로 초대된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다.

"정책 과정의 변화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본 것으로 잠깐 돌아가면 민달팽이 유니온 그런 그룹들이 주체하던 사람들이 주변인이었거든요. 문제였지만 문제화시킨 두 그룹이 결과치였고. 그러다보니까 주목을 받게 되고, 활동과 결과와 과정들이 청년을 대변하게 되었고... 박원순 시장님이 받아줬고, 상대방이 정책 파트너가 되었고. 그런 거버넌스적인 어떤 울타리 안에서 시정 안에 녹여서 같이 이야기해보자. 의회니 네트워크니 이런 것들이 주변적이었는데 지자체에서 붙여준 거잖아요. … (중략) … 거기서는 정책의 내용이... 처음에는 청년 정책이라는 것들이 부처에서 서울시의 시정 안에서 의결하게 되고 관여하게 되고. 국장 선에서 보고하게 되고. 청년 정책 안에 더 녹여들게 할 것인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A4)

"서울도 청년들이 온전히 만들었냐고 보면 그것도 아닌 것이 상호간에 서로 파트너로 인식하는 과정이 있어야 민간도 행정파트너와는 요구하고 만들 수 있겠다는 시그널이 생기는 거고. 행정 입장에서도 민간의 파트너가 있어야 관이 주도를 해도 민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니까 서울은 그 호흡이 맞았다고 봅니다."(A8)

이와 같은 경험을 Cobb과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세 가지 유형, 즉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동원형(mobilization), 그리고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을 기본 틀로 하여 분석할 수 있다(Cobb, Ross and Ross, 1976). '외부주도형'은 이슈가 정부를 제외한 외부 집단에서 제기되고 공중의제로 확산되고 이것이 정책의제로 발전하는 것이고, '동원형'은 정부의 정책결정자가 정책의제의 이슈를 공중의제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내부접근형'은 정부 내부자들이 외부에 반대세력이 형성되지 않게 비밀을 유지하며 정책의제화 하는 것을 말한다(남궁근, 1994, pp.41-42; 서인석·윤병섭, 2017, p.27).

이와 같은 정책의제설정 이론에 청년들이 제기한 청년노동과 주거문제의 이슈가 서울시의 정책의제화 과정을 적용해 본다면, 문제제기 단계는 '외부주도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민간집단에 의해 먼저 제기된 청년주거와 노동의 문제가 공식적인 행위가 요구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이것이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어 공공의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론적으로 외부 주도형이 새로운 집단 세력과 규합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집단이 정부의 공식적인 행위를 요구하면서 우리사회의 공공의제로 되는 과정은 미약하고, 문제제기 단계에서 서울시장의 채택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은 오히려 정책결정자의 채택으로 자동 공식의제로 전환되는 '동원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제기 자체를 서울시장이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외부주도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분명한 것은 정부내부자 또는 근거리의 사람들이 이슈를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내부접근형'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2) 지역 청년정책으로의 빠른 확산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2015년 1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6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를 모델로 하는 청년조례제정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19년 3월 기준 17개 광역시·도 및 14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며,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수립과 심의기구 및 청년참여기구 등이 설치되고 있다(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07.30a, 2019.07.30b).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현재 100%이고, 정책심의기구의 설치(94.1%)와 심의 기구의 설치(82.3%), 그리고 정책시행계획의 수립(82.3%)이나 이를 위한 실태조사 등의 실시(64.7%)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07.30a, p.1).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017년 이후 빠르게 조례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의기구 등을 설치하고 있다(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07.30b).

표 Ⅲ-5 지방정부 청년정책 추진 기반 현황 집계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 수	비율	지역 수	비율
청년 기본 조례 제정	17개	100.0	145개	64.1
기본계획 수립	13개	74.4	49개	21.6
시행계획 수립	14개	82.3	37개	16.3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11개	64.7	34개	15.0
심의기구 설치	16개	94.1	76개	33.6
청년참여기구 설치	14개	82.3	61개	26.9
참여기구 조례 표기	8개	47.0	-	-
청년센터 설치	5개	29.4	25개	11.0

* 출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2019.07.30a, 2019.07.30b). 2019년 광역지방정부 청년정책자료 현황(2019년 3월 기준), 2019년 기초지방정부 청년정책자료 현황(2019년 6월 기준) 각 내부자료 p.1 (https://youthpolicy.kr/32, 2019.10.17. 검색 및 인출).

면접조사의 참여자들은 지방정부가 단기간에 청년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짧은 시차를 두고 확산되었다는 점을 청년문제가 이슈화되고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과정에서 갖게 된 또 다른 성과라고 평가한다. 그 과정에서 촉진제가 되었던 것은 서울시의 조례 및 지원사업의 추진이라 할 수 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인거 같아요. 큰 성찰 없이? 전국 각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만들었고. 그럼에도 청년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고."(A6)

> "어느 순간 조례하면서 지역화가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었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다양성이 넘쳐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다고 보았고. 모든 걸 중앙으로 하면 안 되겠다. 속도도 느리고 한계도 보이고. 그러다보니까 부처는 헤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지역부터 올라오는 게 오히려 맞겠다고 보았고..."(A12)

지방정부에 조례가 갖추어졌다는 것이 청년정책의 기반을 갖추고 체계적인 정책 내용들로 추진되고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이 지역 내 청년들의 문제제기와 이슈의 의제화로서 시작되기 보다는 다른 지역의 자지단체의 상황이라는 외부적 환경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의 청년 이슈들이 이식되어 온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의 청년들의 동력이 아니며, 오히려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정책의제 설정을 주도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년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들은 비록 지차단체장을 비롯한 '관' 주도로 지방정부의 청년조례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토대로 지역이 청년이슈에 반응을 한다는 점, 청년당사자들이 네트워킹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 의회를 비롯하여 기성세대가 청년을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이나마 변화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조금씩은 바뀌고 있죠. 관 주도든 뭐든 간에. 보장제에 관심도 있고 문의도 많이 오고. 청년네트워크도 100명 정도 신청했고. 그래도 비율로 다른 곳과 비교를 못해서 그렇지만 아직은 고인 물이다...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는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물론 더디지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째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바뀐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당사자 청년을 이끌어내서. 강력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게. 당사자 참여 네트워킹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걸 고민하는 거죠."(A9)

"변화는 일단 정치권은 변화는 많이 일어났어요. 기본적으로 기성어르신이 옛날에는 젊은 세대와 대립을 했다면 기본 전제로 청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년 필요하지... 그 역량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일단 표면적인 것은 5년 전에는 SNS 홍보 잘한다. 요즘은 블록체인 이런 기술을 선점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 같아요. 정치적 어젠더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역할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는가."(A12)

(3) '청년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발굴

빠른 속도로 확산된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또 다른 성과는 조례를 기반으로 청년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에 청년센터를 비롯하여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들을 맡아 운영하는 주체들이 지역 청년정책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로 발굴되었다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발굴되기도 하지만, 서울시와 같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창업이나 일자리 지원의 과정에 참여했던 이들이 자연스럽게 주체로서 성장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지역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생태계가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금 다행인건 2년이 지나고 3년차인데 청년 주체가 그래도 많이 발굴되었어요. 하나는 서울에서도 커뮤니티 사업하면서 청년들이 도전하게 하는 사업도 있었지만 사실 청년 주체를 발굴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주체들이 점점 성장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심사도 있겠지만.. 계속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야죠. 그럼 터전 사업으로 쭉 지원하도록 하고 3년차 되니까 성장이 되었고. 두 번째는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단기 일자리 사업.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서울의 뉴딜처럼?) 네. 작년에 처음 생겼어요. … (중략) … 어쨌든 공간과 공간에 일하는 사람들과 인력이 배치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탄탄하게 생기는 과정인데 그 이후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A7)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더디지만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의 빠른 추진으로 청년들의 공간과 공간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의 형성, 그 과정에서 지역의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정부와 공유하는 과정에 거버넌스 참여하는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 내 청년이슈에 대한 문제 인식(problem recognition)의 변화가 함께 동반된다.

"엄청 큰 변화죠.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말씀해주시기를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어쨌든 큰 건 청년들의 의견이나 소통 창구가 공식적인 창구가 생겼다는 것 같아요. 17년 이전에는 활동해도 파급력이 없었으니까요. 공식 창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모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공간뿐만 아니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식은 아직 오래 걸릴 것 같구요. 서울은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 정책에 대해 꾸려나가지만 저희는 지역에서의 인식 개선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공간에 대한 인식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공간 컨퍼런스도 열고. 지역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시민의 참여?"(A8)

2) 청년이슈 정책화 과정에서 인식된 한계

(1) 정책 방향 설정의 한계와 청년집단에 대한 몰이해

① '청년=약자' 프레임의 한계와 '청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청년'이라는 집단을 정부가 개입하여 지원해야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때, 의제설정이론에 비추어본다면 문제제기를 공공의제화 하고 이를 정책의제로 설정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 바탕이 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우리사회의 약자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논리가 청년을 지원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많은 이들에게 짧은 기간 공감을 얻고 설득해 내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의 제안사유이자 동시에 법률제정의 취지로서 설명되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청년이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단순히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필요성은 청년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립기반을 형성해야하는 시기이자 누구나 생애과정에서 거치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불평등과 같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떠안기 때문에 지원해야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해, 청년정책은 '청년'이라는 개인 또는 일정 연령의 집단이 복지지원 대상으로 전락해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이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결국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보완하려고 하는 정책이 청년정책인데, 그러한 의미가 '청년=약자'라는 프레임 속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왜곡된 인식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왜곡된 인식의 형성은 청년지원과 세대갈등의 이슈를 연계시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청년 지원 사업을 청년에 한정시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다른 연계된 정책들과의 확장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편견의 기제가 되기도 한다.

"사실 저희도 역사의 죄를 지은 게 있죠. 청년들을 약자화 시키는 흐름 속에서 편승해서 커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채의식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한계는 엄청 빨리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에 대한 이질성이나 사회정책의 프레임 안에서 가져갔어야 했는데.. 당사자성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청년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회경제적 여건이 이렇게 되었고, 그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뿐인데. 이것을 청년의 문제라고 하면서 세대 문제로 만들어 버렸고."(A3)

"청년(이) 운다, 징징댄다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사회 정책으로 우리가 가줘야 되지 않을까. … (중략) … 이제는 쪼개야 되는 거 아닌가. 초기에는 청년에 집중되지 않아서 청년정책이 부각되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올랐으니 오히려 분화시켜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A13)

"(청년공간들이)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청년 정책으로 된 것처럼 보는 것은 한계인 거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한계라고 봐요. 가장 커다란 한계는 이 공간 지원 사업을 청년에게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한정 지워놓고 보는 것. 그걸로 해석하는 것. 이 사례를 바탕으로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도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지? 이런 논의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성공하니까 복사해서 붙이는.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겠다고 오는데 우리도 이런 비슷한 청년공간을 만들겠다고 하고 가세요. 이런 게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해요."(A1)

그렇다면 정책대상자로서 청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들의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 청년정책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으나, 이제까지의 청년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책대상자로서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정부 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부재하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된 것은 청년정책이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성과의 이면이기도 하다.

공유된 개념정의나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정책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를 제각각이 해석하는 혼란한 상황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면밀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설계되지 않은 정책 사업이라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그러한 상황을 '엉켜있는 상태'라고 표현한다.

>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지금의 청년들의 문제에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안 되어 있는 거에요. 왜냐면 청년들은 사회구조 안에서 특정 계층일 뿐이지 연령 계층이었을 뿐이지 이 청년이 노동자거나 여성이라는 계층화되지 않았잖아요. … (중략) … 데이터나 실태나 현황들은 전부 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을 보고하는데… 방식은 창업이나 문화 기회 쪽에 지원으로 가는 거에요. 왜냐하면 활력 있는 청년,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청년. 이런 이미지를 선호하니까. 청년을 바라보는 이중 시선들 때문에 정책방향이 오락가락 해요. … (중략) … 청년 문제가 뭔지 진단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다 엉켜 있어요."(A8)

>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조금 사회적 합의 부족이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지방정부에서 청년조례를 다 만들었거든요. 기본 17개 시·도에서는 행정의회에서 하겠다고 판을 다 깔았는데 중앙정부에 가서 사회적 합의가 덜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방정부는 없는 건가. 어떤 지방에서는 노력해서 만들어보자고 해서 해보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시·도에 빠르게 만들어져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전달이 덜 되었거나 확산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거에요."(A10)

② 다층화된 청년집단에 대한 이해와 분석 부족

청년들이 생물학적 동일 연령대에 있다고 해서 같은 상태의 같은 특성을 지니는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이슈들이 본격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고 정책화되는 과정에서는 아주 쉽게 청년 집단이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된다. 기본 전제가 현실과 맞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되는 정책들은 청년들의 정책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우리사회가 경제·사회적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고, 그 격차가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사는 청년들은 수직적으로는 경제적 계층화로 층화되고 수평적으로는 청년 개개인이 갖는 특성에 따라 촘촘하게 분리·분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어떠한 정책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층화된 청년집단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설계하고 있는 정책의 목표집단(target group)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년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들은 각기 다른 정책대상자를 하나의 지원 사업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 “두 개의 다른 대상에 대해 계속해서 같은 정책으로 하나로 퉁 치려고 하는 게 문제인거 같아요. 수당 하나 하면 다 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사회정책이 그렇게 간단한가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대상이나 그 대상에 따른 정책 목표나 이런 게 다양하고,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도모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것들은 자원 연결이거든요. … (중략) … (정책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사회적 에너지를 위한 보편적 정책에 대한 1차원 고민이 있어야 하고. 2차원은 그런 보편적 수혜는 필요치 않지만 본인들이 형성해 놓은 과정 안에서의 지원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A8)

정책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정책'으로 포장된 사업들로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명분만 챙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나열되는 주요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실제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계층이 아닌 어느 정도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는 계층을 향하고 있어, 향후 청년지원정책이 세대 내 격차를 더 확대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시되었다.

> "청년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달라요. 사실 누굴 향하고 있느냐 인데. … (중략) …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치는 상위에 있는 (또는) 끝 단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 정책의 수혜대상이 누구냐.. 청년이라는 큰 틀로 덮어버리고 포장한다고 결과치도 나오지 않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밑단으로 하려하지만 그러한 접근하려는 친구들조차도 그런 거 모르고... 얼마나 아우를 수 있는가."(A4)

> "정책대상이 사실 중상층에 맞춰져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다수에 맞춰서) 다수에 맞췄다기보다도 그냥 중상층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청년주택은 너무 비싸요. 2억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들. 그런 계층한테 맞춰져 있고, 그 외의 것들도 내일채움공제도 진짜 애매하잖아요. 정말 재직자 채움 끝나면 5년 이후에는 소득격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A3)

③ 정책추진 주체의 청년집단에 대한 이해 부족

청년들이 다층화되고 분화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외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에 대해 정책 추진의 주체들이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면접조사 참여자들이 경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20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떠한 환경 하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정책을 설계하고 지원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청년 세대의 문제나 세대 특성은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사회이고 시민이에요. 돈이 없어도 오천 원짜리 커피를 사먹으러 카페에 가는 시민은 우리 사회에서는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고, 일도 없으면서 차를 가지고 다닌다거나 문화적 소비에 더 치중한다거나 삶에 대한 불안정성은 높지만 중소기업은 가지 않는 특이한 세대. 교육은 많이 받았고 해외 경험도 되게 많고. 이런 복잡한 세대의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고. 이 문제를 우리 세대 기성세대는 한 번도 마주한 적도 해결해본 적도 또는 사실 진지하게 들여다 본적도 없다는 거에요. … (중략) … 대상자에 대한 이해라거나 연구 자체가 없는 거에요. 정부 보고서를 보면 되게 일률적이고 보편적이면서 한 번에 쫙 가려는 무언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A8)

"도대체 언제까지 청년들에게 네일아트 배우고 제과제빵을 배우게 하고. 이건 너무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저의 세대? 문제인 게.. 2010년 초반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힘든 건 이제 4차 산업이 진행되면서 그 밑의 사람들은 코딩 배우고 있고 C언어 배우고 있는데 저희 세대는 그걸 학습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미 노동시장에서 자리를 잡지도 못했는데 이 흐름이 오면서 노동시장에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배우기에는 직업훈련이나 내일배움제도로 배우기에는 기관의 질이 너무 낮으니까 이걸로 배워서는 직업 이행이 안 되고, 밑에서는 더 어린 친구들이 빨리 배워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 하고... 그런 우려가 있어요."(A3)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정책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이들부터 지역 단위에서 청년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전달하는 이들까지 범주의 폭이 좁지 않다.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정책추진 주체라는 범주에 속하는 이들이 정책대상인 청년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제까지의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는 중앙 또는 지방 상관없이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주체들을 접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청년거버넌스 참여활동을 하였던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지역별 편차, 중앙과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격차, 그리고 청년에 대한 낮은 이해력과 경직된 인식이 이제까지의 과정에서 큰 한계라고 지적한다.

"정책(을) 실제로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의사소통이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떨어지기도 하구요."(A7)

"정부 관계자에서도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있어요. 굉장히 그 분들은 더 고민을 많이 하세요. 물론 밀접 하냐 와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시고. 5년 전 이야기를 아직 하고 계시고."(A13)

"지자체 별로 갭이 너~~~~무 커요. 잘하는 데 못하는 데를 떠나서 그냥 청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정도가 갭이 정말 너무 크더라고요 공무원들이. … (중략) …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청년 인구가 적을수록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그럴 때 결국 중심을 잡아주는 건 중앙부처에서 오신 사무관이나 국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원) 못 준다고 하면서... 계속 인식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니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A3)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추진 주체들이 청년세대에 대해 단순히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 특히 정책추진의 주체들의 문제 대응 역량의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것은 개인의 역량이기 보다는 이제까지 정부의 대상자 정책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청년을 정책 대상자로 설정했을 때 정책추진 주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당황스러움과 어디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야 할지 몰랐다는 의미에서의 '역량 부족'이라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이슈들은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주체들이 문제제기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었을지라도 머릿속에 문제 해결의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국회로 대변되는 정치권이나 행정부 모두 그 당황스러움과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도 모든 세대와 비슷하지만 유독 청년문제가 왜 정치권에서 표류했을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정치권이나 정책 단위에서 이것을 받아드리는 의지를 넘어서는 역량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감수성은 풍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청년은 겪었으니까.. 물론 시대에 따라 모양은 달랐지만. 그걸 겪었다는 점에서 똑같았기 때문에 측은지심이든 거기에 대한 감수성은 나름 있는 반면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몰랐던 것 같아요. … (중략) … 그 당시의 정책권이나 청년 정책을 담당할만한 연구기관 조차도 청년문제를 그냥 일자리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감수성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아마 청년문제가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을 찾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국회에서 일해 보면 가장 쉬운 게 해외사례 찾고 우리나라에 맞게 설계해서 맞추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거버넌스 틀이었다면... 그것은 행정기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A5)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분들이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고 고민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우리와 맞지 않는 문제?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A7)

정책추진 주체들의 이해부족은 단순히 정책의제 설정이나 설계단계에서 지원목적이나 목표 집단을 고려하지 못하는데 따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3~4년 동안 지방정부 청년정책은 정부의 업무 담당자의 자리를 만들고, 관련된 사업과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기구들을 각 지역에 설치하면서 정책 추진의 주체들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이나 정책 추진 주체의 '몰이해'는 적절하지 않은 이들을, 예컨대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지만 생물학적 연령대가 청년인 자를 정책사업 추진 주체로 선정함에 따라 정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일명 '자리 나누기' 또는 '예산 나누기'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도 이와 같은 사례를 목도한 경험을 보고하였다.

"청년이라는 거 말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 범위에서 넘어서지 않는. 이거를 일자리 쪽으로 보려는 분들은 그렇게 보려 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은 연구로

만 보고. 그냥 지자체에 소위 말하는 정부와 밀접한 관계된 사람을 모시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어서 사실 걱정이죠. 수도권은 사회적 경제나 시민사회가 쏠림현상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청년으로 들어오거나 수탁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청년 지원 사업 기관들의 운영이 산으로 가는 거죠."(A5)

이상과 같이 구체적 경험 속에서 도출된 그의 청년 문제가 이슈화되고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청년거버넌스 참여자들에게 인식된 첫 번째 한계인 '정책방향 설정의 한계'와 청년집단에 대한 '몰이해'에 이어, 다음에서는 두 번째 한계로 인식된 '청년활동가들의 소진과 정책 도구화'와 관련된 경험들 속에서 발견된 구체적인 한계들을 살펴보았다.

(2) 청년활동가의 소진과 정책도구화

① 소진되는 청년활동가: 문제 대상에서 해결의 주체로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책대상자로서 청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에 청년정책이 전국의 지방정부로 확산이 되면서, 청년문제와 이슈를 제기하였던 소수의 청년활동가들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고갈되고 있다는 점은 그간 청년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영역에서든 발생되었던 공통된 문제이다.

2010년대 초반 청년들이 등록금 문제를 비롯하여 주거와 노동의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른바 '문제의 대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와 이슈가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정책 안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정책제도화 과정에서는 청년활동가들이 자기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새 당사자 '문제해결의 주체'로 변화되었다.

청년활동가들이 당사자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된 것은 정책 추진 주체들이 이해의 수준이 낮은 문제도 있지만, 명목상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형성하고 설계했다는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싶은 정부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꾸 물어보기만 해요. 그러면 활동가 그룹이나 당사자 그룹들은 본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우선 이야기 하는 거죠. … (중략) … 보통 행정 입장에서는 당사자 단체나 청년 그룹을 만날 때 리드를 못해요 행정은. 활동가에게 많이 의존해요. 내용이 없고, 고민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주로 청년 단체나 활동가에게 많이 의존하게 돼요. 청년들의 입을 빌어서 결정했다는 당위를 갖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되고 소진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럴 만한 준비나 역량이나 경험이 있는 그룹들이 딱 들어갔을 때는 행정을 약간 리드하는 측면도 있어요."(A8)

청년활동가들은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면서 때때로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을 리드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갖는 시각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인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주체들과 해법을 모색하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자신들의 역할을 분리해야 보다 더 심도 있는 청년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는 그 과정의 핵심을 '건강한 긴장감'이라고 표현하였다.

"활동가한테 너무 많은 부분을 부여하고 의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활동가들도 자칫하면 보고 싶은 청년만 볼 수 있거든요. … (중략) … 활동가들에게 문제에 대한 진단도 마이크가 와버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까지 와버리니까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할 일이다' 라거나... 다른 사람의 과업이라고 못하고 계속 설명해내기 바빴던 거예요. 최근 몇 년간. 저는 이런 것이 구분되거나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랬을 때 서로의 역할이 심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강한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A8)

문제 제기자인 청년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일들은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는 단계까지 확장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형성과 결정은 기존 정부의 공무원들이 하던 방법들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였다. 결국, 청년활동가들에 대한 의존과 그들의 역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었지만 정책이 형성된 결과는 그들의 역할이 왜 있어야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이와 같은 결과들이 반복되는 것은 논의와 타협의 과정을 가능한 짧게 가지면서 정책성과를 빠르게 얻고 싶어하는 정부의 욕구와 구색 맞추는 수준에서의 청년참여가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긴 한데... 회의 한번 참석하면 2만원? 참여수당을 책정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인 거버넌스 활동의 문제 자체가.. 원래 위원회도 문제인 거잖아요. 전문가위원회도 회의만 하고 끝내는 식의 말만 하고 끝내는 참여이지 사실 결국에는 공무원이 하던 대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실 두 시간 안에 뭐가 되지 않잖아요. 일 년에 두 번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정해진 시간 안에 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타협과 과정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더 희생을 하게 되는 구조는 발생하는 것 같아요."(A6)

"과연 (나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고민이 들어요. 위원회 15명인데 그 중에 청년 한 명을 넣어놓고, 우리는 청년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이런 이미지로만 활용되는 것 같다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죠. 사실 하면서 가장 회의감이 들었던 것은 작년에 OOO대책 발표하면서 그 과정에서 청년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여실히 봤고. 그냥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구색 맞을 때는 듣는 척 했다가 그냥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대상 중 하나이고, 청년 정책을 아무리 열심히 생산적인 이야기를 해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A3)

"들으려는 스탠스는 많고 열려있고 청년들의 의견이다 많이 환영하려고 노력하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리까리해요. 이미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참여해서 명분을 실어준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지역도 청년보장제 이런 거 도입할

때 작년 말에... 쉽게 말해서 원탁회의 했는데 사실은 정해진 것에 대해 확인받는 느낌?"(A9)

청년활동가들이 소진되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는 함께 논의하는 정부의 정책담당자의 불안정성에 있다. 협의하고 논의하던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 정책형성의 단계까지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 설명만 하고 있게 되니, 하고자 했거나 결정해야하는 사항들이 추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담당자의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갖추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만으로도 어렵다.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경우라서... 담당자가 길게 6개월도 못하고 다 바뀌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저희도 학습하기 어려운데 담당자 정도는 (전문 역량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그 방식으로 가야하지 않는가. 과장까지는 아니어도 실무담당자 선에서 오픈으로 해도 좋을 텐데..."(A7)

"저희도 평균 공무원 재직 기간이 저희 과가 최대 8개월이에요. 공무원 와서 뭘 해봅시다. 하고 설명하면 또 바뀌고. 공무원들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바뀌니까. 이 설명을 수십 번 해야 하니까."(A8)

비단 담당자 문제만은 아니다. 지방정부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의회를 주도하는 정당에 변화가 있을 경우도 동일한 상황이 빚어진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청년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자치단체장과 그 이후 변경된 자치단체장의 대응 속도와 추진 여건에 있어 실제 큰 차이를 체감하였다.

"물론 요새는 (담당자가) 바뀌니까 같은 여당이어도. 저희가 감시 대상이에요. 예전엔 성과 대상이었는데. … (중략) … 정권은 그대로지만 행정도 바뀌고 시의원도 바뀌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전(前)시장님이었으면 저희는 더 날아다녔을 걸요? 이미 중간조직이 생겼을 것이고. 어쨌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저희는 6개월 안에 3명이 바뀌었어요."(A7)

② 이해관계에 따른 '대표성' 문제제기

청년활동가들이 소진되는 두 번째 문제는 뜬금없이 들이대는 '대표성' 문제이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은 이제까지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청년활동가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며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때때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상황에 닿거나 의사결정자들의 선호가 달라질 때, 갑자기 파트너쉽을 유지해 왔던 청년활동가들에게 '너희들이 청년집단을 대표 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 면접조사에 참여자들은 다른 사회정책 분야와는 달리, 유독 청년들에게만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맥락 없이 이루어지며, 결국에 그러한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기성 정책추진 주체들의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고 보았다.

"각종 TF에 불려 나가는데 불리하면 얘기하다가 청년 대표가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 해요. 같은 대상을 가지고 대표성을 부정하기도 하는 거죠. 다 들어놓고 이야기하다가 뭔가가 안 맞으면 너네가 대표야? 이렇게 가는 거죠."(A7)

"사회에서 아동, 노인 정책 깔 때 아동 대표, 노인 대표 그 대상자를 인터뷰하나요? 사회 문제에 대한 진단을 못하나요? 그걸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한테는 보이스를 요구하는지 모르겠고. 그건 오히려 정부가 정치적인 필요 때문 아닌가요? 예를 들어 지금 활동가 그룹으로 대변되는 몇 안 되는 청년활동가들이 맘에 안 드는 거거든요."(A8)

③ 정책주도의 불평등: 당사자 참여 정책결정과정의 도구화

앞서 논의한 청년집단 대표성 문제에 더하여 청년활동가들이 소진되는 또 다른 문제는 정책결정과정과 결과에서 비롯된다. 정책의제가 설정된 후 제도화 또는 새로운 정책 사업을 형성하는 과정에 청년활동가들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이미 결정을 해놓고 절차

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의견을 구하고, 아이디어만 취한 채 피드백 없이 제안된 방향성과 다른 내용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보면서 자신들의 활동과 의견 개진의 무의미하게 소모되었다는 사실에 큰 실망감을 갖는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그간의 청년거버넌스 활동을 회고하면서 '청년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피력하였다.

> "청년거버넌스를 하면서... (느낀 점은) 청년들은 항상 이용당했다. 청년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청년정책까지인가. (청년사업인가) 왜 청년의 목소리가 특수한 의미에서 당사자성이라는 게... 스스로 외쳤던 것이기 하지만, 반대로 역이용당하는 청년들은 당사자로서만 힘이 있게 되는 것이어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약한 청년한테 뭘 좀 주고 예산을 까는 게 아니고 사회구조적으로 공통된 거잖아요. … (중략) … 구조 전체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못한다는 부분이 있었고."(A6)

> "작은 거라도 기회가 생겼을 때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내부에서도 반성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갈 상황을 잘 보고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나 지방 정부가 손을 내밀어서 들어오라고 하니 우리 쪽에 자원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들어가서 이용당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큰 틀에서 보면 OO지역도 다른 지자체가 보기에도 너무 부러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정 자체가 여기 OO은 활동가들이 있었고 주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역할 한 것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더 할 수 있는 역량을 제안하는 것이기도 했거든요."(A6)

또한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청년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제안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결정한 것과는 다른 내용과 형태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보고 실망하였으며, 자신들이 직접 참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형성 과정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따른 참여 효능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한다.

"정책적으로 먼저 이야기 하면 정책 제안하면 제안한 대로 안 나오는 게 많아요.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이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 (중략) … 어쨌든 제안한 것과는 다르게 그 정책이 그 방향으로 안 가고 피드백도 제대로 안되고. 그래도 저희는 잘 되었어요. 아직도 가끔 그러세요. 판을 다 짜놓고 '자,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 판을 다 짜놓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들어보려 하는 거겠지만 이미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는."(A7)

"참여 기회는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한계는 반영률이 적어요. 참여는 많이 해요. 그러나 여전히 반영률이 높지 않다. 실제로 수당이나 일자리대책에 참여했거든요? 큰 틀을 짜기는 했어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방향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위에서 한번 이야기하면 내용이 싹 바뀌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다른 새로운 안이 나오기도 하고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것이 바뀌기도 하고. 뭔가 개선하는 방향이 없어지고."(A13)

이와 같은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경험한 실망과 낮아지는 효능감은 정책의 이슈가 어떻게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정책화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즉 청년들이 제안하면 바로 정책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화 과정에서 제반 환경을 고려하고 정책의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문지기(gatekeepers)'의 역할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이해가 함께 동반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서인석·윤병섭, 2017, pp.29-30).

청년 이슈가 청년활동가들에 의해 공공의제(public agenda)가 되고, 이것이 정책의제(formal agenda)가 되기 위해서는 일명 '문지기'로 표현되는 역할자의 선택이 필요하다. 정치체제이론에 따르면 문지기의 역할은 어떤 공공의제가 사회 맥락의 규범 하에서 적합한 정책의제로 변환 및 수정 될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며, 정책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논의되는 공공의제는 문지기를 통해 결합되거나 수정될 수 있고 또는 삭제 될 수 있다(Easton, 1965, pp.122-123; 서인석·윤병섭, 2017, p.26에서 재인용)

앞서 본 장의 첫 번째 그간의 청년이슈 정책화 과정에서의 성과 부분에서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유형을 세 가지, 즉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나누어 볼 때, 우리나라 청년정책 의제의 설정은 외부주도형에 가깝다고 논의 한 바 있다. 외부주도형의 정책의제 설정 이론에서는 청년들이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의제를 제안하고 정책형성이 될 수 있게 이슈를 공식의제(formal agenda)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하더라도, 실제 정책 집행이 문제제기 집단(grievance group)의 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하는 점으로 설명한다(남궁근, 1994, p.42).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청년활동가들이 이해했다 할지라도, 의견개진과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들에게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년활동가들은 스스로의 역할이 '도구'에 불과하였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정책추진 주체인 정부의 '문지기'역할에 대한 신뢰는 확보되기 어렵다.

> "청년들의 의견으로 정책제안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필요하다고 나왔고. 그게 진짜로 우리들의 제안을 통해 된 건지 아니면 OO이나 OO나 여기서 했던 걸 가져온 것인지 모르고. 정작 제안을 했던 청년들은 진행과정이나 피드백을 받지 못했어요. 제안을 했으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물어보면서 구체화 하면 좋겠는데."(A9)

이상과 같이 '청년활동가들의 소진과 정책 도구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들은 외부주도자에 의해 발전된 공공의제가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던 그 간의 청년정책 추진과정이 갖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화 과정 속에서 청년활동가들의 경험 속에 나타난 청년 집단 내부에서 인식된 한계를 '집단 내 격차와 배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을 살펴보고 논의하였다.

(3) 청년집단 내 격차와 배제의 문제 표면화

① 청년 당사자 집단의 약한 동력과 분화된 욕구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청년활동가들이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식한 한계는 비단 청년정책 추진 환경이나 추진 주체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년'세대가 갖는 '낮은 응집력' 연령 집단이라는 특성,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분화되어 나오는 요구들을 청년집단의 의견으로 묶어 내는 과정의 어려움도 청년이슈 정책과 과정에서 경험한 한계로 발견되었다.

면접조사에 참여자들은 청년문제를 이슈화하고, 정책의제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청년 집단 자체의 동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 이 동력이 사회의 에너지와 결합되어야 정책화가 가능하다는 공통적인 이해를 갖는다. 그러나 그 간의 청년문제가 이슈화되는 과정과 정책화되는 과정에서는 소규모 청년활동가 집단이라는 아주 작은 동력만이 추동된 것이다.

>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한데 시에 말할 때는 소수가 가서 이야기 하니까 이게 되게 큰 정책 기류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아직 조심스럽죠."(A2)

>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일반 청년의 목소리는 개별화되어있고. 활동가들은 청년세대 안에서의 특정 이슈나 대상을 대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활동해 나가잖아요. 개별화된 청년들의 이해관계는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불쑥불쑥 나오면서... 정치적 의제화가 되려면 사회적 에너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정치적 사회적 에너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청년들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흔히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터져 나오는 사회적 에너지가 너무 없으니까 정치권에서도 알아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역으로 우리처럼 민간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에너지를 분출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하긴 해요."(A8)

청년 당사자 집단에서 청년이슈들에 대해 약한 동력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청년 개개인의 특성의 영향도 있지만, 시대적으로 대학의 학생 운동이 쇠퇴하고 소멸해 가는 과정과도 맞물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시민운동과 같이 어떠한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기존의 집단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 정책의 이슈들이 붉어져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집단을 결성하여 조직화한 이후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 아닌, 개별적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슈화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묶여지면서 공공의제가 되자, 청년활동가들 중심으로 작은 활동조직이 생겨나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 "저는 동력이라는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화 과정에서는. 처음에 청년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런 의제들이나 목소리들이 파편화되어 나왔지만... 제가 배우기로는 민의 주체가 잘 조직화가 되어있어야 파트너십이 이뤄진다고 하고, 여기서 의제로서 보급이 되어야 하고 소위 말하는 에너지가 나와야 하고. 청소년이나 여성의 시민사회에서 조직화된 그룹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청년문제가 나왔을 때는 없었던 거죠. 그 당시를 반추해보면... 결국 학생운동권이 몰락하고, 제도권에 대거 옮겨갔기 때문에 공백의 지대가 생겼고, 비 운동권들이 등장하고... 반값등록금도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목소리를 내던 운동권은 소위 말해서 의견그룹, 정책이라던지 의제에 관심 있는 그룹들이 대학이라는 조직화된 그룹에서는 사라지게 된 거죠."(A5)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청년문제가 이슈화된 이후 생겨난 청년활동가들의 집단의 활동 방식은 기존의 시민운동 단체들과는 외형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로 의견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동력을 창출해 나간다. 이와 같은 특성의 장점이 활용되어 활동하는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뭉쳐내는 에너지는 부족할지라도 네트워크를 통해 그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며 활동하고 있는 경험도 발견된다.

"OOO에서도 물어봤던 게 청년 단체는 시민단체와 왜 친하지 않니? 기존에 운동을 했던 주제와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주제들과 너무 다른 거죠.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거죠. 다만, 그래도 고민도 하면서 가는 부분은 참여기구 쪽에서 활동가가 리드해 나가긴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모으면서 대표성과 확장성을 가져가야 하지 않는가..."(A7)

"그냥 하나 아쉬운 것은 많은 청년들이 함께 많이 안 한다는 거? 다른 청년들이 나가떨어지는? 사실 자기들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나와 내 친구들이나 세대에 좋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반 청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쉽죠. 그래서 보던 사람들만 계속 보고. 이쪽 계열에 있거나 활동가들만 있고.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 (중략) … OOO네트워크에서 힐링 많이 되죠. 아주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연대나 서로의 정보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거에 대한 것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별 대응이나 교환 이런 것들도. OO지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A9)

② 드러난 청년활동가와 일반 청년 간 정책욕구의 격차

청년정책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청년 집단과 관련하여 드러나는 사항 중 하나는 정책화의 최선두에 서는 청년활동가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정책욕구가 일반 청년들과 다른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2018년 '지역 청년센터 프로그램 필요성 및 센터 운영 고려사항'에 관한 청년집단 의견조사에서도 일반청년들과 청년활동가들의 지원 욕구가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김종진, 2018, pp.41-42).

청년 집단이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다분화된 집단으로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한다면 일반 청년과 청년활동가들의 정책 욕구가 차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청년활동가가 개진하는 의견이나 언어가 다른 일반 청년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청년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상황들이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발견된다. 그와 같은

시각은 앞에서 논의했던 청년활동가들을 향한 '너희가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느냐?'와 같은 불필요한 청년집단 대표성 문제 제기와 그 맥을 같이한다.

> "정책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소수인거에요. … (중략) … 저는 이런 장면들이 사회 곳곳에서 보였다고 봐요. 예를 들면 대학교 학생회들이 일반 대학생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전체 학년의 분위기와 이것을 만들어가는 학생회 소수간의 괴리되는 현상들. 그렇다보니 정말 학생복지가 뒷전으로 가잖아요. 오히려 학교가 이런 분위기를 알아서 더 협상해나가지 않는. 저는 이게 사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거기서 봤을 때는 '정말 이상한 애들'이다..."(A1)

청년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사회구조와 환경, 그리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학습하면서 정책화 과정의 선두에 서는 청년활동가가 그러한 과정과 경험이 없는 일반 청년들과 동일한 욕구를 갖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

면접조사에 참여자들은 청년활동가들과 일반 청년들이 정책욕구의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선도하는 입장에서 일반청년들의 선의를 이끌어 함께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년활동가들과 일반 청년들 간의 정책 욕구의 차이는 정책화 과정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다만, 정책의제 설정의 '문지기'나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갖는 청년들이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하며, 참여하는 이들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 "문제점이 될 수도 있겠고 느끼는 건 이 정책 영역에서 나오는 언어와 그냥 일반 청년 사이에서 나오는 언어랑은 너무 달라요. 참여하는 사람들의 언어와.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평등의 관점도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 가치를 추구하고

그동안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정체성이라던지 다 포용하는 분위기로 가는 반면에 여기는 아직도 기존의 질서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살아가기 급급한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서 저희 단체도 우리가 힙스터가 되지 않으려면.. 대중운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녹아들어서 그들에게 선의를 이끌어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토론해보자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지금 거버넌스 참여도 참여인데 거기를 통해서 이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자고 할 건지가 저희 단체에서는 이슈거든요."(A3)

③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배제된 청년층의 포착

청년정책이 확산되고 발전해 가면서 드러난 또 다른 청년 집단 내 격차는 청년문제들이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거나, 목소리를 낼 지라도 너무 소수여서 공공으로까지 전달되지 않는 청년층이 포착된다는 점이다. 대체로 기존 정책 안에서 포괄되지 못하고 정책 접근성이 아주 낮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들과 상대적 저학력 청년들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고교를 졸업하는 청년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입학하는 세대에서 '저학력'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저학력은 단순히 학력수준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정규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학력인정 교육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일명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측면에서의 저학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어 질 수 있고,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이들에게 기대되는 리터러시의 수준이 있지만, 청년활동가들이 청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청년들의 '정책 리터러시'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이들의 경험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저는 취약계층 청년들이 배제된 것이 너무 심각하다. 그 때도 그랬지만 현장에서는 더 큰 거예요. 와서 이 사람은 기존의 고용정책으론 아무것도 안 되고... 사실 뉴딜 일자리에 들어오는 청년들만 하더라도 면접관으로 가보면 정말 어디에도 취업할 수 없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청년 수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취약계층 청년들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어디서 보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게 제 주장이에요. 게시판에 카드뉴스로 청년들 언어로 정책을 소개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정책이 있냐고 물어보면 집이 어딘지 가까운 고용센터를 소개해줘도, (그리고) 어떻게 연락하고 신청하면 된다고 말을 해줘도 못해요. 정책 접근성의 차이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청년 지원 사업이)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A3)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상자의 특성이 아닌, 청년이슈로서 다루는 주제들이 한정된 이슈로 집중되다 보니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포괄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한 일부 청년들의 목소리가 청년이슈로 담기지 못한다.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특히 일자리문제나 청년층 비정규직화 문제에 가려져 직장과 학교생활에서의 위계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오래된 갑질 문화나 성폭력의 문제들이 그 간의 정책화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로 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한다.

"취준단계 상태와 공부단계, 취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 사건이 나야 조망을 하는 시대잖아요. 취준생은 너무 주변에 많으니까. 학교나 일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고졸생들 사건사고가 없으면 조망되지 않는데... 법안 하나 생기면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하는 상태가 아쉬운 거죠. 청년위원회 있을 때 교수 갑질, 성추행 사라지지 않고 있고, 청년들이 약자로서 차별받고 있거나 손해를 감내해야하는 문화를 어떻게 국가가 관리하고 문화를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런 게 주요과제인데 단순히 비정규직 급여적인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뭔가 혜택에 매몰되어 있어서..."(A4)

이상과 같이 청년 집단을 구성하는 이들의 격차와 일부 배제되는 청년들이 포착되어 표면화되는 문제가 청년거버넌스 참여자들에게 인식된 세 번째 한계점으로 논의되었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계로 도출되었던 국가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을 정책화 하는 과정에서 느껴진 한계, 즉 '다음'이 그려지지 않는 정책 추진의 내용을 살펴보고 논의하였다.

(4) '다음'이 그려지지 않는 내용의 정책 추진

① '구조'보다는 '사업': 장기플랜이 부재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조례제정을 비롯하여 제도적으로 청년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 사업을 수행해 나간 것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이다. 전국의 청년거주자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이슈들을 정책의제로 빠르게 설정하였으며,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모델로 삼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최근 2~3년 동안 급속하게 마련한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은 기존의 개별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의 대상을 청년으로 확장하거나, 신규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에 사업을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을 보내는 방식, 그리고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대상이나 영역에 새로운 지원 사업을 추가 하는 방식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시 말하면, 국가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갖는 성격이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진단, 그리고 방향 설정이나 가치를 담은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개별 사업들만의 확장과 예산의 증액이 추진되어 온 것이다.

"청년정책이 정확하게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별로 없는 거죠. 저는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이건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보는데. 근데 그래서 그 상이 무엇인가가 논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A10)

"이런 목소리를 아무리 낸다 한들 결국에는... 방어하기 위한 고민을 더 많이 하지 다음의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A13)

"(청년정책이) 커다란 빅 픽처? 또는 사이클을 그리지 못하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A14)

"저는 국가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세대 문제가 아니라 미래사회든 미래에 영향을 주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경쟁력이 결여된 청년들을 극복하는 대안. 청년정책이 국가정책으로."(A12)

이에 대해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중앙정부의 장기 계획과 국가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을 그 간 중앙정부 청년정책 추진의 맹점이라고 지적한다. 참여자들은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고 신규 사업을 전국 단위로 벌이는데 있어 기본적인 문제 진단, 그리고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았다.

일단 중앙정부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만들어 제공했다'는 점을 성과로서 포장하고, 지역에서 실제 사업이 운영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닿는 구조와 실효성의 문제는 애당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방정부가 과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하였다.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유도해내서 정책을 세팅해야하는데.. 청년 일자리 없지? 창업해봐. 돈을 그냥 주는 그런 패턴이 모든 것에 다 맞추는 거 같아요. 집? 없어? 그럼 집 줄게. 8평.. 이렇게 보급하는 것에만 멈춰져 있고 집중되어 있는 게 답답한 거죠."(A1)

"지역 일자리 사업이 내려가잖아요. 이런 거죠. 중앙은 예산을 써야하니까 진짜 미달이어도 예산을 줘야 돼요.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담당자가 해야 한다니까 그냥 적어서 되면 돈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는 사업도 많았어요. 이거 하시면 안 된다고 해도 이해가 잘 안되시잖아요. 전국적으로 무지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아무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돈만 쓰고 청년들은 취업 안 되고 백수 되고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줄기차게 중앙에서 이걸 컨트롤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행정상의 여력이 안 된다는 이정도 반응밖에 안 오는 거예요."(A13)

"예산이 증가 폭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 재검토를 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짜야할 시기가 여기에 와있지 않는가. 중앙정부는 해 놓은 게 없으니까 연구부터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실패했다고 하면..."(A5)

지원 사업 확장과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대를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한 실증적 준비 없이 빠른 성과를 위해 일괄 추진하다보니, 중앙정부 정책 사업의 미비한 점들은 최종 서비스 전달자인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옮겨지고, 그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인 '청년'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무의미한 '사업'만이 남게 된다.

"지금은 문제 진단이 안 되어 있고 사업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설정만 준거에요. 분석이 없고. 청년이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가 청년센터 전국에 20개 까는 거야? 이거까진 되어 있죠. 근데 까는 거에서 끝내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온라인 청년센터 정보 많이 활용해. 그 다음은 모두 지자체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A8)

"거기 (지역)에 맞게 가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광역시랑 기초시랑 도농 복합이나 컨디션이나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똑같이 하고 똑같이. 저희도 사업을 하더라도 발로 찾아 나가다 보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똑같이 하면 그냥 돈 뿌리고 점검하고 예산 지원 받고 평가받고 똑같다는 거죠."(A7)

일부 지방정부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이 안착되고 안정화 되는 단계에 진입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들 지역에서 청년거버넌스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지방정부보다 늦은 시기에 착수되는 중앙정부 청년정

책으로 인해 안정화된 지역의 청년정책이 흔들리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우려는 일부 지역에서 청년정책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가 성과로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 "저는 관점을 좀 바꿔서 이야기 하자면 정확하게 청년기본법을 주장한 처음 이유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방식을 교란하지 마'였단 말이죠.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에서 오는 걸 지역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중앙에서 뭔가를 정해서 규모 있게 뿌리면 지역이 다 흔들려요. 적어도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이 성장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을 교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좀 방어를 해보자. 대응을 해보자가 저희 작년 사업의 미션이에요. 중앙정부 대응 미션이. … (중략) … 지금 그냥 중앙정부가 이상한 짓만 안했으면 좋겠다."(A10)

② 자치단체장 주도 빠른 복제의 지역 청년정책: 구색과 실제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에 대한 개념이나 장기계획 없이 개별 사업을 늘리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온 것이 한계라면, 지방정부는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도입한 이후 빠르게 기초 단위까지 단기간 내에 확산되었지만 그것이 대체로 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빠른 '복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자치단체장들이 청년정책의 이슈를 단기간에 도입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의 이슈를 빠른 의사결정으로 수용한 것일 수도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자치단체장 선거과정에서 소속된 중앙 정당의 청년 이슈를 공약으로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중앙부처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의식한 성과 내기의 연장선 상일수도 있다. 예컨대 [2019년 행정안전부 합동 평가]의 경우, 17개 시·도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 시책 등의 추진 성과에 대해 24개 중앙부처가 공동

으로 참여하여 평가를 함에 있어 중요 초점은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를 중점 평가하여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구현'에 있었다(행정안전부, 2019.07.31.).

정책의제의 설정과 과정이 자치단체장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 '동원형(mobilization model)'의 형태로 정책이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정책이 정치지도자 또는 정책결정자에 의해 제기될 경우 자동적으로 공식의제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정책이 성공하려면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공식의제가 공공의제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형태는 정치지도자 또는 정책의사결정자와 국민의 거리가 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지배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의제 설정 유형이다(남궁근, 1994, p.42).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도 이 자치단체장 주도의 빠른 복제로 청년정책이 도입된 지역들의 사례를 쉽게 발견된다.

> "여기가 성공했다고 하면 청년 정책을 세팅하는 지자체가 고대로 따라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진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A1)

> "지자체는 서울시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분주하게 되고."(A4)

> "지방 정부 쪽을 이야기 한다면 행정의 빠른 복제... 콘트롤C + 콘트롤V. 청년정책의 복제. 긍정적인 방식은 청년정책의 확산인거고, 부정적인 부분은 고려 없이 우선 복사해 가는 거죠. 그렇게 확산 되어 가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은 없고. 정말 빠른 복제가 거의 3년 사이에 만들어 졌어요. 이런 과정에서 실상 당사자성을 구현하는 방식? 옛날에는 시장 한 명 오고 30명 모여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시장 한 명 오고 한 100명 모이는 자리가 더 생기는 거죠."(A10)

> "시장님이 2015년부터 청년정책을 밀면서 거버넌스를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청년 아젠다를 이끄는 게 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이런 게 되게 부족해요. 어쨌든 정책이나 아젠다 이런 부분이 다 관에서 매니징 하고 있는 거예요."(A9)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장이 주도한 청년정책의 빠른 도입과 정착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청년참여기구의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의회의 협조 그리고 정책추진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관여에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지역의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영향은 크게 나타난다.

"각 자치구의 청년정책위원회를 보면 서울에 있는 각 자치구를 봤을 때 의지가 있는 자치구일수록 현 자치구의 수장과 구청장의 관계가 돈독한 굉장한 힘을 받아서 주도하죠. 청년이 주체가 되어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는 그 자체가 굉장한 힘을 받아서 밀도 있게 설계하고."(A5)

"어디든지 정책결정권자의 관심에 따라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물론 시기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당시 시장님과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의회에서 주도 했어요. 17년에 그 다음 18년 선거니까 그 당시 구청장님 되신 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16년부터. 시의원 도와주시고 시장님도 도와주시고, 본인이 만드시기도 했기 때문에 행정도 도와주고 시의원도 도와주니 시너지가 장난 아니었죠."(A7)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깔렸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 전(前) 시장이 있을 때는 청년을 의식적으로 언급하고 공무원 사회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기 거치면 승진 좀 되겠다는 신호가 있으니까 청년 쪽을 계속 거쳐 가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일자리(라고) 하니까 신호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청년 안한다는 신호가 너무 빨리 갔어요. 공무원들한테. 이게 중요하다 보는 거고."(A8)

3. 소결: 기존 한계를 넘어 앞으로의 방향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앞서 분석되고 의미로 도출된 그 간의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요약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크게 네 가지(①국가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개념화, ②기존 청년정책의 체계화 및 효율화, ③청년정책 의제 설정 및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참여 효능감 회복, ④청년세대 내 격차와 지역 간 격차가 고려된 중앙정부 추진 계획 수립)로 제안하였음.
- 제안된 사항들은 다음 장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인식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및 '청년정책 개선 방향 및 개선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정책델파이 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제6장에서 도출될 청년 정책 개선 방향 및 추진과제로 반영될 것임.

이 장에서는 지난 십여년 간 청년이슈가 정책화되는 과정에서의 변화와 한계를 당시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했던 청년당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청취하고, 그 경험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와 한계를 〈표 Ⅲ-6〉에 요약된 바와 같이 도출하였다.

이른바 청년문제가 공공이슈로 의제화되고 정책화되는 과정을 경험한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발견된 그 간의 변화이자 성과는 크게 세 가지,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한계는 크게 네 가지로 의미로 압축되었다.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발견된 성과 세 가지 중 하나는 문제 제기한 이슈가 하나의 정책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점이고, 이어 또 다른 성과는 짧은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조례가 제정되고 청년정책 추진 기반이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당사자의 입장으로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발굴되었다는 점이다.

표 Ⅲ-6 그간 청년정책 이슈화 및 정책화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요약

성과	한계
1 문제제기 이슈의 정책 제도화	1 정책 방향설정의 한계와 청년에 대한 몰이해
2 조례제정을 통한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빠른 확산	2 청년활동가의 소진과 정책도구화
	3 청년 세대 내 격차와 배제의 문제 표면화
3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발굴	4 '다음'이 그려지지 않는 내용의 정책 추진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 이면에는 네 가지로 압축되는 한계가 공존한다. 그 중 첫 번째 한계는 정책 방향설정의 한계와 청년집단에 대한 몰이해이고, 정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청년활동가들이 소진되는 것은 물론 정책도구로만 활용되기도 한 점이 또 다른 한계로 드러났다. 또한 청년세대 내 정책 욕구의 표출이나 의제 선도의 격차와 일부 청년층이 배제되는 문제가 정책의 확산과정에서 표면화 된 것도 포착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들 한계와 더불어 정책 설계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발견된 것은 그 간 추진된 청년정책은 대체로 '다음'이 그려지지 않는 내용의 정책 추진이라는 점이다.

이들 한계점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표 Ⅲ-7〉과 같이, 청년거버넌스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는 압축된 하나의 한계점에 다양한 측면에서 발견되고 공통적으로 인식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Ⅲ-7 청년이슈 정책과 과정에서의 한계

주요 한계	내용
1 정책 방향 설정의 한계와 청년집단에 대한 몰이해	①'청년=약자' 프레임의 한계와 '청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②다층화된 청년 집단에 대한 이해와 분석 부족 ③정책추진 주체의 청년집단에 대한 이해 부족
2 청년활동가들의 소진과 정책 도구화	①소진되는 청년활동가: 문제의 대상에서 해결의 주체로 ②이해관계에 다른 대표성 문제제기 ③정책주도의 불평등: 당사자 참여 정책과정의 도구화

주요 한계	내용
3 청년집단 내 격차와 배제의 문제 표면화	①청년당사자 집단의 약한 동력과 분화된 욕구 ②청년활동가와 일반 청년 간 정책욕구 격차 ③목소리를 내지 않는 배제된 청년층 포착
4 '다음'이 그려지지 않는 내용의 정책 추진	①'구조'보다는 '사업': 장기플랜이 부재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②자치단체장 주도 빠른 복제, 구색만 갖추려는 지방정부 청년정책

그 간의 청년정책이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다는 것이 첫 번째 한계점이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청년=약자'라는 프레임이 갖는 한계와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양극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단일집단이 아닌 다층으로 존재하는 청년집단에 대한 이해와 각기 다른 욕구에 대한 분석의 부족, 그리고 공공영역의 정책추진 주체가 갖는 청년에 대한 낮은 이해 수준이 해당된다.

두 번째 한계점은 빠르게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청년 문제를 제기하는 청년활동가들이 소진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여기에는 청년문제 제기 단계에서는 청년을 문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했던 정부가 다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청년활동가들을 해결의 주체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소수에 불과한 청년활동가들의 에너지 소진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청년활동가를 활용하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청년활동가가 갖는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한 문제 지적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으로 청년이 정책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확보되었지만, 그저 할당된 인원수나 구색을 맞추는 수준에서 도구화되고 있다는 점도 동일한 선상에서 지적되는 두 번째 한계 해당 내용이다.

세 번째 한계점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진영에서 세대 간 격차뿐만 아니라 청년집단 내 격차와 일부 청년들의 배제의 문제가 표면화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화되고 다층으로 분화된 작은 집단 또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청년집단의 특성 상

하나의 청년당사자 집단으로서의 응집력이 약하고, 표출되는 정책욕구 또한 다분화되어 나타나는 등 기본 특성에서 비롯되는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집단 내의 격차가 점차 더 커지는 것인데, 예컨대 청년정책 이슈의 맨 앞에 서게 되는 청년활동가들과 보통의 청년들 사이에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크다는 점, 그리고 청년의 이슈에서 아예 배제된 청년층의 존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계점으로 도출된 것은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이 이구동성 보고하는 경험으로서 이제까지의 청년정책의 추진이 '다음'이 그려지지 않는 단편적인 정책사업의 추진이었다는 점이다.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보다는 단편적인 지원 사업에 집중하여 대응을 하다 보니 장기계획은 부재하게 되고, 분석된 기초자료 없이 다른 지역에서의 사업을 복제하는 수준으로 구색 갖추기만 해왔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그간의 청년정책 추진의 한계는 단지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청년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2019년 현 시점에도 유효하다. 그렇다면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했던 이들의 경험 속에서 발견된 다양한 측면에서 붉어진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 장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다음 장에서 분석될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인식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연이어 분석되는 '청년정책 개선 방향 및 개선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정책델파이의 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청년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나, 우선 본 장에서 의미 있게 도출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총괄·조정기구가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만큼, 과연 국가 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그 개념에 따른 청년정책들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 기존의 정책들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온 청년정책들이 과연 정립된 개념을 적용했을 때 과연 청년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정책들이 정책대상자로서 '청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것들이 다수이며, 정책 목표 집단으로 하는 청년의 기본 특성과 욕구에 대한 진단과 분석 없이 사업으로 확장되거나 신설된 정책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 체계화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청년이슈의 의제설정은 청년이라는 외부주도자에 의해 제기되지만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단계에서 청년거버넌스의 기능과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년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참여에 대한 효능감이 낮아지고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동시에 건강한 청년정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폭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이제까지 개별부처의 사업으로 대응해오던 방식이 아닌, 국가의 대상자 정책의 하나로 비전을 제시하고, 어떠한 방향성 하에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인지, 그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 계획의 근간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벌어진 청년 세대 내 격차와 지역 간의 격차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청년거버넌스가 건강하게 잘 작동되고 있고, 그 간의 청년정책 추진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자체와 기반조차 갖추지 못하고 지역 내 청년이슈 의제 설정의 동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지역 간의 격차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하고 연계하여 함께 성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그 간의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 극복을 위한 필요 사항들은 이어 분석되는 설문조사와 델파이 조사의 실증 결과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본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제4장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의견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특성별 현행 청년정책 당사자 인지도 및 수혜율
3.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평가
4.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회정책 비전의 중요성 및 추진 정책의 우선순위
5. 소결 : 청년 당사자들의 청년정책 평가와 추진 방향

4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의견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청년들이 인식하는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시급한 청년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19세~34세 청년 총 733명을 대상으로 '현행 청년정책 당사자 의견조사'를 실시함.
-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의견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 및 전략]을 기본 틀로 하여 선정된 현행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평가의견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었고, 작성된 설문지 초안은 여러 단계의 검토 및 수정 작업, 그리고 IRB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음.
- Web기반 온라인 조사를 통해 확보된 조사 자료에 대한 실증 분석 방법, 즉 응답자 특성별 차이 검증과 영향 요인 분석, 그리고 영향력 산출 및 비교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음.

1) 조사 추진 및 표본 구성

(1) 조사 추진 과정

현 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인지와 수혜, 중요도와 도움 정도, 정책 우선순위가 청년들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행 청년정

* 이 장의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 설계 및 내용 구성, 분석모형 설계와 결과의 해석, 1.의 집필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자료 수집은 ㈜한국리서치,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집필은 변금선 부연구위원이, 분석 결과의 그래프 작성은 이민정 연구사업운영원이 수행하였음.

책 당사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연구계획에서 설정한 단계에 따라 추진되었다. 먼저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내용, 포용국가 실현에 있어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구조적 현실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행 청년정책과 청년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 청년정책을 선정하고 청년당사자 의견조사 내용을 설계하였다. 청년당사자 평가를 위한 조사문항을 개발하고, 청년정책 전문가, 거버넌스참여 청년, 조사연구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조사도구를 완성하였고 설문조사는 온라인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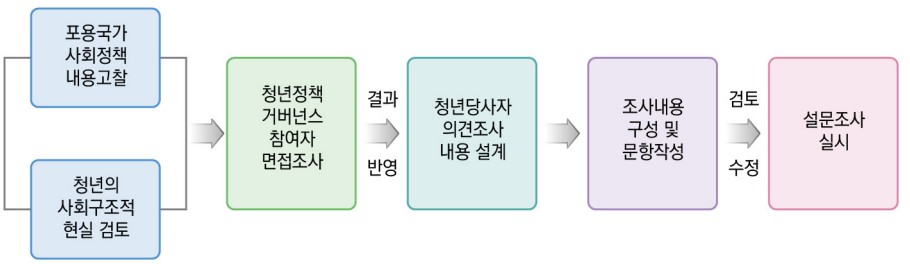


그림 Ⅳ-1 설문조사 추진과정

(2) 표본 구성

설문조사의 대상은 19세~34세 일반청년과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이다. 일반청년의 모집단은 2019년 7월 현재 전국 19세~34세 청년이다. 청년의 경우 표집틀이 없어서 체계적 확률표집이 불가능하므로 청년의 현재 상태(재학생, 미취업자, 취업자)를 기준으로 최소 210명씩 확보하도록 설계하였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집단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를 대상으로 임의,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을 따랐다.

일반 청년의 세부표본은 연령, 성별, 구직상태, 근로형태를 반영해 구성하였다. 재학생은 연령과 성별을 동수로 구성하였다. 미취업자는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성별과 연령을 동수로 구성하되, 고졸자, 구직, 비구직자가 각각 50명씩 확보되도록 할당하였다. 취업자도 성별과 연령을 동수로 구성하고 고졸자, 정규직, 비정규직이 각각 50명씩 확보되도록 할당하였다.

표 Ⅳ-1 최소 표본 구성 및 할당

(단위: 명)

구 분	대학(원)재학		미취업		취업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세~24세	35	35	35	35	35	35	210
25세~29세	35	35	35	35	35	35	210
30세~34세	35	35	35	35	35	35	210
계	210		210 (고졸자/구직자/ 비구직자 각 50명, 총 150명 확보)		210 (고졸자/정규직/ 비정규직 각 50명, 총 150명 확보)		630

2) 조사내용 구성 및 문항 개발

(1) 조사내용의 구성

청년정책 관련 정부 자료의 수집과 검토, 거버넌스 참여자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내용의 틀을 구성하고,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 자문회의를 통해 세부 문항을 개발하였다. 조사내용의 기본적인 틀은 청년의 현재 상태,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의견,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청년정책의 당사자 의견과 추진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청년들의 현재 상태와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특성을 '개인 및 배경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표 Ⅳ-2 조사 내용의 구성

구분		대학(원)재학자		미취업자	취업자
주요 내용	청년정책 당사자 의견 (인지도 및 이용경험, 중요도, 도움정도)	사회 통합	기회권한 배분	①학자금지원	• 국가장학금 • 학자금 대출 또는 대출이자 지원
			소득불평등 완화	②구직 및 창업지원	•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지원 • 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 • 고용센터 구직활동 지원
				③일하는 청년 소득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희망키움통장 • 근로장려세제 • 청년동행카드
				④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청년고용기업 세금감면
			지역균형 발전	⑤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 청년당사자 소통, 의견수렴기구 • 청년정책 수립, 정책심의기구
		사회 지속	저출산 고령사회	⑥주거지원	• 전월세보증금 지원 • 월세지원 • 공공임대주택 • 공공기숙사
				⑦신용회복	• 대학생·청년 햇살론 • 대출금 상환유예
			사회서비스 일자리	⑧사회서비스 및 공간지원	• 청년 활동공간 지원 • 활동공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사업
			안전보장 생명존중	⑨건강지원	• 청년대상 국가건강검진 • 정신건강온라인 자가검진
		혁신 능력	창의성 다양성	⑩다양한 활동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사회 활동지원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람중심 일터혁신	⑪일터의 안전보장	• 비숙련 청년을 위한 직장내갑질 규제 • 현장실습·비숙련 청년 산업안전 보장
			고용안전망 구축	⑫고용안전망 확충	• 1인 영세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미가입구직자 구직활동금 지원
	청년정책 추진 방향	•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중요도 인식 • 우선되어야 할 청년정책			

구분			대학(원)재학자	미취업자	취업자
개인 및 배경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현재 상태, 거주지역 • 동거형태, 주관적 경제적 여건 수준, 월평균 총 소득, 생활비 마련		
	집단별 상태 관련 특성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 청년정책거버넌스 참여 여부, 참여 기간		
		현재 상태	• 대학(원) 학제, 소재지	• 미취업기간, 취업준비, 구직활동, 구직실패, 공시준비	• 근로형태, 사업체 규모, 근속기간

주요 내용은 포용 사회정책 3개 비전, 9개 전략에 해당하는 12개의 청년정책 영역에 대한 당사자 인식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정책의 인지여부와 수혜경험을 확인하고, 청년정책이 '청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해당 청년정책이 본인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당사자 평가 대상이 되는 청년정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다. 현 정부의 사회정책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책을 조사하여 청년의 이행특성(교육, 취업, 주거, 경제적 독립 등)에 따라 분류하고, 이어서 조사한 정책 중 주된 대상이 청년이거나 현 정부에서 청년정책이라고 발표한 정책을 선별하여 포용적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의 목표와 내용에 맞게 재배치하였다.

연구진이 정리한 당사자 인식 평가 대상 청년정책 리스트에 대해 청년집단과 청년정책 전문가 집단의 자문(①누락된 정책, ②제외해야 할 정책, ③내용을 보완해야 할 정책, ④영역을 변경해야 할 정책, ⑤기타)을 거쳐 설문에 포함할 12개의 청년정책 영역과 30개 정책을 확정하였다. 더욱 정확한 당사자 인식 조사를 위해 12개 정책영역과 30개 정책의 목표, 대상, 지원 내용에 관해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어서 포용 사회정책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개인 및 배경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①성별, ②연령, ③최종 교육수준, ④거주지역, ⑤동거형태, ⑥주관적 경제 여건 인식, ⑦월평균 총소득, ⑧생활비 마련 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집단 관련 특성으로는 ①현재 상태와 ②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로 구성했다. 재학생은 ①대학(원) 학제와 ②소재지를, 미취업자는 ①미취업기간, ②구직활동 여부와 ③기간, ④공시준비 여부를, 취업자는 ①사업체 규모, ②근로 형태, ③근속기간이 포함되었다.

(2) 조사 문항의 개발

① 조사 문항 구성

연구진이 마련한 설문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①조사내용 구성, ②측정방식, ③문항의 내용, ④추가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여 설문 초안을 수정·보완하였다. 이어서 수정·보완된 설문지는 청년정책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①측정개념, ②측정방식, ③추가 문항, ④기타의견에 관해 자문을 받아 2차 수정·보완이 되었다. 2차 수정·보완된 설문지는 ①문항간 연계로직, ②응답대상자별 문항로직, ③추가수정사항 검토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청년집단과 청년정책 전문가, 그리고 조사전문가의 종합검토를 통해 조사문항이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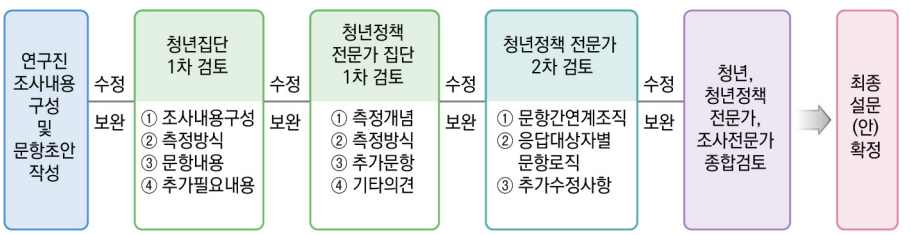


그림 Ⅳ-2 조사문항 개발 과정

최종설문지는 총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0. 조사대상자 판별 및 개인 특성' 영역에서는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현재 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이 선정되었다.

'1. 청년정책 당사자 의견' 영역에서는 포용적 사회정책의 비전과 전략별 12개 정책영역과 30개 정책에 관한 인지여부, 이용경험, 중요도와 도움 정도를 확인하는 문항들이 구성되었다.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도움 정도는 정책의 인지, 수혜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의 인지와 수혜경험을 먼저 응답하도록 하고 중요도와 도움 정도 문항을 배치하였다. 인지와 수혜경험은 12개 정책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정책 30개에 대해 개별적으로 측정하였다. 중요도는 12개 정책영역이 19세~34세 청년들의 삶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10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1, 매우 중요하다=10)로 측정하였으며, 청년에 본인의 삶에 대한 도움 정도 역시 12개 정책영역에 대해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 영역에서는 포용적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에 관한 청년들의 동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했던 3대 비전에 대한 중요도를 10점 척도로 측정하고, 9대 전략에 대해서는 1순위~3순위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3.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영역에서는 응답자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경험 여부와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활동기간을 파악하는 문항을 측정하였다.

표 Ⅳ-3 설문 문항 및 문항작성의 근거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재학	미취업	취업	
0. 조사 대상자 판별 및 개인 특성	• 연령	문1	문1	문1	연구진 작성
	• 성별	문2	문2	문2	
	• 학적 상태	문3	문3	문3	
	• 최종 학력		문 3-1	문 3-1	
	• 고등학교 형태		문 3-1-1	문 3-1-1	
	• 최종학력		문 3-2	문 3-2	
	• 학교의 소재지	문 3-3	문 3-3	문 3-3	
	• 현재 취업 여부	문4	문4	문4	김지경·이윤주(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실태조사 선문4. 활용
	•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문 4-1	연구진 작성
	• 현재 일하는 직장의 종사자 수			문 4-2	김지경·이윤주(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실태조사 문22. 활용
	•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			문 4-3	김지경·이윤주(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실태조사 문24. 활용
	• 미취업 상태 기간	문 4-4	문 4-4		연구진 작성
	•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 여부	문 4-5	문 4-5		김지경·이윤주(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실태조사 문17. 수정 활용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재학	미취업	취업	
	• 최종학교 졸업 이후 구직활동 기간		문 4-5-1		김지경·이윤주(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실태조사 문17-1. 활용
	• 지난 4주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 여부		문 4-5-2		김지경·이윤주(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실태조사 문17-2. 수정 활용
	•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문5	문5	문5	연구진 작성
	• 혼인상태	문6	문6	문6	연구진 작성
	• 동거 형태	문7	문7	문7	연구진 작성
	• 경제적 여건	문8	문8	문8	김지경·이윤주(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실태조사 문29-1. 활용
	• 월평균 총소득	문9	문9	문9	김지경·이윤주(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실태조사 문26. 활용
	• 생활비 마련	문10	문10	문10	김지경·이윤주(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실태조사 문27. 수정 활용
1. 청년 정책 당사자 의견	• 학자금 지원제도의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 11-1	문 11-1	문 11-1	연구진 작성
	• 학자금 지원정책의 중요도 인식	문 11-2	문 11-2	문 11-2	
	• 학자금 지원정책의 도움 정도	문 11-3	문 11-3	문 11-3	
	• 구직지원 및 창업 관련 지원의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 12-1	문 12-1	문 12-1	
	• 구직지원 및 창업 관련 지원의 중요도 인식	문 12-2	문 12-2	문 12-2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재학	미취업	취업	
	• 구직지원 및 창업 관련 지원의 도움 정도	문 13-3	문 12-3	문 12-3	연구진 작성
	•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의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 13-1	문 13-1	문 13-1	
	•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의 중요도 인식	문 13-2	문 13-2	문 13-2	
	•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의 도움 정도	문 13-3	문 13-3	문 13-3	
	•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의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 14-1	문 14-1	문 14-1	
	•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의 중요도 인식	문 14-2	문 14-2	문 14-2	
	•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의 도움 정도	문 14-3	문 14-3	문 14-3	
	• 청년 당사자 참여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 15-1	문 15-1	문 15-1	
	• 청년 당사자 참여지원의 중요도 인식	문 15-2	문 15-2	문 15-2	
	• 청년 당사자 참여지원의 도움 정도	문 15-3	문 15-3	문 15-3	
	• 일하는 청년 주거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 16-1	문 16-1	문 16-1	
	• 일하는 청년 주거지원의 중요도 인식	문 16-2	문 16-2	문 16-2	
	• 일하는 청년 주거지원의 도움 정도	문 16-3	문 16-3	문 16-3	
	• 청년 신용회복 지원정책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 17-1	문 17-1	문 17-1	
	• 청년 신용회복 지원정책 사업의 중요도 인식	문 17-2	문 17-2	문 17-2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재학	미취업	취업	
	• 청년 신용회복 지원정책 사업의 도움 정도	문 17-3	문 17-3	문 17-3	연구진 작성
	• 청년 사회서비스 및 청년 공간 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 18-1	문 18-1	문 18-1	
	• 청년 사회서비스 및 청년 공간 지원의 중요도 인식	문 18-2	문 18-2	문 18-2	
	• 청년 사회서비스 및 청년 공간 지원의 도움 정도	문 18-3	문 18-3	문 18-3	
	• 청년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 19-1	문 19-1	문 19-1	
	• 청년 건강검진 지원의 중요도 인식	문 19-2	문 19-2	문 19-2	
	• 청년 건강검진 지원의 도움 정도	문 19-3	문 19-3	문 19-3	
	• 청년 대상 다양한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 20-1	문 20-1	문 20-1	
	• 청년 대상 다양한 활동 지원 사업의 중요도 인식	문 20-2	문 20-2	문 20-2	
	• 청년 대상 다양한 활동 지원 사업의 도움 정도	문 20-3	문 20-3	문 20-3	
	• 일터의 안전보장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 21-1	문 21-1	문 21-1	
	• 일터의 안전보장 정책의 중요도 인식	문 21-2	문 21-2	문 21-2	
	• 일터의 안전보장 정책의 도움 정도	문 21-3	문 21-3	문 21-3	
	• 고용안전망 확충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 22-1	문 22-1	문 22-1	
	• 고용안전망 확충 정책의 중요도 인식	문 22-2	문 22-2	문 22-2	
	• 고용안전망 확충 정책의 도움 정도	문 22-3	문 22-3	문 22-3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재학	미취업	취업	
2. 청년 정책의 추진 방향	•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중요도(3)	문23	문23	문23	연구진 작성
	• 우선되어야할 청년정책	문24	문24	문24	
3. 청년 정책 거버 넌스 활동	• 청년정책거버넌스 참여여부	문25	문25	문25	
	• 청년정책거버넌스 활동 참여 기간	문 25-1	문 25-1	문 25-1	

② 연구윤리 심의 및 승인

최종 작성된 설문지를 포함한 본 연구의 '청년정책 당사자 평가 설문조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대상자의 보호에 관한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심의 절차를 준수하였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제10차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본 연구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등의 연구(조사) 동의 획득 계획,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며(심의일: 2019.06.25.),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밝힌다(승인번호: 201906-HR-고유-015-01, 통보일: 2019.06.28.).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및 결과

다양한 상태에 놓인 청년의 설문 참여도를 높이고, 온라인 활동에 친숙한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보고 응답 방식의 온라인조사(Web based survey)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종 확정된 설문지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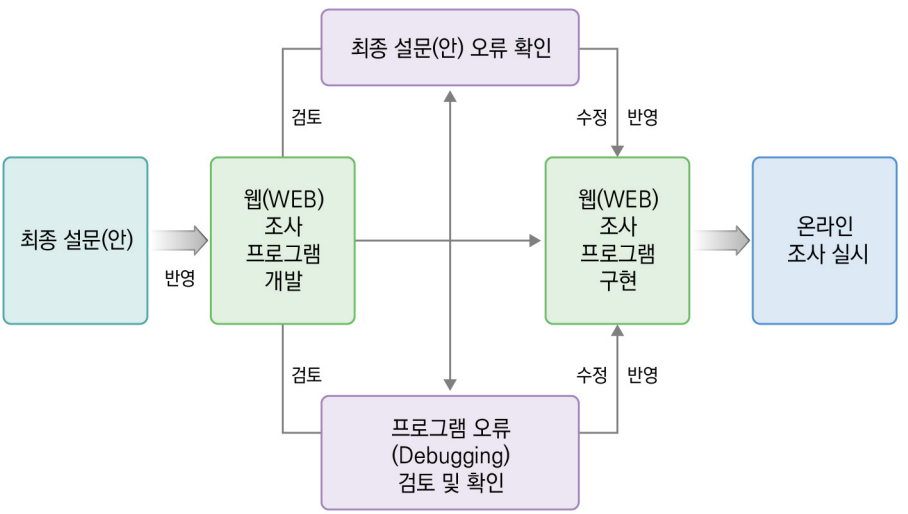


그림 Ⅳ-3 온라인 조사도구 개발 과정

설문지를 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상의 오류(Debugging)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조사도구 개발을 완료하였다. 개발된 온라인 조사 프로그램을 사용해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조사기간 내에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 대상 기준에 맞는 19세~34세 청년 733명이 응답하였다. 현재 상태에 따른 하위 집단별로 210명씩

총 630명의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조사에 참여한 청년(54명)을 포함해 자료가 초과 수집되었다. 최종적으로 재학생 230명, 미취업자 218명, 취업자 285명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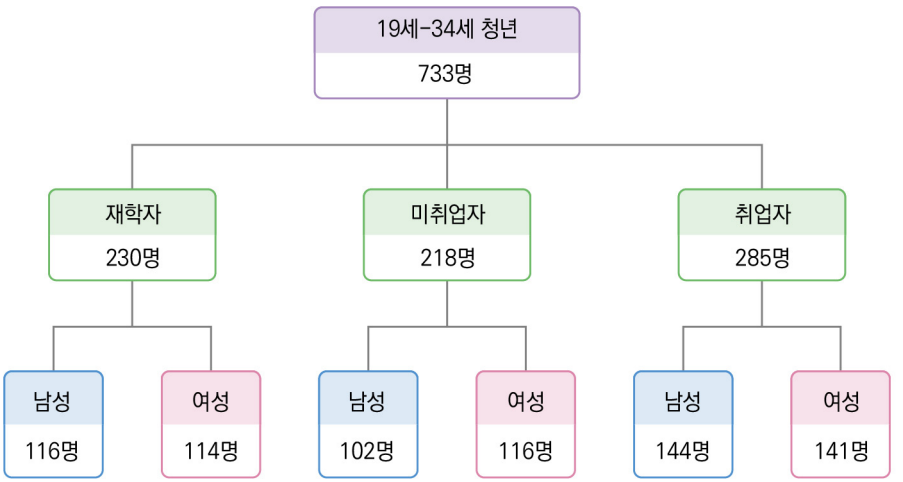


그림 Ⅳ-4 최종 수집 자료의 표본 구성

(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 특성, 인지도와 수혜경험, 중요도와 도움 정도, 정책 우선순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그로 인한 정책 욕구는 청년집단의 현재 상태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학생, 미취업자, 취업자 집단의 청년정책에 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또한,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년의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는 일반 청년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표 Ⅳ-4 청년정책 당사자 인식조사 분석 내용 및 방법

분석 내용		분석 방법
일반특성	• 분석대상자의 특성 - 전체, 현재 상태(재학, 미취업, 취업), 성별, 교육 수준,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주관적 경제여건 인식 등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인지도 및 수혜율	• 특성별 청년정책 인지여부, 수혜 경험 차이 검증 - 전체, 현재 상태(재학, 미취업, 취업), 성별, 교육 수준,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주관적 경제여건 인식 • 청년정책 인지여부·수혜경험 영향 요인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 x^2-test, t-test, F-test • Binary Logit Model
중요도 및 도움 정도	• 전체, 현재 상태(재학, 미취업, 취업), 거버넌스 참여 • 특성별 청년정책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차이 검증 - 전체, 현재 상태(재학, 미취업, 취업), 성별, 교육 수준, 거버넌스 참여, 주관적 경제여건 인식 • 인지 및 수혜에 따른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차이 검증 • 청년정책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 x^2-test, t-test, F-test • 평균, 표준편차, t-test, • Ordered Logit Model
비전 및 전략 우선순위	•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책 비전 중요도 인식 수준 - 전체, 현재 상태(재학, 미취업, 취업), 거버넌스 참여 • 특성별 사회정책 비전 중요도 인식 수준 차이 검증 - 전체, 현재 상태(재학, 미취업, 취업), 성별, 교육 수준, 거버넌스 참여 • 가장 우선해서 추진해야 하는 청년정책 - 전체, 현재 상태(재학, 미취업, 취업), 성별, 교육 수준, 거버넌스 참여 • 가장 우선해서 추진해야 하는 청년정책 영향 요인 - 1순위 청년정책 추진이 필요한 사회정책 전략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 x^2-test, t-test, F-test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 Multinomial Logit Model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수혜경험은 12개 정책영역별 인지도와 수혜경험 현황을 확인하고, 청년의 현재 상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교육수준, 연령 등)에 따라 정책의 인지도와 수혜경험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χ^2-test를 이용해 검증하였다. 그러나 집단특성에 따른 차이 비교만으로는 청년정책 인지도와 수혜경험의 차이가 집단 특성에 따른 차이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재 상태, 거버넌스 참여여부,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독립변수로, 인지여부와 수혜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투입한 모든 변수에 대해서는 분산팽창지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을 이용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항로짓모형 분석 결과, 정책 인지여부와 수혜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승산비(Odds ratio)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도움 정도 역시 인지도와 수혜경험 분석 단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중요도를 통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도움 정도를 통해 청년 정책의 효과를 탐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요도와 도움 정도는 모두 10점으로 측정하였는데, 중요도와 도움정도의 분포 경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3개 항목(낮음, 보통, 높음)의 서열변수로 전환해 평균과 분포를 모두 확인하였다. 12개 청년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정도 비교, 청년집단의 특성별 차이는 χ^2-test, t-test, F-test를 이용해 검증하였다.

이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개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청년정책의 중요도와 도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인지도와 수혜경험에 적용한 변수들(인구사회학적 특성, 현재 상태, 청년정책거버넌스 참여)과 함께 인지여부, 수혜경험 유무를 분석모형에 추가로 반영하

였다. 청년정책을 인지하거나 수혜경험이 있는 청년은 해당 정책에 대한 중요도나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종속변수인 중요도와 도움 정도는 각 점수의 중위값(Median)을 기준으로 '낮음', '보통', '높음'으로 전환해 반영했는데, 3개 항목 값을 갖는 서열변수이므로 서열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중요도와 도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승산비를 도출해 분석하였다.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대한 청년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전체적 경향과 청년의 특성별 차이를 χ^2-test, t-test, F-test를 이용해 검증하였다. 포용국가 비전 전략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9개의 전략을 높은 순위대로 5개의 범주로 변수를 전환하여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영향력 비교는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승산비(Odds ratio)를 이용해 확인하였다.

한편, 설문을 구성하는 인지도와 수혜경험, 중요도와 도움 정도,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의 중요도 간에 체계적인 경향성 혹은 관계가 포착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지 및 수혜 여부에 따른 중요도와 도움 정도의 차이, 그리고 세 가지 청년정책 비전 중요도에 따라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정책 중요도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2. 특성별 현행 청년정책 당사자 인지도 및 수혜율

주요 발견(Main Findings)

- 조사에 응답한 733명을 대상으로 12개 영역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수혜율을 분석한 결과,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도와 수혜율은 대체로 낮으며, 정책 간 차이도 크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됨(인지도 19.5%~99.0%, 수혜율 7.2%~56.2%).
- 인지도가 50%를 넘는 정책은 학자금 지원(99.0%), 구직 및 창업지원(83.5%),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79.0%) 이며, 인지도가 30%에 못 미치는 정책은 대체로 최근에 도입된 정책들임(다양한 역량개발 19.5%, 일터 안전 22.0%, 청년정책 거버넌스 22.9%, 고용안전망 32.1%).
- 청년 특성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대체로 여성의 인지도가 남성보다 높고, 고졸과 비정규직 취업 청년의 인지도 및 수혜율이 대체로 낮음.
-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집단의 인지도와 수혜율은 비참여 집단보다 높은데, 특히 인지도가 낮은 정책에서 그 격차는 두드러지게 나타남.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책 인지여부와 수혜경험 영향 요인은 ①교육수준, ②성별, ③경제여건 인식, ④소득, ⑤거버넌스 참여, ⑥근로형태이며, 정책사업 별로 나누어 볼 때, 대체로 대학졸업 이상의 청년들과 여성 청년들이 정책인지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됨.
- 경제여건 수준이 낮은 청년들은 ①학자금 지원, ②신용회복지원, ③고용안전망 정책을 수혜할 가능성 높았고, 경제여건 수준이 높은 이들은 ①활동 공간 및 서비스 정책, ②역량개발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적 계층에 따른 정책인지와 욕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청년정책 인지도 및 수혜율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소득계층과 청년 개인의 현재 상태 특성에 따라 정책 인지도와 수혜율의 차이가 작지 않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됨.

1) 분석대상자의 특성

(1) 전체 대상자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년은 총 733명이다. 표본할당 과정을 통해 조사에 참여한 청년은 679명(92.6%)이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조사에 참여한 청년은 54명(7.4%)이다. 전체 응답자 중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는 75명(10.2%), 비참여자는 658명(89.8%)이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75명 중 21

명(28.0%)은 표본할당 과정을 통해, 54명(72.0%)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였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조사에 참여한 54명을 제외한 679명은 연령(1:1:1), 성별(1:1), 현재 상태(1:1:1)를 기준으로 할당표집을 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특성도 표본할당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남성(49.4%)이 여성(50.6%) 비율보다 다소 낮다. 연령은 25세~29세(35.4%) 비중이 가장 높고, 30세~34세가 33.8%, 19세~24세는 30.8%였다. 현재 상태는 취업한 청년이 38.9%로 가장 많았고, 재학생은 31.4%, 미취업자는 29.7%이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7.1세이며,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4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대다수 청년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졸업하였으며(대학 혹은 대학원 재학생 31.4%, 대학원 졸업 3.4%), 고등학교 졸업 이하 청년은 17.9%으로 상대적 비율이 낮다. 거주지역의 경우 광역시(31.5%), 서울(26.7%), 경기(22.1%) 순으로 거주 비중이 높고, 그 외 도 지역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9.7%였다. 거주형태의 경우 부모 혹은 조부모와 함께 산다고 응답한 경우(64.4%)가 절반 이상이며, 혼자 사는 경우도 19.4%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자는 11.9%이다.

주관적인 경제적 여건에 관한 인식을 1점~10점으로 확인한 결과, 경제적 여건 인식이 4점~7점으로 중간수준인 경우가 7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1점~3점인 경우는 24.8%이다. 8점~10점인 경우는 4.4%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인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173.5만원이었으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7.4%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년 다수가 저소득가구임을 파악하였다[18]. 생활비 마련 방법은 나의 소득이 55.8%로 가장 높다.

18) 보건복지부 고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에 따르면, 2019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61만3,500원이며, 기초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138만4,061원이다. OECD 기준 상대빈곤선인 중위소득 40% 빈곤선은 184만5,400원이다.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90만6,528원, 기준중위소득의 30%는 87만1,958원, 40%는 116만2,611원이다(보건복지부, 2018.07.24.).

표 Ⅳ-5 분석 대상자 특성: 전체

구 분	특성		빈도(비율)	평균(표준편차)
전체			733(100.0)	
성별	남성		362(49.4)	
	여성		371(50.6)	
연령	19세~24세		226(30.8)	27.11(4.15)
	25세~29세		259(35.4)	
	30세~34세		248(33.8)	
교육 수준	대졸 미만	고졸 이하	131(17.9)	
		대학 재학 중	170(23.2)	
	대졸 이상	대학 졸업	347(47.3)	
		대학원 재학 중	60(8.2)	
		대학원 졸업	25(3.4)	
현재 상태	재학		230(31.4)	
	미취업		218(29.7)	
	취업		285(38.9)	
거주 지역	서울		196(26.7)	
	경기		162(22.1)	
	광역시		231(31.5)	
	그 외 도 지역		144(19.7)	
거주 형태	나 혼자		142(19.4)	
	부모/조부모와 함께		472(64.4)	
	형제자매 또는 친구선후배와 함께		33(4.5)	
	배우자나 연인과 함께		53(7.2)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33(4.5)	
혼인 상태	기혼		87(11.9)	
	미혼		646(88.1)	

구 분	특성	빈도(비율)	평균(표준편차)
경제적 여건 인식 (1점~10점)	낮음(1점~3점)	182(24.8)	4.74(1.73)
	중간(4점~7점)	519(70.8)	
	높음(8점~10점)	32(4.4)	
월평균 가구 총소득	100만원 미만	274(37.4)	173.50(155.01)
	100만원~150만원 미만	61(8.3)	
	150만원~200만원 미만	106(14.5)	
	200만원~250만원 미만	110(15.0)	
	250만원~300만원 미만	50(6.8)	
	300만원 이상	132(18.0)	
생활비 마련 방법	나의 소득	409(55.8)	
	부모 지원	76(10.3)	
	나의 저축	195(26.6)	
	배우자 수입	32(4.4)	
	그 외	21(2.9)	
청년정책 거버넌스	비참여	658(89.8)	
	참여	75(10.2)	

(2) 현재 상태에 따른 대상자 특성의 차이

현재 상태(재학, 미취업, 취업)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성별 비중은 큰 차이가 없으나(여성 50.6%), 미취업자의 경우 여성(53.2%)이 남성(46.8%)보다 높으며, 취업자(여성 49.5%)와 재학생(여성 49.6%)은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다소 낮다. 재학생의 평균 연령은 26.3세로 가장 어리고, 취업자는 27.7세, 미취업자는 27.2세이다.

연령분포에서도 재학생의 19세~24세 비중(36.5%)이 미취업자(31.2%), 취업자(26.0%)보다 높다. 교육수준의 경우, 재학생 중 대학재학생은 73.9%, 대학원

재학생은 26.1%이다. 미취업자 중 고졸 이하는 23.9%, 대학졸업 이상은 76.1%이고, 취업자 중 고졸 이하는 27.7%, 대학졸업 이상은 72.3%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거주지역의 경우 재학생, 미취업자, 취업자 모두 서울, 경기, 광역시 거주자의 비중이 높았는데, 재학생의 그 외 도 지역 거주 비중(17.9%)이 미취업자(21.1%), 취업자(20.7%)보다 낮다. 거주형태의 경우 미취업자가 부모·조부모와 동거하는 비중이 높았고(74.3%), 취업자가 부모·조부모와 동거하는 비중도 58.6%에 달한다. 혼자 산다고 응답한 경우는 재학생(23.5%)이 가장 높으며, 취업자(21.1%), 미취업자(12.8%) 순이다. 기혼자 비중은 취업자(16.8%)가 가장 높고, 재학생(7.8%)이 가장 낮다. 취업 후 결혼하는 우리나라 성인이행 과정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적 여건 인식에 관해 높다고 응답한 경우(8점~10점)는 재학생(8.7%)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자와 미취업자는 각각 2.8%, 1.8% 정도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미취업자(71.1%), 재학생(43.5%), 취업자(6.7%) 순으로 높다. 재학생의 56.1%, 미취업자의 76.6%가 월가구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며, 취업자의 13.7%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취업자(23.9%), 재학생(16.9%), 미취업자(11.5%)순으로 높다. 생활비 마련 방법의 경우, 취업자는 '나의 소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9.5%이며, 미취업자는 '부모 지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4.0%로 재학생(37.8%)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율은 취업자(14.1%), 재학생(13.1%), 미취업자(2.3%) 순으로 높다. 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의 참여 기간은 미취업 참여자(60.0%), 재학생 참여자(43.3%)는 1년 미만 참여 비율이 가장 높고, 취업자는 1년 이상~3년 미만 참여한 경우(42.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Ⅳ-6 집단별 개인 특성

(단위: 명, %)

구 분	특성		전체	재학	미취업	취업
전체			733(100.0)	230(31.38)	218(29.74)	285(38.88)
			733(100.0)	230(100.0)	218(100.0)	285(100.0))
성별	남성		362(49.4)	116(50.4)	102(46.8)	144(50.5)
	여성		371(50.6)	114(49.6)	116(53.2)	141(49.5)
연령	19세~24세		226(30.8)	84(36.5)	68(31.2)	74(26.0)
	25세~29세		259(35.4)	79(34.4)	74(33.9)	106(37.2)
	30세~34세		248(33.8)	67(29.1)	76(34.9)	105(36.8)
	평균(편차)		27.11(4.15)	26.32(4.27)	27.20(4.07)	27.70(4.02)
교육 수준	대졸 미만	고졸 이하	131(17.9)	0(0.0)	52(23.9)	79(27.7)
		대학 재학 중	170(23.2)	170(73.9)	0(0.0)	0(0.0)
	대졸 이상	대학 졸업	347(47.3)	0(0.0)	161(73.8)	186(65.3)
		대학원 재학 중	60(8.2)	60(26.1)	0(0.0)	0(0.0)
		대학원 졸업	25(3.4)	0.0(0.0)	5(2.3)	20.0(7.0)
거주 지역	서울		196(26.7)	74(32.2)	56(25.7)	66(23.2)
	경기		162(22.1)	43(18.7)	53(24.3)	66(23.1)
	광역시		231(31.5)	74(32.2)	63(28.9)	94(33.0)
	그 외 도 지역		144(19.7)	39(17.9)	46(21.1)	59(20.7)
거주 형태	나 혼자		142(19.4)	54(23.5)	28(12.8)	60(21.1)
	부모/조부모와 함께		472(64.4)	143(62.2)	162(74.3)	167(58.6)
	형제자매/친구선후배와 함께		33(4.5)	15(6.5)	7(3.2)	11(3.9)
	배우자나 연인과 함께		53(7.2)	9(3.9)	10(4.6)	34(11.9)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33(4.5)	9(3.9)	11(5.1)	13(4.6)
혼인 상태	기혼		87(11.9)	18(7.8)	21(9.6)	48(16.8)
	미혼		646(88.1)	212(92.2)	197(90.4)	237(83.2)
경제적 여건 인식	낮음(1점~3점)		182(24.8)	49(21.3)	58(26.6)	75(26.3)
	중간(4점~7점)		519(70.8)	161(70.0)	156(71.6)	202(70.9)
	높음(8점~10점)		32(4.4)	20(8.7)	4(1.8)	8(2.8)
	평균(편차)		4.74(1.73)	5.10(1.81)	4.46(1.63)	4.67(1.70)

구 분	특성	전체	재학	미취업	취업
월평균 가구 총소득	100만원 미만	274(37.4)	100(43.5)	155(71.1)	19(6.7)
	100만원~150만원 미만	61(8.3)	29(12.6)	12(5.5)	20(7.0)
	150만원~200만원 미만	106(14.5)	27(11.7)	9(4.1)	70(24.6)
	200만원~250만원 미만	110(15.0)	25(10.9)	9(4.1)	76(26.7)
	250만원~300만원 미만	50(6.8)	10(4.4)	8(3.7)	32(11.1)
	300만원 이상	132(18.0)	39(16.9)	25(11.5)	68(23.9)
	평균(편차)	173.50(155.01)	171.10(177.91)	97.44(140.73)	233.64(114.93)
생활비 마련 방법	나의 소득	409(55.8)	115(50.0)	39(17.9)	255(89.5)
	부모 지원	195(26.6)	87(37.8)	96(44.0)	12(4.2)
	나의 저축	76(10.3)	18(7.8)	52(23.9)	6(2.1)
	배우자 수입	32(4.4)	5(2.2)	16(7.3)	11(3.9)
	그 외	21(2.9)	5(2.2)	15(6.9)	1(0.3)
거버넌스 참여 여부	비참여	658(89.8)	200(86.9)	213(97.7)	245(85.9)
	참여	75(10.2)	30(13.1)	5(2.3)	40(14.1)
거버넌스 참여 기간	1년 미만	31(41.3)	13(43.3)	3(60.0)	15(37.5)
	1년 이상~3년 미만	32(42.7)	13(43.3)	2(40.0)	17(42.5)
	3년 이상	12(16.0)	4(13.3)	0(0.0)	8(20.0)
	평균(편차)	19.01(20.44)	15.83(14.57)	10.00(14.20)	22.52(24.15)

〈표 Ⅳ-7〉은 재학생, 미취업자, 취업자의 세부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①전문대, ②4년제 대학, ③대학원)과 학교 소재지(①서울, ②경기, ③광역시, ④그 외 도 지역)를 분석하였다. 재학생 중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가 67.4%로 가장 높고, 대학원은 26.1%, 전문대는 6.5%로 구성되었고, 대학소재지는 서울(36.5%), 광역시(31.3%), 그 외 도 지역(21.3%), 경기(10.9%)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①미취업 기간, ②구직활동 여부, ③구직활동 유경험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기간, 그리고 비구직자에 한해 공시 준비 여부를 추가 조사하였다. 조사응답자 중 실업 상태(미취업상태면서 구직활동함)인 청년은 86명으로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취업자+미취업 구직자, 371명)의 23.2%로 2019년 5월 기준 만15세~29세 청년 실업률이 9.9%인 것과 크게 차이가 있는데(통계청, 2019), 이는 본 연구에서 재학생, 취업자, 미취업자를 1:1:1로 할당하여 취업자를 과소 표집하였고, 만19세~34세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9)]

한편 미취업자의 평균 미취업기간은 30.9개월이며,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년 미만(30.7%), 1년 이상 2년미만(20.2%), 2년이상 3년미만(14.2%)가 뒤를 이었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부가조사의 만15세~29세 청년 미취업기간이 1년 미만(55.9%), 3년 이상(16.9%)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다소 길다(통계청, 2019). 이는 응답자 중 미취업자 다수가 장기간 미취업상태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미취업 구직자의 구직활동 기간은 평균 17.5개월이며, 구직 활동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9.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2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장기간 구직활동자의 비율도 26.8%로 낮지 않다. 또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미취업자는 39.5%이며, 비구직자 중 공시준비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64.4%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응답자의 6.4%(구직활동, 공시준비를 하지 않는 미취업자)가 니트(NEET, Not Employed, Education, and Training)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업자의 특성은 취업형태(①정규직 임금근로, ② 비정규 임금근로, ③비임금근로), 회사규모, 근속기간, 월평균근로소득을 분석하였다. 전체 취업자의 60.4%가

19) 본 연구 응답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6%, 고용률은 38.9%로 통계청의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부가조사 결과'의 만15세~29세 경제활동참가율(48.4%), 고용률(43.6%)과 차이가 있었다(통계청, 2019.07.16.).

정규직이었으며, 비정규직은 23.5%, 비임금근로자는 16.1%였다. 임금근로자 중 39.0%는 비정규직이다. 연령대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통계청의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만15세~29세 청년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34.6%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통계청, 2018).

회사 규모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이 3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300인 이상 대기업(18.6%), 10인~30인 미만 중소기업(17.5%) 순이다. 평균 근속기간은 26.4개월이며, 1년 미만 근속(35.8%), 1년이상 2년미만 근속(25.6%), 3년 이상 근속(15.6%), 2년 이상 3년미만 근속(13.0%) 순으로 높았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201.7만원이었으며,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2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28.1%), 300만원 이상(16.2%)이 그 다음 순위의 비중으로 구성되었다.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도 9.4%로 적지 않다.

표 Ⅳ-7 재학생, 미취업자, 취업자 집단별 특성

구 분	특성	재학	미취업	취업
전체		230(31.4)	218(29.7)	285(38.9)
		230(100.0)	218(100.0)	285(100.0))
재학 학교 유형	전문대	15(6.5)	-	-
	4년제	155(67.4)		
	대학원	60(26.1)		
학교 소재지	서울	84(36.5)		
	경기	25(10.9)		
	광역시	72(31.3)		
	그 외 도 지역	49(21.3)		

구 분	특성	재학	미취업	취업
미취업 기간	1년 미만		67(30.7)	
	1년 이상~2년 미만		44(20.2)	
	2년 이상~3년 미만		31(14.2)	
	3년 이상		76(34.9)	
	평균 개월수(편차)		30.90(29.6)	
구직활동 여부	활동함		86(39.5)	
	활동 안 함	-	132(60.5)	-
구직자 구직활동 기간	6개월 미만		34(39.5)	
	6개월 이상~1년 미만		14(16.3)	
	1년 이상~2년 미만		15(17.4)	
	2년 이상		23(26.8)	
	평균 개월수(편차)		17.5(20.7)	
비구직자 공시준비	했음		85(64.4)	
	안 했음		47(35.6)	
취업형태	정규 임금근로			172(60.4)
	비정규 임금근로			67(23.5)
	비임금근로			46(16.1)
회사 규모	10인 미만			113(39.7)
	10인~30인 미만			50(17.5)
	30인~100인 미만			45(15.8)
	100인~300인 미만	-	-	24(8.4)
	300인 이상			53(18.6)
근속기간	1년 미만			102(35.8)
	1년~2년 미만			73(25.6)
	2년~3년 미만			37(13.0)
	3년 이상			73(15.6)
	평균 개월수(편차)			26.40(28.5)

구 분	특성	재학	미취업	취업
월평균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	-	-	27(9.4)
	100만원~150만원 미만			22(7.7)
	150만원~200만원 미만			80(28.1)
	200만원~250만원 미만			82(28.8)
	250만원~300만원 미만			28(9.8)
	300만원 이상			46(16.2)
	평균(편차)			201.7(85.5)

(3)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른 대상자 특성의 차이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라 대상자의 특성이 달라지는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Ⅳ-8〉과 같다. 먼저 성별 비교를 해보면,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이후 참여자)의 남성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참여자의 70.7%, 비참여자의 47.0%가 남성이다. 연령분포도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참여자 중 25세~29세는 40.0%로 비참여자(34.8%)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참여자는 고졸 이하가 12.0%, 대학 재학생이 36.0%로 구성되는데 반해, 비참여자는 고졸 이하가 18.5%, 대학 재학생 21.7%로 구성되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대학졸업자 비중은 참여자(42.7%)가 비참여자(47.9%)보다 낮다.

현재 상태는 확연히 다르다. 특히, 미취업자는 참여 유경험자 비율이 6.7%에 불과하였다. 이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표집방식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준비에 집중하는 미취업자들의 경우 청년정책과 관련된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거주지역의 경우,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53.3%로 높은 수준이다. 거주형태의 경우, 참여자는 부모·조부모와 사는 경우

(49.3%), 혼자 살거나(22.7%) 형제자매·친구·선후배와 함께 사는 경우(13.3%), 배우자나 연인과 사는 경우(12.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비참여자는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66.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기혼자 비중도 참여자(14.7%)가 비참여자(11.5%)보다 높다. 이와 같은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집단은 비참여자 집단에 비해 다양한 배경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경제적 여건 인식이 낮은 경우는 참여자(33.3%)가 비참여자(23.9%)보다 높으나, 중간인 경우는 참여자(62.7%)가 비참여자(71.7%)보다 낮았다. 그러나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참여자(180.5만원)가 비참여자(172.7만원)보다 높으며, 2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참여자(40.1%)가 비참여자(39.8%)보다 높다. 150만원 미만인 경우 역시 참여자(45.4%)나 비참여자(45.8%)나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실제 소득수준이 높더라도 주관적 경제 수준을 낮게 인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생활비 마련 방법도 차이가 있었는데, 참여자의 다수가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했지만(70.7%), 비참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54.1%이다. 본인의 저축을 포함하면,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경우는 참여자 76.0%, 비참여자 65.0%이고,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비참여자(27.2%)가 참여자(21.3%)보다 높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조사에 응답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는 남성, 재학생, 취업자 비중이 높으며, 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자 살거나 부모가 아닌 형제자매, 선후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한편, 월평균가구소득은 비참여자보다 다소 높으나, 주관적 경제여건 인식은 오히려 낮으며.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보인다.

표 Ⅳ-8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른 특성 비교

구 분	특성		참여	비참여
전체			75(10.23)	658(82.77)
			75(100.0)	658(100.0)
성별	남성		53(70.7)	309(47.0)
	여성		22(29.3)	349(53.0)
연령	19세~24세		24(32.0)	202(30.7)
	25세~29세		30(40.0)	229(34.8)
	30세~34세		31(28.0)	227(34.5)
	평균(편차)		26.8(4.04)	27.2(4.17)
교육 수준	대졸미만	고졸 이하	9(12.0)	122(18.5)
		대학 재학 중	27(36.0)	143(21.7)
	대졸이상	대학 졸업	32(42.7)	315(47.9)
		대학원 재학 중	3(4.0)	57(8.7)
		대학원 졸업	4(5.3)	21(3.2)
현재 상태	재학		30(40.0)	200(30.4)
	미취업		5(6.7)	213(32.4)
	취업		40(53.3)	245(37.2)
거주 지역	서울		7(9.3)	189(28.7)
	경기		11(14.7)	151(23.0)
	광역시		40(53.3)	191(29.0)
	그 외 도 지역		17(22.7)	127(19.3)
거주 형태	나 혼자		17(22.7)	125(19.0)
	부모/조부모와 함께		37(49.3)	435(66.1)
	형제자매/친구선후배와 함께		10(13.3)	23(3.5)
	배우자나 연인과 함께		9(12.0)	44(6.7)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2(2.7)	31(4.7)

구 분	특성	참여	비참여
혼인 상태	기혼	11(14.7)	76(11.5)
	미혼	64(85.3)	582(88.5)
경제적 여건 인식	낮음(1점~3점)	25(33.3)	157(23.9)
	중간(4점~7점)	47(62.7)	472(71.7)
	높음(8점~10점)	3(4.0)	29(4.4)
	평균(편차)	4.48(1.0)	4.78(1.70)
월평균 가구 총소득	100만원 미만	26(34.7)	248(37.7)
	100만원~150만원 미만	8(10.7)	53(8.1)
	150만원~200만원 미만	11(14.7)	95(14.4)
	200만원~250만원 미만	14(18.7)	96(14.6)
	250만원~300만원 미만	5(6.7)	45(6.8)
	300만원 이상	11(14.7)	121(18.4)
	평균(편차)	180.53(170.7)	172.71(153.3)
생활비 마련 방법	나의 소득	53(70.7)	356(54.1)
	저축	4(5.3)	72(10.9)
	부모 지원	16(21.3)	179(27.2)
	배우자 수입	2(2.7)	32(4.9)
	그 외	0(0.0)	19(2.9)

2) 특성별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여기서는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여부와 수혜경험이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전체 집단의 인지여부와 수혜율을 확인한 후, 하위집단별로 정책의 인지여부와 수혜경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하위집단 구분은 성별, 연령범주(①19세~24세, ②25세~29세, ③30세~34세), 교육수준(①대졸미만, ②대졸이상), 현재 상태(①재학생, ②미취업자, ③취업자), 거버넌

스 참여여부로 확인했으며, 각 정책의 특성에 따라 거주지역(①서울, ②경기, ③광역시, ④그 외 시도), 근로형태(①정규직 임금근로, ②비정규직 임금근로, ③비임금근로)에 따른 차이를 추가로 검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 제시하였다.

(1) 전체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각 정책의 인지여부(인지도) 및 수혜경험(인지한 집단 중 수혜율)을 분석한 결과, 인지도가 높은 정책(학자금 지원 정책 99.0%,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 83.5%,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정책 79.0%, 주거지원 정책 76.8%)은 대부분 정책을 시행한 지 오래된 정책들이었다. 인지도가 낮은 정책은 시행 초기이거나(다양한 역량개발 활동 지원정책 19.5%, 일터 안전보장 정책 22.0%, 고용안전망 32.1%), 지자체 사업인 청년정책 거버넌스(22.9%)이다.

각 정책을 인지했다고 응답한 청년을 대상으로 수혜경험을 확인한 결과, 수혜율은 대체로 낮다. 수혜율이 50%를 넘는 정책은 학자금 지원 정책이 유일하다. 이는 청년정책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선별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인지도와 수혜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정책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과 주거지원 정책은 인지도에 비해 수혜율이 크게 낮았다. 소득지원, 주거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이 소수 청년에 집중되어 도움이 필요한 다수 청년이 정책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Ⅳ-9 현행 청년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단위: 명, %)

구분		정책 인지여부			수혜경험		
		사례수	알고 있음	모름	사례수	있음	없음
사회통합	학자금 지원 정책	733 (100.0)	667 (99.0)	66 (9.0)	667 (100.0)	374 (56.1)	293 (43.9)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	733 (100.0)	612 (83.5)	121 (16.5)	612 (100.0)	221 (36.1)	391 (63.9)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	733 (100.0)	579 (79.0)	154 (21.0)	579 (100.0)	96 (16.6)	483 (83.4)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정책	733 (100.0)	340 (46.4)	393 (53.6)	340 (100.0)		
	청년정책 거버넌스	733 (100.0)	168 (22.9)	565 (77.1)	168 (100.0)	60 (35.7)	108 (64.3)
사회지속가능성	주거지원 정책	733 (100.0)	563 (76.8)	170 (23.2)	563 (100.0)	43 (7.6)	520 (92.4)
	신용회복 정책	733 (100.0)	340 (46.4)	393 (53.6)	340 (100.0)	52 (15.3)	288 (84.7)
	청년 활동공간 및 서비스 정책	733 (100.0)	278 (37.9)	455 (62.1)	278 (100.0)	87 (31.3)	191 (68.7)
	건강지원 정책	733 (100.0)	246 (33.6)	487 (66.4)	246 (100.0)	61 (24.8)	185 (75.2)
사회혁신	다양한 역량개발 활동 지원 정책	733 (100.0)	143 (19.5)	590 (80.5)	143 (100.0)	23 (16.1)	120 (83.9)
	일터 안전보장 정책	733 (100.0)	161 (22.0)	572 (78.0)	161 (100.0)		
	고용안전망 정책	733 (100.0)	235 (32.1)	498 (67.9)	235 (100.0)	17 (7.2)	218 (92.8)

(2) 사회통합비전 관련 정책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특성별로 각 정책의 인지도와 수혜율이 달라지는지 확인한 결과, 사회통합 비전 관련 정책의 인지도와 수혜율은 교육수준, 현재 상태,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대졸 이상 집단, 여성,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인지도와 수혜율이 높았다. 현재 상태의 경우 재학생은 학자금과 구직지원, 미취업자는 구직지원, 취업자는 청년고용 기업인센티브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첫째, 학자금 지원 정책(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또는 대출이자지원)의 인지도와 수혜율은 정책 특성이 반영되어 대졸 이상, 재학생이 높았다. 대졸 이상 청년의 학자금 지원 정책 인지도는 94.9%, 수혜율은 61.5%로 대졸 미만인 청년보다 높았다. 재학생의 인지도(96.5%)가 가장 높았으며, 수혜율도 재학생(63.5%)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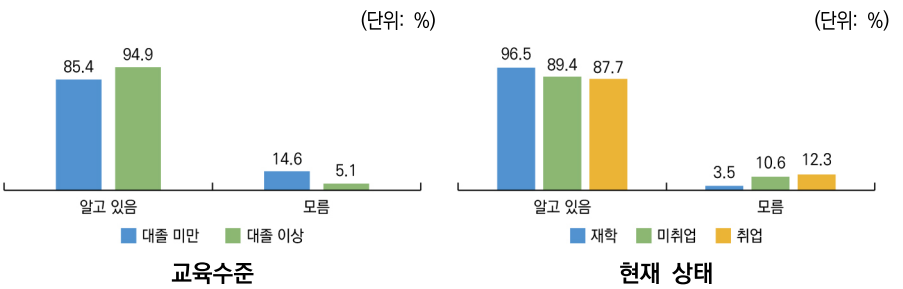


그림 Ⅳ-5 특성별 학자금 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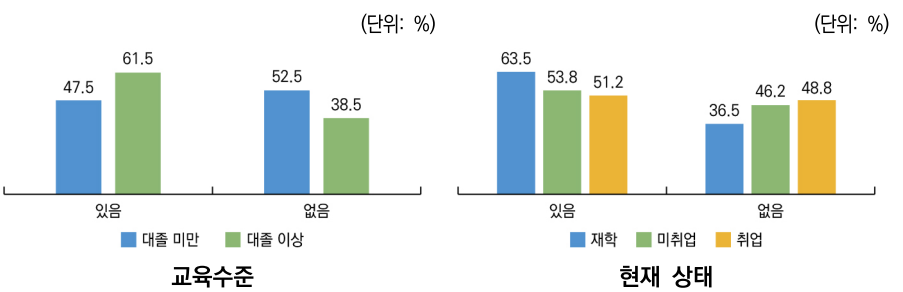


그림 Ⅳ-6 특성별 학자금 지원 정책의 수혜경험 차이

둘째,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대학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창업사관학교, 고용센터 구직활동 지원)의 인지도는 여성, 25세~29세, 대졸 이상, 구직활동을 한 집단이 높았고, 수혜율은 대졸 이상, 미취업자, 구직활동을 한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 이상 집단이 대졸 미만보다 인지도, 수혜율이 모두 높았다. 구직 및 창업지원의 주된 정책 대상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인지도와 수혜율을 분석한 결과, 구직활동을 하는 집단의 인지도는 90.7%, 수혜율은 55.1%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인지도, 78.8%, 수혜율, 39.4%)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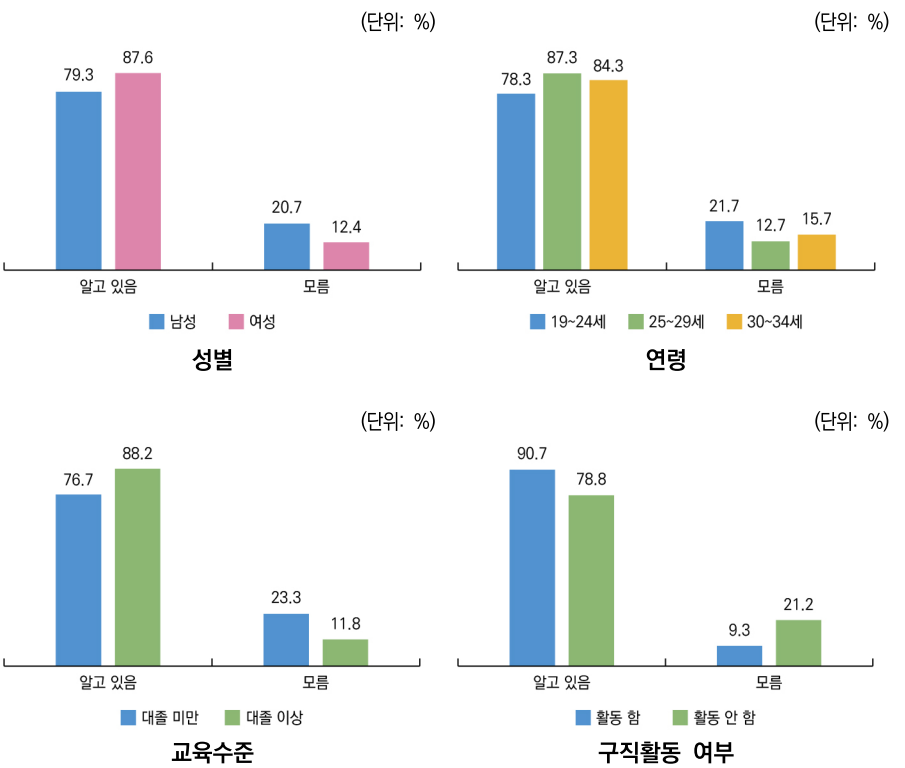


그림 Ⅳ-7 특성별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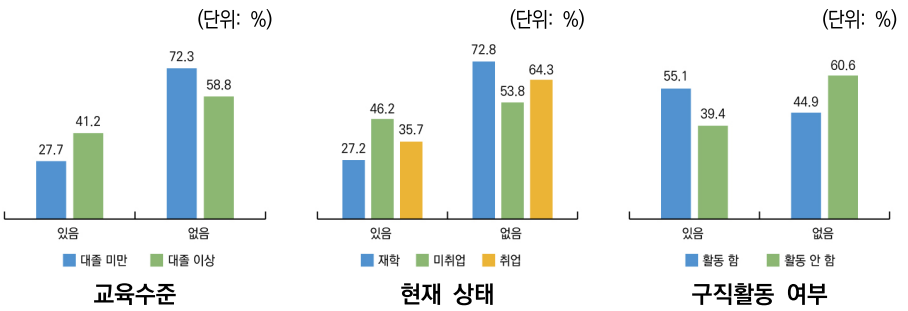


그림 Ⅳ-8 특성별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수혜 경험 차이

셋째,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세제, 청년동행카드) 인지도는 여성, 25세~29세, 대졸 이상 집단이 높았고, 수혜율은 정규직 임금근로 집단이 높았다. 대졸 이상 집단의 인지도는 83.8%로 대졸 미만의 인지도는 72.1%보다 높았고, 취업자의 수혜율은 정규직 임금근로자(24.0%)가 비정규직 임금근로(23.1%), 비임금근로(2.9%) 집단보다 높았다. 소득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책이 증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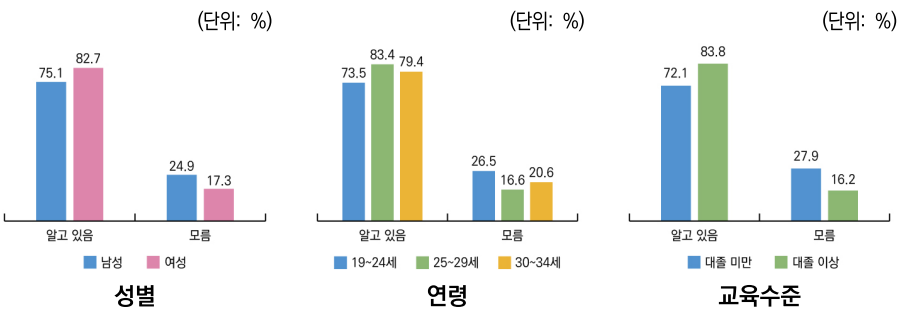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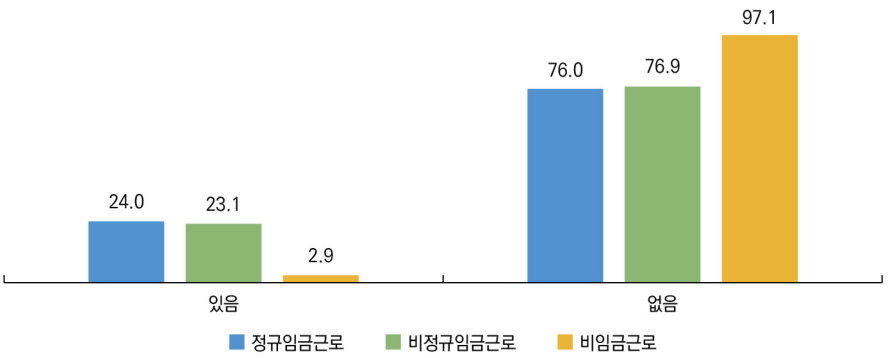


그림 Ⅳ-9 특성별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인지여부 차이

(단위: %)



취업형태

그림 Ⅳ-10 특성별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수혜경험 차이

넷째,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지원 정책(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고용기업 세금감면)의 인지도는 다른 정책과는 달리 남성, 30세~34세 집단에서 높았으며, 대졸 이상,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집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의 인지도는 51.1%로 여성의 인지도(41.8%)보다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있는데, 대졸 이상 집단의 인지도는 52.8%로 대졸미만 인지도(37.2%)보다 높았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인지도는 65.3%로 비참여자(44.2%)와 20%p 이상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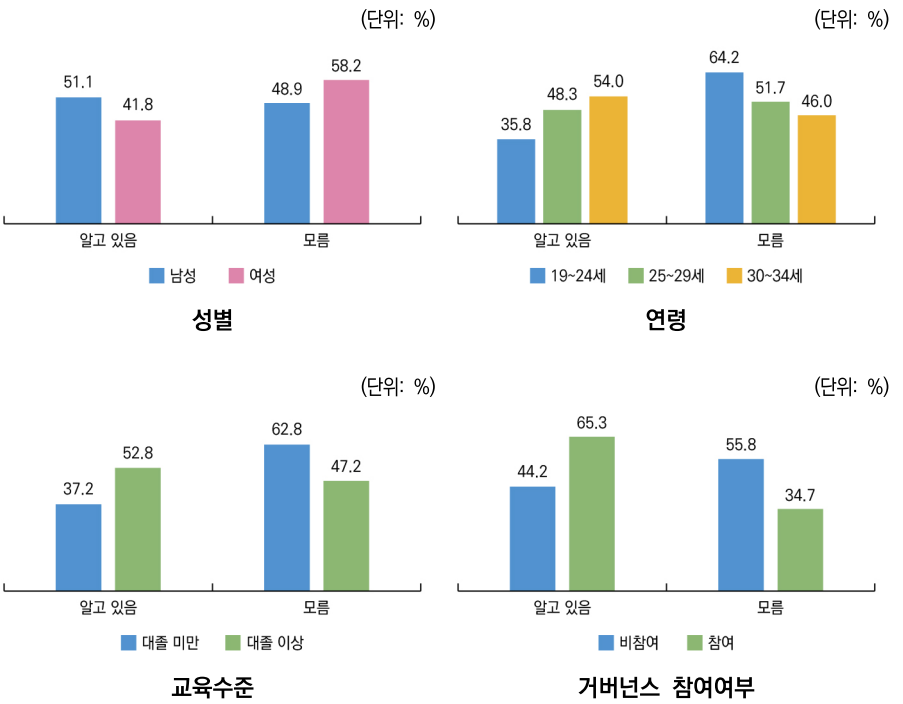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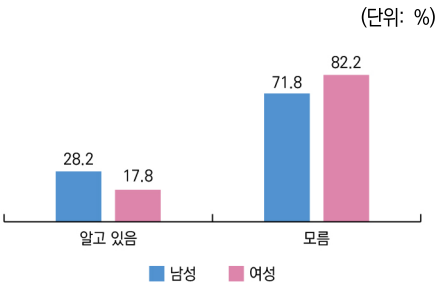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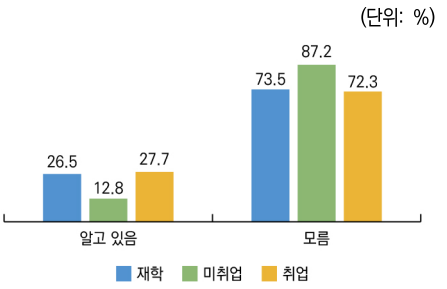


그림 Ⅳ-11 특성별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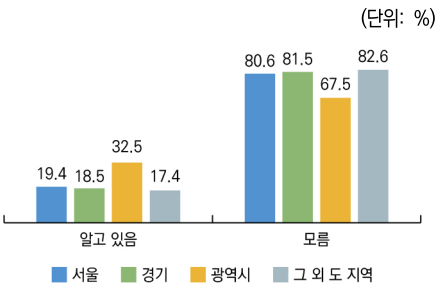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청년당사자 소통과 의견수렴기구, 청년정책 수립 및 정책임의 기구)의 인지도는 남성, 취업자, 광역시 거주, 거버넌스 참여자 집단인 경우 높았고, 수혜율은 취업자, 광역시 거주자가 경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지역별 인지도는 광역시(32.5%), 서울(19.4%), 경기(18.5%), 그 외 도 지역(17.4%)순으로 높았다. 수혜율은 광역시(52.0%), 그 외 도 지역(40.0%), 경기(20.0%), 서울(13.2%) 순으로 높았다. 인지도와 수혜율이 광역시 거주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에 응답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거주지역이 광역시에 집중된 것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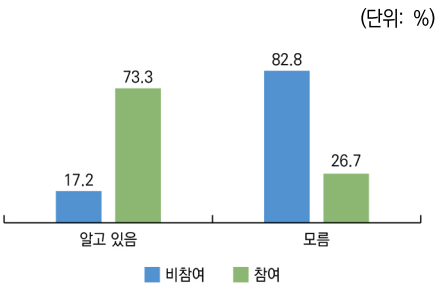
성별



현재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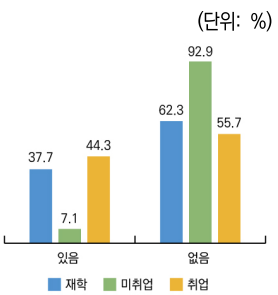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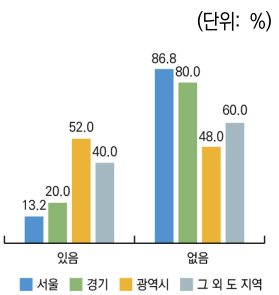


거버넌스 참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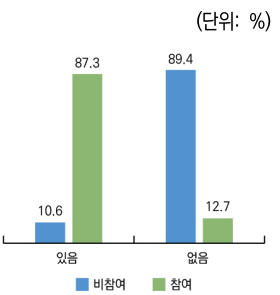
그림 Ⅳ-12 특성별 청년 거버넌스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



현재 상태



거주지역



거버넌스 참여여부

그림 Ⅳ-13 특성별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수혜 경험 차이

(3) 사회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정책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사회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정책의 인지도는 사회통합 비전 관련 정책과 유사하게 성별, 교육수준, 연령,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라 달랐으나, 사회통합 비전 관련 정책보다 인지도, 수혜율이 낮았고 특히 수혜율은 대부분 정책에서 집단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첫째, 주거지원 정책(전월세보증금 지원,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의 인지도는 여성, 30세~34세, 대졸 이상인 경우, 수혜율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형태 집단별 수혜율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가장 높았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신혼부부를 핵심집단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것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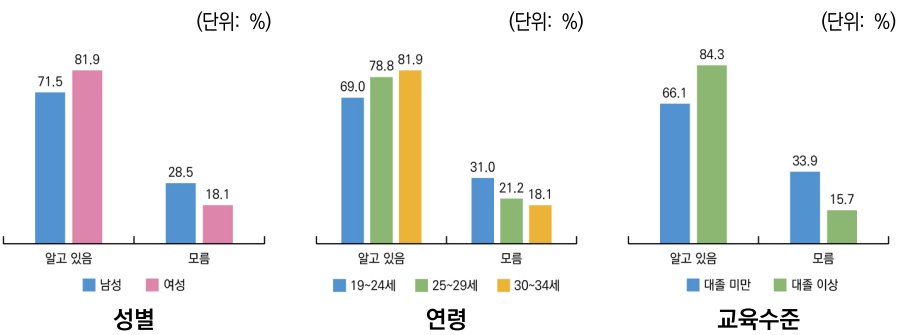


그림 Ⅳ-14 특성별 주거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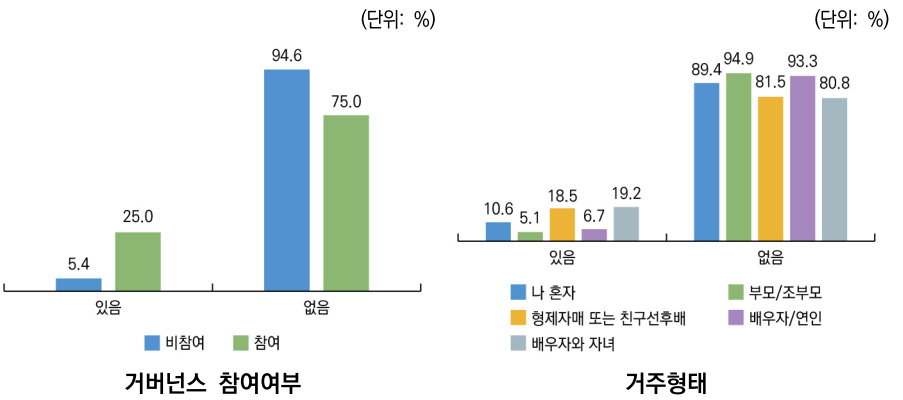


그림 Ⅳ-15 특성별 주거지원 정책의 수혜경험 차이

신용회복 정책(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금 상환유예)은 수혜율은 집단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인지도는 30세~34세, 대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졸 이상 집단의 인지도는 50.7%로 대졸 미만(40.2%)보다 10.5%p 높았다. 이는 저학력, 비서울 거주 청년보다는 학자금 대출이나 주거 관련 대출이 필요한 30대 이상 서울 거주 대졸 청년이 정책 인지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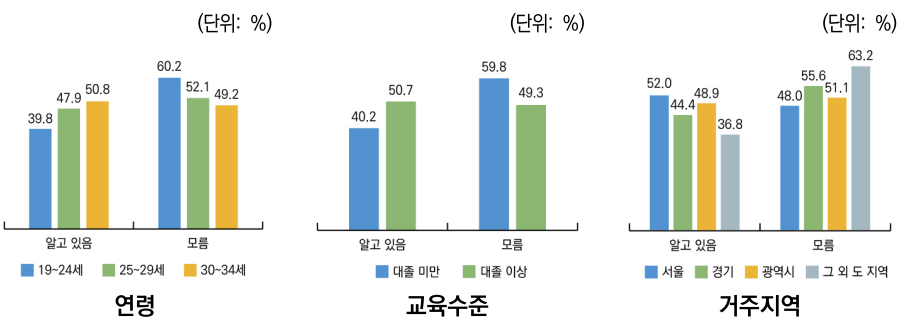


그림 Ⅳ-16 특성별 신용회복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지원 정책(청년 활동공간 지원, 활동공간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 문화공연 및 강연, 네트워크사업, 공간대여 서비스)의 인지도는 재학생, 광역시 거주, 경제여건 인식이 높은 집단, 거버넌스 참여 집단이 높았고, 수혜율은 취업자, 광역시 거주, 거버넌스 참여 집단에서 높았다. 경제여건 인식은 인지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경제여건 인식이 높은 집단의 인지도는 50.0%로 경제여건 인식이 중간인 집단(39.7%), 낮은 집단(30.8%)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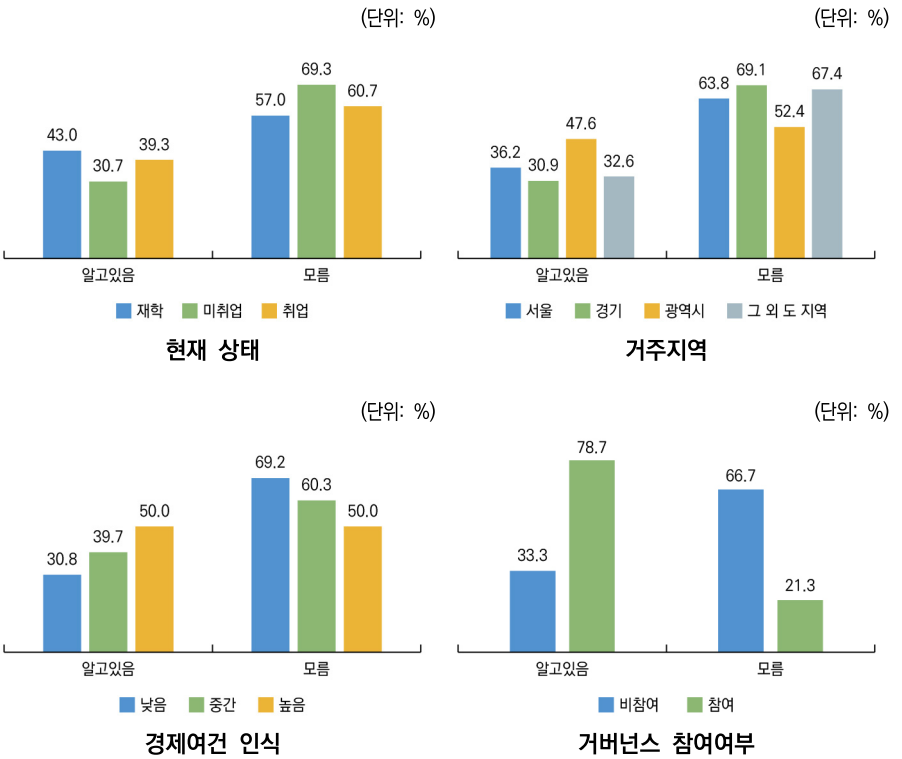


그림 Ⅳ-17 특성별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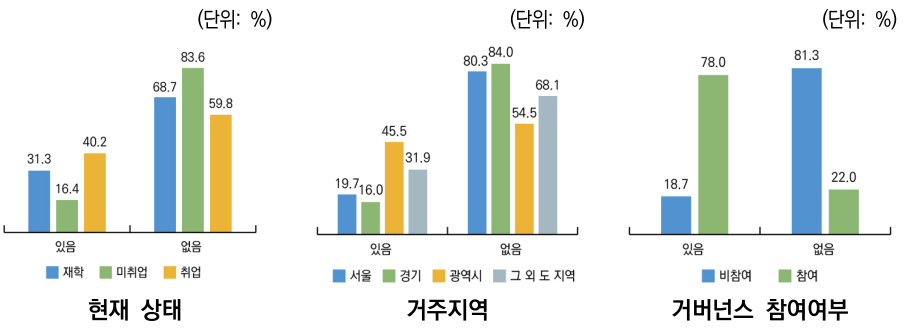


그림 Ⅳ-18 특성별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의 수혜경험 여부

건강지원 정책(청년대상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온라인 자가검진)의 인지도는 19세~24세, 거버넌스 참여, 광역시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높았으며, 수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 인지도는 다른 정책들과 달리 19세~24세(41.2%)인 경우 가장 높았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광역시(40.3%) 거주 청년의 인지도가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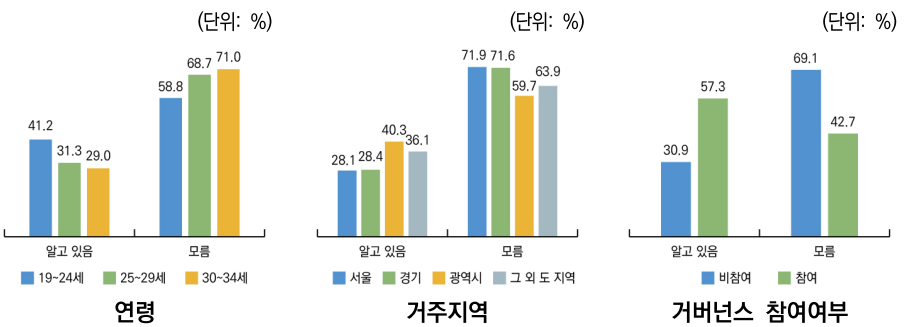


그림 Ⅳ-19 특성별 건강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4) 사회혁신 비전 관련 정책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사회혁신 비전 관련 정책은 세 가지 비전에 해당하는 정책 중 인지도와 수혜율이 가장 낮았다. 이 때문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여부에 따른 인지도와 수혜율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양한 역량개발 활동 지원 정책(문화체육관광부 지역사회 활동지원, 행정자치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인지도는 남성, 거버넌스 참여, 광역시 거주자인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혜율은 연령이 25세~29세, 거버넌스 참여, 월평균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수혜율을 보면, 19세~24세의 수혜율은 5.1%에 그쳤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마땅한 일이나 활동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행기 청년들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거버넌스 참여자의 수혜율은 46.7%로 비참여자 8.0%보다 5배 이상 높았는데, 다양한 역량 개발 활동지원 정책의 대상자 수와 예산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청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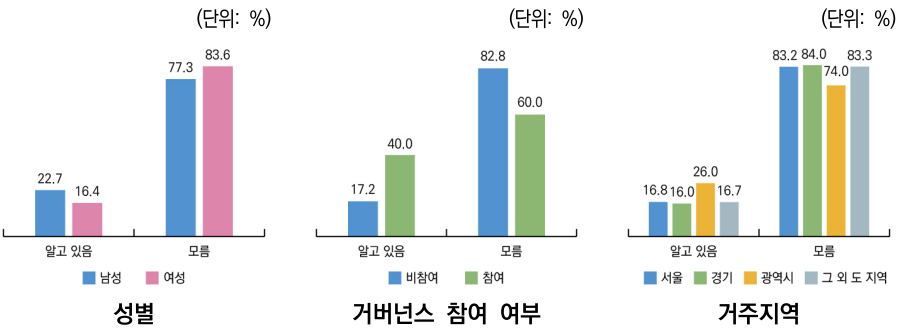


그림 Ⅳ-20 특성별 다양한 역량개발 활동 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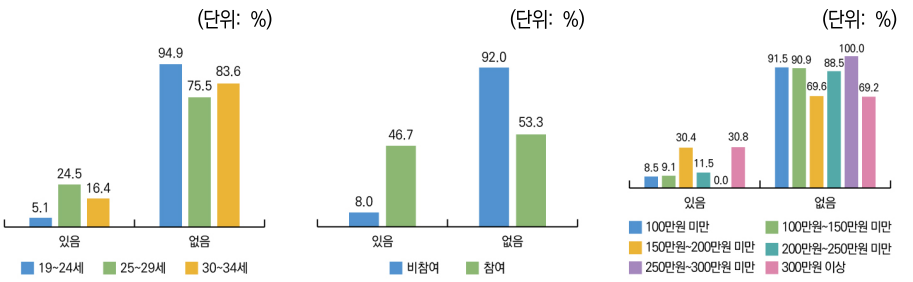


그림 Ⅳ-21 특성별 다양한 역량개발 활동 지원 정책의 수혜경험 여부

일터 안전보장 정책(직장내갑질 규제, 현장실습·비숙련 청년 산업안전 보장)의 인지도는 매우 낮았고, 현재 상태에 따른 차이만 유의했다. 재학생 집단이 27.4%로 취업자(21.8%), 미취업자(16.5%)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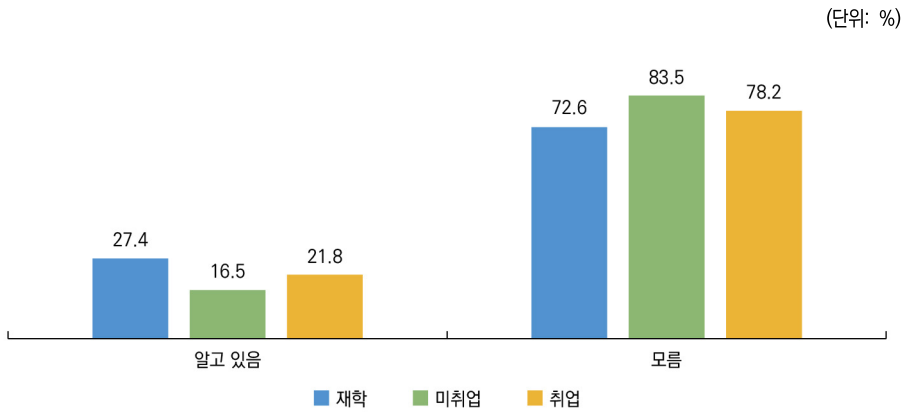


그림 Ⅳ-22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인지 여부 차이

고용안전망 정책(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구직활동금 지원)의 인지도는 대졸 이상, 거버넌스 참여, 공시를 준비한 경험이 없는 미취업 비구직자 집단에서 높았다. 이 역시 수혜율은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대졸 이상 집단의 고용안전망 정책 인지도는 35.2%로 대졸 미만 집단(27.6%)보다 높았다. 미취업 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공시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인지도(38.3%)가 준비했다고 응답한 집단(21.2%)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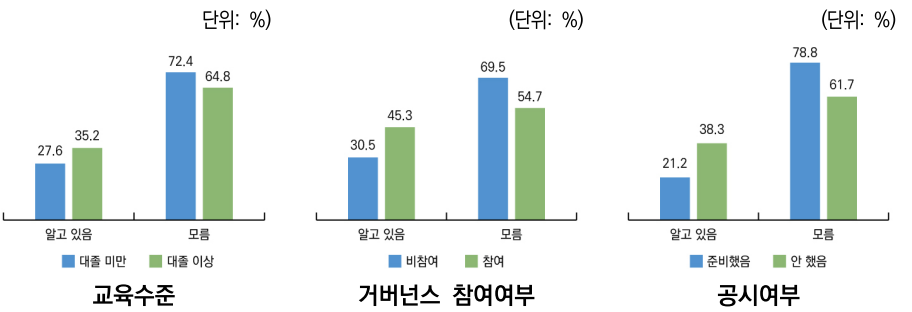


그림 Ⅳ-23 특성별 고용안전망 정책의 인지 여부

3) 현행 청년정책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의 영향 요인

각 정책의 인지여부와 수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인 특성 변수(①성별, ②연령, ③최종교육, ④거버넌스 참여 여부, ⑤거주 지역, ⑥경제여건 인식 수준)를 독립변수로, 인지여부와 수혜경험을 종속변수로 한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분석하였다.

(1) 사회통합 비전 관련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① 학자금 지원 정책

학자금 지원 정책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최종교육 대졸 이상(+), 현재 상태(재학생+)이었으며, 정책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최종교육 대졸 이상(+), 현재 상태(재학생 +)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경제여건 인식이 낮을수록 학자금 지원정책 수혜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서, 학자금 지원 정책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승산비(Odds Ratio)를 비교한 결과, 현재 상태(재학생)가 미치는 영향력(9.20배)이 가장 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재학생은 취업자와 미취업자보다 학자금지원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이 9.20배 높았다. 이는 제도 정책 이후 경과 시간과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표 Ⅳ-10 학자금 지원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변수	인지여부	수혜경험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성별(남성)	-0.2(0.28)	-0.08(0.17)
연령	**-0.09(0.04)***	**-0.08(0.02)*****
최종교육(대졸 이상)	**2.14(0.32)*****	**1.51(0.23)*****
상태(재학)	**2.22(0.42)*****	**1.33(0.23)*****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5(0.44)	0.03(0.28)
거주지역(서울)	-0.42(0.31)	-0.17(0.19)
경제여건 인식	-0.02(0.08)	**-0.17(0.05)*****
상수	**3.58(1.06)*****	**1.82(0.64)****
N	733	667
LR chi^2	67.30***	65.07***
Pseudo R^2	0.15	0,07
Log likelihood	-188.17	-424.87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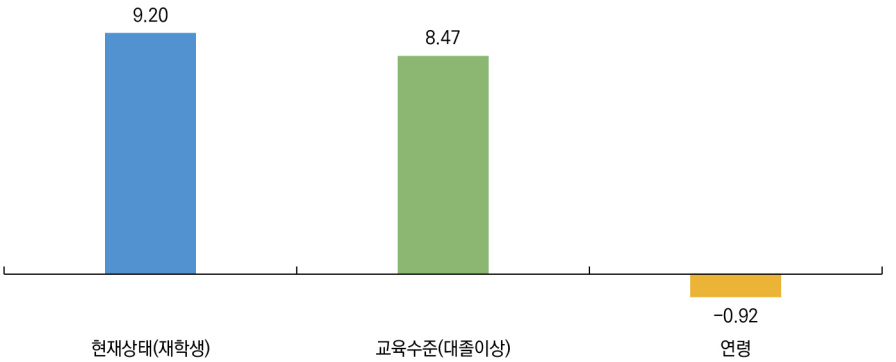


그림 Ⅳ-24 학자금 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②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청년, 취업자 중 비정규직이거나 비임금근로자가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이 낮았다.

표 Ⅳ-11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변수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재학생	
	인지여부	수혜경험	인지여부	수혜경험	인지여부	수혜경험	인지여부	수혜경험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 (남성)	**-0.55 (0.21)****	-0.18 (0.18)	**-0.82 (0.35)***	-0.15 (0.35)	-0.69 (0.41)	-0.30 (0.33)	0.089 (0.373)	0.231 (0.331)
연령	-0.00 (0.03)	0.00 (0.02)	-0.06 (0.05)	-0.07 (0.05)	-0.03 (0.06)	0.05 (0.05)	-0.005 (0.050)	0.062 (0.042)
최종교육 (대졸 이상)	**0.87 (0.23)*****	**0.60 (0.20)****	0.36 (0.41)	-0.56 (0.40)	**1.18 (0.46)****	0.85 (0.48)	0.677 (0.538)	-0.819 (0.433)
상태 (미취업)	0.36 (0.22)	0.14 (0.18)						

변수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재학생	
		인지여부	수혜경험	인지여부	수혜경험	인지여부	수혜경험	인지여부	수혜경험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0.29 (0.35)	-0.53 (0.31)	0.86 (0.56)	0.50 (0.49)	0.14 (1.2)	-0.68 (1.20)	-0.140 (0.548)	-0.870 (0.587)
거주지역 (서울)		-0.35 (0.22)	-0.13 (0.20)	0.71 (0.45)	-0.58 (0.47)	-0.22 (0.43)	-0.11 (0.36)	-0.461 (0.392)	-0.186 (0.364)
경제여건 인식		-0.03 (0.06)	-0.09 (0.05)	-0.07 (0.11)	-0.08 (0.11)	0.01 (0.12)	0.00 (0.10)	-0.120 (0.106)	-0.048 (0.094)
근로형태(비정규)				**-0.83 (0.40)***	-0.05 (0.42)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	10인 미만			-0.95 (0.50)	0.45 (0.49)				
	10-100인			-0.77 (0.49)	0.48 (0.47)				
근속기간				-0.01 (0.01)	-0.00 (0.01)				
로그월근로소득				0.07 (0.22)	0.27 (0.24)				
미취업기간						**0.9 (0.45)***	0.46 (0.32)		
구직 여부 (구직)						0 (0.01)	-0.01 (0.01)		
구직기간									
상수		1.47 (0.79)	-0.52 (0.68)	4.42 (1.65)**	-0.36 (1.75)	1.8 (1.56)	-1.78 (1.34)		
N		733	612	285	237	218	182	230	195
LR chi^2		29.47***	20.36**	21.65*	13.45	19.09*	17.14*	4.79	7.83
Pseudo R^2		0.04	0.03	0.08	0.06	0.1	0.07	0.02	0.034
Log likelihood		-313.64	-390.1	-118.39	-114.05	-88.14	-117.04	-95.690	-110.17

***p<.001, **p<.01, *p<.05

영향력 비교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더 명료하게 나타났다. 최종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집단은 대졸 미만 집단보다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이 2.39배 높았다. 취업자는 대졸 이상 집단의 영향력이 3.26배였고, 그림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미취업 구직자는 70.97배로 크게 높았다. 이는 청년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고용정책인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이 여전히 대졸 이상 집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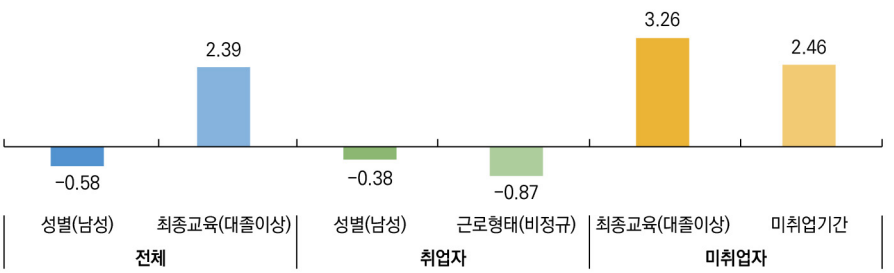


그림 Ⅳ-25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영향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③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인지도와 수혜율도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결과도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과 유사했다. 최종교육이 대졸 이상이거나 정규직인 경우,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을 인지하거나 수혜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핵심 대상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인지와 수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성별보다 최종교육이 인지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다. 대졸인 집단이 대졸 미만 집단보다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이 1.73배 높았다. 취업자 대상 분석에서도, 근속기간보다 근로형태의 영향력이 컸는데, 정규직이 비정규직·비임금근로자보다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이 2.61배 높았

다. 구직 및 창업지원뿐만 아니라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도 대학졸업 이상, 정규직 청년이 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성, 수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Ⅳ-12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변수		전체		취업자	
		인지여부	수혜경험	인지여부	수혜경험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성별(남성)		**-0.46(0.19)***	-0.02(0.23)	-0.68(0.36)	-0.04(0.36)
연령		0.01(0.02)	-0.02(0.03)	-0.06(0.05)	-0.07(0.05)
최종교육(대졸 이상)		**0.55(0.20)****	-0.13(0.25)	0.45(0.41)	-0.55(0.41)
상태(취업)		0.30(0.20)	**0.49(0.23)***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43(0.33)	0.15(0.35)	0.93(0.57)	0.64(0.52)
거주지역(서울)		0.32(0.22)	-0.31(0.27)	0.68(0.45)	-0.66(0.48)
경제여건 인식		-0.04(0.05)	-0.13(0.07)	-0.06(0.11)	-0.11(0.11)
근로형태(정규임금)				**0.96(0.39)***	**0.95(0.41)***
회사 규모(100인 이상)	10인 미만			-0.63(0.51)	0.65(0.51)
	10~100인 미만			-0.77(0.49)	0.47(0.49)
근속기간(1년 미만)	1~2년미만			-0.08(0.45)	**1.09(0.42)***
	2~3년미만			0.48(0.63)	0.12(0.61)
	3년 이상			**-1.00(0.46)***	0.34(0.53)
로그월평균근로소득				0.03(0.22)	0.19(0.23)
상수		0.82(0.71)	-0.60(0.88)	3.46(1.62)*	-0.98(1.73)
N		733	579	285	237
LR chi^2		25.99***	11.27	27.32*	26.88*
Pseudo R^2		0.03	0.02	0.11	0.11
Log likelihood		-363.83	-254.43	-115.55	-107.34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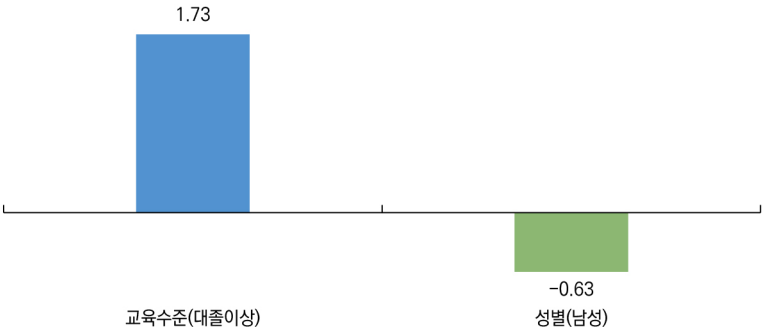


그림 Ⅳ-26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영향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④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정책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정책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남성 +), 연령(+), 최종교육수준(대졸 이상 +), 거버넌스 참여(+), 경제여건 인식(+)이었으며, 정책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력(2.49배)이 가장 컸고, 대졸 이상(1.74배), 남성(1.50배)이 뒤를 이었다.

표 Ⅳ-13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정책의 인지여부 영향 요인

변수	전체	취업자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성별(남성)	**0.40(0.16)***	0.16(0.26)
연령	**0.06(0.02)****	0.01(0.04)
최종교육(대졸 이상)	**0.55(0.17)****	**0.79(0.32)***
상태(취업)	-0.04(0.16)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91(0.27)*****	**1.35(0.42)****
거주지역(서울)	-0.03(0.18)	0.06(0.31)
경제여건 인식	**0.11(0.05)***	0.14(0.08)

변수		전체	취업자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근로 형태(정규임금)			0.17(0.29)
회사 규모 (100인 이상)	10인 미만		-0.24(0.35)
	10~100인미만		0.09(0.33)
근속기간 (1년 미만)	1~2년미만		0.26(0.33)
	2~3년미만		0.67(0.42)
	3년 이상		0.30(0.37)
로그월평균근로소득			-0.06(0.17)
상수		-2.92(0.60)***	-1.94(1.24)
N		733	285
LR chi^2		52.00***	32.96**
Pseudo R^2		0.05	0.08
Log likelihood		-480.16	-181.02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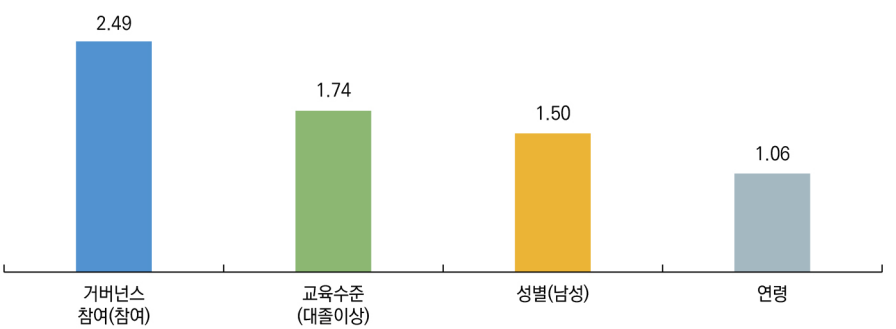


그림 Ⅳ-27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정책의 인지 여부 영향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⑤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남성 +), 최종교육(대졸 이상 +), 거버넌스 참여(+)였고,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지역(서울 -), 거버넌스 참여(+)였다.

표 Ⅳ-14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변수	전체		참여자	
	인지여부	수혜경험	인지여부	수혜경험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성별(남성)	**0.45(0.20)***	-0.44(0.53)	-0.26(0.74)	-0.16(1.05)
연령	0.02(0.03)	0.09(0.07)	**0.33(0.12)****	0.21(0.17)
최종교육(대졸 이상)	**0.53(0.25)***	-0.21(0.72)	1.07(0.91)	-0.88(1.40)
상태(재학)	0.42(0.24)	0.03(0.65)	1.75(0.94)	0.94(1.46)
거주지역(서울)	-0.07(0.22)	**-1.69(0.76)***	2.14(1.63)	-0.64(1.41)
경제여건 인식	0.11(0.06)	-0.10(0.14)	0.19(0.17)	0.09(0.25)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참여)	**2.58(0.29)*****	**4.13(0.56)*****		
거버넌스 참여 기간			-0.02(0.02)	0.01(0.04)
상수	-3.20(0.76)***	-3.53(2.24)	-9.34(3.29)**	-3.97(5.04)
N	733	168	75	55
LR chi^2	114.51***	109.04***	18.81**	3.73
Pseudo R^2	0.15	0.5	0.22	0.09
Log likelihood	-337.32	-54.98	-34.09	-19.1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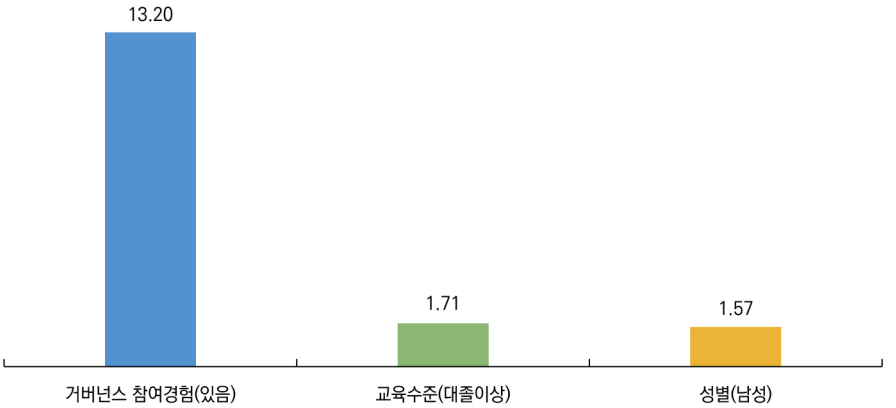


그림 Ⅳ-28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인지 여부 영향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2)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①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정책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정책의 인지여부와 수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여건(+)이 유일했고, 거버넌스 참여자를 대상 분석결과, 연령(+). 미취업(-)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었다. 대학을 가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자, 미취업자, 경제적 여력이 없는 취약 청년들이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성과 수혜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버넌스 참여자에 한해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연령이 1세 많아질 때 정책인지 가능성이 1.39배 높아지며, 재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 미취업자가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은 95.6% 낮았다(그림 Ⅳ-29).

표 Ⅳ-15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변수		전체		참여자	
		인지여부	수혜경험	인지여부	수혜경험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성별(남성)		0.03(0.16)	-0.46(0.33)	-0.12(0.87)	-1.13(0.90)
연령		-0.01(0.02)	0.04(0.04)	**0.33(0.14)***	0.14(0.12)
최종교육(대졸 이상)		0.28(0.20)	-0.05(0.44)	-0.84(1.03)	0.81(1.01)
상태(재학)	미취업	-0.35(0.23)	-0.05(0.52)	**-3.11(1.45)***	-
	취업	-0.23(0.21)	0.39(0.43)	-0.71(1.04)	-0.75(1.07)
거주지역(서울)		0.04(0.18)	-0.27(0.38)	-0.12(1.26)	-0.47(1.40)
경제여건 인식		**0.18(0.05)*** **	0.02(0.09)	0.24(0.2)	0.24(0.20)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2.08(0.31)***	2.75(0.40)***		
거버넌스 참여 기간				-0.01(0.02)	0.01(0.03)
상수		-1.32(0.64)*	-2.56(1.28)*	-6.78(3.49)	-2.75(3.19)
N		733	278	75	58
LR chi^2		78.84***	78.21***	19.48*	7.29
Pseudo R^2		0.08	0.23	0.25	0.12
Log likelihood		-447.07	-133.66	-29.13	-27.21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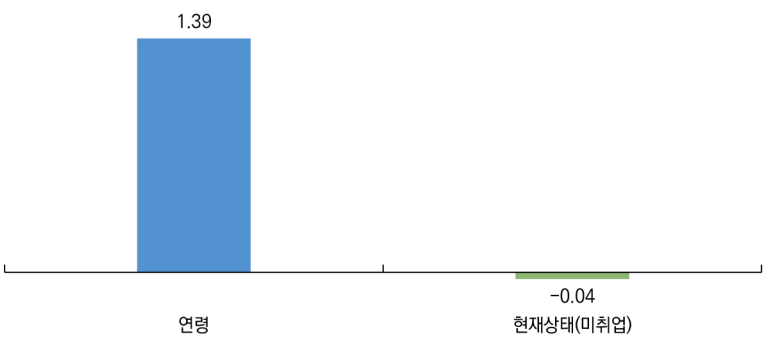


그림 Ⅳ-29 청년 활동공간 및 서비스 정책의 인지 여부 영향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② 주거지원, 신용회복, 건강지원 정책

주거지원, 신용회복, 건강지원 정책 모두 대졸 이상 집단이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주거지원과 건강지원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가, 신용회복은 미취업자(+),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경우(+)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주거지원 정책은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정책은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경우 정책 수혜 가능성이 높았다.

표 Ⅳ-16 주거지원, 신용회복, 건강지원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변수	주거지원		신용회복		건강지원	
	인지여부	수혜경험	인지여부	수혜경험	인지여부	수혜경험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59(0.19)****	-0.30(0.35)	0.21(0.15)	0.22(0.32)	-0.12(0.17)	-0.18(0.31)
연령	0.02(0.03)	0.06(0.05)	0.01(0.02)	0.02(0.04)	**-0.06(0.02)****	0.01(0.04)
최종교육(대졸 이상)	**0.93(0.20)*****	-0.15(0.39)	**0.48(0.17)****	0.72(0.39)	**0.46(0.19)***	-0.29(0.37)
상태(미취업)	0.32(0.24)	0.82(0.42)	**0.54(0.20)****	0.52(0.39)	0.07(0.21)	0.52(0.41)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0.87(0.35)***	**1.72(0.40)*****	-0.24(0.26)	0.64(0.51)	**1.14(0.26)*****	0.13(0.41)
거주지역(서울)	0.12(0.21)	-0.06(0.40)	0.19(0.17)	0.27(0.35)	-0.22(0.19)	0.38(0.36)
경제여건 인식	0.04(0.05)	-0.14(0.10)	-0.03(0.05)	**-0.38(0.11)*****	0.05(0.05)	-0.01(0.09)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12(0.07)	0.11(0.18)	**0.16(0.06)****	**0.43(0.18)***	-0.05(0.06)	0.02(0.13)
생활비 조달방법 (내가 벌어서)	0.26(0.23)	**1.05(0.49)***	**0.41(0.19)***	-0.35(0.41)	0.13(0.21)	0.35(0.39)
거주형태(혼자)	0.13(0.25)	0.28(0.40)			0.03(0.21)	-0.51(0.43)
혼인상태(기혼)	0.20(0.36)	0.51(0.49)				
상수	-0.72(0.78)	-5.57(1.61)***	-2.04(0.64)**	-3.58(1.41)*	0.61(0.67)	-1.80(1.30)
N	733	563	733	340	733	246
LR chi^2	57.43***	38.95***	33.13***	26.45**	36.92***	6.49
Pseudo R^2	0.07	0.13	0.03	0.09	0.04	0.02
Log likelihood	-368.27	-132.44	-489.59	-132.22	-449.25	-134.54

***p<.001, **p<.01, *p<.05

주거지원의 인지에서 최종교육의 영향력(2.54배)이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력(2.39배)보다 높았다. 주거지원도 대학 졸업 이상 집단이 정보접근성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경제여건 인식이 낮을수록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신용회복 정책 수혜 가능성인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가구소득수준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여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건강지원 정책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건강지원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이 3.14배 높았으며, 대졸이상 집단이 대졸미만 집단보다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이 1.59배 높았다. 건강지원 정책 역시 대졸 이상 집단의 정책인지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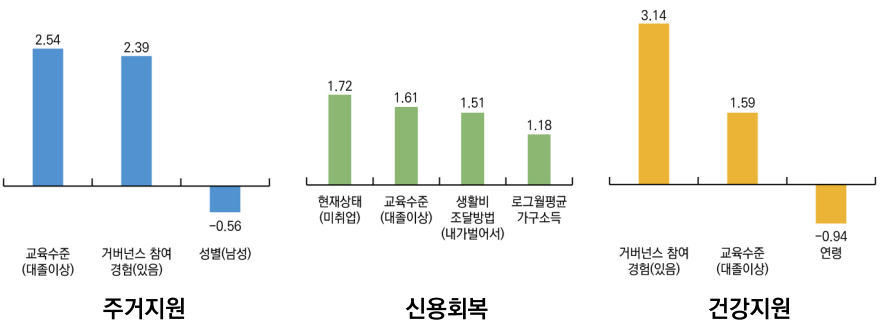


그림 Ⅳ-30 주거지원, 신용회복, 건강지원 정책의 인지 여부 영향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3) 사회혁신 비전 관련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① 다양한 역량개발 정책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그리고 경제여건 인식이 높을수록 다양한 역량개발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고,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정책 수혜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양한 역량개발 정책이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과 일치하며,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 속한 청년들이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인지와 수혜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그림 Ⅳ-31),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력(2.96배)이 경제여건 인식(1.12배)보다 컸다.

표 Ⅳ-17 다양한 역량개발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변수		인지여부	수혜경험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성별(남성)		0.30(0.20)	-0.46(0.63)
연령		0.03(0.03)	-0.04(0.07)
최종교육(대졸 이상)		-0.10(0.24)	0.24(0.70)
상태(재학)	미취업	-0.05(0.30)	1.78(0.94)
	취업	0.10(0.25)	-0.42(0.79)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1.09(0.27)*** **	**3.00(0.71)*** **
거주지역(서울)		-0.15(0.23)	-0.33(0.74)
경제여건 인식		**0.11(0.06)***	-0.16(0.19)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09(0.08)	**0.72(0.31)***
상수		-3.34(0.82)***	-4.47(2.51)
N		733	143
LR chi^2		30.65	32.84
Pseudo R^2		0.04	0.26
Log likelihood		-346.42	-46.65

② 고용안전망과 일터 안전보장 정책

고용안전망 정책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대졸 이상 집단, 거버넌스 참여자가 고용안전망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여건 인식이 낮을수록 정책 수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자도 대졸 이상, 거버넌

스 참여자의 정책인지 가능성이 높았고, 경제여건 인식이 낮을수록 수혜 가능성이 높았다. 고용안전망 정책이 노동시장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큰 저연령대 청년, 그리고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집단의 수혜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그림 Ⅳ-31), 거버넌스 참여 경험과 최종교육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인 경우 고용안전망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이 1.72배 높았고, 거버넌스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2.00배 높았다. 한편, 별도 그림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졸이상 교육이 고용안전망 정책 인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취업자로 한정하였을 때 1.97배로 더 크게 나타났고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력도 취업자 집단에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18 고용안전망과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인지여부 및 수혜경험 영향 요인

변수		고용안전망				일터 안전보장(인지여부)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인지여부	수혜경험	인지여부	수혜경험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09(0.16)	0.55(0.56)	0.09(0.27)	0.36(0.90)	0.32(0.19)	0.20(0.32)
연령		-0.02(0.02)	-0.04(0.07)	-0.04(0.04)	**-0.34(0.17)***	-0.05(0.02)	-0.08(0.05)
최종교육(대졸 이상)		**0.54(0.21)****	-0.33(0.69)	**0.68(0.34)***	-0.07(1.04)	0.16(0.23)	0.38(0.42)
상태(재학)	미취업	-0.28(0.25)	1.02(0.95)			-0.48(0.28)	
	취업	-0.30(0.22)	1.14(0.80)			-0.32(0.24)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69(0.26)****	0.67(0.67)	**0.85(0.39)***	0.22(1.19)	0.36(0.29)	0.05(0.50)
거주지역(서울)		0.03(0.19)	-0.20(0.69)	-0.02(0.32)	0.28(1.18)	0.18(0.21)	-0.31(0.39)
경제여건 인식		0.07(0.05)	**-0.36(0.16)***	0.16(0.09)	**-0.92(0.35)****	0.09(0.05)	**0.34(0.10)****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10(0.07)	0.19(0.27)	-0.48(0.40)	0.96(1.97)	0.08(0.08)	0.53(0.32)

변수		고용안전망				일터 안전보장(인지여부)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인지여부	수혜경험	인지여부	수혜경험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근로 형태(비정규임금)				-0.18(0.33)	-0.55(1.02)		-0.00(0.40)
회사 규모 (100인 이상)	10인 미만			0.21(0.35)	-0.57(1.32)		-0.76(0.41)
	10~100인 미만			-0.06(0.34)	0.91(1.17)		-0.66(0.39)
근속기간(개월)				-0.08(0.13)	0.58(0.42)		
근속기간 (1년 미만)	1~2년미만						0.52(0.39)
	2~3년미만						0.17(0.54)
	3년 이상						0.12(0.46)
로그월평균근로소득				0.56(0.38)	1.34(2.44)		**-0.49(0.25)***
상수		-1.24(0.67)	-1.74(2.25)	-1.20(1.45)	-2.77(7.61)	-0.87(0.76)	-1.13(1.78)
N		733	235	285	95	733	285
LR chi^2		22.21**	13.63	18.7	17.01	21.31	30.49
Pseudo R^2		0.02	0.11	0.05	0.27	0.03	0.10
Log likelihood		-448.72	-54.2	-172.05	-23.46	-375.24	-134.03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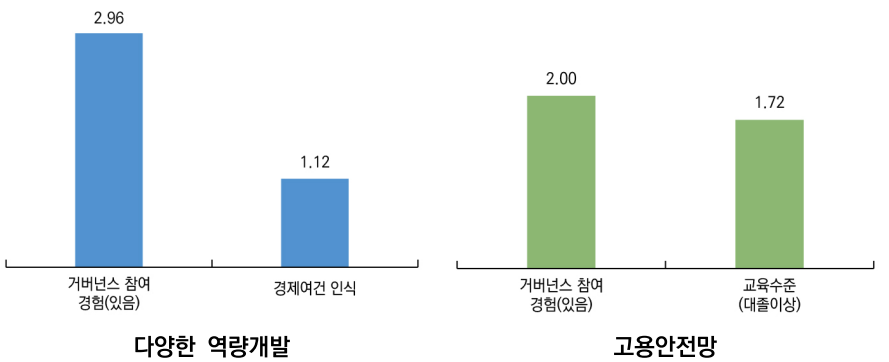


그림 Ⅳ-31 역량개발, 고용안전망 정책의 인지 여부 영향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3.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평가

주요 발견(Main Findings)

-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을 기본 틀로 하여 선정된 12개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정책들이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음.
- 청년들은 생활안전망에 대한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통합 비전과 관련한 정책 가운데에는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61.3%)이,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정책에서는 '주거지원'(64.5%)이, 사회혁신 비전 관련 정책에서는 '일터 안전보장 정책'(61.7%)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음,
- 조사된 12개 청년정책 중 중요도와 도움정도가 평균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 정책은 ①건강지원, ②주거지원, ③일터 안전보장으로 나타나, 향후 청년정책이 건강, 주거, 일자리 질에 대한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도움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집단은 앞서 살펴본 정책인지도가 낮은 집단과 같은 미취업자, 대졸 미만 저학력 집단이고, 높은 집단은 재학생, 대학졸업 이상, 거버넌스 참여집단이었음.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가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도움정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정책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책 인지여부와 수혜경험,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력은 인지도, 수혜율이 낮은 정책(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기업 인센티브, 활동공간, 역량개발)에서 크게 나타남.
- ①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②학자금지원, ③주거지원, ④건강지원, ⑤고용안전망과 같은 생활안전망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도 인식은 경제여건 인식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①역량개발, ②일터안전 정책의 중요도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정책욕구가 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 청년 당사자가 인식하고 평가하는 현행 청년정책의 중요도와 도움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용 중심에서 벗어나, 낮은 소득계층의 청년들에게는 건강지원, 주거지원,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정책 등 생활안전망 관련 지원을 확충하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역량개발, 거버넌스, 활동공간 지원 정책 역시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줌.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청년정책이 19세~34세 청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중요도), 그리고 청년 본인의 현실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움정도)를 분석하였다. 중요도와 도움정도는 1점~10점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1점~10점을

3개 항목(①중요하지 않음/도움 안 됨 1점~3점, ②보통 4점~7점, ③중요함/도움 됨 8점~10점) 변수로 전환해 중요도와 도움정도 인식 분포를 분석하였다.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정도 수준을 비교할 때 점수가 8점~10점(중요함, 도움 됨) 비율이 많은 경우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크면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시 말해, 평균 점수가 높더라도 중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정책을 중요도·도움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회정책 비전별 청년정책의 중요도를 분포와 평균 점수를 이용해 비교하고, 청년의 현재 상태(①재학생, ②미취업자, ③취업자),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라 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이어서 청년 특성별로 정책의 중요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청년정책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서열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해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는 정책인지 여부, 수혜경험, 그리고 기본 특성이 독립변수로 설정되었고, 중요도(①중요하지 않음, ②보통, ③중요함)와 도움정도(①도움 되지 않음, ②보통, ③도움 됨)가 종속변수로 설정되었다.

1) 청년들 삶에 있어서 현행 청년정책의 중요도

(1) 사회정책 비전 및 전략 분야별 중요도 수준

① 사회정책 비전별 청년정책의 중요도 수준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현행 청년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사회통합의 학자금 지원 정책(8.32점, 73.8%)이었고, 중요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50% 이상인 정책은 일터 안전보장(61.7%), 건강지원(61.4%),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61.3%), 구직 및 창업 지원(60.7%), 고용안전망 확충(53.9%),

신용회복(52.9%)이었다. 중요도 수준이 가장 낮은 정책은 다양한 역량개발 정책(7.07점, 44.5%)이었다. 기본적 생활안전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인식하는 중요도가 대체로 더 높았다. 한편, 사회통합 비전 영역에서는 학자금 지원과 구직 및 창업지원이,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에서는 주거지원과 건강지원이, 사회혁신에서는 일터 안전보장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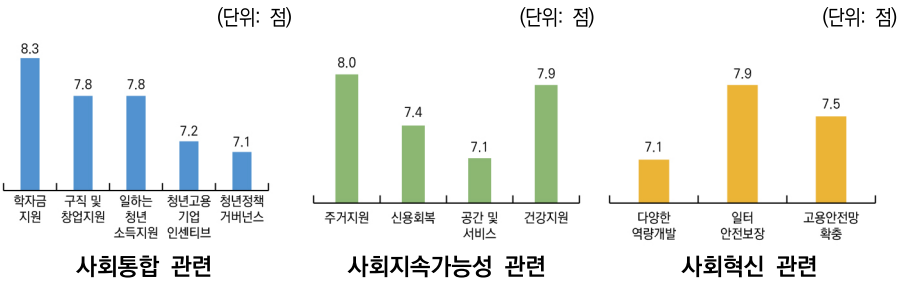


그림 Ⅳ-32 정책영역과 정책별 중요도 평가 비교

표 Ⅳ-19 사회정책 비전 관련 청년정책의 중요도 평가

(단위: 명, %, 점)

비전	정 책	사례 수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사회 통합	학자금 지원	733	2.1	24.1	73.8	8.32(1.79)
	구직 및 창업 지원	733	3.4	35.9	60.7	7.83(1.92)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733	4.4	34.4	61.3	7.77(2.01)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733	6.6	44.3	49.1	7.24(2.16)
	청년정책 거버넌스	733	6.6	49.5	43.9	7.10(2.12)
사회적 지속 가능성	주거지원	733	3.3	32.2	64.5	7.98(1.88)
	신용회복	733	5.1	42.0	52.9	7.43(2.04)
	청년활동 공간 및 사회서비스	733	5.9	51.7	42.4	7.08(2.05)
	건강지원	733	2.2	36.4	61.4	7.86(1.85)
사회 혁신	다양한 역량개발	733	5.5	50.1	44.5	7.07(2.07)
	일터 안전보장	733	2.3	36.0	61.7	7.88(1.88)
	고용안전망 확충	733	4.0	42.2	53.9	7.54(1.93)

② 현재 상태에 따른 청년정책의 중요도 수준

현재 상태별로 청년정책의 중요도 인식이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 사회통합 비전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정책에서는 상태별로 필요한 정책이 분화되어 나타났다. 가령, 취업자는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7.67점, 57.2%)보다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7.84점, 61.1%)의 중요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미취업자는 주거지원 정책(7.69점, 59.2%)보다 건강지원 정책(7.82점, 60.1%)의 중요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회혁신 비전 관련 정책의 경우, 전체 청년이 인식하는 청년정책의 중요도 순위가 ①일터 안전보장→②고용안전망→③다양한 역량개발 순으로 같았다.

③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에 따른 청년정책 중요도 차이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라 각 정책에 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 참여자가 인식하는 청년 정책에 대한 중요도 수준이 높았다. 사회통합 비전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정책의 중요도 수준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사회혁신 관련 정책 중요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사회통합 비전 관련 정책의 중요도와 관련해, 거버넌스 비참여 청년은 학자금 지원, 구직 및 창업지원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는데 거버넌스 참여 청년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거버넌스 참여자는 학자금 지원보다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거버넌스 참여 청년 중 취업자 비중(53.3%)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

사회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해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청년은 건강지원과 청년 활동공간 및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주거지원, 신용회복보다 높았다.

표 Ⅳ-20 청년정책의 중요도 평가 : 현재 상태별 비교

(단위: 명, %, 점)

구 분	재학					미취업					취업				
	사례 수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평균 (편차)	사례 수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평균 (편차)	사례 수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평균 (편차)
학자금 지원	230	0.9	17.0	82.2	8.70 (1.57)	218	2.8	28.9	68.4	8.08 (1.87)	285	2.5	26.3	71.2	8.20 (1.84)
구직 및 창업 지원	230	1.7	32.2	66.1	8.11 (1.71)	218	5.1	35.3	59.6	7.75 (2.04)	285	3.5	39.3	57.2	7.67 (1.97)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230	4.4	28.7	67.0	7.97 (2.03)	218	5.5	39.0	55.5	7.49 (2.06)	285	3.5	35.4	61.1	7.84 (1.92)
청년고용 기업인센티브	230	5.7	34.8	59.6	7.61 (2.18)	218	7.3	53.2	39.5	6.94 (2.20)	285	6.7	45.3	48.1	7.17 (2.09)
청년정책 거버넌스	230	6.1	45.7	48.3	7.37 (2.05)	218	7.8	55.1	37.2	6.81 (2.10)	285	6.0	48.4	45.6	7.10 (2.17)
주거지원	230	1.7	29.1	69.1	8.27 (1.71)	218	3.2	37.6	59.2	7.69 (1.92)	285	4.6	30.5	64.9	7.97 (1.94)
신용회복	230	3.9	36.5	59.6	7.72 (1.96)	218	6.4	50.0	43.6	7.09 (2.19)	285	4.9	40.4	54.7	7.46 (1.94)
공간 및 서비스	230	4.8	47.4	47.8	7.41 (1.97)	218	6.9	60.5	32.6	6.74 (2.02)	285	6.0	48.4	45.6	7.08 (2.02)
건강지원	230	1.3	34.8	63.9	8.07 (1.71)	218	1.8	38.1	60.1	7.82 (1.80)	285	3.1	36.5	60.4	7.73 (1.98)
다양한 역량 개발	230	3.5	46.5	50.0	7.37 (1.95)	218	6.4	52.8	40.8	6.87 (2.15)	285	6.3	50.9	42.8	6.98 (2.09)
일터 안전보장	230	0.9	30.9	68.3	8.17 (1.71)	218	3.2	39.5	57.3	7.72 (1.96)	285	2.8	37.5	59.7	7.77 (1.93)
고용안전망 확충	230	2.6	38.3	59.1	7.83 (1.81)	218	4.1	45.9	50.0	7.36 (1.99)	285	4.9	42.5	52.6	7.45 (1.93)

표 Ⅳ-21 청년정책의 중요도 평가 :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참여					비참여				
	사례 수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평균 (편차)	사례 수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평균 (편차)	사례 수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평균 (편차)
학자금 지원	733	2.1	24.1	73.8	8.32 (1.79)	75	0.0	25.3	74.7	8.37 (1.67)	658	2.3	24.0	73.7	8.32 (1.80)
구직 및 창업 지원	733	3.4	35.9	60.7	7.83 (1.92)	75	1.3	34.7	64.0	8.09 (1.73)	658	3.7	36.0	60.3	7.80 (1.94)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733	4.4	34.4	61.3	7.77 (2.01)	75	1.3	20.0	78.7	8.44 (1.65)	658	4.7	36.0	59.3	7.70 (2.03)
청년고용 기업인센티브	733	6.6	44.3	49.1	7.24 (2.16)	75	8.0	37.3	54.7	7.25 (2.24)	658	6.4	45.1	48.5	7.24 (2.16)
청년정책 거버넌스	733	6.6	49.5	43.9	7.10 (2.12)	75	0.0	21.3	78.7	8.68 (1.44)	658	7.3	52.7	40.0	6.92 (2.11)
주거지원	733	3.3	32.2	64.5	7.98 (1.88)	75	1.3	20.0	78.7	8.56 (1.44)	658	3.5	33.6	62.9	7.92 (1.91)
신용회복	733	5.1	42.0	52.9	7.43 (2.04)	75	1.3	34.7	64.0	8.04 (1.72)	658	5.5	42.9	51.7	7.36 (2.06)
공간 및 서비스	733	5.9	51.7	42.4	7.08 (2.05)	75	0.0	20.0	80.0	8.60 (1.42)	658	6.5	55.3	38.2	6.91 (2.04)
건강지원	733	2.2	36.4	61.4	7.86 (1.85)	75	0.0	20.0	80.0	8.64 (1.39)	658	2.4	38.3	59.3	7.77 (1.87)
다양한 역량 개발	733	5.5	50.1	44.5	7.07 (2.07)	75	0.0	38.7	61.3	7.87 (1.79)	658	6.1	51.4	42.6	6.98 (2.08)
일터 안전보장	733	2.3	36.0	61.7	7.88 (1.88)	75	0.0	29.3	70.7	8.48 (1.46)	658	2.6	36.8	60.6	7.81 (1.91)
고용안전망 확충	733	4.0	42.2	53.9	7.54 (1.93)	75	0.0	32.0	68.0	8.28 (1.50)	658	4.4	43.3	52.3	7.46 (1.96)

(2) 청년특성별 중요도 인식 차이

여기서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 수준이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하위집단 구분은 앞서 인지 여부, 수혜경험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성별, 연령범주(①19세~24세, ②25세~29세, ③30세~34세), 교육수준(①대졸미만, ②대졸이상), 현재 상태(①재학생, ②미취업자, ③취업자), 거버넌스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정책의 특성에 따라 거주지역(①서울, ②경기, ③광역시, ④그 외 시도), 근로형태(①정규직 임금근로, ②비정규직 임금근로, ③비임금근로) 등에 따른 차이를 추가로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 제시하였다.

① 사회통합 비전 관련 정책 중요도

사회통합 비전 관련 정책 중요도의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미취업자의 중요도 인식 수준이 일관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앞서 분석된 정책 인지와 수혜경험의 차이와 유사한 결과이다.

먼저 학자금 지원 정책의 중요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t-test=-3.6, $p<.001$) 재학생의 중요도 평균 점수가 8.7점으로 가장 높았다(F-test=8.1, $p<.001$). 둘째,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 중요도는 여성, 재학생이 높았고, 연령별, 경제여건 인식에 따른 차이도 확인되었다. 19세~24세(8.1점)가 25세~29세(7.8점), 30세~34세(7.6점)보다 높았고(F-test=3.1, $p<.05$).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집단의 중요도 수준이 가장 높았다(66.5%, χ^2-test=18.238, $p<.01$).

표 Ⅳ-22 학자금 지원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15 (2.05)	177 (24.15)	541 (73.81)	8.3 (1.79)
성별	남성	100.0	3.0	27.4	69.6	8.1
	여성	100.0	1.1	21.0	77.9	8.6
	x^2-test / t-test			8.179*		-3.6***
현재 상태	재학	100.0	0.9	17.0	82.2	8.7
	미취업	100.0	2.8	28.9	68.4	8.1
	취업	100.0	2.5	26.3	71.2	8.2
	x^2-test / F-test			13.158*		8.1**

***p<.001, **p<.01, *p<.05

표 Ⅳ-23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25 (3.4)	263 (35.9)	445 (60.7)	7.83 (1.92)
성별	남성	100.0	5.3	37.9	56.9	7.6
	여성	100.0	1.6	34.0	64.4	8.0
	x^2-test / t-test			9.558**		-3.0**
연령	19세~24세	100.0	2.2	33.6	64.2	8.1
	25세~29세	100.0	4.3	34.8	61.0	7.8
	30세~34세	100.0	3.6	39.1	57.3	7.6
	x^2-test / F-test			3.585		3.1*
현재 상태	재학	100.0	1.7	32.2	66.1	8.1
	미취업	100.0	5.1	35.3	59.6	7.7
	취업	100.0	3.5	39.3	57.2	7.7
	x^2-test / F-test			7.147		3.7*

구 분		전체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경제여건 인식	낮음	100.0	7.1	26.4	66.5	7.8
	중간	100.0	2.1	39.5	58.4	7.8
	높음	100.0	3.1	31.3	65.6	7.8
	x^2-test / F-test		**18.238****			0.01

***p<.001, **p<.01, *p<.05

셋째,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중요도는 구직 및 창업지원과 유사한 차이를 보였고,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과 다른 점은 경제여건 인식이 높은 집단 중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5.0%로 경제여건 인식 낮음(68.7%), 중간집단(57.8%)보다 높았다(x^2-test=16.352, p<.01).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이 빈곤층, 저소득 집단에 집중된 것을 고려할 때, 소득지원 정책 대상을 중상층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Ⅳ-24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32 (4.4)**	**252 (34.4)**	**449 (61.3)**	**7.8 (1.7)**
성별	남성	100.0	6.6	37.0	56.4	7.6
	여성	100.0	2.2	31.8	66.0	7.9
	x^2-test / t-test		**12.651****			**-2.2***
현재 상태	재학	100.0	4.4	28.7	67.0	8.0
	미취업	100.0	5.5	39.0	55.5	7.5
	취업	100.0	3.5	35.4	61.1	7.8
	x^2-test / F-test		7.129			**3.4***

구 분		전체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4.7	36.0	59.3	7.7
	참여	100.0	1.3	20.0	78.7	8.4
	x^2-test / t-test		10.919**			-3.1**
경제여건 인식	낮음	100.0	5.5	25.8	68.7	7.8
	중간	100.0	3.7	38.5	57.8	7.8
	높음	100.0	9.4	15.6	75.0	7.8
	x^2-test / F-test		16.352**			2.2

***p<.001, **p<.01, *p<.05

넷째,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정책의 중요도는 현재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학생의 59.6%, 취업자의 48.1%, 미취업자의 39.5%가 기업 인센티브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재학생의 중요도 평균 점수는 7.6점으로 취업자(7.2점), 미취업자(6.9점)보다 높았다(F-test=5.7, p<.01).

표 Ⅳ-25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48 (6.6)	325 (44.3)	360 (49.1)	7.2 (2.2)
현재 상태	재학	100.0	5.7	34.8	59.6	7.6
	미취업	100.0	7.3	53.2	39.5	6.9
	취업	100.0	6.7	45.3	48.1	7.2
	x^2-test / F-test		18.483**			5.7**

***p<.001, **p<.01, *p<.05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중요도의 차이는 다른 정책과 달리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됐다. 대졸 이상이 대졸 미만 집단보다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표 Ⅳ-26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48 (6.6)	363 (49.5)	322 (43.9)	7.1 (2.1)
성별	남성	100.0	9.1	50.6	40.3	7.0
	여성	100.0	4.0	48.5	47.4	7.2
	x^2-test / t-test		9.461**			-1.5
최종교육	대졸 미만	100.0	9.3	48.2	42.5	7.0
	대졸 이상	100.0	4.6	50.5	44.9	7.2
	x^2-test / t-test		6.332*			-1.3
현재 상태	재학	100.0	6.1	45.7	48.3	7.4
	미취업	100.0	7.8	55.1	37.2	6.8
	취업	100.0	6.0	48.4	45.6	7.1
	x^2-test / F-test		6.295			3.8*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7.3	52.7	40.0	6.9
	참여	100.0	0.0	21.3	78.7	8.7
	x^2-test / t-test		41.827***			-7.1***

***p<.001, **p<.01, *p<.05

②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정책 중요도 인식 차이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정책에서 정책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사회통합 비전과 마찬가지로, 남성, 미취업자였으며,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보

다 비참여자의 중요도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주거지원 정책의 중요도는 여성, 재학생,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중요도 평균 점수는 재학생(8.3점), 취업자(8.0점), 미취업자(7.7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F-test=5.5, p<.01). 중요도 평균 점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8.6점)가 비참여자(7.9점)보다 높았다(t-test=-2.8, p<.01).

표 Ⅳ-27 주거지원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24 (3.3)	236 (32.2)	473 (64.5)	8.0 (1.9)
성별	남성	100.0	5.0	32.9	62.2	7.8
	여성	100.0	1.6	31.5	66.9	8.2
	x^2-test / t-test		7.026*			-2.4*
현재 상태	재학	100.0	1.7	29.1	69.1	8.3
	미취업	100.0	3.2	37.6	59.2	7.7
	취업	100.0	4.6	30.5	64.9	8.0
	x^2-test / F-test		7.736			5.5**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3.5	33.6	62.9	7.9
	참여	100.0	1.3	20.0	78.7	8.6
	x^2-test / t-test		7.409*			-2.8**

***p<.001, **p<.01, *p<.05

둘째, 신용회복 정책의 경우, 여성 중 53.6%, 남성 52.2%가 신용회복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중요도 평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재학생의 중요도 평균 점수는 7.7점으로 취업자(7.5점), 미취업자(7.1점)보다 높

았다(F-test=5.5, p<.01).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는 평균 점수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참여자(8.0점)가 비참여자(7.4점)보다 높았다(t-test=-2.7, p<.01).

셋째,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의 중요도는 주거지원, 신용회복 정책과 유사했으며, 다만 중요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참여자(8.6점)가 비참여자(6.9점)보다 중요도 점수가 높았다(t-test=-7.0, p<.001).

표 Ⅳ-28 신용회복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37 (5.1)	308 (42.0)	388 (52.9)	7.4 (2.0)
성별	남성	100.0	7.2	40.6	52.2	7.4
	여성	100.0	3.0	43.4	53.6	7.6
	x^2-test / t-test		6.866*			-1.6
현재 상태	재학	100.0	3.9	36.5	59.6	7.7
	미취업	100.0	6.4	50.0	43.6	7.1
	취업	100.0	4.9	40.4	54.7	7.5
	x^2-test / F-test		12.251*			5.5**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5.5	42.9	51.7	7.4
	참여	100.0	1.3	34.7	64.0	8.0
	x^2-test / t-test		5.292			-2.7**

***p<.001, **p<.01, *p<.05

표 Ⅳ-29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43 (5.9)	379 (51.7)	311 (42.4)	7.1 (2.1)
성별	남성	100.0	8.6	51.4	40.1	6.9
	여성	100.0	3.2	52.0	44.7	7.3
	x^2-test / t-test		9.834**			-2.2*
현재 상태	재학	100.0	4.8	47.4	47.8	7.4
	미취업	100.0	6.9	60.6	32.6	6.7
	취업	100.0	6.0	48.4	45.6	7.1
	x^2-test / F-test		12.825*			6.1**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6.5	55.3	38.2	6.9
	참여	100.0	0.0	20.0	80.0	8.6
	x^2-test / t-test		48.942***			-7.0***

***p<.001, **p<.01, *p<.05

넷째, 건강지원 정책의 경우, 상태에 따른 중요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교육수준과 경제여건에 차이만 유의했다. 대졸 이상 집단 중 건강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4.6%로 대졸 미만 집단(56.8%)보다 높았으며, 중요도 평균점수도 대졸 이상(8.0점)이 대졸 미만(7.7점)보다 높았다(t-test=-2.2, p<.05).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집단 중 건강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7.6%로 경제여건 인식 높음(59.3%), 중간집단(59.4%)보다 높았다(x^2-test=11.984, p<.05).

표 Ⅳ-30 건강지원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16 (2.2)	267 (36.4)	450 (61.4)	7.9 (1.8)
성별	남성	100.0	3.0	40.6	56.4	7.6
	여성	100.0	1.4	32.4	66.3	8.1
	x^2-test / t-test		8.791*			-3.3**
최종교육	대졸 미만	100.0	3.7	39.5	56.8	7.7
	대졸 이상	100.0	1.2	34.3	64.6	8.0
	x^2-test / t-test		8.169*			-2.2*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2.4	38.3	59.3	7.8
	참여	100.0	0.0	20.0	80.0	8.6
	x^2-test / t-test		12.725**			-3.9***
경제여건 인식	낮음	100.0	4.4	28.0	67.6	8.0
	중간	100.0	1.5	39.1	59.3	7.8
	높음	100.0	0.0	40.6	59.4	7.8
	x^2-test / F-test		11.984*			0.48

***p<.001, **p<.01, *p<.05

③ 사회혁신 비전 관련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사회혁신 비전 관련 정책의 중요도 인식은 앞에서 확인한 사회통합,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취업자의 중요도 인식이 가장 낮았고,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중요도 인식이 높은 것은 유사했으나, 성별 차이는 고용안전망 정책만 유의했다. 한편, 근로형태에 따른 중요도 차이도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첫째, 다양한 역량개발 활동 지원 정책의 경우, 재학생의 중요도 평균 점수는 7.4점으로, 취업자(7.0점), 미취업자(6.9점)보다 높았다(F-test=3.7, p<.05).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중 역량개발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3%로, 비참여자(42.6%)보다 높았으며, 평균 점수도 참여자(7.9점)가 비참여자(7.0점)보다 높았다(t-test=-3.5, p<.001).

표 Ⅳ-31 다양한 역량개발 활동 지원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40 (5.5)	367 (50.1)	326 (44.5)	7.1 (2.1)
현재 상태	재학	100.0	3.5	46.5	50.0	7.4
	미취업	100.0	6.4	52.8	40.8	6.9
	취업	100.0	6.3	50.9	42.8	7.0
	x^2-test / F-test		5.746			3.7*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6.1	51.4	42.6	7.0
	참여	100.0	0.0	38.7	61.3	7.9
	x^2-test / t-test		12.068**			-3.5***

***p<.001, **p<.01, *p<.05

둘째,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중요도는 취업형태가 비정규직인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자 285명을 대상으로 취업형태에 따라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한 결과,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일터 안전보장 정책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76.1%로, 정규직 임금근로자(55.8%), 비임금근로자(50.0%)보다 높았다. 중요도 평균 점수는 비정규직(8.3점), 비임금근로자(7.8점), 정규직 임금근로자(7.6점) 순으로 높았다(t-test=3.7, p<.05).

한편, 경제여건 인식은 중요도 분포에서만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제여건 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이 일터 안전보장 정책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8.1%로,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집단(66.5%), 중간인 집단(59.0%)보다 높았다 (x^2-test=13.338, p<.05).

표 Ⅳ-32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17 (2.3)	264 (36.0)	452 (61.7)	7.9 (1.9)
현재 상태	재학	100.0	0.9	30.9	68.3	8.2
	미취업	100.0	3.2	39.5	57.3	7.7
	취업	100.0	2.8	37.5	59.7	7.8
	x^2-test / F-test		8.189			4.1*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2.6	36.8	60.6	7.8
	참여	100.0	0.0	29.3	70.7	8.5
	x^2-test / t-test		4.072			-2.9**
경제여건 인식	낮음	100.0	4.4	29.1	66.5	8.0
	중간	100.0	1.7	39.3	59.0	7.8
	높음	100.0	0.0	21.9	78.1	8.3
	x^2-test / F-test		13.338*			1.8
취업형태[주]	정규	100.0	4.1	40.1	55.8	7.6
	비정규	100.0	1.5	22.4	76.1	8.3
	비임금	100.0	0.0	50.0	50.0	7.8
	x^2-test / F-test		13.173*			3.7*

***p<.001, **p<.01, *p<.05
주: 취업자 28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마지막으로, 고용안전망 정책의 중요도는 여성(7.7점)이 남성(7.4점)보다 높았다(t-test=-2.4, p<.05).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가 고용안전망 정책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8.0%로, 비참여자(52.3%)보다 높았으며, 평균 점수도 참여자(8.3점)가 비참여자(7.5점)보다 높았는데(t-test=-3.5, p<.001), 그 차이는 다른 정책의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보다는 낮았다.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집단이 고용안전망 정책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3.2%로 경제여건 인식이 높은 집단(59.4%), 중간집단(50.3%)보다 높았다(x^2-test=13.095, p<.05).

표 Ⅳ-33 고용안전망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29 (4.0)	309 (42.2)	395 (53.9)	7.5 (1.9)
성별	남성	100.0	5.3	43.7	51.1	7.4
	여성	100.0	2.7	40.7	56.6	7.7
	x^2-test / t-test		4.424			-2.4*
현재 상태	재학	100.0	2.6	38.3	59.1	7.8
	미취업	100.0	4.1	45.9	50.0	7.4
	취업	100.0	4.9	42.5	52.6	7.5
	x^2-test / F-test		5.146			4.0*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4.4	43.3	52.3	7.5
	참여	100.0	0.0	32.0	68.0	8.3
	x^2-test / t-test		8.437*			-3.5***
경제여건 인식	낮음	100.0	5.5	31.3	63.2	7.7
	중간	100.0	3.5	46.2	50.3	7.5
	높음	100.0	3.1	37.5	59.4	7.7
	x^2-test / F-test		13.095*			1.2

***p<.001, **p<.01, *p<.05

(3) 정책인지 여부 및 수혜경험에 따른 중요도 인식 차이

여기서는 정책인지와 수혜경험에 따라 각 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대부분 정책을 인지할 경우 중요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청년고용기업 인센티브, 일터 안전보장, 고용안전망 정책의 중요도는 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정책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많지 않았는데, 학자금 지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신용회복, 활동공간 및 서비스 정책이 수혜 여부에 따라 중요도 인식수준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34 정책인지 및 수혜경험에 따른 중요도 인식 차이

(단위: 점)

구 분	정책인지			수혜경험		
	알고 있음	모름	t-test	있음	없음	t-test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학자금 지원	8.40(1.75)	7.50(1.99)	**-3.958*** **	8.71(1.54)	8.01(1.91)	**-5.250*** **
구직 및 창업지원	7.95(1.88)	7.22(2.05)	**-3.858*** **	8.12(1.90)	7.86(1.86)	-1.623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7.89(1.98)	7.34(2.06)	-3.042	8.04(2.10)	7.86(1.95)	-0.840
기업 인센티브	7.16(2.25)	7.30(2.09)	0.846	-		
청년정책 거버넌스	7.81(2.10)	6.88(2.08)	**-5.047*** **	8.75(1.78)	7.29(2.08)	**-4.587*** **
주거지원	8.13(1.79)	7.50(2.08)	**-4.587*** **	8.28(2.09)	8.12(1.76)	-0.577
신용회복	7.76(1.97)	7.15(2.06)	**-4.152*** **	8.33(2.05)	7.66(1.94)	**-2.253***
활동공간 및 서비스	7.72(1.85)	6.69(2.07)	**-6.761*** **	8.40(1.61)	7.41(1.87)	**-4.282*** **
건강지원	8.30(1.65)	7.64(1.90)	**-4.591*** **	8.23(1.72)	8.32(1.64)	0.366
다양한 역량개발	7.59(1.75)	6.94(2.13)	**-3.353*** **	7.91(2.17)	7.53(1.67)	-0.972
일터 안전보장	8.04(1.83)	7.84(1.89)	-1.202	-		
고용안전망	7.74(1.84)	7.45(1.97)	-1.932	7.47(1.87)	7.77(1.84)	0.637

2) '나'의 현실 삶에 있어서의 현행 청년정책의 도움 정도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각 청년정책이 19세~34세 청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청년 본인의 현실 삶에 각 정책이 얼마나 도움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앞에서 확인한 중요도의 평균 점수가 8점 이상, 70%~80% 수준이었던 반면, 도움정도의 평균 점수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이보다 낮았고, 도움정도 수준이 높은 정책 순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1) 사회정책 비전 및 전략 분야별 도움 정도 인식

① 사회정책 비전별 청년정책의 도움 정도 차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별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통합 비전과 사회혁신 비전 정책은 중요도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에 대한 도움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회통합 비전과 관련된 청년정책이 청년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한 결과, 학자금 지원 정책(평균 6.63점, 중요함 44.1%),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6.42점, 38.6%), 구직 및 창업지원(6.45점, 36.8%),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6.10점, 31.1%), 청년정책 거버넌스(6.02점, 28.7%) 순으로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에서 확인한 사회통합 비전 관련 정책 중요도 순서와 유사한 결과이다.

표 Ⅳ-35 사회정책 비전에 따른 청년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 수	도움 안 됨 (1~3점)	보통 (4~7점)	도움 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사회 통합	학자금 지원	733	16.4	39.6	44.1	6.63(2.84)
	구직 및 창업 지원	733	14.1	49.1	36.8	6.45(2.49)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733	15.8	45.6	38.6	6.42(2.63)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733	17.2	51.7	31.1	6.10(2.58)
	청년정책 거버넌스	733	17.2	54.2	28.7	6.02(2.52)
사회적 지속 가능성	주거지원	733	15.1	45.6	39.3	6.50(2.63)
	신용회복	733	18.1	49.8	32.1	6.02(2.65)
	청년활동 공간 및 사회서비스	733	17.2	53.5	29.3	6.04(2.53)
	건강지원	733	9.6	46.2	44.2	6.89(2.35)
사회 혁신	다양한 역량개발	733	18.3	55.5	26.2	5.87(2.55)
	일터 안전보장	733	13.0	47.6	39.4	6.59(2.53)
	고용안전망 확충	733	14.6	50.3	35.1	6.39(2.49)

둘째,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과 관련된 청년정책의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 중요도에서는 주거지원 정책의 중요도 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도움 정도에서는 건강지원 정책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정책 중 청년들의 현실 삶에 있어서 도움 정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건강지원 정책(평균 6.89, 중요함 44.2%)이었으며, 주거지원 정책(평균 6.50점, 중요함 39.3%), 신용회복(6.02점, 32.1%), 청년활동 공간 및 사회서비스(6.04점, 29.3%)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사회혁신 비전과 관련된 정책의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일터 안전보장(평균 6.59점, 중요함 39.4%)이었으며, 고용안전망(6.39점, 35.1%), 다양한 역량개발(5.87점, 26.2%) 순으로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② 현재 상태별 청년정책의 도움 정도 차이

사회통합 비전 관련 청년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수준은 현재 상태에 따라 명확하게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 정책, 미취업자는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 취업자는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에 대한 도움 정도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앞의 중요도 분석에서 재학생과 취업자는 학자금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미취업자는 구직 및 창업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던 것과 다소 다른 결과다.

한편, 사회통합 비전과 달리 사회 지속가능성 비전 정책의 도움 정도는 상태에 따른 순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건강지원→주거지원→신용회복→청년 활동 공간 및 서비스). 중요도 분석에서 재학생과 취업자의 경우 건강지원 정책보다 주거지원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미취업자만 건강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

사회혁신 비전 관련 청년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순위는 모두 같았고, 이는 중요도의 순위와도 일치한다(일터 안전보장→고용안전망→다양한 역량개발).

표 Ⅳ-36 청년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 상태별 비교

(단위: 명, %, 점)

구 분	재학					미취업					취업				
	사례 수	도움 안됨	보통	도움	평균 (편차)	사례 수	도움 안됨	보통	도움	평균 (편차)	사례 수	도움 안됨	보통	도움	평균 (편차)
학자금 지원	230	16.5	32.6	50.9	7.03 (2.91)	218	18.4	45.4	36.2	6.24 (2.81)	285	14.7	40.7	44.6	6.62 (2.77)
구직 및 창업 지원	230	16.1	46.5	37.4	6.45 (2.59)	218	11.0	50.9	38.1	6.54 (2.35)	285	14.7	49.9	35.4	6.38 (2.52)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230	17.0	41.3	41.7	6.53 (2.81)	218	11.9	54.6	33.5	6.35 (2.42)	285	17.9	42.1	40.0	6.38 (2.63)
청년고용 기업인센티브	230	19.1	46.5	34.4	6.24 (2.76)	218	15.6	56.4	28.0	5.96 (2.45)	285	16.8	52.3	30.9	6.09 (2.52)

구 분	재학					미취업					취업				
	사례 수	도움 안됨	보통	도움	평균 (편차)	사례 수	도움 안됨	보통	도움	평균 (편차)	사례 수	도움 안됨	보통	도움	평균 (편차)
청년정책 거버넌스	230	15.6	48.7	35.7	6.42 (2.55)	218	18.3	60.1	21.6	5.59 (2.45)	285	17.5	54.1	28.4	6.04 (2.51)
주거지원	230	15.2	40.9	43.9	6.76 (2.67)	218	13.3	56.9	29.8	6.19 (2.45)	285	16.5	40.7	42.8	6.51 (2.71)
신용회복	230	17.0	44.7	38.3	6.33 (2.70)	218	20.2	56.4	23.4	5.60 (2.59)	285	17.5	48.8	33.7	6.08 (2.64)
공간 및 서비스	230	17.8	48.7	33.5	6.26 (2.64)	218	17.9	61.5	20.6	5.69 (2.37)	285	16.1	51.3	32.6	6.13 (2.54)
건강지원	230	9.6	43.0	47.4	7.06 (2.37)	218	7.8	49.5	42.7	6.87 (2.17)	285	10.9	46.3	42.8	6.78 (2.47)
다양한 역량 개발	230	17.0	51.7	31.3	6.13 (2.55)	218	19.7	60.1	20.2	5.58 (2.51)	285	18.2	55.1	26.7	5.88 (2.57)
일터 안전보장	230	10.4	45.7	43.9	6.88 (2.43)	218	12.8	51.9	35.3	6.41 (2.50)	285	15.1	46.0	39.0	6.50 (2.61)
고용안전망 확충	230	12.2	48.7	39.1	6.62 (2.45)	218	15.1	53.2	31.7	6.22 (2.46)	285	16.1	49.5	34.4	6.33 (2.54)

③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에 따른 청년정책 도움 정도 인식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라 각 정책에 관한 도움 정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 참여 청년과 비참여 청년이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가령, 사회통합 비전 관련 청년정책의 도움 정도는 중요도와 유사하게, 거버넌스 참여 청년이 학자금 지원보다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거버넌스 참여 청년 중 취업자 비중(53.3%)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청년정책의 도움 정도에 대해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청년은 청년 활동공간 및 서비스 정책의 도움 정도 가장 높다고 인식하였고, 사회혁신 비전 청년정책의 중요도는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차이가 없었다.

표 Ⅳ-37 사회통합 비전 관련 청년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참여					비참여				
	사례 수	도움 안됨	보통	도움	평균 (편차)	사례 수	도움 안됨	보통	도움	평균 (편차)	사례 수	도움 안됨	보통	도움	평균 (편차)
학자금 지원	733	16.4	39.6	44.1	6.63 (2.84)	75	16.0	36.0	48.0	6.77 (2.60)	658	16.4	40.0	43.6	6.62 (2.87)
구직 및 창업 지원	733	14.1	49.1	36.8	6.45 (2.49)	75	14.7	46.7	38.7	6.65 (2.50)	658	14.0	49.4	36.6	6.43 (2.49)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733	15.8	45.6	38.6	6.42 (2.63)	75	10.7	42.7	46.7	6.93 (2.63)	658	16.4	45.9	37.7	6.36 (2.52)
청년고용 기업인센티브	733	17.2	51.7	31.1	6.10 (2.58)	75	16.0	45.3	38.7	6.47 (2.52)	658	17.3	52.4	30.2	6.06 (2.58)
청년정책 거버넌스	733	17.2	54.2	28.7	6.02 (2.52)	75	6.7	29.3	64.0	7.77 (2.28)	658	18.4	57.0	24.6	5.83 (2.47)
주거지원	733	15.1	45.6	39.3	6.50 (2.63)	75	8.0	25.3	66.7	7.55 (2.46)	658	16.0	47.9	36.2	6.38 (2.62)
신용회복	733	18.1	49.8	32.1	6.02 (2.65)	75	12.0	40.0	48.0	6.92 (2.44)	658	18.8	50.9	30.2	5.91 (2.66)
공간 및 서비스	733	17.2	53.5	29.3	6.04 (2.53)	75	2.7	30.7	66.7	8.08 (1.84)	658	18.8	56.1	25.1	5.81 (2.50)
건강지원	733	9.6	46.2	44.2	6.89 (2.35)	75	4.0	33.3	62.7	7.75 (2.14)	658	10.2	47.7	42.1	6.80 (2.36)
다양한 역량 개발	733	18.3	55.5	26.2	5.87 (2.55)	75	6.7	46.7	46.7	7.07 (2.32)	658	19.6	56.5	23.9	5.73 (2.54)
일터 안전보장	733	13.0	47.6	39.4	6.59 (2.53)	75	10.7	33.3	56.0	7.28 (2.52)	658	13.2	49.2	37.5	6.52 (2.52)
고용안전망 확충	733	14.6	50.3	35.1	6.39 (2.49)	75	8.0	40.0	52.0	7.29 (2.25)	658	15.4	51.5	33.1	6.28 (2.50)

(2) 청년특성별 인지하는 도움 정도 차이

여기서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도움 정도 수준이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① 사회통합 비전 관련 정책의 도움 정도 차이

사회통합 비전 관련 정책의 도움 정도는 정책마다 공통적인 경향을 찾기 어려웠다. 청년들이 처한 상황과 요건에 따라 각자 다른 정책 욕구를 가지므로 정책이 상정하는 주요 대상에 따라 도움 정도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 학자금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차이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지원 정책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를 보였다. 25세~29세, 대학졸업 이상, 재학생일 때 학자금 지원 도움 정도 인식수준이 높았다. 전체 연령집단 중 25세~29세가 학자금 지원 정책이 도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48.3%, χ^2-test=12.528, p<.05). 대학졸업 이상 집단의 도움 정도 평균 점수(6.8점)가 대학졸업 미만 집단의 평균 점수(6.4점)보다 높았다(t-test=4.95, p<.05). 재학생의 도움 정도 평균 점수는 7.0점으로 취업자(6.6점), 미취업자(6.2점)보다 높았다(F-test=4.4, p<.05).

둘째,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는 성별 차이가 있었으나, 결과는 혼재되어 있었다.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이 도움 된다고 응답한 비율, 평균 점수는 여성이 더 높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은 17.4%로 여성(10.8%)보다 더 높았다.

표 Ⅳ-38 학자금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도움 안 됨 (1~3점)	보통 (4~7점)	도움 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100.0)	120 (16.37)	290 (39.56)	323 (44.07)	6.63 (2.84)
연령	19세~24세	100.0	17.7	36.3	46.0	6.72(3.01)
	25세~29세	100.0	17.8	34.0	48.3	6.70(2.95)
	30세~34세	100.0	13.7	48.4	37.9	6.49(2.56)
	x^2-test / t-test			**12.528***		0.47
최종교육	대졸 미만	100.0	21.3	36.9	41.9	6.36(3.05)
	대졸 이상	100.0	13.0	41.4	45.6	6.83(2.68)
	x^2-test / t-test			**8.960***		**4.95***
현재 상태	재학	100.0	16.5	32.6	50.9	7.03(2.91)
	미취업	100.0	18.4	45.4	36.2	6.24(2.81)
	취업	100.0	14.7	40.7	44.6	6.62(2.77)
	x^2-test / F-test			**11.242***		**4.39***

***p<.001, **p<.01, *p<.05

표 Ⅳ-39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도움 안 됨 (1~3점)	보통 (4~7점)	도움 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100.0)	103 (14.05)	360 (49.11)	270 (36.83)	6.45 (2.49)
성별	남성	100.0	17.4	47.5	35.1	6.26(2.67)
	여성	100.0	10.8	50.7	38.5	6.63(2.29)
	x^2-test / t-test			**6.686***		**-2.04***
연령	19세~24세	100.0	11.5	48.7	39.8	6.70(2.52)
	25세~29세	100.0	14.3	44.8	40.9	6.54(2.58)
	30세~34세	100.0	16.1	54.0	29.8	6.13(2.34)
	x^2-test / F-test			9.053		**3.37***

***p<.001, **p<.01, *p<.05

셋째,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는 19세~24세, 재학생과 취업자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세~24세 연령집단의 44.3%가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이 자신의 현실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점수도 19~24세(6.7점)가 가장 높았다(F-test=5.17, p<.01). 한편, 재학생의 41.7%, 취업자의 40.0%, 미취업자의 33.5%가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χ^2-test=10.819, p<.05).

표 Ⅳ-40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도움 안 됨 (1~3점)	보통 (4~7점)	도움 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100.0)	116 (15.83)	334 (45.57)	283 (38.61)	6.42 (2.63)
연령	19세~24세	100.0	12.8	42.9	44.3	6.65(2.67)
	25세~29세	100.0	14.3	44.0	41.7	6.63(2.62)
	30세~34세	100.0	20.2	49.6	30.2	5.98(2.54)
	x^2-test / F-test		12.981*			5.17**
현재 상태	재학	100.0	17.0	41.3	41.7	6.53(2.81)
	미취업	100.0	11.9	54.6	33.5	6.35(2.42)
	취업	100.0	17.9	42.1	40.0	6.38(2.63)
	x^2-test / F-test		10.819*			0.34

***p<.001, **p<.01, *p<.05

넷째,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정책의 도움 정도는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9세~24세 연령집단의 37.6%가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정책이 자신의 현실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25세~29세(32.1%), 29세~34세(24.2%) 순으로 도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평균 점수도 19세~24세(6.4점), 25세~29세(6.2점), 30세~34세(5.7점) 순으로 높았다(F-test=4.47, p<.05).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도움 정도는 남성, 재학생,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인 경우 높았다. 남성 중 29.0%, 여성 28.3%가 거버넌스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x^2-test=8.342, p<.05). 도움 정도 평균 점수는 재학생(6.4점), 취업자(6.0점), 미취업자(5.6점) 순으로 높았다(F-test=6.2, p<.01).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중 거버넌스 정책이 도움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4.0%로, 비참여자(24.6%)보다 35.4%p 높았으며, 평균 점수도 참여자(7.8점)가 비참여자(5.8점)보다 높았다(t-test=-6.5, p<.001).

표 Ⅳ-41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도움 안 됨 (1~3점)	보통 (4~7점)	도움 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100.0)	126 (17.19)	379 (51.71)	228 (31.11)	6.10(2.58)
연령	19세~24세	100.0	13.3	49.1	37.6	6.37(2.55)
	25세~29세	100.0	16.2	51.7	32.1	6.24(2.61)
	30세~34세	100.0	21.8	54.0	24.2	5.71(2.52)
	x^2-test / F-test		12.702*			4.47*

***p<.001, **p<.01, *p<.05

표 Ⅳ-42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도움 안 됨 (1~3점)	보통 (4~7점)	도움 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100.0)	126 (17.19)	397 (54.16)	210 (28.65)	6.03(2.52)
성별	남성	100.0	21.0	50.0	29.0	5.93(2.78)
	여성	100.0	13.5	58.2	28.3	6.12(2.24)
	x^2-test / t-test		8.342*			-1.02

구 분		전체	도움 안 됨 (1~3점)	보통 (4~7점)	도움 됨 (8~10점)	평균(편차) (1~10점)
현재 상태	재학	100.0	15.7	48.7	35.7	6.42(2.55)
	미취업	100.0	18.4	60.1	21.6	5.59(2.45)
	취업	100.0	17.5	54.0	28.4	6.04(2.51)
	x^2-test / F-test		**10.960***			**6.15****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18.4	57.0	24.6	5.83(2.47)
	참여	100.0	6.7	29.3	64.0	7.77(2.28)
	x^2-test / t-test		**51.334*****			**-6.52*****

***p<.001, **p<.01, *p<.05

②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정책의 도움 정도는 현재 상태(미취업), 청년정책 거버넌스 미참여자에게서 낮게 나타났으며, 주거지원은 혼인상태(기혼), 신용회복과 건강지원은 경제여건 인식이 높은 경우 도움 정도가 낮았다.

첫째, 주거지원 정책의 경우, 25세~29세 연령집단의 43.2%가 주거지원 정책이 자신의 현실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19세~24세(42.0%), 29세~34세(32.7%)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평균 점수도 25세~29세(6.8점), 19~24세(6.7점), 30세~34세(6.1점) 순으로 높았다(F-test=5.14, p<.01). 미혼인 경우(40.9%), 기혼(27.6%)보다 주거지원 정책이 도움 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점수도 미혼(6.6점)이 기혼(5.5점)보다 높았다(r-test=13.23, p<.001).

표 Ⅳ-43 주거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도움 안 됨 (1~3점)	보통 (4~7점)	도움 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100.0)	111 (15.14)	334 (45.57)	288 (39.29)	6.50(2.63)
연령	19세~24세	100.0	12.4	45.6	42.0	6.67(2.59)
	25세~29세	100.0	12.7	44.0	43.2	6.75(2.55)
	30세~34세	100.0	20.2	47.2	32.7	6.06(2.70)
	x^2-test / F-test		10.758*			5.14**
현재 상태	재학	100.0	15.2	40.9	43.9	6.76(2.67)
	미취업	100.0	13.3	56.9	29.8	6.19(2.45)
	취업	100.0	16.5	40.7	42.8	6.51(2.71)
	x^2-test / F-test		16.677**			2.63
혼인상태	미혼	100.0	13.5	45.7	40.9	6.62(2.59)
	기혼	100.0	27.6	44.8	27.6	5.54(2.77)
	x^2-test / t-test		13.547**			13.23***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16.0	47.9	36.2	6.38(2.62)
	참여	100.0	8.0	25.3	66.7	7.55(2.46)
	x^2-test / t-test		26.258***			-3.685***

***p<.001, **p<.01, *p<.05

둘째, 신용회복 정책의 도움 정도는 재학생,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경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집단 중 신용회복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로 경제여건 인식 높음(37.5%), 중간집단(29.7%)보다 높았으며(x^2-test=10.500, p<.05), 중요도 평균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Ⅳ-44 신용회복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도움 안 됨 (1~3점)	보통 (4~7점)	도움 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100.0)	133 (18.14)	365 (49.80)	235 (32.06)	6.02(2.65)
현재 상태	재학	100.0	17.0	44.8	38.3	6.33(2.70)
	미취업	100.0	20.2	56.4	23.4	5.60(2.59)
	취업	100.0	17.5	48.8	33.7	6.08(2.64)
	x^2-test / F-test		11.977*			4.40*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18.8	50.9	30.2	5.91(2.66)
	참여	100.0	12.0	40.0	48.0	6.92(2.44)
	x^2-test / t-test		9.970**			-3.137**
경제여건 인식	낮음	100.0	17.6	44.5	37.9	6.34(2.82)
	중간	100.0	17.5	52.8	29.7	5.93(2.56)
	높음	100.0	31.3	31.3	37.5	5.63(3.05)
	x^2-test / F-test		10.500*			1.96

***p<.001, **p<.01, *p<.05

셋째,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 삶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한 결과, 19세~24세, 재학생,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도움 정도가 높았다. 재학생의 33.5%, 취업자 32.6%, 미취업자 20.6%가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평균 점수도 재학생(6.3점), 취업자(6.1점), 미취업자(5.7점) 순으로 높았다(F-test=3.14, p<.05).

표 Ⅳ-45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의 중요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도움 안 됨 (1~3점)	보통 (4~7점)	도움 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100.0)	126 (17.19)	392 (53.48)	215 (29.33)	6.04(2.53)
연령	19세~24세	100.0	12.8	58.0	29.2	6.27(2.34)
	25세~29세	100.0	17.4	49.8	32.8	6.17(2.63)
	30세~34세	100.0	21.0	53.2	25.8	5.71(2.57)
	x^2-test / F-test		8.193			**3.44***
현재 상태	재학	100.0	17.8	48.7	33.5	6.26(2.64)
	미취업	100.0	17.9	61.5	20.6	5.69(2.37)
	취업	100.0	16.1	51.2	32.6	6.13(2.54)
	x^2-test / F-test		**12.173***			**3.14***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18.8	56.1	25.1	5.81(2.50)
	참여	100.0	2.7	30.7	66.7	8.08(1.84)
	x^2-test / t-test		**58.086*****			**-7.640*****

***p<.001, **p<.01, *p<.05

넷째, 건강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는 여성,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경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중 48.8%, 남성 39.5%가 건강지원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점수도 여성(7.1점)이 남성(6.6점)보다 높았다(t-test=8.16, p<.01). 한편,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경우 건강지원 정책이 도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집단의 46.7%, 중간인 집단의 44.1%, 높은 집단의 31.3%가 건강지원 정책이 도움 된다고 응답했다(x^2-test=10.40, p<.05).

표 Ⅳ-46 건강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도움 안 됨 (1~3점)	보통 (4~7점)	도움 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100.0)	70 (9.55)	339 (46.25)	324 (44.20)	6.89 (2.35)
성별	남성	100.0	11.3	49.2	39.5	6.64(2.50)
	여성	100.0	7.8	43.4	48.8	7.14(2.17)
	x^2-test / t-test		7.257*			8.16**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10.2	47.7	42.1	6.80(2.36)
	참여	100.0	4.0	33.3	62.7	7.75(2.14)
	x^2-test / t-test		12.152**			11.15***
경제여건 인식	낮음	100.0	13.7	39.6	46.7	6.81(2.69)
	중간	100.0	7.7	48.2	44.1	6.95(2.20)
	높음	100.0	15.6	53.1	31.3	6.44(2.65)
	x^2-test / F-test		10.397*			0.86

***p<.001, **p<.01, *p<.05

③ 사회혁신 비전 관련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사회혁신 비전 관련 정책의 도움 정도는 앞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중 역량 개발 정책이 도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6.7%로, 비참여자(23.9%)보다 22.8%p 높았으며, 평균 점수도 참여자(7.1점)가 비참여자(5.7점)보다 높았다(t-test=6.50, p<.001). 일터 안전보장 정책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연령이 어린 경우, 도움 정도 인식수준이 높았다(19세~24세(6.8점), 25세~29세(6.7점), 30세~34세(6.3점), (F-test=3.32, p<.05).

표 Ⅳ-47 다양한 역량개발 활동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도움 안 됨 (1~3점)	보통 (4~7점)	도움 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100.0)	134 (18.28)	407 (55.53)	192 (26.19)	5.87(2.55)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19.6	56.5	23.9	5.73(2.54)
	참여	100.0	6.7	46.7	46.7	7.07(2.32)
	x^2-test / t-test		20.715***			6.502***

***p<.001, **p<.01, *p<.05

표 Ⅳ-48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도움 안 됨 (1~3점)	보통 (4~7점)	도움 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100.0)	95 (12.96)	349 (47.61)	289 (39.43)	6.59(2.53)
연령	19세~24세	100.0	11.1	46.5	42.5	6.81(2.41)
	25세~29세	100.0	11.6	48.3	40.2	6.72(2.48)
	30세~34세	100.0	16.1	48.0	35.9	6.26(2.65)
	x^2-test / F-test		4.379			3.32*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13.2	49.2	37.5	6.52(2.52)
	참여	100.0	10.7	33.3	56.0	7.28(2.52)
	x^2-test / t-test		9.737**			6.22*

***p<.001, **p<.01, *p<.05

고용안전망 정책의 도움 정도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경제여건 인식이 높은 집단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경제여건 인식이 높은 집단의 43.8%, 낮은 집단의 41.2%, 중간인 집단의 32.4%가 고용안전망 정책이 도움 된다고 응답했다(x^2-test=10.48, p<.05).

표 Ⅳ-49 고용안전망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도움 안 됨 (1~3점)	보통 (4~7점)	도움 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100.0)	107 (14.60)	369 (50.34)	257 (35.06)	6.39(2.49)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15.4	51.5	33.1	6.28(2.50)
	참여	100.0	8.0	40.0	52.0	7.29(2.25)
	x^2-test / t-test		11.103**			11.20***
경제여건 인식	낮음	100.0	17.0	41.8	41.2	6.50(2.72)
	중간	100.0	13.5	54.1	32.4	6.35(2.39)
	높음	100.0	18.8	37.5	43.8	6.28(2.79)
	x^2-test / F-test		10.480*			0.26

***p<.001, **p<.01, *p<.05

(2) 정책인지 및 수혜 여부에 따른 도움 정도 인식 차이

정책인지와 수혜경험에 따라 각 정책의 도움 정도가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학자금 지원, 구직 및 창업지원, 청년 정책 거버넌스, 신용회복, 활동공간 및 서비스, 건강지원, 다양한 역량개발은 중요도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정책을 인지하는 경우 도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수혜경험에 따른 도움 정도 인식 차이는 중요도(표 Ⅳ-34)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주거지원, 구직 및 창업지원,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고용안전망은 중요도에서는 수혜경험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도움 정도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의 삶에 대한 도움 정도가 중요도 보다 정책 수혜에 더 민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Ⅳ-50 정책인지 및 수혜경험에 따른 도움 정도 인식 차이

(단위: 점)

구분	정책인지			수혜경험		
	알고 있음	모름	t-test	있음	없음	t-test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학자금 지원	6.74(2.83)	5.58(2.74)	**-3.192****	7.86(2.29)	5.30(2.81)	**-12.955*****
구직 및 창업지원	6.57(2.46)	5.84(2.55)	**-2.946****	7.16(2.12)	6.23(2.58)	**-4.561*****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6.49(2.62)	6.16(2.64)	-1.357	7.17(2.30)	6.35(2.66)	**-2.805****
기업 인센티브	6.07(2.57)	6.13(2.59)	0.281	-		
청년정책 거버넌스	6.83(2.55)	5.78(2.46)	**-4.807*****	7.78(2.48)	6.40(2.36)	**-3.730*****
주거지원	6.58(2.63)	6.21(2.61)	-1.638	7.84(2.10)	6.48(2.65)	**-3.278****
신용회복	6.34(2.67)	5.73(2.61)	**-3.143****	8.21(2.15)	6.01(2.62)	**-5.734*****
활동공간 및 서비스	6.76(2.38)	5.60(2.53)	**-6.139*****	8.02(1.87)	6.18(2.36)	**-6.402*****
건강지원	7.42(2.15)	6.63(2.40)	**-4.385*****	7.75(1.92)	7.31(2.22)	-1.390
다양한 역량개발	6.52(2.41)	5.71(2.56)	**-3.452*****	7.17(2.59)	6.40(2.36)	-1.419
일터 안전보장	6.93(2.57)	6.50(2.51)	-1.927	-		
고용안전망	6.78(2.35)	6.20(2.54)	**-2.969****	7.06(2.25)	6.76(2.36)	-0.503

***p<.001, **p<.01, *p<.05

3) 현행 청년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인식수준의 영향 요인

지금까지 대상자 특성별로 청년들이 인식하는 청년정책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각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보다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본적인 특성변수(①성별, ②연령, ③최종 교육, ④거버넌스 참여 여부, ⑤거주 지역, ⑥경제여건 인식수준)와 정책 인지 여부, 그리고 수혜경험을 독립변수로, 중요도와 도움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서열로짓모형을 분석하였다.

한편, 중요도와 도움 정도는 1점~10점으로 측정하였는데, 종속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여, 모든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의 응답 분포가 우측으로 편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적합한 분석모형을 상정하기 위해 각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의 중위값을 '보통'으로, 중위값보다 낮으면 '낮음', 중위값보다 높으면 '높음'으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1점~10점인 중요도와 도움 정도의 변수값을 ①중요도·도움 정도 낮음(중위값 미만), ②중요도·도움 정도 보통(중위값), ③중요도·도움 정도 높음(중위값 초과)으로 변경·설정하였다.

(1) 사회통합 비전 청년정책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① 학자금 지원 정책

학자금 지원 정책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여성 +), 연령(-), 현재 상태(재학생+)이었으며,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혜경험(+)으로 분석되었다.

하위 집단을 ①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대학 재학, ③대학졸업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에 따라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중요도는 연령(-)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도움 정도는 연령(-)과 경제여건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집단이 포함되어 경제여건 인식이 높은 경우 학자금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학 재학생의 경우 중요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고, 도움 정도의 경우, 경제여건 인식(-), 수혜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혜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경제여건 인식이 높을수록 학자금 지원 정책이 현실 삶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낮았는데, 학자금 지원 정책이 소득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도움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학 졸업생의 경우,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여성 +), 경제여건 인식(-), 수혜경험(+)이었고,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취업자(-), 수혜경험(+)이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경제여건이 낮은 경우,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 학자금 지원 정책의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고, 미취업자보다는 재학생이,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Ⅳ-51 학자금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변수		전체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재학		대학 졸업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40 (0.15)****	-0.21 (0.15)	-0.59 (0.40)	-0.45 (0.39)	0.07 (0.26)	-0.31 (0.29)	**-0.79 (0.22)*****	-0.16 (0.22)
연령		**-0.05 (0.02)***	-0.02 (0.02)	**-0.12 (0.05)***	**-0.09 (0.05)***	-0.04 (0.03)	0.00 (0.04)	-0.03 (0.03)	-0.03 (0.03)
최종교육 (대졸 이상)		0.21 (0.20)	0.06 (0.20)						
상태 (재학)	미취업	**-0.75 (0.22)*****	-0.39 (0.23)	-0.03 (0.38)	-0.09 (0.37)			-0.32 (0.22)	**-0.55 (0.22)***
	취업	**-0.51 (0.20)***	0.06 (0.21)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06 (0.25)	0.08 (0.26)	-0.94 (0.90)	0.09 (0.78)	-0.11 (0.40)	-0.23 (0.42)	0.35 (0.36)	0.30 (0.39)
거주지역(서울)		0.08 (0.17)	0.20 (0.18)	0.13 (0.46)	0.20 (0.47)	-0.11 (0.37)	0.12 (0.41)	0.27 (0.24)	0.49 (0.25)
경제여건 인식		**-0.16 (0.04)*****	-0.05 (0.04)	-0.21 (0.11)	**0.22 (0.10)***	-0.09 (0.07)	**-0.18 (0.08)***	**-0.21 (0.07)****	-0.06 (0.07)
정책인지(인지함)		0.48 (0.30)	-0.18 (0.28)	0.24 (0.44)	-0.29 (0.43)	1.04 (0.86)	0.38 (0.85)	0.67 (0.54)	-0.30 (0.45)
수혜경험(경험함)		**0.52 (0.16)****	**1.70 (0.17)*****	0.45 (0.61)	0.56 (0.58)	0.49 (0.28)	**1.88 (0.30)*****	**0.58 (0.23)****	**1.70 (0.23)*****

변수		전체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재학		대학 졸업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학교 지역(서울)						0.01 (0.36)	-0.53 (0.40)		
학교 유형 (2년제)	4년제					0.58 (0.55)	0.43 (0.57)		
	대학원					0.60 (0.61)	0.23 (0.64)		
Constant Cut1		-1.86 (0.68)**	-0.62 (0.69)	-3.41 (1.57)*	-1.46 (1.45)	-0.06 (1.37)	0.12 (1.47)	-1.23 (1.13)	-1.00 (1.11)
Constant Cut1		-1.26 (0.68)	0.01 (0.69)	-2.91 (1.57)	-0.87 (1.45)	0.47 (1.37)	0.70 (1.47)	-0.53 (1.13)	-0.29 (1.11)
N		733	733	131	131	230	230	372	372
LR chi^2		66.08***	144.51***	11.91	11.87	11.42	64.12***	38.71***	76.08***
Pseudo R^2		0.05	0.1	0.05	0.05	0.03	0.15	0.05	0.1
Log likelihood		-689	-652.59	-108.15	-114.93	-220.34	-187.05	-351.96	-335.84

***p<.001, **p<.01, *p<.05

각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승산비(Odds ratio)를 비교한 결과, 전체 집단, 대학 재학생, 대학 졸업생의 경우 수혜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요인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수혜경험이 있는 집단은 수혜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학자금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1.68배 높았고, 도움 정도는 5.46배 높았다. 이는 대학 졸업생의 중요도(1.8배)와 도움 정도(5.5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수혜경험이 도움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 재학생이 대학 졸업생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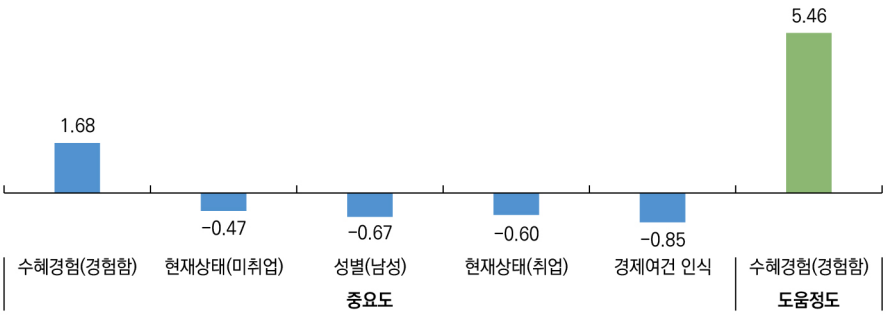


그림 Ⅳ-33 학자금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②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여성+), 연령(-), 현재상태(재학생 기준 취업자-), 정책인지(+), 수혜경험(+)이었으며, 도움 정도에는 연령(-)과 수혜경험(+)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자의 경우, 연령이 낮거나, 거버넌스 참여자인 경우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도움 정도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 서울 거주(+), 근속기간(-), 수혜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분석에 이어 현재 상태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 미취업자는 대부분 요인이 유의도를 상실하였고, 미취업기간(-)만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학생의 경우, 중요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으며, 학교 위치가 서울이 아닌 경우, 학교유형이 4년제보다는 2년제인 경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2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변수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재학생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32 (0.14)***	-0.09 (0.14)	-0.44 (0.24)	-0.37 (0.24)	-0.41 (0.27)	0.11 (0.27)	-0.28 (0.26)	-0.19 (0.26)
연령		**-0.04 (0.02)***	**-0.07 (0.02)*****	**-0.08 (0.03)***	-0.06 (0.04)	0.00 (0.04)	-0.03 (0.04)	-0.03 (0.03)	-0.04 (0.04)
최종교육 (대졸 이상)		0.25 (0.18)	0.30 (0.18)	0.06 (0.30)	**0.63 (0.31)***	-0.11 (0.36)	0.04 (0.37)		
상태 (재학 기준)	미취업	-0.35 (0.20)	-0.16 (0.21)						
	취업	**-0.41 (0.19)***	-0.14 (0.19)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22 (0.24)	0.23 (0.24)	**0.89 (0.37)***	0.03 (0.36)	-0.28 (0.82)	-0.37 (0.95)	-0.31 (0.37)	0.63 (0.39)
거주지역(서울)		0.10 (0.16)	0.17 (0.16)	0.38 (0.29)	**0.64 (0.29)***	0.50 (0.31)	0.23 (0.30)	-0.04 (0.37)	0.44 (0.39)
경제여건 인식		-0.06 (0.04)	-0.00 (0.04)	-0.04 (0.08)	0.08 (0.08)	-0.02 (0.08)	-0.03 (0.08)	-0.10 (0.07)	-0.05 (0.07)
정책인지(인지함)		**0.58 (0.20)****	0.32 (0.21)	0.52 (0.34)	-0.07 (0.33)	0.73 (0.38)	0.74 (0.40)	0.72 (0.37)	0.35 (0.39)
수혜경험(경험함)		**0.34 (0.16)***	**0.67 (0.16)*****	0.49 (0.27)	**0.68 (0.27)***	0.23 (0.29)	0.47 (0.29)	0.22 (0.31)	**0.81 (0.31)****
근로형태(비정규)				0.38 (0.29)	-0.08 (0.29)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	10인 미만			-0.51 (0.32)	-0.33 (0.33)				
	10-100인			-0.53 (0.31)	0.07 (0.31)				
근속기간				-0.00 (0.00)	**-0.02 (0.01)****				
로그월근로소득				0.24 (0.15)	-0.01 (0.14)				
미취업기간						**-0.01 (0.01)***	-0.00 (0.01)		
구직 여부(구직)						-0.23 (0.28)	-0.07 (0.28)		

변수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재학생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학교 지역(서울)								-0.48 (0.37)	**-0.93 (0.38)***
학교 유형 (2년제)	4년제							0.34 (0.50)	**-1.14 (0.58)***
	대학원							0.59 (0.57)	-1.15 (0.64)
Constant Cut1		-1.56 (0.58)**	-1.41 (0.60)*	-1.25 (1.14)	-1.38 (1.12)	-0.39 (1.11)	-0.36 (1.12)	-1.21 (1.10)	-2.20 (1.20)
Constant Cut1		-0.65 (0.58)	-0.66 (0.59)	-0.34 (1.14)	-0.55 (1.12)	0.51 (1.11)	0.33 (1.12)	-0.21 (1.10)	-1.40 (1.19)
N		733	733	285	285	218	218	230	230
LR chi^2		38.74***	41.73***	31.01**	39.61***	17.28	12.7	13.95	28.64**
Pseudo R^2		0.02	0.03	0.05	0.07	0.04	0.03	0.03	0.06
Log likelihood		-760.03	-733.51	-285.19	-274.09	-222.25	-215.75	-238.62	-223.73

***p<.001, **p<.01, *p<.05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정책인지와 수혜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정책인지(1.78배)와 수혜경험(1.41배)이다. 수혜경험이 도움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혜경험이 없는 이들의 1.95배로 큰 영향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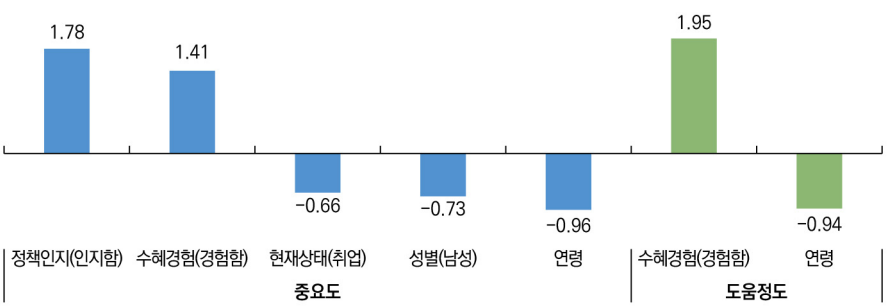


그림 Ⅳ-34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에 포함되는 세부 정책의 인지여부와 수혜경험이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고용센터 구직수당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고용센터 구직수당을 인지하는 경우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의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고, 구직수당을 수혜한 경험이 있으면 도움 정도가 높았다.

표 Ⅳ-53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 유형별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변수		대학일자리센터		창업사관학교		고용센터 구직수당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38(0.14)****	-0.16(0.14)	**-0.39(0.14)****	-0.16(0.14)	**-0.33(0.14)***	-0.08(0.15)
연령		**-0.05(0.02)***	**-0.07(0.02)*****	**-0.05(0.02)****	**-0.07(0.02)*****	**-0.05(0.02)****	**-0.08(0.02)*****
최종교육(대졸 이상)		0.27(0.18)	0.34(0.18)	**0.35(0.17)***	**0.40(0.18)***	0.30(0.17)	0.35(0.18)
상태 (재학 기준)	미취업	-0.16(0.22)	0.02(0.22)	-0.23(0.21)	-0.04(0.22)	-0.29(0.22)	-0.20(0.22)
	취업	**-0.45(0.19)***	-0.17(0.20)	**-0.53(0.19)****	-0.23(0.19)	**-0.54(0.19)****	-0.27(0.19)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21(0.24)	0.22(0.24)	0.22(0.24)	0.21(0.24)	0.20(0.24)	0.17(0.24)
거주지역(서울)		0.06(0.16)	0.12(0.16)	0.05(0.16)	0.11(0.16)	0.09(0.16)	0.17(0.16)
경제여건 인식		**-0.09(0.04)***	-0.03(0.04)	-0.08(0.04)	-0.03(0.04)	-0.07(0.04)	-0.01(0.04)
로그 월근로소득		**0.11(0.06)***	0.08(0.05)	**0.12(0.06)***	0.09(0.05)	**0.12(0.06)***	0.07(0.06)
해당 정책 인지		0.26(0.16)	0.17(0.16)	0.07(0.16)	-0.03(0.16)	**0.48(0.17)****	0.32(0.17)
해당 정책 수혜		0.11(0.23)	0.19(0.23)	-0.09(0.54)	0.38(0.54)	0.27(0.18)	**0.78(0.18)*****
Constant Cut1		-1.67(0.58)**	-1.48(0.59)*	-1.86(0.58)**	-1.66(0.58)**	-1.56(0.59)**	-1.48(0.60)*
Constant Cut1		-0.77(0.58)	-0.75(0.59)	-0.97(0.57)	-0.94(0.58)	-0.66(0.58)	-0.73(0.60)
N		733	733	733	733	733	733
LR chi^2		29.69	21.4	26.15	19.35	40	49.02
Pseudo R^2		0.02	0.01	0.02	0.01	0.03	0.03
Log likelihood		-764.56	-743.67	-766.32	-744.7	-759.4	-729.86

***p<.001, **p<.01, *p<.05

③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여성 +), 연령(-), 현재 상태(미취업자, 취업자 -), 거버넌스 참여(+), 경제여건 인식(-), 정책인지(+)였으며,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로그월가구소득(+), 수혜경험(+)이었다.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정책 대상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거버넌스 참여자, 경제여건 인식이 낮을수록 중요도 수준이 높았다. 인지 여부와 수혜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의 인지도와 수혜율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움 정도에서는 최종교육(대졸 이상+)과 근속기간(-)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대졸 이상인 취업자가 미만인 경우보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미취업자의 경우 중요도에는 정책인지(+)와 미취업기간(-)이, 도움 정도에는 정책인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의 경우, 경제여건 인식이 낮을수록 중요도 수준이 높았고,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학교가 서울이 아닌 경우, 2년제 대학 재학생이 대학원 재학생보다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Ⅳ-54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변수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재학생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29 (0.14)***	0.02 (0.14)	**-0.50 (0.24)***	-0.06 (0.25)	-0.05 (0.27)	0.16 (0.28)	-0.34 (0.26)	-0.18 (0.27)
연령		**-0.06 (0.02)****	**-0.06 (0.02)****	**-0.08 (0.04)***	-0.05 (0.04)	-0.01 (0.04)	-0.03 (0.04)	-0.05 (0.04)	-0.03 (0.04)
최종교육 (대졸 이상)		0.19 (0.18)	0.11 (0.18)	0.23 (0.30)	**0.70 (0.31)***	-0.21 (0.35)	-0.26 (0.36)		
상태 (재학 기준)	미취업	**-0.50 (0.21)***	-0.20 (0.22)						
	취업	**-0.38 (0.19)***	-0.22 (0.19)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63 (0.24)****	0.27 (0.24)	**0.95 (0.36)****	0.23 (0.37)	0.81 (0.84)	0.02 (0.95)	0.36 (0.38)	0.20 (0.39)
거주지역(서울)		0.14 (0.16)	-0.10 (0.16)	0.44 (0.29)	0.44 (0.30)	0.54 (0.30)	-0.10 (0.31)	-0.08 (0.36)	0.44 (0.41)
경제여건 인식		**-0.15 (0.04)*****	-0.05 (0.04)	**-0.19 (0.08)***	0.02 (0.08)	-0.08 (0.08)	-0.08 (0.08)	**-0.19 (0.07)****	-0.07 (0.08)
로그월가구소득		0.06 (0.05)	**0.11 (0.06)***	-0.12 (0.26)	-0.05 (0.25)	0.01 (0.07)	0.14 (0.07)	0.13 (0.11)	0.13 (0.11)
정책인지(인지함)		**0.47 (0.18)****	0.16 (0.18)	0.22 (0.32)	-0.49 (0.33)	**0.77 (0.34)***	**0.74 (0.36)***	0.44 (0.31)	0.06 (0.33)
수혜경험(경험함)		0.17 (0.22)	**0.44 (0.21)***	0.47 (0.32)	0.63 (0.32)	0.07 (0.42)	0.09 (0.42)	-0.19 (0.43)	**0.99 (0.45)***
근로형태(비정규)				-0.07 (0.29)	-0.23 (0.29)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	10인 미만			-0.29 (0.32)	0.12 (0.33)				
	10-100인			0.02 (0.30)	0.33 (0.32)				

변수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재학생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근속기간				-0.00 (0.00)	**-0.02 (0.01)****				
로그월근로소득				0.28 (0.21)	0.11 (0.20)				
미취업기간						**-0.01 (0.01)***	-0.01 (0.01)		
구직 여부(구직)						-0.43 (0.28)	0.16 (0.28)		
학교 지역(서울)								-0.42 (0.36)	**-1.23 (0.40)****
학교 유형 (2년제)	4년제							-0.12 (0.53)	-0.76 (0.59)
	대학원							0.21 (0.60)	**-1.34 (0.65)***
Constant Cut1		-2.24 (0.60)***	-1.43 (0.60)*	-2.54 (1.38)	-1.16 (1.31)	-0.79 (1.09)	-0.30 (1.11)	-2.59 (1.08)*	-2.08 (1.16)
Constant Cut1		-1.26 (0.60)*	-0.81 (0.60)	-1.58 (1.38)	-0.57 (1.31)	0.23 (1.09)	0.41 (1.11)	-1.56 (1.07)	-1.39 (1.15)
N		733	733	285	285	218	218	230	230
LR chi^2		49.55***	26.61**	30.58**	29.57**	19.10	14.40	16.91	29.76**
Pseudo R^2		0.03	0.02	0.05	0.05	0.04	0.03	0.03	0.06
Log likelihood		-760.37	-723.57	-288.56	-267.6	-222.27	-211.93	-237.24	-218.35

***p<.001, **p<.01, *p<.05

각 변수의 영향력을 승산비(Odds ratio)를 이용해 비교한 결과,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재학생 모두 정책인지와 수혜경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정책을 인지하는 경우 인지하지 않는 경우보다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이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1.61배 높았으며, 청년정

책 거버넌스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1.87배 높았다. 도움 정도에서도 수혜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1.55배 높았다.

별도 그림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취업자의 경우, 인지여부와 수혜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중요도에서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2.58배)가, 도움 정도에서는 대졸 이상 집단(2.01배)의 영향력이 컸다. 미취업자의 경우 정책을 인지할 경우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은 2.17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은 2.10배 높았다. 재학생의 경우 정책 수혜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2.70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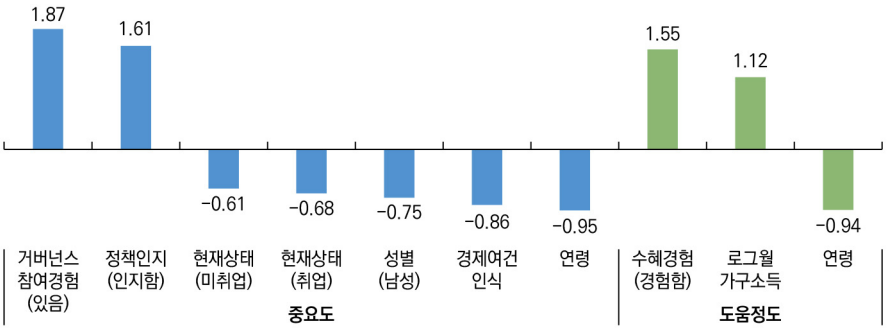


그림 Ⅳ-35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에 포함되는 세부 정책의 인지여부와 수혜경험이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내일채움공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정책을 인지하는 집단이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고, 모든 정책에서 경제여건 인식이 낮을수록 중요도가 높았다.

표 Ⅳ-55 내일채움공제, 근로장려세제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변수		내일채움공제				근로장려세제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30 (0.14)***	0.02 (0.14)	-0.46 (0.24)	-0.03 (0.25)	**-0.37 (0.14)****	-0.01 (0.15)	**-0.52 (0.24)***	0.05 (0.25)
연령		**-0.06 (0.02)****	**-0.06 (0.02)****	**-0.09 (0.04)***	-0.05 (0.03)	**-0.05 (0.02)****	**-0.06 (0.02)****	**-0.08 (0.04)***	-0.04 (0.04)
최종교육 (대졸 이상)		0.01 (0.16)	0.05 (0.16)	0.13 (0.30)	**0.63 (0.31)***	0.08 (0.16)	0.06 (0.16)	0.26 (0.30)	**0.71 (0.31)***
현재 상태(취업)		-0.21 (0.16)	-0.13 (0.16)			-0.30 (0.18)	-0.10 (0.18)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68 (0.24)****	0.32 (0.24)	**0.93 (0.36)***	0.23 (0.36)	**0.71 (0.24)****	0.30 (0.24)	**0.98 (0.37)****	0.28 (0.37)
거주지역(서울)		0.16 (0.16)	-0.09 (0.16)	0.40 (0.29)	0.36 (0.29)	0.14 (0.16)	-0.10 (0.16)	0.46 (0.29)	0.40 (0.30)
경제여건 인식		**-0.13 (0.04)****	-0.05 (0.04)	**-0.20 (0.08)***	0.02 (0.08)	**-0.13 (0.04)****	-0.05 (0.04)	**-0.21 (0.08)****	0.02 (0.08)
로그월가구소득		**0.12 (0.05)***	**0.14 (0.05)****	-0.10 (0.26)	-0.04 (0.25)	0.09 (0.05)	**0.13 (0.06)***	-0.13 (0.27)	-0.13 (0.26)
생활비조달방법 (내가 벌어서)						0.31 (0.18)	0.02 (0.18)	-0.49 (0.42)	**-0.88 (0.42)***
혼인상태(기혼)						-0.14 (0.24)	-0.16 (0.24)	-0.38 (0.35)	-0.37 (0.36)
해당 정책	인지	**0.58 (0.15)*****	0.15 (0.16)	**0.68 (0.28)***	-0.10 (0.28)	**0.36 (0.15)***	0.03 (0.16)	**0.57 (0.25)***	-0.02 (0.26)
	수혜	-0.17 (0.29)	0.35 (0.28)	-0.24 (0.44)	0.32 (0.43)	-0.10 (0.33)	0.59 (0.33)	0.49 (0.58)	0.80 (0.56)
근로형태(비정규)				-0.05 (0.29)	-0.16 (0.29)		-0.15 (0.29)	-0.24 (0.29)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	10인 미만			-0.22 (0.32)	0.19 (0.33)		-0.28 (0.32)	0.18 (0.33)	
	10-100인			0.07 (0.30)	0.40 (0.32)		0.09 (0.31)	0.46 (0.32)	

변수	내일채움공제				근로장려세제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근속기간			0.00 (0.00)	**-0.02 (0.01)****		-0.00 (0.00)	**-0.02 (0.01)****	
로그월근로소득			0.30 (0.21)	0.11 (0.20)		0.38 (0.22)	0.24 (0.22)	
Constant Cut1	-1.84 (0.56)**	-1.33 (0.56)*	-2.35 (1.35)	-0.78 (1.28)	-2.03 (0.58)***	-1.30 (0.59)*	-2.69 (1.43)	-1.04 (1.38)
Constant Cut1	-0.86 (0.56)	-0.71 (0.56)	-1.38 (1.35)	-0.20 (1.28)	-1.06 (0.58)	-0.68 (0.59)	-1.70 (1.43)	-0.45 (1.38)
N	733	733	285	285	733	733	285	285
LR chi^2	49.53***	22.87*	33.82**	25.16*	44.88***	24.2*	37.09**	31.61*
Pseudo R^2	0.03	0.02	0.06	0.04	0.03	0.02	0.06	0.06
Log likelihood	-760.38	-725.44	-286.94	-269.81	-762.71	-724.77	-285.3	-266.58

***p<.001, **p<.01, *p<.05

표 Ⅳ-56 청년동행카드 및 청년 희망키움통장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변수	청년 동행카드				청년 희망키움통장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34 (0.14)***	0.01 (0.14)	**-0.56 (0.24)***	-0.01 (0.24)	**-0.35 (0.14)***	-0.00 (0.14)	**-0.54 (0.24)***	0.01 (0.25)
연령	**-0.05 (0.02)****	**-0.06 (0.02)****	**-0.09 (0.03)***	-0.05 (0.03)	**-0.05 (0.02)****	**-0.06 (0.02)****	**-0.09 (0.04)****	-0.06 (0.04)
최종교육(대졸 이상)	0.07 (0.16)	0.07 (0.16)	0.23 (0.30)	**0.62 (0.30)***	0.07 (0.16)	0.08 (0.16)	0.22 (0.30)	**0.70 (0.31)***
현재 상태(취업)	-0.15 (0.16)	-0.11 (0.16)			-0.32 (0.18)	-0.12 (0.18)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75 (0.24)****	0.37 (0.24)	**0.97 (0.37)****	0.25 (0.36)	**0.72 (0.24)****	0.32 (0.24)	**1.03 (0.37)****	0.32 (0.37)

변수		청년 동행카드				청년 희망키움통장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거주지역(서울)		0.18 (0.16)	−0.09 (0.16)	0.43 (0.29)	0.33 (0.29)	0.14 (0.16)	−0.09 (0.16)	0.42 (0.28)	0.37 (0.30)
경제여건 인식		**−0.15 (0.04)*** **	−0.06 (0.04)	**−0.21 (0.08)** **	0.02 (0.08)	**−0.14 (0.04)** **	−0.05 (0.04)	**−0.20 (0.08)** **	0.01 (0.08)
로그월가구소득		**0.12 (0.05)***	**0.15 (0.05)** **	−0.10 (0.26)	0.00 (0.25)	0.08 (0.05)	**0.13 (0.06)***	−0.11 (0.27)	−0.13 (0.26)
생활비조달방법 (내가 벌어서)						**0.37 (0.18)***	0.05 (0.18)	−0.25 (0.40)	−0.77 (0.41)
해당 정책	인지	0.12 (0.17)	−0.10 (0.17)	0.43 (0.27)	−0.26 (0.28)	0.18 (0.15)	−0.03 (0.15)	0.02 (0.25)	−0.18 (0.26)
	수혜	−0.40 (0.45)	−0.34 (0.45)	−0.26 (0.63)	−0.38 (0.64)	−0.73 (0.51)	0.59 (0.51)	0.29 (0.97)	1.00 (0.95)
근로형태(비정규)				−0.12 (0.29)	−0.19 (0.29)		−0.11 (0.29)	−0.19 (0.29)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	10인 미만			−0.26 (0.31)	0.19 (0.32)		−0.28 (0.32)	0.20 (0.33)	
	10-100인			0.06 (0.30)	0.42 (0.32)		0.04 (0.30)	0.41 (0.32)	
근속기간				−0.00 (0.00)	**−0.02 (0.01)** **		−0.00 (0.00)	**−0.02 (0.01)** **	
로그월근로소득				0.33 (0.21)	0.06 (0.20)		0.32 (0.22)	0.25 (0.22)	
Constant Cut1		−2.11 (0.55)***	−1.41 (0.56)*	−2.71 (1.33)*	−0.88 (1.26)	−2.06 (0.56)***	−1.45 (0.56)**	−3.12 (1.41)*	−1.45 (1.34)
Constant Cut1		−1.15 (0.55)*	−0.80 (0.55)	−1.75 (1.33)	−0.29 (1.26)	−1.09 (0.55)*	−0.84 (0.56)	−2.16 (1.40)	−0.86 (1.34)
N		733	733	285	285	733	733	285	285
LR chi^2		36.04***	21.15*	30.13**	26.39*	42.09***	21.46*	27.98*	29.94*
Pseudo R^2		0.02	0.01	0.05	0.05	0.03	0.01	0.05	0.05
Log likelihood		−767.13	−726.3	−288.78	−269.19	−764.1	−726.14	−289.86	−267.42

***p<.001, **p<.01, *p<.05

④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정책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여성 +), 연령(-), 최종교육(대졸 이상 +), 미취업자(-, 재학생 기준), 거버넌스 참여(+), 경제여건 인식(-), 정책인지(+)였으며,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은 연령(-)이었다.

현재 상태에 따라 하위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취업자는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거버넌스 참여자,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 경제여건 인식이 낮을수록 중요도 수준이 높았으며, 도움 정도에는 근속기간(-)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경우, 거주 지역(서울+), 미취업기간(-)이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도움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재학생은 대부분의 변수가 통계적 유의도를 상실하였고, 도움 정도에서만 학교의 지역이 서울이 아닌 경우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57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변수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재학생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47 (0.15)****	-0.06 (0.15)	**-0.74 (0.26)****	0.10 (0.24)	-0.46 (0.29)	-0.28 (0.27)	-0.46 (0.29)	-0.19 (0.28)
연령		**-0.06 (0.02)****	**-0.04 (0.02)***	**-0.08 (0.04)***	0.00 (0.03)	-0.03 (0.04)	-0.01 (0.04)	-0.05 (0.04)	0.00 (0.04)
최종교육 (대졸 이상)		**0.41 (0.19)***	0.00 (0.18)	0.44 (0.32)	0.39 (0.30)	0.14 (0.37)	-0.19 (0.35)		
상태 (재학 기준)	미취업	**-0.63 (0.22)****	-0.16 (0.21)						
	취업	-0.36 (0.20)	-0.06 (0.19)						

변수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재학생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95 (0.30)****	0.28 (0.26)	**1.23 (0.44)****	0.02 (0.38)	1.32 (1.21)	-0.33 (0.86)	0.74 (0.49)	0.54 (0.46)
거주지역(서울)		0.32 (0.18)	-0.14 (0.16)	**0.71 (0.31)***	0.32 (0.30)	**0.82 (0.33)***	-0.17 (0.30)	0.15 (0.40)	0.41 (0.39)
경제여건 인식		**-0.10 (0.05)***	-0.03 (0.04)	**-0.18 (0.08)***	0.08 (0.08)	-0.07 (0.09)	-0.05 (0.08)	-0.06 (0.08)	-0.06 (0.08)
정책인지(인지함)		**0.34 (0.16)***	0.12 (0.15)	0.25 (0.26)	0.12 (0.25)	0.39 (0.29)	-0.12 (0.27)	0.27 (0.29)	0.24 (0.28)
근로형태(비정규)				0.22 (0.31)	-0.19 (0.30)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	10인 미만			-0.30 (0.34)	0.02 (0.33)				
	10-100인			0.09 (0.34)	0.18 (0.31)				
근속기간				-0.00 (0.00)	**-0.02 (0.01)*****				
로그월근로소득				0.26 (0.15)	-0.09 (0.16)				
미취업기간						**-0.01 (0.01)***	-0.01 (0.01)		
구직 여부(구직)						-0.45 (0.29)	0.18 (0.28)		
학교 지역(서울)								-0.75 (0.40)	**-1.05 (0.38)****
학교 유형 (2년제)	4년제							-0.24 (0.62)	-0.41 (0.61)
	대학원							0.18 (0.69)	-1.09 (0.67)
Constant Cut1		-3.58 (0.62)***	-2.06 (0.57)***	-2.91 (1.18)*	-0.96 (1.16)	-2.46 (1.15)*	-1.78 (1.06)	-3.42 (1.26)**	-1.88 (1.20)
Constant Cut1		-2.71 (0.61)***	-1.39 (0.57)*	-1.91 (1.17)	-0.21 (1.16)	-1.59 (1.14)	-0.96 (1.06)	-2.62 (1.25)*	-1.33 (1.19)

변수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재학생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N	733	733	285	285	218	218	230	230
LR chi^2	47.68***	9.56	33.4***	24.95**	20.84**	5.71	14.1	21.6**
Pseudo R^2	0.03	0.01	0.06	0.04	0.05	0.01	0.04	0.05
Log likelihood	-660.32	-720.03	-250.65	-270.2	-204.72	-221.38	-190.9	-204.4

***p<.001, **p<.01, *p<.05

각 요인의 영향력을 승산비(Odds ratio)를 이용해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였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정책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2.59배 높았는데, 이는 정책인지(1.41배)보다 컸다. 별도 그림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취업자의 경우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3.41배로 전체 집단 대상 분석 결과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 한편, 거주지역의 영향력도 큰 편이었는데, 취업자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비거주자보다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정책의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2.04배 높았으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서울 거주의 영향력이 2.26배였다. 서울과 지역의 일자리 기회 격차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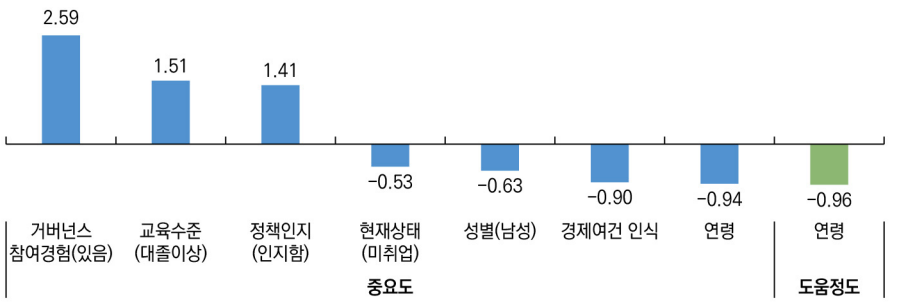


그림 Ⅳ-36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⑤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여성 +), 최종교육(대졸 이상 +), 재학생(+), 거버넌스 참여(+), 수혜경험(+)이었고,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미취업(-), 거버넌스 참여(+), 정책인지(+)로 분석되었다.

한편,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참여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없었는데, 이는 거버넌스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동질적 특성을 보이거나 하여 중요도와 도움정도 인식 수준이 유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Ⅳ-58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변수		전체		참여자		비참여자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성별(남성)		**-0.33(0.15)***	-0.08(0.14)	0.02(0.88)	0.12(0.70)	**-0.35(0.15)***	-0.05(0.15)
연령		-0.03(0.02)	**-0.04(0.02)***	-0.05(0.11)	0.11(0.11)	-0.03(0.02)	**-0.05(0.02)****
최종교육(대졸 이상)		**0.38(0.18)***	0.30(0.17)	-0.86(0.91)	-0.88(0.87)	**0.42(0.18)***	**0.38(0.18)***
상태 (재학 기준)	미취업	**-0.51(0.20)***	**-0.60(0.20)****	0.96(1.23)	-0.52(1.12)	**-0.53(0.21)***	**-0.59(0.21)****
	취업	**-0.38(0.19)***	-0.29(0.19)	0.11(0.94)	-0.25(0.89)	-0.37(0.19)	-0.28(0.19)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1.11(0.36)****	**1.11(0.29)*****				
거주지역(서울)		0.22(0.16)	-0.01(0.16)	-1.75(1.07)	0.90(1.26)	0.25(0.16)	-0.02(0.16)
경제여건 인식		-0.04(0.04)	-0.01(0.04)	0.02(0.21)	0.07(0.17)	-0.05(0.04)	-0.02(0.04)
정책	인지	0.23(0.20)	**0.51(0.19)****	1.21(1.03)	-0.24(0.94)	0.22(0.21)	**0.44(0.21)***
	수혜	**1.19(0.47)***	1.35(1.03)	0.92(0.90)	0.85(0.64)	0.85(0.64)	0.25(0.60)
거버넌스 참여 기간				0.01(0.01)	-0.02(0.01)		
Constant Cut1		-1.54(0.56)**	-1.79(0.57)**	-2.86(3.11)	0.53(2.86)	-1.61(0.58)**	-1.91(0.59)**
Constant Cut1		-0.60(0.56)	-0.99(0.56)	-1.56(3.09)	1.54(2.85)	-0.68(0.58)	-1.11(0.58)
N		733	733	75	75	658	658
LR chi^2		75.66***	55.33***	13.69	8.89	23.81**	21.64**
Pseudo R^2		0.05	0.04	0.14	0.08	0.02	0.02
Log likelihood		-737.17	-734.21	-42.62	-51.15	-690.52	-678.98

***p<.001, **p<.01, *p<.05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승산비(Odds ratio)를 이용해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영향력이 큰 요인은 정책인지, 수혜경험,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이고,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보다는 수혜경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3.03배 높았는데,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비해 3.28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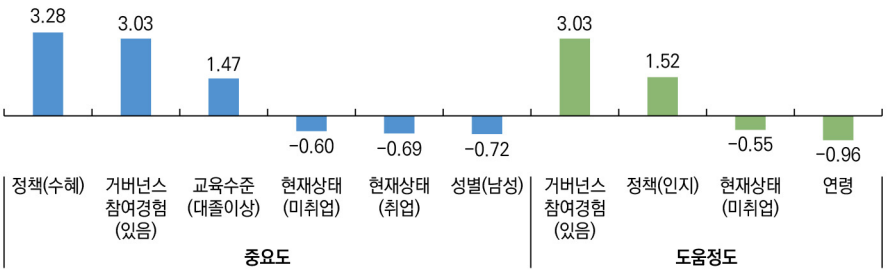


그림 Ⅳ-37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2)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관련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① 청년 활동공간 및 사회서비스 정책

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정책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 미취업(-), 거버넌스 참여(+), 정책인지(+), 수혜경험(+)이었다.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거버넌스 참여(+), 정책인지(+), 수혜경험(+)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요도에서는 정책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비참여자 대상 분석에서의 중요도는 정책인지(+), 여성(+), 미취업(-)이, 도움정도에는 연령(-), 수혜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59 청년 활동공간 및 사회서비스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변수		전체		참여자		비참여자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42(0.15)****	-0.01(0.15)	-0.33(0.95)	0.12(1.05)	**-0.41(0.15)****	-0.01(0.15)
연령		-0.03(0.02)	**-0.06(0.02)****	0.03(0.13)	0.08(0.14)	-0.03(0.02)	**-0.07(0.02)*****
최종교육(대졸 이상)		0.12(0.18)	0.16(0.18)	-0.3(0.97)	-0.87(1.01)	0.16(0.18)	0.21(0.18)
상태 (재학 기준)	미취업	**-0.56(0.20)****	-0.28(0.20)	-1.99(1.30)	-0.57(1.21)	**-0.52(0.21)***	-0.26(0.21)
	취업	-0.26(0.19)	-0.10(0.19)	-0.52(1.04)	-0.55(1.05)	-0.25(0.19)	-0.09(0.20)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1.38(0.33)*****	**1.09(0.35)****				
거주지역(서울)		0.21(0.16)	-0.00(0.17)	0.57(1.45)	-0.27(1.26)	0.21(0.16)	0.02(0.17)
경제여건 인식		-0.03(0.04)	-0.01(0.04)	-0.08(0.21)	-0.05(0.22)	-0.02(0.04)	-0.01(0.05)
정책	인지	**0.57(0.17)*****	**0.33(0.17)***	**2.04(0.98)***	1.64(1.02)	**0.50(0.17)****	0.26(0.17)
	수혜	**0.64(0.30)***	**1.47(0.35)*****	1.59(1.14)	0.37(0.32)	0.37(0.32)	**1.24(0.38)****
거버넌스 참여 기간				-0.02(0.02)	0.00(0.02)		
Constant Cut1		-1.50(0.57)**	-2.03(0.58)***	-1.45(3.51)	0.09(3.70)	-1.64(0.58)**	-2.21(0.59)***
Constant Cut1		-0.46(0.56)	-1.22(0.58)*	-0.09(3.49)	1.27(3.70)	-0.60(0.58)	-1.41(0.59)*
N		733	733	75	75	658	658
LR chi^2		99.6***	98.72***	26.65**	22.22**	35.68***	35.98***
Pseudo R^2		0.06	0.07	0.28	0.26	0.03	0.03
Log likelihood		-733.52	-707.70	-34.57	-32.45	-692.32	-670.36

***p<.001, **p<.01, *p<.05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승산비(Odds ratio)를 이용해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영향력이 큰 요인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와 수혜경험이었다. 거버넌스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청년 활동공간 및 사회서비스 정책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3.99배 높았으며, 정책을 인지하는 경우(1.76배), 수혜경험(1.90배)보다 큰 영향력이다.

한편, 도움 정도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수혜경험이었다. 수혜경험이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청년 활동공간 및 사회서비스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4.36배 높았는데, 이는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력(2.98배)보다 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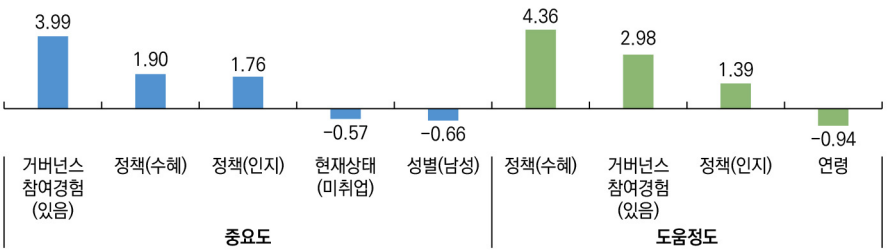


그림 Ⅳ-38 청년 활동공간 및 사회서비스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② 주거지원 정책

주거지원 정책과 신용회복 정책에서는 각 정책에 포함된 세부 정책의 인지여부와 수혜경험이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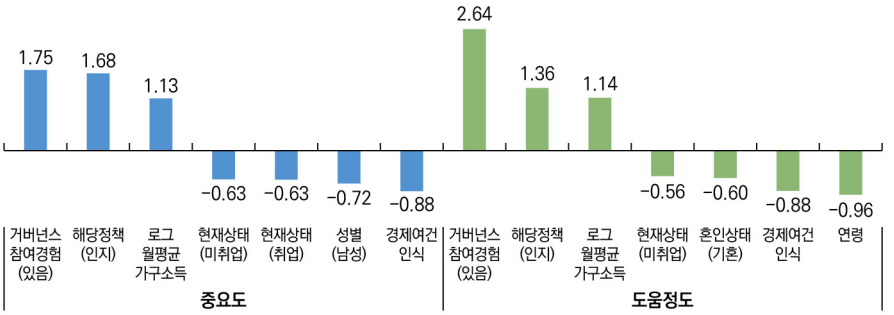
주거지원 정책의 경우, 전월세보증금,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을 인지하는 경우 주거지원 정책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월세지원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중요도를 오히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세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례의 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수혜경험자가 정책 중요도를 낮게 인식한다는 것은 월세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승산비(Odds ratio)를 이용해 비교한 결과, 세부정책의 인지와 수혜보다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는 비참여자 보다 주거지원 정책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1.75배~2.03배 높았고, 도움 정도에 있어서는 2.64배~2.86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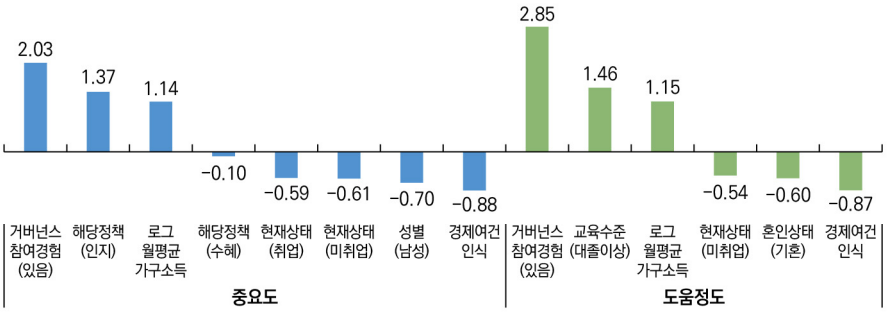
표 Ⅳ-60 주거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변수		전월세 보증금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33 (0.15)***	-0.03 (0.15)	**-0.35 (0.15)***	-0.04 (0.15)	**-0.30 (0.15)***	-0.01 (0.15)	**-0.34 (0.14)***	-0.04 (0.15)
연령		-0.02 (0.02)	**-0.04 (0.02)***	-0.02 (0.02)	-0.04 (0.02)	-0.02 (0.02)	**-0.04 (0.02)***	-0.02 (0.02)	-0.04 (0.02)
최종교육 (대졸 이상)		0.21 (0.18)	0.33 (0.18)	0.24 (0.18)	**0.38 (0.18)***	0.22 (0.18)	0.36 (0.18)	0.28 (0.18)	**0.38 (0.18)***
상태 (재학 기준)	미취업	**-0.47 (0.22)***	**-0.59 (0.23)****	**-0.50 (0.22)***	**-0.62 (0.22)****	**-0.47 (0.22)***	**-0.60 (0.23)****	**-0.49 (0.22)***	**-0.59 (0.23)****
	취업	**-0.46 (0.20)***	-0.28 (0.20)	**-0.53 (0.20)****	-0.32 (0.20)	**-0.44 (0.20)***	-0.29 (0.20)	**-0.46 (0.20)***	-0.28 (0.20)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56 (0.26)***	**0.97 (0.27)*****	**0.71 (0.26)****	**1.05 (0.27)*****	**0.61 (0.25)***	**1.05 (0.27)*****	**0.63 (0.25)***	**1.05 (0.27)*****
거주지역(서울)		0.29 (0.16)	-0.03 (0.17)	0.32 (0.16)	-0.02 (0.17)	0.25 (0.16)	-0.04 (0.17)	0.28 (0.16)	-0.03 (0.17)
경제여건 인식		**-0.13 (0.04)****	**-0.13 (0.04)****	**-0.13 (0.04)****	**-0.13 (0.04)****	**-0.12 (0.04)****	**-0.13 (0.04)****	**-0.12 (0.04)****	**-0.13 (0.04)****
로그월평균가구 소득		**0.13 (0.06)***	**0.13 (0.06)***	**0.13 (0.06)***	**0.14 (0.06)***	**0.12 (0.06)***	**0.13 (0.06)***	**0.13 (0.06)***	**0.13 (0.06)***
생활비 조달방법 (내가 벌어서)		0.11 (0.19)	-0.07 (0.19)	0.14 (0.19)	-0.06 (0.19)	0.11 (0.19)	-0.06 (0.19)	0.11 (0.18)	-0.06 (0.19)
혼인상태(기혼)		-0.43 (0.24)	**-0.52 (0.25)***	-0.37 (0.24)	**-0.51 (0.25)***	-0.43 (0.24)	**-0.53 (0.25)***	-0.39 (0.24)	**-0.53 (0.25)***
해당 정책	인지	**0.52 (0.15)*****	**0.31 (0.15)***	**0.31 (0.16)***	0.21 (0.16)	**0.55 (0.16)*****	0.27 (0.16)	0.18 (0.15)	0.12 (0.15)
	수혜	-0.63 (0.44)	0.31 (0.48)	**-2.31 (0.75)****	-0.19 (0.73)	-0.26 (0.42)	0.25 (0.40)	-0.49 (0.67)	0.69 (0.74)
Constant Cut1		-1.20 (0.62)	-1.33 (0.63)*	-1.22 (0.62)*	-1.37 (0.63)*	-1.16 (0.62)	-1.31 (0.63)*	-1.27 (0.62)*	-1.31 (0.63)*
Constant Cut1		-0.24 (0.62)	-0.63 (0.63)	-0.27 (0.62)	-0.67 (0.62)	-0.20 (0.62)	-0.61 (0.63)	-0.33 (0.62)	-0.61 (0.63)
N		733	733	733	733	733	733	733	733
LR chi^2		55.87***	64.07***	56.26***	60.78***	54.45***	62.56***	44.41***	60.80***
Pseudo R^2		0.04	0.04	0.04	0.04	0.03	0.04	0.03	0.04
Log likelihood		-752.07	-716.48	-751.88	-718.13	-752.78	-717.24	-757.8	-718.12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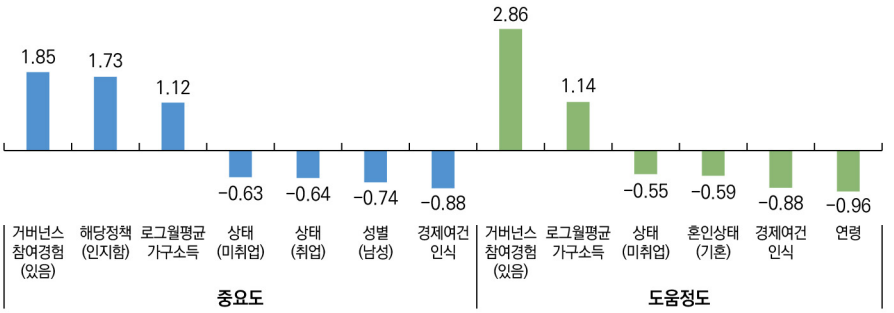


전월세 보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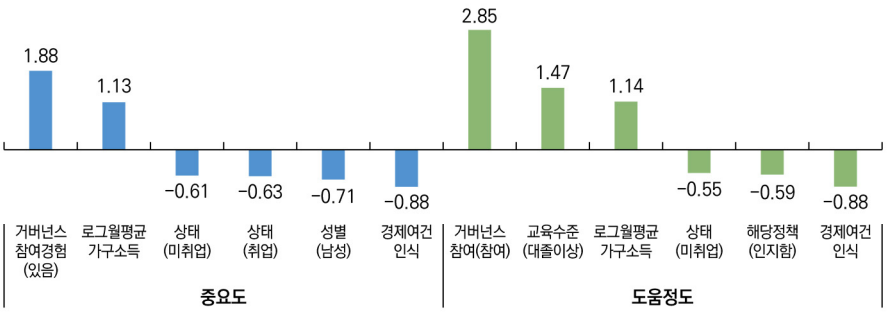


월세지원

그림 Ⅳ-39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그림 Ⅳ-40 주거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③ 신용회복 지원 정책

저신용등급대상자 대출 지원 정책인 대학생·청년 햇살론과 대출금 상환유예 정책의 인지여부와 수혜경험이 신용회복 지원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중요도에는 정책인지(+), 미취업(-), 경제여건(-), 로그월평균가구소득(+), 청년정책거버넌스 참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도움 정도는 수혜경험(+), 혼인상태(기혼 -), 로그월평균가구소득(+), 청년정책거버넌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61 신용회복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변수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금 상환유예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15(0.15)	-0.05(0.15)	-0.11(0.15)	-0.04(0.15)
연령		-0.03(0.02)	-0.02(0.02)	-0.03(0.02)	-0.03(0.02)
최종교육(대졸 이상)		0.25(0.18)	0.20(0.18)	0.26(0.18)	0.20(0.18)
상태 (재학 기준)	미취업	**-0.55(0.23)***	-0.42(0.22)	**-0.52(0.22)***	-0.40(0.23)
	취업	-0.37(0.20)	-0.22(0.21)	-0.38(0.20)	-0.18(0.21)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59(0.25)***	**0.87(0.27)****	**0.62(0.25)***	**0.90(0.27)*****
거주지역(서울)		0.07(0.16)	-0.03(0.17)	0.07(0.16)	-0.02(0.17)
경제여건 인식		**-0.12(0.04)****	-0.08(0.04)	**-0.13(0.04)****	-0.08(0.04)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12(0.06)***	**0.13(0.06)***	**0.13(0.06)***	**0.13(0.06)***
생활비 조달방법 (내가 벌어서)		-0.08(0.19)	-0.14(0.19)	-0.04(0.19)	-0.11(0.19)
혼인상태(기혼)		-0.22(0.25)	**-0.57(0.25)***	-0.20(0.25)	**-0.50(0.25)***
해당 정책	인지	**0.66(0.15)*****	0.22(0.15)	**0.45(0.16)****	0.25(0.16)
	수혜	0.40(0.43)	**1.44(0.57)***	0.33(0.35)	**1.04(0.41)***
Constant Cut1		-0.82(0.62)	-0.99(0.63)	-0.84(0.62)	-1.08(0.63)
Constant Cut1		0.16(0.62)	-0.35(0.63)	0.12(0.62)	-0.43(0.63)
N		733	733	733	733
LR chi^2		57.1***	50.99***	46.37***	51.91***
Pseudo R^2		0.04	0.03	0.03	0.04
Log likelihood		-741.57	-713.66	-746.93	-713.2

***p<.001, **p<.01, *p<.05

각 변수의 영향력을 승산비(Odds ratio)를 이용해 비교한 결과, 인지여부와 수혜경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안다고 응답한 청년은 모른다고 응답한 청년보다 신용회복 지원 정책의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1.94배 높았고, 수혜경험이 있는 청년은 없는 청년보다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4.22배 높았다. 이는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력(중요도 1.81배, 도움 정도 2.38배)보다 컸다. 대출금 상환유예 정책을 안다고 응답한 청년은 모른다고 응답한 청년보다 신용회복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1.57배 컸으며, 수혜경험이 있는 청년은 없는 청년보다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2.82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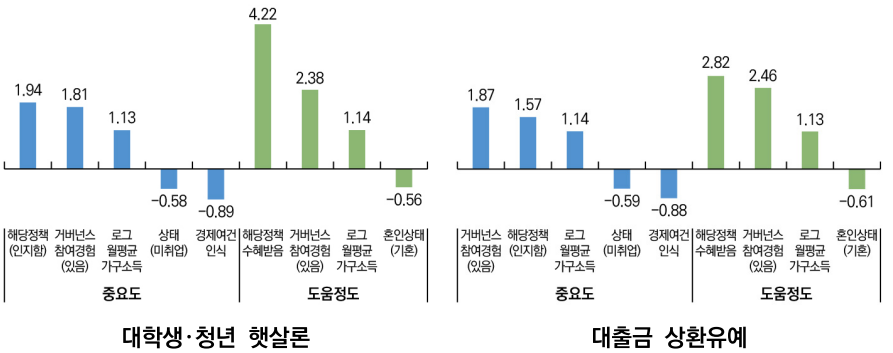


그림 Ⅳ-41 신용회복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④ 건강지원 정책

건강지원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정책인지는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수혜경험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 거버넌스 참여(+), 경제여건 인식(-), 혼자 사는 경우(+), 정책을 인지하는 경우 건강지원 정책의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여성(+), 거버넌스 참여(+), 정책을 인지하는 경우 건강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Ⅳ-62 건강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변수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42(0.14)****	**-0.44(0.15)****
연령		0.02(0.02)	-0.02(0.02)
최종교육(대졸 이상)		0.27(0.18)	0.25(0.18)
상태 (재학 기준)	미취업	-0.35(0.22)	-0.17(0.23)
	취업	-0.39(0.20)	-0.25(0.20)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80(0.25)****	**0.90(0.26)*****
거주지역(서울)		-0.11(0.16)	0.16(0.17)
경제여건 인식		**-0.14(0.04)*****	-0.08(0.04)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08(0.06)	0.08(0.06)
생활비 조달방법(내가 벌어서)		-0.26(0.19)	-0.18(0.19)
거주형태(혼자)		**0.42(0.19)***	0.16(0.19)
정책	인지	**0.56(0.17)****	**0.48(0.17)****
	수혜	0.13(0.29)	0.58(0.31)
Constant Cut1		-0.42(0.60)	-1.17(0.61)
Constant Cut1		0.56(0.60)	-0.41(0.61)
N		733	733
LR chi^2		66.13***	56.42***
Pseudo R^2		0.04	0.04
Log likelihood		-750.43	-729.1

***p<.001, **p<.01, *p<.05

각 변수의 영향력을 승산비(Odds ratio)를 이용해 비교한 결과,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인지여부의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건강지원 정책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2.23배 높았으며, 정책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1.75배 높았다.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2.47배, 정책을 인지하는 경우는 인지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1.62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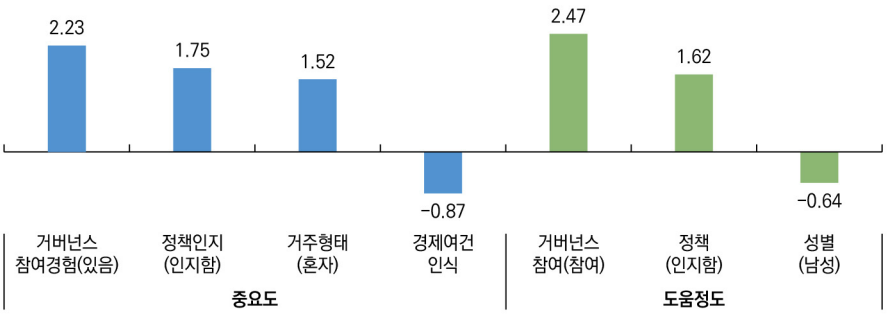


그림 Ⅳ-42 건강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3) 사회혁신 비전 관련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① 다양한 역량개발 정책

다양한 역량개발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신용회복, 주거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역량개발 정책에 포함된 세부 정책의 인지여부와 수혜경험이 다양한 역량개발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두레 등 지역사회 활동지원 정책의 인지여부는 도움 정도에만 영향을 미쳤고, 수혜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문화체육부 지역사회 활동지원 사업을 알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다양한 역량개발 정책이 본인의 현실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외에도 여성(+), 거버넌스 참여(+)가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수혜경험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정책인지는 중요도와 도움 정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63 다양한 역량개발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변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사회 활동 지원		행정자치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32(0.14)***	**-0.47(0.15)****	**-0.32(0.14)***	**-0.46(0.14)****
연령		-0.02(0.02)	-0.03(0.02)	-0.02(0.02)	-0.03(0.02)
최종교육(대졸 이상)		0.20(0.17)	0.08(0.17)	0.19(0.17)	0.04(0.17)
상태 (재학 기준)	미취업	-0.24(0.22)	-0.20(0.22)	-0.26(0.22)	-0.21(0.22)
	취업	**-0.43(0.20)***	-0.11(0.20)	**-0.43(0.20)***	-0.09(0.20)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81(0.26)****	**0.91(0.26)*****	**0.65(0.26)***	**0.82(0.27)****
거주지역(서울)		0.09(0.16)	0.23(0.16)	0.10(0.16)	0.23(0.16)
경제여건 인식		-0.04(0.04)	-0.01(0.04)	-0.05(0.04)	-0.01(0.04)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13(0.06)***	0.09(0.06)	**0.12(0.06)***	0.09(0.06)
생활비 조달방법 (내가 벌어서)		-0.01(0.19)	-0.02(0.19)	-0.04(0.19)	-0.03(0.19)
해당 정책	인지	0.26(0.23)	**0.67(0.23)****	**0.52(0.21)***	**0.43(0.21)***
	수혜	-0.57(0.69)	0.42(0.87)	0.48(0.57)	0.43(0.54)
Constant Cut1		-0.86(0.58)	-0.93(0.58)	-1.03(0.58)	-1.03(0.58)
Constant Cut1		0.01(0.57)	-0.18(0.58)	-0.15(0.58)	-0.29(0.58)
N		733	733	733	733
LR chi^2		26.34**	42.34***	34.21***	39.01***
Pseudo R^2		0.02	0.03	0.02	0.03
Log likelihood		-758.83	-737.15	-754.9	-738.81

***p<.001, **p<.01, *p<.05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승산비(Odds ratio)를 이용해 비교한 결과,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인지 여부가 뒤를 이었다. 거버넌스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다양한 역량개발 정책 중요도가 높거나,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1.91배~2.49배 높았으며, 정책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역량개발 정책이 중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1.53배~1.95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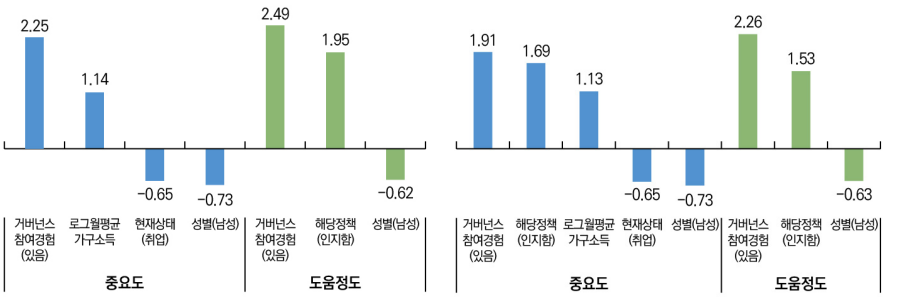


그림 Ⅳ-43 다양한 역량개발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② 일터 안전보장 정책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경우 인지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취업자의 경우, 비숙련 청년을 위한 갑질규제 정책의 인지여부(-)가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 거버넌스 참여(+), 경제여건 인식(-), 로그월가구소득(+)이었으며, 도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거버넌스 참여(+), 로그월가구소득(+)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현장실습·비숙련 노동자 산업안전 보장의 경우, 대졸 이상이 대졸 미만보다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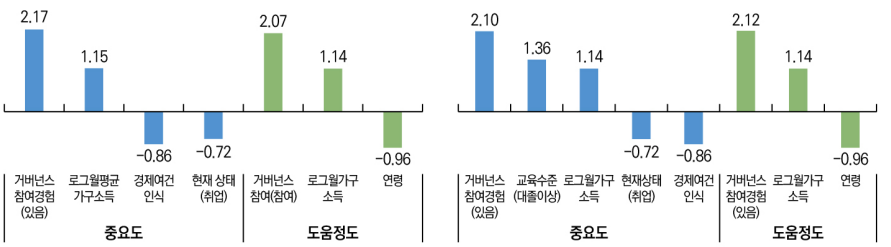
표 Ⅳ-64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변수		비숙련 청년을 위한 직장내 갑질규제				현장실습, 비숙련 노동자 산업안전 보장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16 (0.14)	-0.18 (0.14)	-0.39 (0.24)	-0.37 (0.24)	-0.17 (0.14)	-0.17 (0.14)	-0.40 (0.24)	-0.37 (0.24)
연령		-0.03 (0.02)	**-0.04 (0.02)***	-0.02 (0.03)	-0.03 (0.03)	-0.03 (0.02)	**-0.04 (0.02)***	-0.0 2(0.03)	-0.03 (0.03)
최종교육 (대졸 이상)		0.29 (0.16)	0.15 (0.16)	0.21 (0.29)	0.25 (0.29)	**0.31 (0.16)***	0.13 (0.16)	0.24 (0.29)	0.26 (0.29)
현재 상태(취업)		**-0.32 (0.16)***	-0.21 (0.16)			**-0.33 (0.16)***	-0.21 (0.16)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78 (0.24)****	**0.73 (0.25)****	**1.18 (0.37)****	0.61 (0.36)	**0.74 (0.24)****	**0.75 (0.24)****	**1.17 (0.37)****	0.59 (0.36)
거주지역(서울)		0.09 (0.16)	-0.03 (0.16)	0.17 (0.28)	0.03 (0.28)	0.08 (0.16)	-0.03 (0.16)	0.22 (0.28)	0.06 (0.28)
경제여건 인식		**-0.15 (0.04)*****	-0.01 (0.04)	-0.10 (0.07)	0.12 (0.08)	**-0.15 (0.04)*****	-0.01 (0.04)	-0.10 (0.07)	0.11 (0.08)
로그월가구소득		**0.14 (0.05)****	**0.13 (0.05)***	-0.48 (0.28)	0.13 (0.24)	**0.13 (0.05)****	**0.13 (0.05)***	-0.49 (0.28)	0.10 (0.24)
정책 인지		-0.22 (0.20)	0.28 (0.20)	**-0.75 (0.33)***	-0.42 (0.33)	0.12 (0.17)	0.30 (0.18)	-0.52 (0.29)	-0.13 (0.30)
근로형태(비정규)				0.40 (0.28)	0.29 (0.29)			0.45 (0.28)	0.32 (0.29)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	10인 미만			-0.52 (0.31)	-0.59 (0.31)			-0.51 (0.31)	-0.56 (0.31)
	10-100인			-0.42 (0.30)	-0.45 (0.30)			-0.40 (0.30)	-0.42 (0.30)
근속기간				-0.00 (0.00)	-0.01 (0.00)			-0.00 (0.00)	-0.01 (0.00)
로그월근로소득				**0.50 (0.24)***	-0.09 (0.19)			**0.54 (0.24)***	-0.05 (0.19)

변수	비숙련 청년을 위한 직장내 갑질규제				현장실습, 비숙련 노동자 산업안전 보장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Constant Cut1	-1.59 (0.54)**	-0.90 (0.55)	-1.97 (1.32)	-0.71 (1.24)	-1.55 (0.54)**	-0.82 (0.55)	-1.95 (1.31)	-0.70 (1.24)
Constant Cut1	-0.25 (0.53)	-0.18 (0.55)	-0.49 (1.31)	0.05 (1.24)	-0.21 (0.54)	-0.10 (0.55)	-0.49 (1.31)	0.07 (1.24)
N	733	733	285	285	733	733	285	285
LR chi^2	31.79**	23.82*	34.34**	18.13	31.02**	24.73*	32.16**	16.66
Pseudo R^2	0.02	0.02	0.05	0.03	0.02	0.02	0.05	0.03
Log likelihood	-787.34	-746.33	-295.65	-286.71	-787.73	-745.87	-296.74	-287.45

***p(.001, **p(.01, *p(.05

각 변수의 영향력을 승산비(Odds ratio)를 이용해 비교한 결과,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2.17배 높았다. 정책 인지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정책에서 정책인지 여부가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비숙련 청년을 위한 직장 내 갑질규제 현장실습, 비숙련 노동자 산업안전 보장

그림 Ⅳ-44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③ 고용안전망 정책

고용안전망 정책에 포함된 세부 정책인 산재보험 대상 확대,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책인지와 수혜경험이 고용안전망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정책인지와 수혜경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용안전망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 취업자(-), 청년정책 거버넌스(+), 경제여건 인식(-)이었으며,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최종교육(대졸 이상 +),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로 분석되었다. 여성, 거버넌스 참여자,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경우 고용안전망 정책의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컸으며, 취업자는 재학생보다 중요도 인식이 낮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대졸 이상 집단, 거버넌스 참여자가 고용안전망 정책이 현실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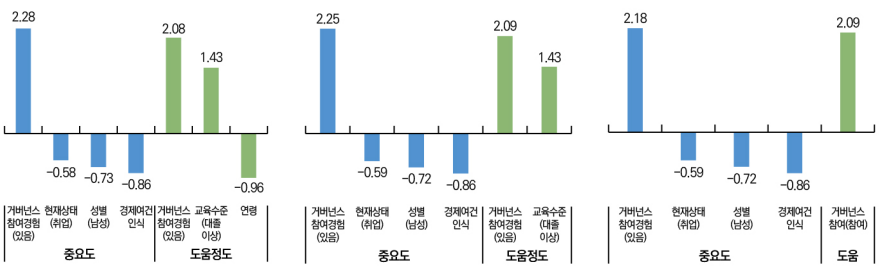
표 Ⅳ-65 고용안전망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 요인

변수		산재보험 확대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32(0.14)***	-0.18(0.14)	**-0.32(0.14)***	-0.17(0.14)	**-0.32(0.14)***	-0.17(0.14)
연령		-0.00(0.02)	**-0.04(0.02)***	-0.00(0.02)	-0.04(0.02)	-0.00(0.02)	-0.04(0.02)
최종교육(대졸 이상)		0.32(0.18)	**0.35(0.18)***	0.33(0.18)	**0.36(0.18)***	0.32(0.18)	0.33(0.18)
상태 (재학 기준)	미취업	-0.41(0.22)	-0.40(0.23)	-0.42(0.22)	-0.39(0.23)	-0.42(0.22)	-0.39(0.23)
	취업	**-0.54(0.20)****	-0.21(0.20)	**-0.53(0.20)****	-0.21(0.20)	**-0.52(0.20)****	-0.20(0.20)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83(0.24)*****	**0.73(0.25)****	**0.81(0.24)*****	**0.74(0.25)****	**0.78(0.24)****	**0.74(0.25)****
거주지역(서울)		0.21(0.16)	0.12(0.16)	0.21(0.16)	0.11(0.16)	0.21(0.16)	0.12(0.16)
경제여건 인식		**-0.15(0.04)*****	-0.05(0.04)	**-0.15(0.04)*****	-0.05(0.04)	**-0.15(0.04)*****	-0.05(0.04)
로그월평균가구소득		0.10(0.06)	0.07(0.06)	0.09(0.06)	0.07(0.06)	0.09(0.06)	0.07(0.06)

변수		산재보험 확대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중요도	도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생활비 조달방법 (내가 벌어서)		0.00(0.18)	-0.23(0.19)	-0.01(0.18)	-0.23(0.19)	-0.01(0.18)	-0.24(0.19)
해당 정책	인지	0.05(0.22)	0.02(0.22)	0.07(0.18)	0.27(0.18)	0.09(0.18)	0.31(0.18)
	수혜	-0.76(0.65)	0.55(0.64)	-0.44(0.54)	0.15(0.55)		
Constant Cut1		-0.65(0.58)	-1.11(0.59)	-0.72(0.58)	-1.06(0.59)	-0.67(0.58)	-1.03(0.58)
Constant Cut1		0.34(0.58)	-0.39(0.58)	0.27(0.58)	-0.34(0.58)	0.32(0.58)	-0.30(0.58)
N		733	733	733	733	733	733
LR chi^2		39.21***	23.41*	38.49***	25.32*	38.07***	25.6**
Pseudo R^2		0.03	0.02	0.02	0.02	0.02	0.02
Log likelihood		-755	-737.22	-755.36	-736.26	-755.57	-736.12

***p<.001, **p<.01, *p<.05

각 변수의 영향력을 승산비(Odds ratio)를 이용해 비교한 결과,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2.08~2.28배 높았다. 한편, 대졸 이상이 대졸 미만보다 산재보험 확대와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의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1.43배 높았다.



산재보험 확대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그림 Ⅳ-45 고용안전망 정책의 중요도 및 도움 정도 영향요인 영향력 비교(Odds Ratio)

4.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회정책 비전의 중요성 및 추진 정책의 우선순위

주요 발견(Main Findings)

- 포용국가 사회정책 3대 비전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사회적 지속가능성(평균 7.9점, 중요함 63.0%)→사회혁신(7.7점, 59.5%)→사회통합(6.9점, 37.8%) 순으로 높음.
-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9대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22.2%), 고용안전망(20.5%), 기회 공정배분(15.1%)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청년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소득보장제도 개혁(26.0%), 여성은 고용안전망(21.8%)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학력 수준에 따라서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고용안전망이(25.2%), 대학졸업 이상은 소득보장제도 개혁(22.0%)이, 미취업자는 고용안전망(27.1%), 취업자는 소득보장제도(24.9%)가 시급하다고 인식함.
- 다항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진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컸고, 미취업자는 소득보장제도 개혁보다는 고용안전망 구축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여건을 낮게 인식하는 청년들은 고용안전망 구축보다는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경제여건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소득보장제도 개혁보다는 기타 정책(저출산 고령사회 능동적 사회시스템,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역량강화와 일터혁신)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차이를 보임.
-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청년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요인의 분석 결과를 통해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과 층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의 실증적 근거가 확보되었음.

여기서는 본 연구의 제2장에서 고찰된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비전과 전략'이 청년들의 정책 욕구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에 대해 청년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때 비전인 ①사회통합 비전, ②사회적 지속가능성, ③사회혁신 비전에 대한 중요도 인식수준을 확인하고, 청년 특성별로 비전에 대한 중요도 인식수준이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정책 3대 비전에 포함된 9개 전략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청년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1) 사회정책 3대 비전 방향으로의 청년정책 추진의 중요성

(1) 사회정책 3대 비전의 중요도 인식 수준

사회정책 3대 비전의 중요도 인식 수준의 평균 점수와 중요도 분포(①중요하지 않음(1점~3점), ②보통(4점~7점), ③중요함(8점~10점))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년들이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사회정책 비전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평균 7.91점, 중요함 63.0%)이었고, 사회혁신 비전(7.72점, 59.5%), 사회통합 비전(6.88점, 37.8%)이 뒤를 이었다.

표 Ⅳ-66 사회정책 3대 비전의 중요도 인식 수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사회통합 비전	733	6.5	55.7	37.8	6.88(2.07)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733	2.2	34.8	63.0	7.91(1.78)
사회혁신 비전	733	2.5	38.0	59.5	7.72(1.83)

현재 상태(①재학생, ②미취업자, ③취업자) 하위집단별로 3대 비전의 중요도 인식수준이 다른지 분석한 결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전의 순서(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사회혁신 비전→사회통합 비전)는 같았다. 평균 점수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을 보면, 재학생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미취업자는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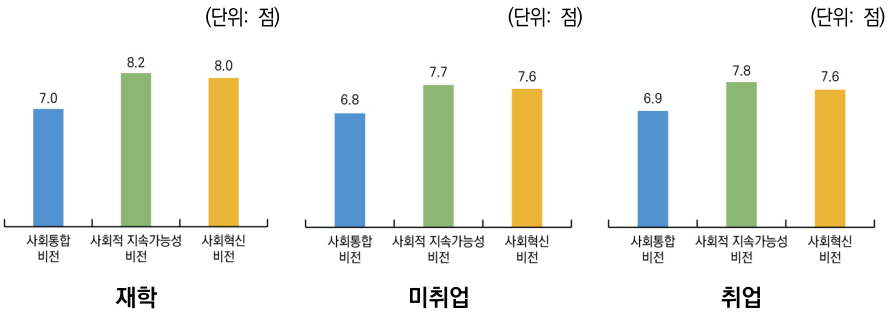


그림 Ⅳ-46 사회정책 3대 비전의 중요도 인식 수준: 현재 상태별 비교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라 사회정책 비전 중요도 인식 수준이 달라지는지 확인한 결과, 사회정책 비전 중요도 순위는 같았으나, 참여자 집단의 중요도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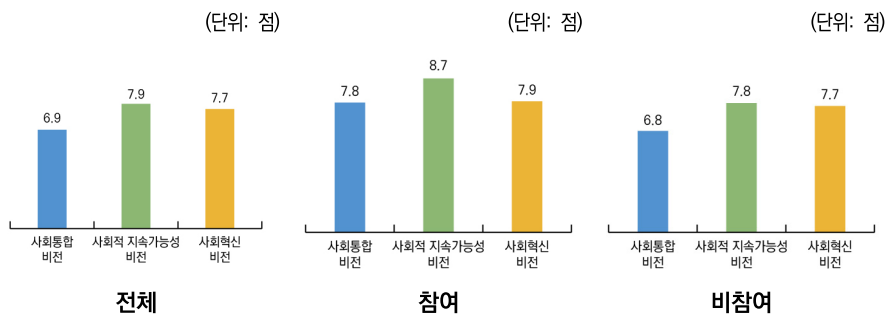


그림 Ⅳ-47 사회정책 3대 비전의 중요도 인식 수준: 거버넌스 참여여부 비교

(2) 특성별 사회정책 3대 비전 중요도 인식 차이

여기서는 청년특성에 따른 하위집단별 사회정책 3대 비전의 중요도 인식 차이를 검증하였다. 하위집단 구분은 성별, 연령범주(①19세~24세, ②25세~29세, ③30세~34세), 최종교육수준(①대졸 미만, ②대졸 이상), 현재 상태(①재학생, ②

미취업자, ③취업자), 거버넌스 참여 여부로 확인했으며, 각 정책의 특성에 따라 거주지역(①서울, ②경기, ③광역시, ④그 외 시도), 근로형태(①정규직 임금근로, ②비정규직 임금근로, ③비임금근로) 등에 따른 차이를 추가로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 제시하였다.

① 사회통합 비전 중요도 인식 차이

사회통합 비전 중요도 인식은 성별,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라 달랐다. 사회통합 비전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39.8%)이 여성(35.8%)보다 높았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도 남성(9.7%)이 여성(3.5%)보다 높았다(x^2-test=14.735, p<.01).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통합 비전 중요도 인식은 분포와 평균 점수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자의 중요도 평균 점수는 6.88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3%로 비참여자(6.78점, 35.1%)보다 높았다(t-test=-4.30, p<.001).

표 Ⅳ-67 특성별 사회통합 비전 중요도 인식 차이

(단위: 명, %, 점)

구 분		전체	중요하지 않음 (1~3점)	보통 (4~7점)	중요함 (8~10점)	평균(편차) (1~10점)
전체		733 (100.0)	48 (6.55)	408 (55.66)	277 (37.79)	6.88(2.07)
성별	남성	100.0	9.7	50.6	39.8	6.87(2.34)
	여성	100.0	3.5	60.7	35.9	6.88(1.77)
	x^2-test / t-test		14.735**			-0.055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비참여	100.0	6.4	58.5	35.1	6.78(2.01)
	참여	100.0	8.0	30.7	61.3	6.88(2.07)
	x^2-test / t-test		21.901***			-4.300***

***p<.001, **p<.01, *p<.05

②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중요도 인식 차이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중요도 인식은 성별, 교육수준, 현재 상태, 경제여건 인식,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인 경우, 대학생 이상,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경우, 거버넌스 참여자의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성별의 경우 평균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요도 분포는 차이가 있었다. 별도 그래프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남성 중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4.6%로 여성(61.5%)보다 높았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남성(3.3%)이 여성(1.1%)보다 높았다(χ^2-test=6.043, p<.05). 교육수준은 평균 점수와 분포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 혹은 대학원 재학생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도 점수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평균 점수 8.20점, 중요함 69.6%)고, 대학(원)졸업(7.90점, 63.2%), 고등학교 졸업 이하(7.41점, 51.2%) 순으로 높았다(F-test=8.38,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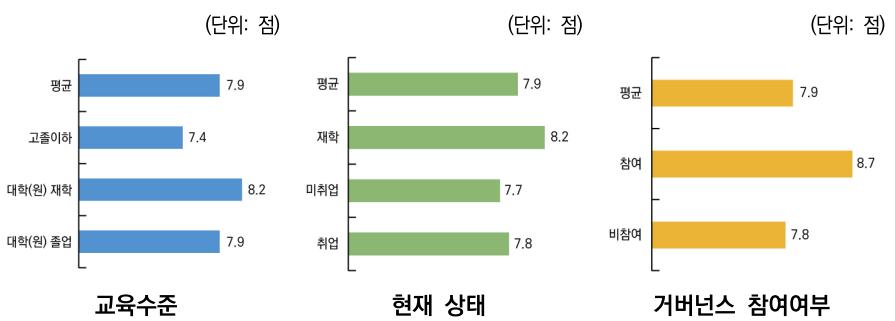


그림 Ⅳ-48 특성별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중요도 인식 차이

현재 상태의 경우, 재학생(8.20점, 69.6%), 취업자(7.83점, 62.8%), 미취업자(7.70점, 56.4%) 순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F-test=4.96, p<.01).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경우 중요도 인식이 가장 높았으

며(69.2%), 높은 경우(62.5%), 중간(60.9%)이 뒤를 이었다(χ^2-test=12.178, p<.001).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중요도 인식이 높았는데, 참여자가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84.0%로 비참여자(60.6%)보다 높았다(χ^2-test=15.830, p<.001).

③ 사회혁신 비전 중요도 인식 차이

사회혁신 비전 중요도 인식은 교육수준, 현재 상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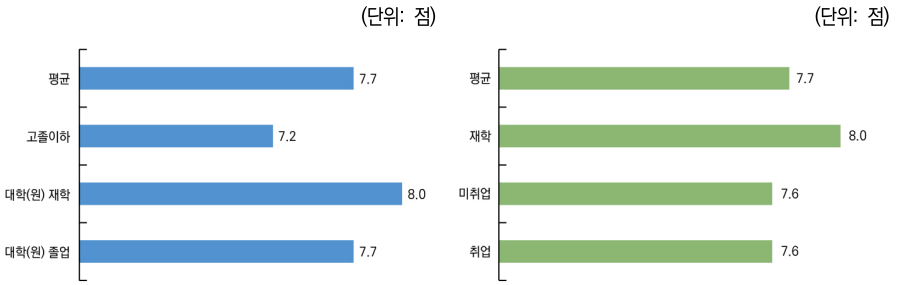


그림 Ⅳ-49 특성별 사회혁신 비전 중요도 인식 차이

현재 상태가 재학생인 경우,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가 사회혁신 비전의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대학 혹은 대학원 재학생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도 점수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평균 점수 8.04점, 중요함 65.7%), 고등학교 졸업 이하(7.15점, 50.4%)가 가장 낮았다(F-test=10.31, p<.001). 현재 상태의 경우, 재학생(8.04점, 65.7%), 취업자(7.58점, 58.6%), 미취업자(7.57점, 54.1%) 순으로 사회혁신 비전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F-test=5.19, p<.01).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사회혁신 비전 중요도 인식이 높았는데, 참여자가 사회혁신 비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66.7%로 비참여자(58.7%)보다 높았다(χ^2-test=9.609, p<.01).

(3) 정책 중요도 평가와 사회정책 3대 비전 중요도 인식 수준의 관련성

앞에서 확인한 청년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평균 점수)와 3대 비전의 중요도 인식수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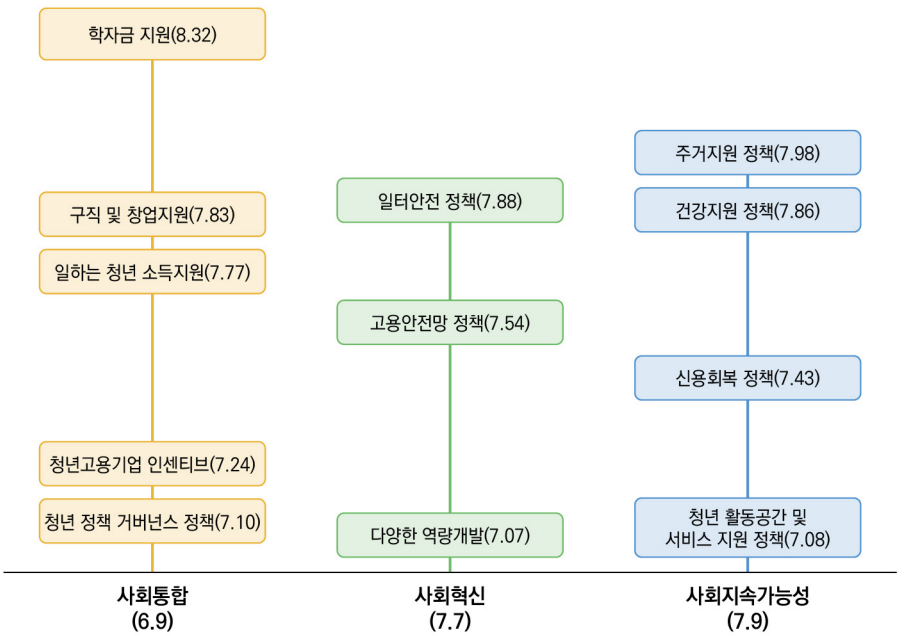


그림 Ⅳ-50 사회정책 3대 비전 중요도 인식 수준 비교

사회통합 비전에 대한 중요도는 3대 비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사회통합에 포함되는 학자금 지원, 구직 및 창업지원,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정책의 중요도는 높았다. 사회혁신 비전은 세부 정책의 중요도와 비전에 대한 중요도 모두 중간수준이었다. 사회 지속가능성 비전에 대한 중요도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주거지원 정책과 건강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만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책의 중요도가 생활안전망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청년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며 정책 추진 방향은 3대 비전을 모두 포괄하도록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2)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청년정책의 우선순위

9대 전략(①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②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③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④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⑤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⑥일상생활의 안전보장과 생명 존중, ⑦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⑧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혁신, ⑨경제-일자리 선순환을 고용안전망 구축)을 대상으로 현시점에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청년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를 청년의 특성에 따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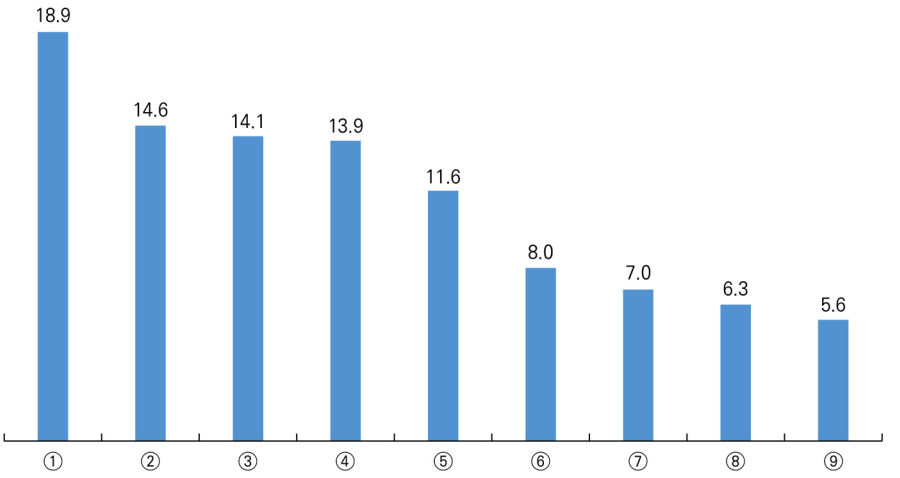
(1) 특성별 청년정책 우선순위

① 3순위 복수 응답 결과

현시점에 가장 시급한 정책 1순위~3순위를 합산해 분석한 결과(1순위~3순위 최빈값), 청년들은 사회혁신 비전에 속하는 ⑨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18.9%), 사회통합 비전인 ①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도 14.6%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세 번째로 시급하다고 응답한 정책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의 ⑤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14.1%)이었으며, ②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13.9%)→⑥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 존중(11.6%)→④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8.0%)→ ⑦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7.0%)→③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6.3%)→⑧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혁신(5.6%) 순으로 높았다.

(단위: %)



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고용 안전망 구축
②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소득 보장제도 개혁
③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④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⑤ 일상생활의 안전보장과 생명 존중
⑥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⑦ 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⑧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⑨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 주: 9대 전략을 높은 비율 순서대로 재배열 (이하 그림 동일)

그림 Ⅳ-51 특성별 현시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청년 정책 분포: 1-3순위

특성별로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의 순위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여성과 남성 모두 ⑨고용안전망 구축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두 번째, 세 번째 순위 정책은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은 ①소득보장제도 개혁과 ②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보다, ⑤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Ⅳ-68 특성별 현시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청년 정책 분포 : 1순위~3순위 종합

(단위: %)

		%(명)	경제 일자리 선순환 고용 안전망 구축	소득 불평등 완화 소득 보장 제도 개혁	사회 서비스 공공성 신뢰성 강화 일자리 창출	공정 사회 기회 권한 공평 배분	일상 생활 안전 보장 생명 존중	저출산 고령 사회 능동적 사회 시스템 구축	인적 자본의 창의성 다양성 증진	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 사람 중심 일터 혁신
전체		**(733)**	**18.9**	**14.6**	**14.1**	**13.9**	**11.6**	**8.0**	**7.0**	**6.3**	**5.6**
성별	남성	100.0	18.4	15.1	12.8	12.9	10.0	9.1	8.6	7.0	6.1
	여성	100.0	19.4	14.1	15.4	14.9	13.0	6.8	5.4	5.7	5.2
연령	19세~24세	100.0	19.6	14.8	14.8	13.3	12.0	7.9	7.4	5.9	4.3
	25세~29세	100.0	19.0	13.7	14.9	12.9	10.7	7.7	7.6	6.4	7.0
	30세~34세	100.0	18.1	15.4	12.7	15.7	12.0	8.2	5.9	6.7	5.3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00.0	19.5	16.5	15.5	12.3	13.1	8.5	5.1	5.6	4.0
	대학(원)재학	100.0	17.4	14.1	15.1	13.6	12.6	7.3	8.8	6.4	4.8
	대학(원)졸업	100.0	19.6	14.3	13.1	14.7	10.4	8.1	6.5	6.6	6.7
현재 상태	재학	100.0	17.4	14.1	15.1	13.6	12.6	7.3	8.8	6.4	4.8
	미취업	100.0	20.3	14.1	15.6	14.9	10.5	5.8	6.1	6.4	6.4
	취업	100.0	19.0	15.5	12.2	13.5	11.6	10.2	6.2	6.3	5.7
거버 넌스	참여	100.0	15.6	18.0	13.7	10.9	12.3	3.8	9.5	10.9	5.2
	비참여	100.0	19.2	14.2	14.2	14.3	11.5	8.4	6.7	5.8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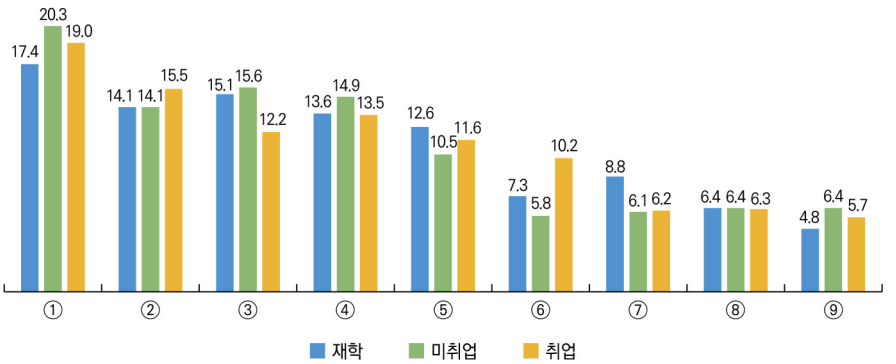
* 주: 1순위~3순위 복수응답 값을 전체로 했을 때 비율(1순위 응답자 733명, 2순위 응답자 705명, 3순위 응답자 691명임.

연령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1순위는 모두 고용안전망으로 동일했으나, 두 번째, 세 번째 시급한 정책 순위는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19세~24세는 소득보장제도 개혁(14.8%)과 기회 권한의 공평한 배분(14.8%)이, 25세~29세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신뢰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14.9%)이, 30세~34세는 공정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15.7%)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가장 시급한 정책은 고용안전망 구축으로 동일했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시급한 정책만 다르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소득보장제도 개혁(16.5%), 대학(원)재학생은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15.1%), 대학(원)졸업자는 공정사회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14.7%)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현재 상태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도 가장 시급한 정책은 고용안전망 구축으로 동일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시급한 정책만 다르게 나타났다. 재학생과 미취업자는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취업자는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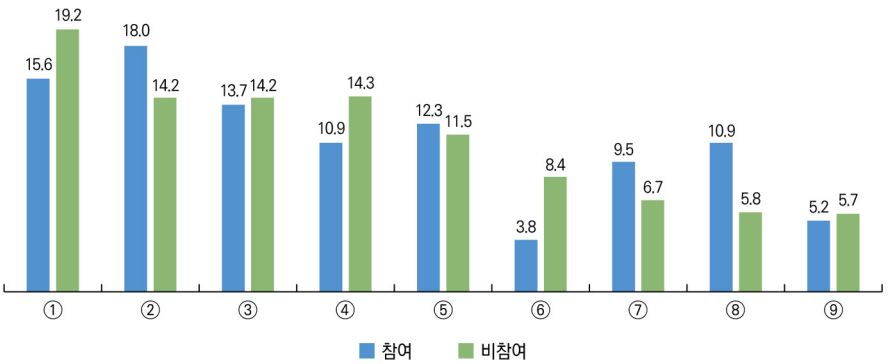


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고용 안전망 구축
②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소득 보장제도 개혁
③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④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⑤ 일상생활의 안전보장과 생명 존중
⑥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⑦ 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⑧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⑨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그림 Ⅳ-52 현시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청년 정책 분포: 1-3순위 _ 현재 상태 비교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는 전체적인 순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거버넌스 참여자는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했고, 그 비중도 18.0%였다. 고용안전망 구축(15.6%)→사회서비스 공공성 신뢰도 강화와 일자리 창출(13.7%)→일상생활 안전보장과 생명존중(12.9%)→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10.9%), 사회통합을 위한 기회균형발전 추진(10.9%) 순으로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거버넌스 비참여자는 고용안전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했고(19.2%),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14.3%)→소득보장제도 개혁(14.2%)과 사회서비스 일자리(14.2%)→일상생활 안전보장과 생명존중(11.5%)이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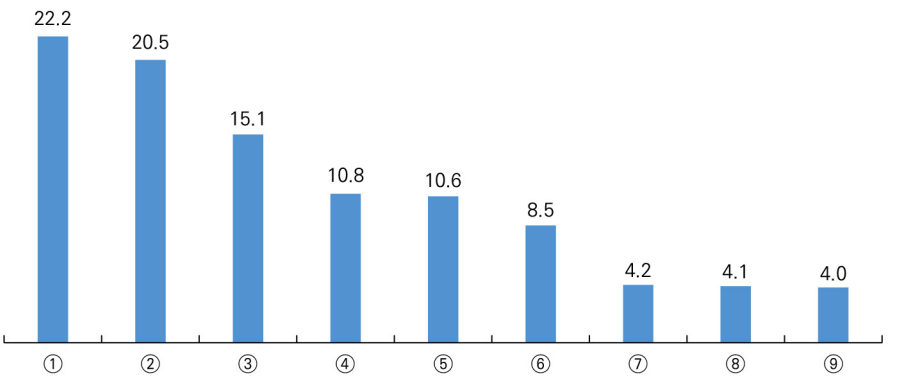
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고용 안전망 구축
②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소득 보장제도 개혁
③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④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⑤ 일상생활의 안전보장과 생명 존중
⑥ 저출산 고령 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⑦ 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⑧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⑨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그림 Ⅳ-53 현시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청년 정책 분포: 1-3순위 _ 거버넌스 참여여부

② 1순위 기준 응답 결과

현시점에 가장 시급한 정책 1순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고용안전망 구축,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단위: %)



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소득 보장제도 개혁
②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고용 안전망 구축
③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④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⑤ 일상생활의 안전보장과 생명 존중
⑥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⑦ 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⑧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⑨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그림 Ⅳ-54 현시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청년 정책 1순위

①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22.2%)와 ⑨경제-일자리 선순환을 고용안전망 구축(20.5%)은 2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소득보장제도와 고용안전망이라는 생활안전망 관련 정책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②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정책도 15.1%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⑤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10.8%)→⑥일상생활의 안전보장과 생명 존중(10.6%)→④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8.5%)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③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⑦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⑧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혁신은 모두 5% 미만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청년 특성별로 시급한 1순위 정책이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 여성은 고용안전망 구축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고(21.8%), 남성은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26.0%). 기회와 권한의 공정배분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고(여성 17.0%, 남성13.3%), 남성은 여성보다 저출산고령사회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남성 10.2%, 여성 6.7%).

연령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9세~24세 집단과 30세~34세 집단은 소득보장제도 개혁(19세~24세 23.9%, 30세~34세 23.0%)이, 25세~29세 집단은 고용안전망 구축(21.6%)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세~24세, 25세~29세는 12.4%였는데, 30세~34세는 7.0%로 낮게 나타났다.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역량개발 관련 정책은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는데, 25세~29세 집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역량개발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5세~29세는 6.2%로 19세~24세(2.7%), 30세~34세(2.8%)보다 높았다.

교육수준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대학(원)재학생과 대학(원)졸업생은 가장 시급한 정책 1순위가 소득보장제도 개혁이라고 응답했는데(각각 21.7%, 22.0%),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고용안전망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고(25.2%), 소득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았다(23.7%).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청년의 경우 고용안전망과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역량강화 정책과 창의성·다양성 증진 정책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에 그쳤다.

표 Ⅳ-69 특성별 현시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청년 정책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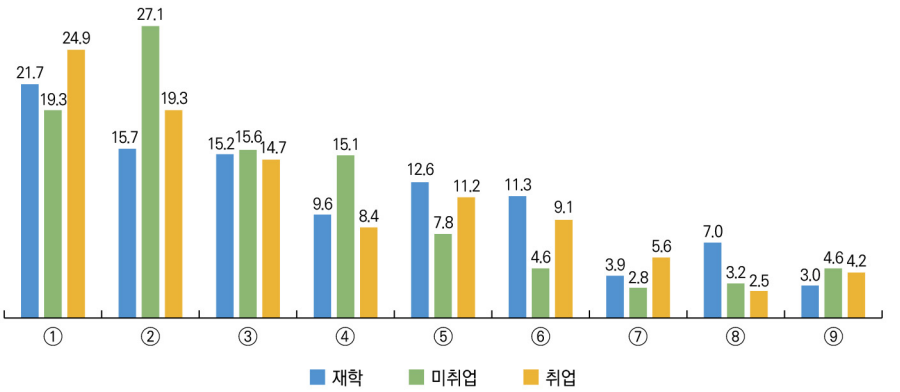
(단위: %)

		% (명)	소득 불평등 완화 소득 보장 제도 개혁	경제 일자리 선순환 위한 고용 안전망	공정 사회 기회 권한 공평 배분	사회 서비스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일상 생활 안전 보장과 생명 존중	저출산 고령 사회 능동적 사회 시스템 구축	인적 자본의 창의성 다양성 증진	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 일터 혁신
전체		**(733)**	**22.2**	**20.5**	**15.1**	**10.8**	**10.6**	**8.5**	**4.2**	**4.1**	**4.0**
성별	남성	100.0	26.0	19.1	13.3	9.1	8.3	10.2	6.4	3.9	3.9
	여성	100.0	18.6	21.8	17.0	12.4	12.9	6.7	2.2	4.3	4.0
연령	19세~24세	100.0	23.9	22.1	12.8	12.4	11.5	5.8	3.5	5.3	2.7
	25세~29세	100.0	20.1	21.6	14.3	12.4	7.7	10.0	5.0	2.7	6.2
	30세~34세	100.0	23.0	17.7	18.2	7.7	12.9	9.3	4.0	4.4	2.8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00.0	23.7	25.2	14.5	10.7	8.4	9.2	3.1	2.3	3.1
	대학(원)재학	100.0	21.7	15.7	15.2	9.6	12.6	11.3	3.9	7.0	3.0
	대학(원)졸업	100.0	22.0	21.8	15.3	11.6	10.2	6.5	4.8	3.0	4.8
현재 상태	재학	100.0	21.7	15.7	15.2	9.6	12.6	11.3	3.9	7.0	3.0
	미취업	100.0	19.3	27.1	15.6	15.1	7.8	4.6	2.8	3.2	4.6
	취업	100.0	24.9	19.3	14.7	8.4	11.2	9.1	5.6	2.5	4.2
거버 넌스	참여	100.0	28.0	13.3	8.0	13.3	10.7	4.0	8.0	8.0	6.7
	비참여	100.0	21.6	21.3	16.0	10.5	10.6	9.0	3.8	3.7	3.7

현재 상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과 취업자는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고(재학생 21.7%, 취업자 24.9%), 미취업자는 고용안전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27.1%). 미취업자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이 역시 재학생(9.6%), 취업자(8.4%)보다 높았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참여자와 비참여자 모두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참여자 28.0%, 비참여자 21.6%).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는 고용안전망 구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3.3%로 동일했으나, 비참여자는 고용안전망 구축(21.3%)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10.5%)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정책과 역량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높았다.

(단위: %)



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소득 보장제도 개혁
②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고용 안전망 구축
③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④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⑤ 일상생활의 안전보장과 생명 존중
⑥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⑦ 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⑧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⑨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그림 Ⅳ-55 현시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청년 정책 1순위: 현재 상태 비교

(2) 가장 우선되는 청년정책 전략 선택의 결정요인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청년 정책의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정책 1순위 중 최빈값을 기준으로 ①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②고용안전망 구축, ③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④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⑤일상생활 안전 보장, ⑥기타로 구분된 우선순위 정책을 종속변수로, 기본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은 여성보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즉, 남성은 여성보다 소득보장제도가 기회의 공정한 배분, 사회서비스 일자리, 일상생활 안전보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취업자는 소득보장제도 개혁보다는 고용안전망 구축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경제여건이 낮은 경우에는 고용안전망 구축보다는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했고, 경제여건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보장제도 개혁보다는 기타 정책(저출산 고령사회 능동적 사회시스템,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역량강화와 일터혁신)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제도 개혁과 고용안전망 정책에 관한 우선순위 선택요인을 분석한 결과, 미취업자인 경우 소득보장제도 개혁보다 고용안전망 정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고, 경제여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소득보장제도 개혁보다 고용안전망 정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소득보장제도 개혁과 기회의 공평한 배분을 비교한 결과, 남성이 소득보장제도 개혁보다 기회의 공평한 배분이 시급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보장제도 개혁보다 기회의 공평한 배분이 시급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거주지역이 서울이 아닌 경우,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기회의 공평한 배분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제도 개혁 정책을 비교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소득보장제도 개혁보다 시급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미취업자는 재학생에 비해 소득보장제도 개혁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넷째, 일상생활 안전보장과 소득보장제도 개혁 정책을 비교한 결과, 남성이 소득보장제도 개혁보다 일상생활 안전보장이 시급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낮았다.

표 Ⅳ-70 청년정책 우선순위 결정요인 다항로짓 분석결과 (전체)

변수		기준 :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재도 개혁 전략				
		고용안전망	기회의 공평한 배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 안전 보장	기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		-0.38 (0.24)	**-0.54 (0.26)***	**-0.65 (0.29)***	**-0.77 (0.29)****	0.02 (0.24)
연령		-0.00 (0.03)	**0.09 (0.03)****	-0.02 (0.04)	0.04 (0.04)	0.05 (0.03)
최종교육(대졸 이상)		0.04 (0.29)	-0.59 (0.30)	-0.04 (0.35)	-0.25 (0.34)	-0.23 (0.28)
상태 (재학)	미취업	**0.71 (0.34)***	0.29 (0.36)	**0.79 (0.40)***	-0.23 (0.42)	-0.17 (0.34)
	취업	0.13 (0.31)	-0.03 (0.33)	-0.12 (0.39)	-0.15 (0.36)	-0.18 (0.29)
청년정책 거버넌스(참여)		-0.40 (0.42)	-0.84 (0.50)	0.49 (0.44)	-0.07 (0.46)	0.09 (0.36)
거주지역(서울)		-0.02 (0.26)	**-0.73 (0.32)***	0.33 (0.31)	-0.02 (0.32)	-0.03 (0.26)
경제여건 인식		**0.18 (0.07)***	0.11 (0.08)	0.16 (0.08)	0.11 (0.08)	**0.22 (0.07)*****
Constant		-0.88 (0.91)	-2.49 (1.00)*	-1.07 (1.11)	-1.77 (1.10)	-2.34 (0.92)*
N		733				
LR chi^2		82.41***				
Pseudo R^2		0.03				
Log likelihood		-1241.23				

***p<.001, **p<.01, *p<.05

5. 소결 : 청년 당사자들의 청년정책 평가와 추진 방향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인지도 및 수혜율, 12개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정도의 평가, 그리고 현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실증분석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고용 중심으로 확대된 현행 정책의 한계와 앞서 제3장의 면접조사에서 드러났던 청년 집단 내의 격차와 다층으로 분화된 청년의 정책지원 욕구를 실증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음.
- 정책인지도는 지원에 대한 수혜여부 뿐만 아니라, 당사자 집단에 어떤 정책이 중요한지, 자신의 삶에 어떤 정책이 도움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확인됨.
- 조사에 포함된 12개 정책 중 생활안전망과 관련된 ①학자금, ②주거, ③건강, ④일터 안전보장에 대한 청년당사자들의 중요성 인식과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 향후 정책 확장 영역의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음.
-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①'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이며, 이어 ②고용안전망과 ③기회의 공정한 배분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혔음.
- 분석된 결과는 본 연구의 제6장에서 앞서 분석된 면접조사, 그리고 다음에서 분석될 정책델파이 실시 결과와 함께 통합된 결과로 분석되고, 현행 청년정책 개선의 방향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개입 방안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지금까지 청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당사자 평가는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3대 비전 및 9개 전략'을 기본 틀로 하여 선정된 현행 청년정책 12개 정책(①학자금 지원, ②구직 및 창업지원, ③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④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⑤청년정책 거버넌스, ⑥신용회복, ⑦주거지원, ⑧청년활동 공간 및 서비스, ⑨건강지원, ⑩다양한 활동지원, ⑪일터 안전보장, ⑫고용안전망)에 대한 인지도와 수혜율, 청년에 대한 중요도와 본인의 삶에 대한 도움정도, 현시점에서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생애발달 단계의 측면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인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의 현재 상태(재학생, 미취업자, 취업자)에 따른 차이, 그리고 앞서 제3장에서 그간 청년거버넌스 참여자 면접조사에서 발견한 청년이슈 정책화 과정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인식 차이, 경제여건과 교육수준, 근로형태 등에 따른 인식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용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확대된 데 따른 한계, 면접조사에서 확인했던 청년 집단 내의 격차와 청년정책으로부터 배제된 청년, 청년 욕구의 분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의 실증분석을 통한 주요 발견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년 당사자의 청년정책 인지도 및 수혜율

'청년정책 인지도 및 수혜경험' 주요 분석 결과
1 학자금 지원, 구직 및 창업지원을 제외하고 청년정책의 인지도와 수혜경험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
2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신용회복 지원은 인지도 높지만 수혜율은 낮음. 지원대상의 폭이 좁은 사업 성격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나, 지원 욕구에 대비 정책의 확장성은 낮았다는 해석도 가능함.
3 거버넌스 참여 청년은 인지도와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인지도와 수혜율이 낮은 정책에서 비참여 청년들과의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남.
4 대졸 이상 청년의 인지도와 수혜율이 전반적으로 높아 저학력 청년 배제된 상황과 위험을 확인함.
5 여성이 남성보다 인지도와 수혜율이 전반적으로 높아 정책 정보획득과 관련한 성별 격차가 확인됨.
6 비정규직 청년의 인지도가 낮았음. 근로환경이 취약한 청년이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음을 확인함.
7 청년정책 인지도는 경제여건 인식에 따라 계층적으로 분화.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청년은 기본적 생활 관련 정책(학자금, 신용회복, 고용안전망)을, 높은 청년은 다양한 활동, 역량에 대한 정책 인지도가 높음.

첫째, 청년정책 인지도와 수혜율을 확인한 결과, 학자금 지원과 구직 및 창업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에 대한 인지와 수혜율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는 청년정책이 적극적 사회정책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고용정

책, 대학진학자를 위한 교육지원 정책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일부 정책은 인지도와 수혜경험 수준이 일치하지 않았다.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신용회복 지원정책은 인지도는 높지만, 수혜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소득, 금융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정책 욕구가 커진 것에 비해 정책이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셋째,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인지도와 수혜율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거버넌스 참여는 인지도 혹은 수혜율이 낮은 정책(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청년 활동공간 및 서비스, 주거지원, 건강지원, 다양한 역량개발, 고용안전망)에서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주도성이 청년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수혜율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대졸 이상 청년의 인지도와 수혜경험이 대체로 높았는데 청년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졸 청년들이 정책 정보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여성이 남성보다 청년정책 인지도와 수혜경험이 높았다. 정책에 대한 정보 습득방식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여섯째, 청년 취업자 중 비정규직 청년의 인지도가 낮았다. 특히 일하거나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정책인 구직 및 창업 지원,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정책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될 수 있고, 취약한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청년정책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욕구가 경제여건에 따라 분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경제여건이 낮은 경우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신용회복, 고용안전망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경제여건 인식이 높은 청년들은 기본적인 생활 그 이상의 활동과 관련된 정책(청년활동공간 및 서비스지원, 다양한 역량기발, 고용기업 인센티브)에 대해 인지도가 높았다.

② 청년정책 중요도 및 도움정도 인식

‘청년정책 중요도 및 도움정도’ 주요 분석 결과
1 생활안전망 관련 정책(학자금 지원, 주거지원, 건강지원, 일터 안전보장)의 중요도와 도움정도가 높았음.
2 현재 상태에 따라 중요도와 도움 정도가 높은 정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학생은 일터안전정책, 미취업자는 건강지원과 구직 및 창업지원, 취업자는 주거지원과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에 대한 중요도와 도움정도 인식 수준이 높음.
3 주거지원, 건강지원, 일터안전 정책은 인지도와 수혜율이 낮았지만 중요도와 도움정도는 높아, 청년들의 정책욕구가 고용안전망 이외의 삶의 영역으로 이미 확장되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됨.
4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는 ‘인지→수혜→중요도 및 도움정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거버넌스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응답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기제가 될 수 있음.
5 경제여건 인식 수준에 따라 중요도와 도움정도가 큰 정책이 달라지며, 특히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청년은 학자금 지원,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주거지원, 신용회복, 일터안전에 대한 중요도와 도움정도의 인식 수준이 높음.

청년들에게 각 청년정책이 19세~34세 청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본인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한 결과, 생활안전망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도움정도가 대체로 높았고, 현재 상태에 따라 중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책이 달랐다.

우선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한 정책은 학자금 지원, 주거지원, 건강지원, 일터 안전보장,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정책이었는데, 재학생은 일터 안전보장 정책이, 미취업자는 건강지원과 구직 및 창업지원 정책이, 취업자는 주거지원과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정도가 높다고 인식한 정책은 건강지원, 학자금 지원, 일터 안전, 주거지원,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정책이었다. 재학생은 건강지원과 일터 안전, 미취업자는 건강지원과 구직 및 창업지원, 취업자는 건강지원과 주거지원에 대한 도움 정도가 높았다.

둘째, 인지도와 수혜율이 낮았지만,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주거지원, 건강지원, 일터 안전 정책이었다. 특히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정책은 인지도는 높고 수혜율은 낮았는데, 중요도는 높았다. 이는 청년들의 정책욕구가 고용에서 다른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구직자나 취업준비생 이외에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의 소득과 고용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청년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는 '인지→수혜→도움 정도 및 중요도'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지여부와 수혜경험에 따른 도움 정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부분 인지하는 경우,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대체로 인지와 수혜,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이 유의미했고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청년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인지도와 수혜율과 마찬가지로, 경제여건 인식 수준에 따라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인식수준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주거지원, 신용회복(햇살론), 일터 안전(비숙련 노동자 산업안전 보장)에 대한 중요도, 도움 정도 수준이 높았다. 저소득 가구 청년을 위한 지원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현시점 시급한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

'현시점 시급한 정책추진의 우선순위' 주요 분석 결과
1 포용국가 사회정책 3대 비전 중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가장 높음.
2 12개 정책 중 ①생활안전망 관련 정책의 중요도 수준이 기장 높고, ②주거지원과 ③건강지원, ④일터 안전보장, ⑤일하는 청년소득 지원의 중요도 수준이 높았음.
3 포용국가 사회정책 9대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전략을 확인한 결과, ①'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②고용안전망과 ③기회의 공정한 배분이 뒤를 이음.
4 남성,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은 소득보장제도 개혁, 여성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청년은 고용안전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차이를 보임.

포용국가 사회정책 3대 비전의 중요도와 9대 전략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3대 비전의 중요도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사회혁신→사회통합 순으로 높았다. 둘째, 3대 비전 중요도 수준에 따른 12개 정책 영역의 중요도 인식 분포를 확인한 결과, 구직 및 창업지원과 학자금 지원의 중요도 수준이 높았지만, 이들 정책이 포함된 사회통합 비전보다 사회지속 가능성 비전, 사회혁신 비전의 중요도 수준이 더 컸다. 앞에서 확인했던 일터 안전보장, 주거지원, 건강지원에 대한 중요도와 도움정도가 높은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는 고용정책 이외 영역에 대한 청년들의 욕구가 커졌음을 시사한다.

셋째, 3대 비전 중 생활안전망 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의 주거지원(7.98점)과 건강지원(7.86점), 사회혁신 비전의 일터 안전보장(7.88점), 사회통합 비전의 일하는 청년소득 지원(7.77점)의 중요도가 높았다.

넷째,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9대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고(22.2%). 고용안전망(20.5%), 기회공정배분(15.1%)도 높았다.

다섯째, 특성에 따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이 달랐다. 남성,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은 소득보장제도 개혁이(26.0%). 여성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청년은 고용안전망(21.8%)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발견은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인 이질적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본적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업한 이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취업 이후의 지원들(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고용안전망, 일터 안전보장 등)에 대한 확충도 병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본다면 청년을 대표해온 '대학 졸업 구직자 지원'이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난 보편적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5장 청년정책 개선방향 및 개선의 우선순위 도출: 정책델파이

1.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실시 개요
2. 단계별 조사 결과
3. 소결: 청년정책, 미래사회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

5 청년정책 개선방향 및 개선의 우선순위 도출: 정책델파이*

1.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실시 개요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제3장의 면접조사를 통한 그간의 청년이슈의 정책화과정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당사자들의 인식 수준과 주관적 평가자료 확보에 이어, 본 장에서는 향후 청년정책 추진에 밑거름이 되는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방향과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기법을 활용하였음.
-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방향과 개선의 우선과제를 도출하고자 2019년 7월 현재 전국의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활동가 39명을 대상으로 3단계의 반복 및 환류체계로 구성된 정책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총 4가지(①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②현시점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③현행 청년정책 평가, ④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로 구성된 조사내용에 대해 1단계 조사이후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질문과 측정 내용을 수정·보완해 나가며 반복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와 내용타당도비율(CVR)을 산출하여 순위를 도출하고 비교 분석하였음.

1) 정책델파이 실시 배경 및 목적

앞의 제4장의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에 이어 본 장에서는 정책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현행 청년정책 개선방향 도출과 개선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2019년 7월

*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강보배 사무국장이 설계·구성하고 분석·집필하였음.

현재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39명을 대상으로 3단계로 구성된 정책 델파이는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책델파이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시점의 청년거버넌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앞선 장에서 일반 청년들의 현행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평가수준을 파악하였으므로, 정책델파이에서는 일반 청년들에 비해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으며, 청년거버넌스를 현재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일반 청년들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논의해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제1장의 연구내용 및 방법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청년 문제 이슈화와 정책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선도했던 청년활동가들과 일반 청년들 간의 정책 이해 수준이 작지 않은 격차를 보인다는 사실이 최근 관련 연구에서 보고(김종진, 2018, pp.41-42)된 바 있으며, 제3장의 지난 10여년 간 청년이슈 의제화 및 정책화 과정에 참여했던 이들의 경험 속에서도, 그리고 제4장의 온라인 설문조사 실증분석에서도 청년거버넌스 참여자들과 비참여 청년들 사이의 정책인지 및 이해도 수준의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라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전통적 델파이' 기법이 아닌, '정책델파이' 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본 연구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전문가집단 대상 반복적인 설문과정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일반적인 사회변화의 추세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과 그러한 정책방향의 예측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정의되지 않은 정책문제를 정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책델파이 기법이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이종성, 2001, pp.23-27; 노승용, 2006, pp.54-55).

이와 같은 논리적 배경 및 목적 하에서 보다 실효성 높은 결과를 얻고자 본 연구에서는 정책델파이를 전국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삶의 이행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겪는 각종 사회문제를 지역 청년들의 협력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자발적인 활동'(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2019.10.20. 검색)을 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청년단체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성세대인 연구자의 프리즘으로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해석함으로써 발생되는 일명 해석의 오류 또는 편의(bias)를 최소화 하고, 청년 당사자의 시각으로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파악하며 국가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존 정책들의 개선방향, 그리고 무엇부터 개선할 것인가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정책델파이 기법의 특성

(1) 정책델파이 기법의 특성

일반적인 델파이가 미래예측을 위한 목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복 및 환류를 통해 수렴하고 합의에 이르는 지점을 도출하는 것이라 한다면, 정책델파이(policy delphi)는 정책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일반적인 델파이 기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문제의 복잡성에 맞도록 보완하여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과 그 대안의 결과예측을 목적으로 한다(남궁근, 2017, p.354; 노승용, 2006, pp.55-57).

정책델파이 기법은 진리는 갈등적이라는 헤겔의 철학에 기본 이념을 두고, 정책에는 전문가가 없으며, 다만 지지자와 반대자가 있을 뿐임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내용의 주장을 자료로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이종성, 2001, p.27).

표 Ⅴ-1 정책델파이와 일반 델파이 기법의 비교

델파이 유형	적합한 문제	중요 초점	참여자 패널 성격
합의형 일반 델파이	잘 정의된 문제	합의 의견 도출	동일한 분야 전문가
규범형 일반 델파이	잘 정의된 문제	대안 도출	상이한 분야 전문가
정책델파이	잘 정의되지 않는 문제	찬·반 견해 활용 정책대안 도출	전문가 없음

* 출처: 이종성 (2001),「델파이 방법」, p.27 〈표2〉 내용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또 다른 측면에서 정책델파이 기법은 델파이 기법 적용에 있어 일반 델파이의 기본원칙과 차별적인 기본원칙을 적용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일반 델파이 기법의 경우 참여자 답변의 익명성 보장이 된다는 원칙을 갖지만, 정책델파이에서는 초기 단계에만 익명성을 갖고, 정책 대안들에 대한 의견이 표면화 된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참여자들이 주장에 대한 토론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익명성'의 특성을 갖는다.

두 번째는 일반 델파이 기법에서는 동일한 분야 또는 보다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정보의 질과 신뢰성을 확보를 전제로 하지만, 정책델파이에서는 델파이 패널로 참여하는 이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전문성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와 식견이 그 기준이 된다.

표 Ⅴ-2 정책델파이와 일반 델파이 기법의 기본 원칙 비교

델파이 기본 원칙	정책델파이	일반 델파이
응답자 익명성	선택적 익명성	익명성 보장
참여자 선정 기준	정책문제에 대한 식견과 이해관계	분야의 전문가
활용 집계 수치	편차, 불일치 부각 수치 사용	결과 요약 수치 사용
결과 도출 목표	정해진 목표 결과 없음	전문가 합의

* 자료: 남궁근(2017)「행정조사방법론」, pp.353-354의 내용을 비교표로 재구성.

세 번째는 일반 델파이 기법에서는 참여자 개개인의 판단을 수치로 집계하고, 그 수치를 다시 몇 회에 걸려 알려주는 반복과 환류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주로 사용되는 수치는 결과를 요약하는 수치로 최빈수, 중위수, 평균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정책델파이에서는 참여자들의 판단을 요약할 때, 응답 편차 등 불일치 또는 갈등을 부각시키는 여러 다양한 수치가 보충적으로 사용된다.

네 번째는 일반 델파이 기법의 주요 목적이 전문가들 사이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있다면, 정책델파이는 대안과 결과를 창조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의견 차이를 이용하고 논쟁을 표면화시키기도 하지만, 결과와 관련한 특정한 제한이 없이 열린 결과를 수용한다. 가령 합의가 도출될 수 도 있고 의견 대립이 수평적으로 계속되는 상황에서 마무리 될 수 있다.

(2) 정책델파이 추진 절차

정책델파이는 사안의 내용과 이 기법을 활용하는 연구자의 능력에 따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일반 델파이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남궁근, 2017, p.354; 노승용, 2006, 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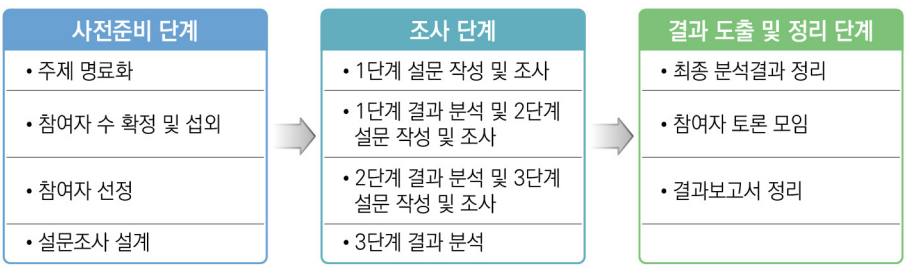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크게 세 단계(①사전준비 단계→②조사단계→③결과 도출 및 정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정책문제의 이슈가 무엇인지 질문할 주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델파이조사에 참여자를 구성한 후, 전체적인 델파이조사의 추진 과정을 설계한다. 사전준비 단계이지만, 정책델파이 실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자의 구성과 델파이조사 과정을 설계하는 일, 즉 몇 단계의 조사를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노승용, 2006, p.55).

두 번째 단계인 '조사단계'에서는 설문지 내용을 구성하고 문항을 작성하며, 완성된 조사지를 참여자들에게 배포하고 회수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 후속 설문지를 작성하는 작업들이 반복된다. 일반적으로 1단계

델파이 조사에서는 개방형 설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앞서 비교한 규범형 델파이나 정책델파이 기법을 활용할 때에는 1단계 설문 구성을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이종성, 2001, p.35). 이에 본 연구의 정책델파이 설문은 1단계 설문을 구조화된 질문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3단계 조사에서 앞서 제4장에서 분석된 온라인 설문조사의 내용 중 일부 결과, 즉 '현시점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청년정책의 우선순위'의 결과를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이전 단계의 응답내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값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결과 도출 및 정리단계'에서는 최종 문항별 통계 값과 그에 대한 의미 도출과 해석을 결과보고서로 정리한다. 최종 의미 또는 결과 도출에 앞서 참여자들이 한 데 모여 서로 다른 각자의 주장 또는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이 정책델파이가 참여자 응답의 완전한 익명성 보장이 아닌 '선택적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설명에 해당되는 지점이다. 토론이 포함되던 포함되지 않던 창조적 아이디어가 정책델파이를 통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될 수 있다(남궁근, 2017, p.358).

본 연구의 정책델파이는 이상과 같이 설명된 절차를 따르고, 3단계로 추진된 설문이 반복 및 환류 되는 구성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었다.



* 자료: 노승용(2016)「델파이 기법: 전문적 통창로 미래예측하기」, p.58 〈표2〉의 내용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V-1 정책델파이 추진 절차

2) 정책델파이 참여자 구성

앞서 설명된 '정책델파이 추진 절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델파이기법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여자 구성 및 선정이다(노승용, 2006, p.55).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델파이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정책문제 이슈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표출되는 과정과 구조 속에서 전문가나 정책결정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나 그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들을 발견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는 정책델파이 또한 적절한 참여자 구성이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은 아니지만, 「청년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정립과 관련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청년 이슈들과 관련하여 그 누구보다도 관심과 이해가 깊으며, 2019년 7월 현재 전국의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를 대상으로 정책델파이를 실시하였다.

적정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작게는 4명에서 11명으로도 가능하며 소수 그룹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100명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략 15명 정도면 중위수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노승용, 2006, pp.55-56). 또한 이슈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10~30명 정도가 일반적(남궁근, 2017, p.355)이라는 의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배경이 매우 다양하고, 청년거버넌스가 잘 정착되어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여건에 대한 사항만이 고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청년 집단 내에서도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관심되는 이슈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델파이 참여자 수를 40명 전후로 설정하고,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표 Ⅴ-3 정책델파이 참여자 구성

구분	지역	성별	연령대	활동분야
1	서울	여	20대	참여기구
2	서울	여	20대	주거
3	서울	남	30대	주거
4	서울	남	30대	노동
5	서울	남	30대	참여기구
6	서울	남	30대	부채
7	서울	여	30대	노동
8	인천/경기	남	20대	참여기구
9	인천/경기	여	20대	참여기구
10	인천/경기	남	30대	사회적경제
11	인천/경기	남	30대	도시재생
12	인천/경기	남	30대	도시재생
13	인천/경기	여	30대	정치
14	충청	남	20대	참여기구
15	충청	여	20대	참여기구
16	충청	여	20대	정치
17	충청	여	20대	사회적경제
18	충청	남	30대	중간지원조직
19	호남	남	20대	노동
20	호남	남	30대	사회적경제
21	호남	여	30대	중간지원조직
22	호남	여	30대	부채
23	호남	여	30대	정치
24	대구/경북	남	20대	참여기구
25	대구/경북	여	20대	노동
26	대구/경북	남	30대	문화
27	대구/경북	남	30대	도시재생
28	대구/경북	남	30대	도시재생

구분	지역	성별	연령대	활동분야
29	부산/울산/경남	남	20대	참여기구
30	부산/울산/경남	남	20대	참여기구
31	부산/울산/경남	여	20대	노동
32	부산/울산/경남	여	20대	문화
33	부산/울산/경남	남	30대	중간지원조직
34	부산/울산/경남	남	30대	문화
35	강원/제주	남	20대	참여기구
36	강원/제주	남	20대	사회적경제
37	강원/제주	남	30대	문화
38	강원/제주	남	30대	도시재생
39	강원/제주	여	30대	문화

지역과 연령, 성별, 활동분야, 그리고 정책델파이 특성인 구성된 갈등 형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균등 비율로 구성될 수 있도록 총 43명을 섭외 대상자로 확정한 후, 정책델파이 참여 요청과 정책델파이 조사 동의를 안내 서면과 구두로 구하였다. 동의를 구하고 응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섭외하고자 했던 43명 중 4명을 제외한 39명이 동의하였으며,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39명의 정책델파이 참여자를 〈표 V-3〉과 같이 구성하였다.

최종 정책델파이 참여자의 연령 구성은 20대 17명, 30대 22명이며, 성별은 남성 24명, 여성 15명이다.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노동 5명, 주거 2명, 부채 2명, 도시재생 4명, 문화기획 5명, 사회적경제 5명, 정치 3명, 지원조직 3명, 참여기구 10명으로 구성되었다.

3) 정책델파이 내용 구성 및 분석방법

(1) 조사 내용 구성

① 1단계 조사 내용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방향 및 개선의 우선순위 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정책델파이 추진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사전 준비 단계'를 통해 정책문제 이슈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총 3회의 반복 및 환류를 통해 측정하고자, 구체적인 문항 4가지(1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진단, 2현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3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4청년정책의 성격 및 지향점)를 〈표 V-4〉와 같이 작성하였다.

일반적으로 1단계 델파이 조사에서는 개방형 설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앞서 살펴본 '정책델파이 기법의 특성'에서 비교된 규범형 델파이나 정책델파이 기법을 활용할 때에는 1단계 설문 구성을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이종성, 2001, p.35). 또한 첫 번째 단계의 질문지에는 ①응답자가 이슈의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문항, ②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문항, ③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식별하게 하는 문항 등을 포함한다(남궁근, 2017, pp.356-357).

표 Ⅴ-4 정책델파이 조사 내용의 구성

주제 문항	측정 내용
1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 청년을 둘러싼 환경들 중 청년정책 설계에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 총15개의 선택항목 중 1순위~3순위 선택 - 선택한 1순위~3순위 내용 선택한 사유 기술
	• 선택한 1순위~3순위 내용에 비추어 현행 중앙정부 정책이 환경에 적절 대응 여부 - 적절 대응 여부(예, 아니오) 판단의 사유 기술
2 현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 현시점 청년정책 수립에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 사항에 관한 의견 기술
	• 총11개로 제시된 청년정책 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1순위~3순위 선택
3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 현행 청년정책 긍정평가기술에 대한 동의정도 1점~10점 중 선택 - 점수 선택의 사유 기술
	• 현행 청년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1순위~3순위 기술 - 기술한 내용의 선택 사유 기술
	• 현행 청년정책 중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1순위~3순위 기술 - 기술한 내용의 선택 사유 기술
4 청년정책의 성격 및 지향점	• 청년정책을 정의하는 총5가지 내용에 대한 동의정도 1점~10점 중 선택 - 점수 선택의 사유 기술
	• 청년정책의 주관적 정의 내용 기술 - 내용 기술의 사유

이에 따라 본 연구의 1단계 조사 내용은 연구방법론 상의 이론적 기법을 고려하여 ①제시된 선택항목 중에서 응답하고 그에 대한 사유를 기술하는 문항, ②우선순위를 선택하는 질문과 그 사유를 기술하는 문항, 그리고 ③내용에 대한 동의정도를 서열척도(1점~10점)로 측정하고, 사유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되었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김민수·김병권·김선기·신윤정·임경지(2018)의 '청년연구자 델파이조사' 질문을 참조하고 재구성하여 작성하고, 본 연구의 〈부록〉에 정책델파이 1단계 질문지로 제시하였다.

표 Ⅴ-5 정책델파이 측정 문항 및 항목

주제 문항	질문 문항	질문에 대한 선택항목
1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문1] 청년정책 설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① 4차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 ② 가족 기능의 약화와 사회 전반의 개인화 ③ 기대수명 신장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④ 기후변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위기 ⑤ 남한과 북한의 관계 변화 ⑥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 ⑦ 성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⑧ 소득 및 자산격차의 심화 ⑨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차이 ⑩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의 부작용 ⑪ 기타
	[문1-1] 각 순위별로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	기술
	[문2] 현행 중앙정부 청년정책이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가에 대한 생각	① 예 ② 아니오
	[문2-2]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기술

주제 문항	질문 문항	질문에 대한 선택항목
2 현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문3] 현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청년정책 수립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기술
	[문4] 청년정책 영역 중 가장 중요한 영역*	① 청년 참여 ② 청년 교육 ③ 청년 고용 ④ 청년 주거 ⑤ 청년 부채 ⑥ 청년 생활안정 ⑦ 청년 문화 ⑧ 청년 권리보호 ⑨ 청년 가치관 및 정서 ⑩ 청년 커뮤니티 및 관계 ⑪ 청년 국내외 교류 ⑫ 기타
3 현행 청년정책 평가	[문5]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동의 정도*	① 현행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고 있다. ② 현행 청년정책은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③ 현행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의견 수렴이 잘 이뤄지고 있다. ④ 현행 청년정책은 모든 청년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5-1] 각 평가에 대한 이유*	기술
	[문6] 현행 청년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1순위 긍정 정책: 2순위 긍정 정책: 3순위 긍정 정책:
	[문6-1]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기술
	[문7] 현행 청년정책 중,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1순위 부정 정책: 2순위 부정 정책: 3순위 부정 정책:
	[문7-1]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기술

주제 문항	질문 문항	질문에 대한 선택항목
4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	[문8] 청년정책을 정의하는 문장에 대한 동의 정도*	① 청년정책은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비하는 **인구정책**이어야 한다. ② 청년정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③ 청년정책은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살아갈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이어야 한다. ④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선택권과 자율성, 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치정책**이어야 한다. ⑤ 청년정책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분배정책**이어야 한다.
	[문8-1] 동의하는 이유*	기술
	[문9] 앞으로의 청년정책에 대한 정의*	기술
	[문9-1] 위와 같이 정의하는 이유*	기술

* 김민수 외 (2018)「서울청년정책 평가 및 발전전망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문항을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② 2단계 조사 내용

1단계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조사에서는 1단계 응답자들이 기술한 오픈 질문의 답변 내용을 분석하여 1단계 질문에 담지 못한 사항을 추가하고, 응답자 입장에서 중복적 해석이 이뤄질 수 있는 사항들을 포착하여 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 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한 후, 측정 방식을 재구성하였다.

2단계 델파이조사 중 '1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하위 측정 15개 항목 중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았던 '남한과 북한의 관계의 변화' 항목을 제외하였다. 반면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와 '소득 및 자산격차 심화' 항목의 경우 모두 불평등과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서 다차원적 불평등이

더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통합하였다. 또한 불평등의 원인으로 함께 답변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의 부작용' 항목을 '⑤자산 격차 등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로 흡수 통합하였다.

한편 '성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항목이 좁은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포착되어 '⑥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수정하여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러 응답자들이 기타 오픈 문항에 지역 격차에 관한 의견을 기술하여 '⑧지역 간 격차의 심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선택항목 중 1순위~3순위를 선택하도록 했던 문항들의 측정 방법을 1점~10점의 서열척도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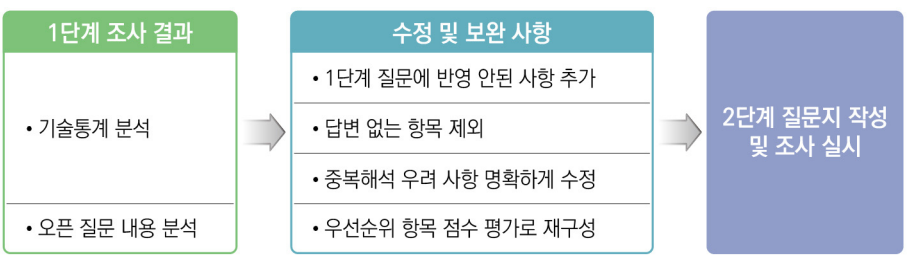


그림 V-2 정책델파이 2단계 조사 내용 작성 절차

③ 3단계 조사 내용

3단계 델파이조사에서는 1, 2단계의 설문 분석 결과, 즉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우선 해당 항목들이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로 꼽혔는가를 제시하고, 제시된 이전 단계의 응답 결과에 대한 의견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를 묻는 방식으로 내용을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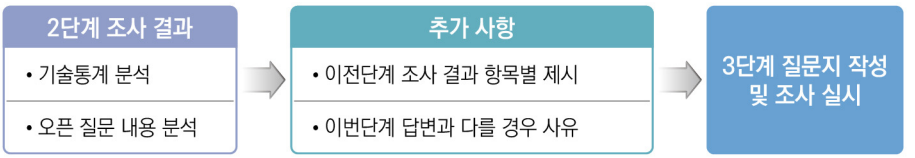


그림 Ⅴ-3 정책델파이 3단계 조사 내용 작성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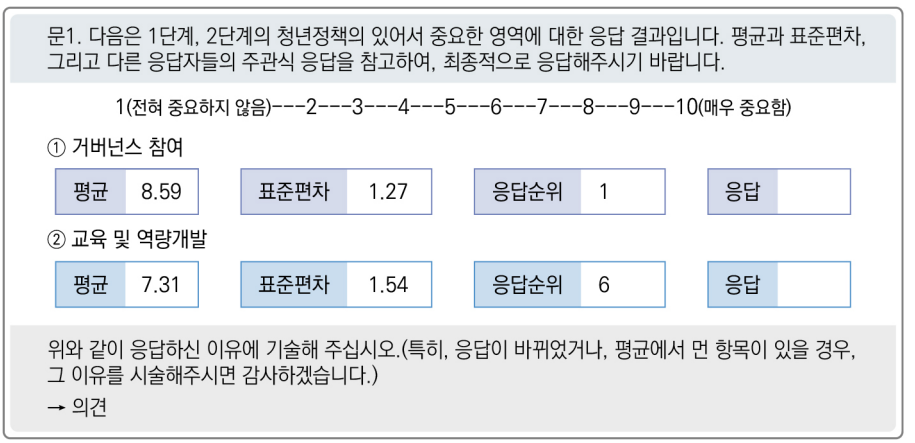


그림 Ⅴ-4 정책델파이 3단계 이전단계 결과 제시(예)

(2) 단계별 결과의 분석 방법

각 단계의 참여자들이 응답한 내용에 대해 분포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단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와 2단계의 결과는 평균 및 표준편차 값, 그리고 응답된 항목의 우선순서를 도출하였고, 3단계 조사의 결과는 평균 및 표준편차 값과 함께 항목별 내용 적합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용타당도비율(Contents Validity Ratio: 이하 CVR)' 값을 산출하였다.

3단계에서 산출된 각 응답 항목의 CVR 값은 Lawshe(1975)가 제시한 정책델파이 참여자 수 별 적정 최소 내용타당도비율 값(minimum values of CVR)을 준거로 삼아, 제시된 최소기준 값에 미치지 못하는 미달 항목을 선별해 내었다.

CVR의 산출은 아래의 수식에 따른다. 아래 식에서 'n_e'는 3단계 정책델파이의 '1점(전혀 중요하지 않음)~10점(매우 중요함)'의 서열척도로 측정한 각 항목에 대해 응답 값이 '7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수이고, N은 전체 응답자의 수를 의미 한다(Lawshe, 1975, p.567).

$$CVR = \frac{n_e - \frac{N}{2}}{\frac{N}{2}}$$

산출 식에 따라 각 측정 항목에 대해 7점 이상 응답한 수가 절반 이하인 경우 CVR 값은 '-(negative)' 값이, 7점 이상 응답자 수와 그보다 낮은 점수의 응답자 수가 반반으로 같을 경우 '0(zero)' 값이 산출된다. 만약 모든 응답자가 7점 이상 응답한 경우 CVR 값은 '1'이 되며, 각 항목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7점 이상 응답하였다면 그 값은 0(zero)~0.99 사이의 값으로 산출된다(Lawshe, 1975, pp.567-568).

표 V-6 정책델파이 응답자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비율(CVR) 최솟값

응답자 수(No. of Panelists)	CVR 최솟값(minoimum value of CVR) (p =.05)
5명	0.99
10명	0.62
15명	0.49
20명	0.42
25명	0.37
30명	0.33
35명	0.31
40명	0.29

* 출처: Lawshe,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p.568 〈Table 1〉에서 발췌.

산출된 내용타당도 비율인 CVR값이 정책델파이 참여자수에 따른 최소 수준에 적합한 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Lawshe(1975)가 제시한 최솟값을 판단의 준거로 삼았다. 본 연구 정책델파이 참여자 수는 총 39명으로, 〈표 V-6〉의 40명 기준으로 했을 때의 최솟값 '0.29'와 35명 기준의 최솟값 '0.31'사이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수가 35명을 초과하지만 40명에는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35명 기준 최솟값인 '0.31'을 측정 항목의 내용타당도 수준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최종 확정하여 판별하였다.

2. 단계별 조사 결과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3단계에 걸쳐 반복 및 환류된 델파이 조사 결과, 청년을 둘러싼 환경 여건 중 청년정책 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이른바 '격차(disparity)'라는 핵심어로 축약될 수 있을 만큼, '자산 격차 등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1순위), '지역 간 격차 심화'(2순위),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3순위) 등으로 나타났음.
- 현시점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거버넌스 참여'(1순위), '생활안전망'(2순위), 커뮤니티 및 문화'(3순위) 등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순위로 꼽힌 사항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주체로서의 청년'이라는 핵심어로 축약될 수 있음.
- 현행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함'(1순위),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2순위). '당사자들의 체감이 낮음'(3순위) 등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됨.
- 현행 청년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고, 이후 추진되는 청년정책은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1순위), '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보편정책'(2순위),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정책'(3순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향점이 도출되었음.

1) 1단계 정책델파이 분석 결과

①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진단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1단계 델파이 조사 중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진단'에서는 10가지 환경 중 1, 2, 3순위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총 15가지 선택항목을 중 '청년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들 중 청년정책 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한 분석 결과, 소득과 자산 격차 등 불평등과 관련한 항을 가장 많은 참여자들이 우선순위로 꼽았다. 즉 선택항목 '⑧소득 및 자산격차의 심화'가 1순위 9명, 2순위 15명, 3순위 3명 등 총 27명이 최우선 과제라 꼽았고, '⑥다차원적 불평등'이 1순위 15명, 2순위 4명, 3순위 2명 등 총 21명이 선택했다. 그리고 '⑩신자유주의

적 정책 기조의 부작용' 항목에 대해 1순위 1명, 2순위 3명, 3순위 4명 등 총 8명이 응답하였는데, 관련 의견 기술에서 응답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가 소득, 자산 격차를 심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다차원적인 불평등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결국 불평등의 심화가 청년을 둘러싼 환경 중 핵심적임을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세대 간 인식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뒤를 이었다. '⑨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차이'가 1순위 5명, 2순위 3명, 3순위 9명 등 총 17명이 공감했으며, '⑦성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1순위 1명, 2순위 4명, 3순위 10명 등 총 15명이 선택했다. 이는 세대 간 인식차이가 큰 상황 속에서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응답자들이 문제라 느끼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Ⅴ-7 정책델파이 1단계 결과: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단위: 명)

구분	측정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①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	1	2	6	9
	② 가족 기능의 약화와 사회 전반의 개인화	2	3	1	6
	③ 기대수명 신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4	3	4	11
	④ 기후변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위기	1	1	0	2
	⑤ 남한과 북한의 관계 변화	0	0	0	0
	⑥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	15	4	2	21
	⑦ 성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1	4	10	15
	⑧ 소득 및 자산격차의 심화	9	15	3	27
	⑨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차이	5	3	9	17
	⑩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의 부작용	1	3	4	8

이어서 인구와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응답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③기대수명 신장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1순위 4명, 2순위 3명, 3순위

4명 등 총 11명이 선택했다. 그러면서 '②가족 기능의 약화와 사회 전반의 개인화'를 꼽은 응답자도 1순위 2명, 2순위 3명, 3순위 1명 등 총 6명이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를 중요하게 바라보면서도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방식의 접근이 아닌, 사람들의 개인화가 심화되고 있는 과정을 고려해 인구구조를 바라봐야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①4차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는 1순위 1명, 2순위 2명, 3순위 6명 등 총 9명이 선택하였는데,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임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구조적 관점을 통해 청년정책이 이뤄질 경우 청년들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기 보다는 일자리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정책을 답습 할 수 있다는 응답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② 현시점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청년정책에 있어서 핵심적 고려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①청년 참여'가 1순위 17명, 2순위 5명, 3순위 4명 등 총 26명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양한 정책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해 정책을 청년들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델파이에 참여자들이 현재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집중 선호된 우선순위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⑥생활안정'이 1순위 9명, 2순위 8명, 3순위 3명으로 총 20명이 응답했으며, '④주거'가 1순위 3명, 2순위 8명, 3순위 7명 등 총 1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불평등 문제가 세대를 이어 확장됨에 따라 공정한 기회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삶의 안전망이 구축돼야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와 변화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담겼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부채' 문제도 적지 않은 응답자 수를 보였다.

커뮤니티나 정서와 관련한 응답자 수도 적지 않다. '⑩커뮤니티 및 관계'는 1순위 3명, 2순위 2명, 3순위 8명 등 총 13명으로 '고용'과 같은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고용이 청년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이제까지 다루어져 왔는데, '커뮤니티 및 관계'에 대한 응답자가 그 만큼 많다는 것은 청년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⑨가치관 및 정서'도 2순위 1명, 3순위 3명으로 총 4명이 응답했는데, 이는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정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Ⅴ-8 정책델파이 1단계 결과: 현시점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측정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현시점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① 청년 참여	17	5	4	26
	② 청년 교육	0	2	1	3
	③ 청년 고용	2	5	6	13
	④ 청년 주거	3	8	7	18
	⑤ 청년 부채	1	1	3	5
	⑥ 청년 생활안정	9	8	3	20
	⑦ 청년 문화	0	2	2	4
	⑧ 청년 권리보호	3	5	2	10
	⑨ 청년 가치관 및 정서	0	1	3	4
	⑩ 청년 커뮤니티 및 관계	3	2	8	13
	⑪ 청년 국내외 교류	0	0	0	0

③ 현행 청년정책 평가

현행 청년정책 평가와 관련된 항목들은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고, 실제 청년정책은 주로 일자리나 주거 정책 중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정책사업의 대상자 범위만 확장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래도 1점에서 10점으로 측정된 평가 점수가 높았던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항목은 점수가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낮지만 평가 항목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거버넌스의 장(場)을 열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창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긍정 평가이거나, 청년들이 시급하게 요구했던 주거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예산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되어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항목과 관련해서는 초기의 소득분위나 다양한 제한들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신혼부부이거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등으로 대표되는, 즉 정부차원에서 권장하는 방향에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 기술되었다.

표 V-9 정책델파이 1단계 결과: 현행 청년정책 평가

(단위: 점)

구분	측정 내용	평균 (편차)
현행 청년정책 평가	①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음	4.10 (1.59)
	②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	4.00 (1.34)
	③ 청년들의 의견 수렴이 잘 이뤄지고 있음	3.85 (1.60)
	④ 청년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3.69 (1.58)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에서는 여러 장(場)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여러 가지 장(場)들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저 아이디어 차원으로 반영하거나 명목상 의견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의 보여주기에 급급해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구조는 갖춰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편 '포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앞서 혜택과 관련해 나왔던 문제점들이 이어서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존 틀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의 청년들이 많다는 지적, 그리고 정책 과정에서 호혜적이거나 포용적인 방향이 아니라 경쟁적 방식에 선출과 선정들로 인해 갈등들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도 기술되었다.

④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

마지막 질문인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에서는 '③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 항목과 '④청년의 선택권, 자율성, 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치정책'의 항목 모두 10점 중 8.6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갈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향점이 크게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V-10 정책델파이 1단계 결과: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

(단위: 점)

구분	측정 내용	평균(편차)	순위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	①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하는 **인구정책**	4.95(2.44)	5
	②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5.92(2.26)	4
	③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	8.64(1.11)	1
	④ 청년의 선택권, 자율성, 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치정책**	8.64(1.22)	1
	⑤ 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보편정책**	7.51(2.42)	3

이 항목 다음 순으로는 '⑤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보편정책'이 7.51점, 그 다음으로는 '②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5.9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을 복지 영역의 시혜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정책접근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에 청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은 중요하게 기술되었다.

가장 낮은 점수의 항목은 '①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하는 인구정책'이었는데, 이는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 등으로 비롯된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일할 청년들이 줄어든다는 관점으로 청년정책을 접근하게 된다면, 결국 기존 정책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것을 나타낸 결과라 할 수 있다.

2) 2단계 정책델파이

①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앞서 2단계 연구내용 구성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총 15개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 순서대로 청년정책 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1순위~3순위로 선택했던 것에서 몇 가지 사항들을 수정·보완하여 질문을 작성하였다. 즉 응답이 나오지 않은 항목은 제외하였고, 같은 의미와 이해를 배경으로 하는 소득 및 자산격차, 그리고 불평등과 관련된 항목들을 포괄성을 기준으로 통합하였으며, 오픈 의견으로 기술된 내용을 참조하여 새롭게 항목들을 구성한 후 우선순위로 측정하지 않고 1점~10점의 서열척도로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⑤자산 격차 등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 항목이 평균 8.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도 가장 낮아 높은 응답 일치성을 보였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청년거버넌스 참여자들이 '자산 격차 등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를 핵심 문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청년들이 노력을 한다하더라도 부모의 자산과 같은 배경으로 인해 삶이 이미 정해져버리는 구조가 점점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그러한 상황들이 결국 일자리, 주거, 부채 등의 현상의 원인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불평등

의 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Ⅴ-11 정책델파이 2단계 결과: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단위: 점)

구분	측정 내용	평균 (편차)	순위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① 4차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	7.00 (1.85)	7
	② 가족 기능의 약화와 사회 전반의 개인화	7.46 (1.57)	5
	③ 기대수명 신장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7.15 (1.66)	6
	④ 기후변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위기	6.26 (1.92)	8
	⑤ 자산 격차 등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	8.79 (1.44)	1
	⑥ 다양성 인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7.62 (1.57)	3
	⑦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차이	7.67 (1.44)	2
	⑧ 지역 간 격차의 심화	7.56 (1.47)	4

다음으로는 '⑦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차이'가 7.67점, '⑥다양성 인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7.62점으로 그 다음 순위를 이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빠르게 압축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세대 간의 인식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은 물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그 과정에서 기존 사회의 관습들과 청년세대 내의 요구가 충돌함에 따라 사회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성의 인정'이 중요한 키워드로 분류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②가족 기능의 약화와 사회

전반의 개인화' 항목도 7.46점으로 다섯 번째 순위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도 기존 차이를 더욱 크게 하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보다 앞선 네 번째 순위의 항목은 '⑧지역 간 격차의 심화'인데, 이는 청년정책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예산규모, 청년인구수 등의 요인으로 청년정책의 초점이나 방향이 다르게 설계되면서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 속에서 이 같은 차이를 명시적 수치로 확인하고, 그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이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청년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로 꼽히는 '①4차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③기대수명 신장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일곱 번째와 여섯 번째를 각각 차지하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인구나 산업구조 환경과 관련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그와 같은 시선으로 정책을 접근했을 경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4차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할 경우 다시 일자리 중심적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자기탐색이나 방향 설계보다 빠르게 고용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도 기존 저출산 정책이나 인구 유입정책으로 접근된다면, 기존의 사회질서에 청년들을 맞추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것이다. 다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응답도 일부 나타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항목이었는데, 이는 청년인구가 급감하는 농어촌 및 소도시 지역의 청년거버넌스 참여자들의 환경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점수로 산출된 항목은 '기후 변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위기'로 평균 6.26점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보다는 청년정책에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일 뿐, 주제에 대한 관심 정도는 낮지 않다. 실제 표준편차가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양한 응답들이 이 항목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다른 항목들은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환경이지만, 기후변화는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하고, 개발시대를 살아온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세대가 이 같은 해결의 주인공이라는 적극적인 의견도 개진되었다.

② 현시점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2단계 조사에서는 '현 시점에서 청년정책의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1단계의 질문에서 '청년 참여'가 너무 폭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음을 포착하여, 이를 '거버넌스 참여'로 명확히 제시하였다. 또 주거, 부채, 생활안정 등을 청년들의 내용을 전반적인 '생활 안전망'으로 포괄해 담았다. 또한 커뮤니티와 문화는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통합하였으며, 문항마다 특성을 살려 구분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응답된 내용이 전혀 없었던 '국내외 교류' 항목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우선순위 선택 응답을 10점 평가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①거버넌스 참여' 항목이 8.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청년거버넌스 참여 활동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도 있지만, 기술된 이유를 살펴보면 이 항목의 높은 사유를 다른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청년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주거 등이 더 우선되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프레임이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 개진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제기하는

관점과 방향이 반영된 채 변화가 일어나야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인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나선다고 해도 이는 제한적일뿐더러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금의 관점에서의 산업구조에 맞춰 무턱대고 일자리를 늘리거나 교육을 한다면 더 문제가 악화될 수 있고, 차라리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표 V-12 정책델파이 2단계 결과: 현 시점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단위: 점)

구분	측정 내용	평균 (편차)	순위
현 시점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① 거버넌스 참여	8.59 (1.27)	1
	② 교육 및 역량개발	7.31 (1.54)	6
	③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	6.92 (1.61)	7
	④ 청년 생활 안전망(주거, 부채, 소득지원)	8.46 (1.31)	2
	⑤ 정서 및 정신건강 지원	7.62 (1.5)	5
	⑥ 커뮤니티 및 문화	7.69 (1.45)	4
	⑦ 생활환경 및 일터에서의 안전	7.72 (1.47)	3

이 같은 의견들 속에서 '④청년 생활 안전망(주거, 부채, 소득지원)' 항목과 '⑦생활환경 및 일터에서의 안전' 항목이 각각 8.46점과 7.72점으로 각각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꼽힌 항목은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을 통해 그 속에서 청년들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그저 잠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부채, 소득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기존의 구조를 흔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⑤정서 및 건강지원' 항목과 '⑥커뮤니티 및 문화' 항목이 각각 7.62점과 7.69점으로 각 5위와 4위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들이 주로 금전 지원이나 교육 지원이었기 때문에, 이들 지원 이외에 다양한 내용과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앞서 분석된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서도 개인화 등의 문제로 출발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동체를 찾고 싶다는 청년들의 욕구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회에 소외 받는 청년들이 정서지원과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기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②교육 및 역량개발' 항목과 '③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 항목이 각각 7.31점과 6.92점으로 각각 6위와 7위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항목 응답 값이 평균 8점과 7점대를 기록하며 그 격차가 크지 않아, 모든 영역의 정책이 균형감을 유지해야 할 만큼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 항목은 유일하게 6점대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를 보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일자리 영역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사 표현임과 동시에, 미래사회의 변화를 발맞추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 이라는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역량 개발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사회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현행 청년정책 평가

‘현행 청년정책 평가’ 질문과 관련해서는 1단계 델파이조사에서 응답된 부정적 이유들에 더하여 부정형 질문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③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함’ 항목이 평균 7.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청년정책 예산이 일자리와 주거에만 과도하게 몰려있고, 주거의 경우도 ‘저리 대출’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답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②지역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항목이 평균 7점으로 두 번째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차원에 청년정책은 아직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고, 기존에 추진하던 내용들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기보다는 부처별로 추진되는 일괄사업에 그치고 있어 부정적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방정부도 아직 서울시 중심으로 개발된 청년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하는 수준이라 특화된 정책들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어 ‘④간접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부담 증가’ 항목과 ‘③당사자들의 체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항목이 각각 6점과 5.97점을 기록했다. ‘간접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부담 증가’는 기존 정책 중 학자금이나 주택 정책의 저리 대출 방식으로서, 결과적으로 부채를 얻게 되는 일명 ‘부담 증가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항목이다. 다만 교육이나 정서 지원 등의 간접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당사자들의 체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항목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빠른 속도로 청년정책이 확산됨에 따라 청년정책 수혜자가 늘어난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의 수와 예산은 늘었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체감이 더 떨어졌다는 상충된 의견들이 피력되었다.

표 V-13 정책델파이 2단계 결과: 현행 청년정책 평가

(단위: 점)

구분	측정 내용	평균 (편차)
현행 청년정책 평가	① 당사자들의 체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5.97 (1.98)
	②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7.00 (2.09)
	③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함	7.49 (1.86)
	④ 간접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음	6.00 (2.36)

④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

2단계 조사에서는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 질문과 관련하여 1단계 델파이조사 보다 세분화 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롭게 문항들을 추가되었다. 특히 '지역 격차'와 관련된 의견들이 1단계에서 다수 기술된 만큼 이를 새로운 항목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불평등 문제 해결'이 중요 키워드로 드러난 만큼 이에 따라 '분배정책'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분배과정에서 선별적인 방식과 보편적 방식에 대한 지향점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도 추가되었다.

분석 결과, '③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 항목이 8.67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청년정책이 단순히 청년을 수혜자로 해석해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앞으로의 사회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드는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발 맞춰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과정이 설계돼야

함이 강조되었다. 그래야만 급변하는 사회에 조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었다.

다음으로는 '⑤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보편정책' 항목과 '⑦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정책', '⑥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분배정책' 항목이 각각 8.51점과 8.18점, 8.08점으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격차들로 인한 어려움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담긴 결과이다. 사회통합정책의 경우는 기존의 사회통합이 아닌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사회통합이 이뤄지며, 이 속에서 다양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술되었다. 불평등의 핵심적인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분배정책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이어서 '④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정책' 항목이 7.74점으로 다섯 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현재 서울이라는 중앙 중심적인 구조 속에서 지역격차가 점점 커지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지역으로 갈수록 더 커져가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야만 당사자들이 더 체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담겨있다.

다음으로 '①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하는 인구정책'과 '②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선별정책' 항목에 대해선 각각 5.77점과 5.54점으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인구정책 관점으로 출산율 증가시키려는 접근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과 더불어 청년세대를 사회 동력으로 해석하고 이를 청년들의 요구가 아닌 사회적 요구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을 돕는 것을 넘어 보편성을 띄고 청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들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응답 모두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인구정책의 관점을 개선하거나 보편정책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을 우선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들도 상충된 의견으로서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Ⅴ-14 정책델파이 2단계 결과: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

(단위: 점)

구분	측정 내용	평균(편차)	순위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	①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하는 **인구정책**	5.77(2.32)	6
	②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5.54(2.10)	7
	③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	8.67(1.46)	1
	④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정책**	7.74(1.76)	5
	⑤ 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보편정책**	8.51(1.47)	2
	⑥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분배정책**	8.08(1.83)	4
	⑦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정책**	8.18(1.83)	3

3) 3단계 정책델파이

①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3단계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편차가 줄고 평균값에 가까운 항목들이 늘어났다. 예컨대 2단계 분석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던 '⑤자산 격차 등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 항목의 평균값은 변화가 없지만, 응답자들의 편차가 줄어들었다. 내용타당도비율(CVR) 0.85로 산출되어, 다차원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큰 변동을 보인 항목은 '⑧지역 간 격차의 심화'이다. 평균값이 7.56점에서 7.77점으로 상승했고, 항목의 순위가 4위에서 2위로 올랐다. 이는 서로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가 공유된 후, 다차원적 불평등과 세대 간 인식차이가 지역에서 더 크게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도 동의하면서 점수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내용타당도비율도 0.79로 다차원적 불평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단계 조사결과에서 변화된 결과 값을 갖는 또 다른 항목은 '⑦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차이'와 '⑥다양성 인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항목이다. 이 두 항목은 모두 평균값이 오르고 표준편차가 줄어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평균값이 같아져 공동 3위가 되었다. 다만, 내용타당도비율에서는 '세대 간 인식차이' 항목이 0.64로 '다양성 인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항목의 0.59보다 더 높게 나타나 세대 간 인식차이가 응답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공감을 받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①4차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 항목이 '③기대수명 신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기존에 일자리 중심적 관점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응답자들의 답변을 참조하게 됨으로써 산업구조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균값 순위와 내용타당도비율을 비교해보면 '⑥다양성 인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항목이 순위에 비해 내용타당도비율이 다소 낮게 산출되었는데, 이는 여성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다양성 인정에 대해 요구가 큰데 반해,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정책델파이에 참여한 여성 응답자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Ⅴ-15 정책델파이 3단계 결과: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단위: 점)

구분	측정 내용	평균 (편차)	순위	내용 타당도비율 (CVR)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① 4차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	7.18 (1.37)	6	0.59
	② 가족 기능의 약화와 사회 전반의 개인화	7.33 (1.32)	5	0.49
	③ 기대수명 신장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7.03 (1.35)	7	0.54
	④ 기후변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위기	6.26 (1.77)	8	*-0.03
	⑤ 자산 격차 등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	8.79 (1.32)	1	0.85
	⑥ 다양성 인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7.72 (1.50)	3	0.59
	⑦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차이	7.72 (1.38)	3	0.64
	⑧ 지역 간 격차의 심화	7.77 (1.31)	2	0.79

* : 내용타당도(CVR) 값이 최소기준 값(0.31) 보다 낮은 경우임.

② 현 시점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3단계 조사에서는 '현 시점에서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질문과 관련해서는 변동이 크게 없고 편차가 줄어들었다.

유일하게 순위 변동이 일어난 것은 '⑥커뮤니티 및 문화' 항목이 3위로 올랐고, '⑦생활환경 및 일터에서의 안전' 항목이 4위로 내려간 것이다. 이는 커뮤니티 및 문화를 단순히 문화적 필요로 인식되었으나, 다른 응답자들의 답변이 공유된 후 청년들의 정서적인 면이나 공동체적 요소가 담겨있다고 해석되면서 순위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①거버넌스 참여'와 '④청년 생활 안전망' 항목에 대한 내용타당도비율은 각각 0.95와 0.9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단계 결과에 비해 편차도 더욱 줄어들었다.

표 Ⅴ-16 정책델파이 3단계 결과: 현 시점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단위: 점)

구분	측정 내용	평균 (편차)	순위	내용 타당도비율 (CVR)
현 시점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① 거버넌스 참여	8.69 (1.10)	1	0.95
	② 교육 및 역량개발	7.31 (1.40)	6	0.38
	③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	6.95 (1.32)	7	0.38
	④ 청년 생활 안전망(주거, 부채, 소득지원)	8.59 (1.25)	2	0.90
	⑤ 정서 및 정신건강 지원	7.64 (1.22)	5	0.74
	⑥ 커뮤니티 및 문화	7.85 (1.06)	3	0.79
	⑦ 생활환경 및 일터에서의 안전	7.74 (1.48)	4	0.64

③ 현행 청년정책 평가

3단계 조사에서는 '현행 청년정책 평가' 질문과 관련하여 1단계, 2단계 조사를 통합해 응답을 받았으며, 그 결과 편차가 줄어들고 응답들이 더욱 명확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평가는 2단계 조사에서와 같이 부정적이다. 특히

‘청년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음’에 대한 공감이 가장 크게 나타나났다.

의견 수렴, 욕구 반영, 체감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질문을 했으나, 이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욕구가 반영된 정책이 추진되는 것도 아니며, 그에 따른 체감도 낮은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3장의 면접조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의견수렴의 반영과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Ⅴ-17 정책델파이 3단계 결과: 현행 청년정책 평가

(단위: 점)

구분	측정 내용	평균 (편차)	순위	내용 타당도비율 (CVR)
현행 청년정책 평가	①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음	4.08 (1.26)	4	-0.95
	②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	3.90 (1.10)	5	-0.95
	③ 청년들의 의견 수렴이 잘 이뤄지고 있음	3.67 (1.30)	6	-0.90
	④ 청년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3.54 (1.39)	7	-0.95
	⑤ 당사자들의 체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6.28 (1.57)	3	-0.18
	⑥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7.36 (1.50)	2	0.49
	⑦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함	7.69 (1.42)	1	0.64
	⑧ 간접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음	6.18 (2.10)	-	*-0.08

* : 내용타당도(CVR) 값이 최소기준 값(0.31) 보다 낮은 경우임.

④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

3단계 조사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과 관련해서는 2단계 결과에서 나타난 항목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편차는 줄었다.

내용타당도비율을 보면, '③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 항목이 가장 큰 공감을 받았고, '④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정책'과 '⑤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보편정책', '⑥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분배정책' 항목 모두가 0.79점으로 긍정적 답변의 수가 일치했다. 이는 질문에서 제시한 청년정책의 성격 및 지향점 대다수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V-18 정책델파이 3단계 결과: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

(단위: 점)

구분	측정 내용	평균 (편차)	순위	내용 타당도비율 (CVR)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	①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하는 **인구정책**	5.51 (1.83)	6	-0.03
	②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5.41 (1.87)	7	-0.33
	③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	8.72 (1.38)	1	0.95
	④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정책**	7.74 (1.58)	5	0.79
	⑤ 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보편정책**	8.49 (1.64)	2	0.79
	⑥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분배정책**	8.15 (1.77)	4	0.79
	⑦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정책**	8.21 (1.66)	3	0.74

앞서 분석된 '청년을 둘러싼 환경' 질문에서는 '지역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성격 및 지향점'에서 '지역정책'이 낮은 순위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격차가 적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방향성이 지역정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술된 내용 중에도 지역적 특수성을 너무 강조하게 될 경우 보편적으로 보장받거나 누려야할 권리가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침해받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다양성이 더 죽을 수 있다는 의견이 의미 있게 개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타당도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역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들 다수가 공감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로서 해석될 수 있다.

3. 소결: 청년정책, 미래사회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정책델파이 실시 결과,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정책 환경 하에서 국가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방향은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의 지향점이 도출되었음.
- 미래사회정책으로 현행 청년정책이 안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현행 청년정책의 한계, 즉 정책분야의 불균형, 지역별 여건과 상황에 대한 낮은 고려, 당사자들의 낮은 체감도 등을 청년거버넌스 참여와 생활안전망에 대한 보편적 확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정책델파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 제6장에서 본 연구의 앞선 장들에서 분석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께 통합된 결과로 분석되고, 현행 청년정책 개선의 방향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개입 방안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이 장에서는 본 연구가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횡적인 축으로 연구의 주요 내용을 구성한 것의 마지막 단계인 '미래'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정책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 방향과 개선해야할 사항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대내외적 환경은 '자산격차 등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이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 간 격차 심화'와 '다양성 인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이다. 즉 '격차(disparity)'라는 핵심어로 축약할 수 있는 불평등 구조에 대한 고려가 청년들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설계를 함에 있어 핵심 적인 고려사항인 것이다.

두 번째, 「청년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있고,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청년들의 거버넌스 참여와 주거, 부채 그리고 소득지원을 포함하는 생활안전망의 강화이다.

세 번째,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주로 정책이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체감도

가 낮다는데서 기인한다.

네 번째, 청년정책의 성격과 지향점은 이제까지 추진되어온 일자리 정책이나 취약한 청년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닌,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으로 나아가야하며, '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보편정책'이 되어야 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정책'으로 안착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전국의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인지하는 청년들을 둘러싼 환경 여건 중 현 시점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위해 산업이나 인구구조를 토대로 설계되었던 기존의 청년정책은 직면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직접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정책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사항들을 당사자의 관점으로서 분야별 균형감 있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청년정책에서 담아가야할 중요한 과제로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은 향후 청년정책이 일자리정책이나 복지정책, 또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이 아닌,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으로 발전하고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미래사회정책은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을 보편정책으로 강화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정책, 그리고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정책이 함께 그 내용 속에 담겨진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요약된 정책델파이의 결과는 다음의 제6장에서 앞선 장들에서 고찰된 내용들, 그리고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실증자료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목적인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표 V-19 정책델파이 최종 결과

구분	우선순위별 내용	순위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① 자산 격차 등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	1
	② 지역 간 격차의 심화	2
	③ 다양성 인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3
	④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차이	3
	⑤ 가족 기능의 약화와 사회 전반의 개인화	5
	⑥ 4차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	6
	⑦ 기대수명 신장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7
현 시점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① 거버넌스 참여	1
	② 청년 생활 안전망(주거, 부채, 소득지원)	2
	③ 커뮤니티 및 문화	3
	④ 생활환경 및 일터에서의 안전	4
	⑤ 정서 및 정신건강 지원	5
	⑥ 교육 및 역량개발	6
	⑦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	7
현행 청년정책 평가	①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함	1
	②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2
	③ 당사자들의 체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3
	④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음	4
	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	5
	⑥ 청년들의 의견 수렴이 잘 이뤄지고 있음	6
	⑦ 청년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7
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	①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	1
	② 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보편정책	2
	③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정책	3
	④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분배정책	4
	⑤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정책	5
	⑥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하는 인구정책	6
	⑦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7

제6장 청년정책 개선 방향 및 추진 과제

1.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2. 청년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설정
3.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6 청년정책 개선 방향 및 추진 과제*

1.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본 연구에서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의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하여 현행 청년정책 평가, 개선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연구내용 구성과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혼합연구방법론(①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유경험자 면접조사, ②12개 영역 30개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포용국사 사회정책 3대 비전 및 9대 전략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③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대상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델파이 조사)을 활용하여 도출하였음.
-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종합해보면, 그 간의 청년정책 추진을 통해 이슈가 제도화되고 청년 당사자의 정책참여 기회를 넓혔다는 성과가 있었으나, 청년집단은 다양한 측면의 격차와 불평등이 확대되는 환경 하에서 다층화·다분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청년정책은 여전히 ①정책의 개념과 방향성의 부재, ②현안 대응 중심의 정책추진, ③취약계층 청년들의 체계적 정책 배제, ④지역 격차, ⑤경제적 계층에 따라 정책욕구가 다양한 층위로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청년당사자들은 국가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사회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사회정책으로 안착되기를 희망하며, 현 시점에서 소득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①소득보장제도의 개혁, ②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③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 장의 1.은 변금선 부연구위원이 초고를 작성하고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수정·보완하였으며, 2.와 3.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1) 주요 결과 요약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통해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를 발표하고,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포용국가는 질적 성장, 공존과 상생, 미래를 향한 혁신사회,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전통적 사회문제가 아닌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으로서 3가지 비전(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과 9가지 전략(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지역균형발전,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인적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정책기획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18.09.06., pp.1-3; 관계부처합동, 2019.02.19., p.4).

본 연구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이 가장 적극적으로 발휘되어야 할 시기와 대상이 생애주기의 불평등이 중첩되고 집중되어 나타나는 청년기 그리고 청년을 위한 정책영역이라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청년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개선 방안과 추진 방향 및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청년들이 감내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일자리 문제를 넘어 주거, 복지, 젠더, 심리·정서적 측면 등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나, 지난 십수 년 간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청년실업률 완화를 위한 일자리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왔다. 또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부처에서는 기존 정책지원 사업의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거나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단편적 현안 대응만으로는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청년들의 삶을 지지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문제가 이슈화,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청년

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이 변화하고 청년당사자들의 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청년정책의 개념 부재와 대상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청년정책에서 배제되는 청년이 존재하고, 고용정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청년정책이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의 한계와 개선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국가 사회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현행 청년정책의 좌표를 진단하고, 이제까지의 청년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 그리고 현행 정책에 대한 당사자 평가를 통해 포용적 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추진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년기본법안」 제정 이후, 제정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수립될 청년정책의 정책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포용적 사회 실현이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사회정책의 하나로 청년정책이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도출이라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로는 연구의 주요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횡축으로 구조화하고, 둘째로는 연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혼합 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의 하나인 통합적 설계(convergent design)를 종축으로 설계하였다. 내용 측면에서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청년정책의 정책 형성 및 추진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과거부터 현재시점까지의 과정으로서 '과거'를 파악하고,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인식을 '현재'의 현황으로서 평가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이 이미 발표된 상황에서 향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핵심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을 위치시키고 안착시키기 위해 '미래'를 위한 개선의 방향과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성과와 한계는 청년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자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자료, 그리고 현행 청년정책의 한계를 넘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으로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청년정책의 방향과 개선점 도출과 관련해서는 정책델파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방안의 근거인 실증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은 4단계, 즉 '①문헌고찰→②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 면접조사→③19세~34세 청년대상 온라인설문조사→④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정책델파이조사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각 단계에서 분석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청년 정책 개선 방향 및 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단계인 제2장에서는 그간 발표된 정부정책 자료와 국내외 발간 자료들을 토대로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수립의 배경, 포용국가 실현에 있어서 청년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간 추진되어온 청년정책의 현황과 과제가 진단되었다. 포용국가 사회정책은 취약한 구성원을 위한 소극적 사회정책에서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정책으로의 전환과 맥을 같이 하며,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사회정책의 주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청년'이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청년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인 사회통합, 사회지속 가능성, 사회혁신의 핵심 주체이다. 청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중간단계에 위치하며, 청년기는 생애초기라는 점에서 전생애 불평등 구조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또한 청년은 비생산인구를 부양하는 핵심적 생산인구이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회재생산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년은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와 이중구조로 안정적인 노동시장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사회적 재생산 역할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의 세대 내 격차를 심화시키고, 경제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건강과 공정성 인식도 계층적으로 분화되는데 핵심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청년정책은 생애주기단계로서 청년기를 사회정책에 포괄하는 과정을 통해 확대되었다. 과거 청년정책은 '청년=근로능력집단'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에 따라 청년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청년의 문제가 고용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계층적으로 나타나면서, 청년실업률 완화를 위한 고용정책만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청년정책은 여전히 고용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은 고용정책에서 포용적 사회정책으로 확장하는 특성을 보였으나, 청년정책의 정의, 대상, 목표, 중장기적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정책 위주로 청년정책을 추진해 청년 모두를 위한 사회정책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제3장에서는 연구의 두 번째 단계로, 청년문제가 이슈화되고 정책화되는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가 도출되었다. 지난 십여년 간 청년 이슈의 의제화 및 정책화 과정에 참여했던 청년거버넌스 당시 참여자들 1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이슈 제도화 과정에서의 성과는 ①문제제기 이슈의 정책 제도화, ②조례제정을 통한 지방정부 청년 정책의 빠른 확산, ③'청년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발굴이었으며, 한계로는 ①정책 방향 설정의 한계와 청년에 대한 몰이해, ②청년활동가의 소진과 정책도구화, ③청년 세대 내 격차와 배제의 문제 표면화, ④'다음'이 그려지지 않는 내용의 정책 추진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는 ①국가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개념화, ②기존 청년정책의 체계화 및 효율화, ③청년정책 의제 설정 및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참여 효능감 회복, ④청년세대 내 격차와 지역 간 격차가 고려된 중앙정부 추진 계획 수립이라는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제안의 토대가 되었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세 번째 단계인 청년들이 인식하는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시급한 청년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19세~34세 청년 총 733명을 대상으로 '현행 청년정책 당사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의견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 및 전략]을 기본 틀로 하여 선정된 12개 영역 30개의 현행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평가의견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작성된 설문지 초안은 여러 단계의 검토 및 수정 작업, 그리고

IRB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인지도와 수혜율, 중요도와 도움 정도, 포용적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우선순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영향요인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 서열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 다항로짓모형(Mutinomial logi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에 응답한 733명을 대상으로 12개 영역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수혜율을 분석한 결과,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도와 수혜율은 대체로 낮으며, 정책 별로 그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인지도 19.5%~99.0%, 수혜율 7.2%~56.2%). 인지도가 50%를 넘는 정책은 학자금 지원(99.0%), 구직 및 창업지원(83.5%),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79.0%) 이며, 인지도가 30%에 못 미치는 정책은 대체로 최근에 도입된 정책들이었다(다양한 역량개발 19.5%, 일터 안전 22.0%, 청년정책 거버넌스 22.9%, 고용안전망 32.1%).

청년정책 인지도 및 수혜율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소득계층과 청년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정책인지의 수준과 지원 수혜율의 차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책 인지여부와 수혜경험 영향 요인은 ①교육수준, ②성별, ③경제여건 인식, ④소득, ⑤거버넌스 참여, ⑥근로형태이며, 정책사업별로 나누어 볼 때, 대체로 대학졸업 이상의 청년과 여성이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여건 수준이 낮은 청년들은 ①학자금 지원, ②신용회복지원, ③고용안전망 정책을 수혜할 가능성 높았고, 경제여건 수준이 높은 이들은 ①활동 공간 및 서비스 정책, ②역량개발 정책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적 계층에 따른 정책인지와 욕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을 기본 틀로 하여 선정된 12개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정책들이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생활안전망에 대한 정책(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주거지원, 일터 안전보장 정책)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미취업자, 대졸 미만 저학력 집단이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도움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였고, 재학생, 대학졸업 이상, 거버넌스 참여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가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도움 정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또한 정책 인지여부와 수혜경험,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거버넌스 참여의 영향력은 인지도, 수혜율이 낮은 정책(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기업 인센티브, 활동공간, 역량개발)에서 크게 나타났다. 생활안전망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도 인식은 경제여건 인식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①역량개발, ②일터안전 정책의 중요도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정책욕구가 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청년정책 당사자 의견조사의 마지막 단계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에 대한 청년들의 동의수준과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3대 비전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고용안전망, 기회공정배분 전략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다항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진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컸고, 미취업자는 소득보장제도 개혁보다는 고용안전망 구축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경제여건을 낮게 인식하는 청년들은 고용안전망 구축보다는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경제여건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소득보장제도 개혁보다는 다른 여타의 정책(저출산 고령사회 능동적 사회시스템,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사회통합 위한 지역균형 발전, 역량강화와 일터 혁신)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청년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요인의 분석결과를 통해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과 층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향후 청년정책의 추진에 밑거름이 되는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방향과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델파이(Policy Delphi)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활동가 39명을 대상으로 3단계의 반복 및 환류체계를 거쳤으며, 4가지(①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②현 시점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③현행 청년정책 평가, ④청년정책 성격 및 지향점)로 구성된 조사내용에 대해 1단계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질문과 측정 내용을 수정·보완해 나가며 단계적으로 반복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와 내용타당도비율(CVR)을 산출하여 순위를 도출하고 비교·분석하였다.

3단계에 걸쳐 반복 및 환류된 정책델파이 조사 결과, 청년을 둘러싼 환경 여건 중 청년정책 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이른바 '격차(disparity)'라는 핵심어로 축약될 수 있을 만큼, '자산 격차 등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1순위), '지역 간 격차 심화'(2순위),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3순위) 등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체로서의 청년'이라는 핵심어로 축약될 수 있다. 현행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함'(1순위),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2순위). '당사자들의 체감이 낮음'(3순위) 등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현행 청년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고, 이후 추진되는 청년정책은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1순위), '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보편정책'(2순위),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정책'(3순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향점이 도출되었다. 이 같은 정책델파이 결과를 토대로, 국가정책으로서의 청년정책이 미래사회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한 정책추진의 네 가지 과제(①다차원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 방위적 접근, ②기존의 산업, 인구 구조적 관점을 넘어 미래사회 설계의 관점으로 접근, ③청년 당사자의 거버넌스 참여를 통한 정책 개선, ④지역 간 격차와 특성을 반영한 정책추진)가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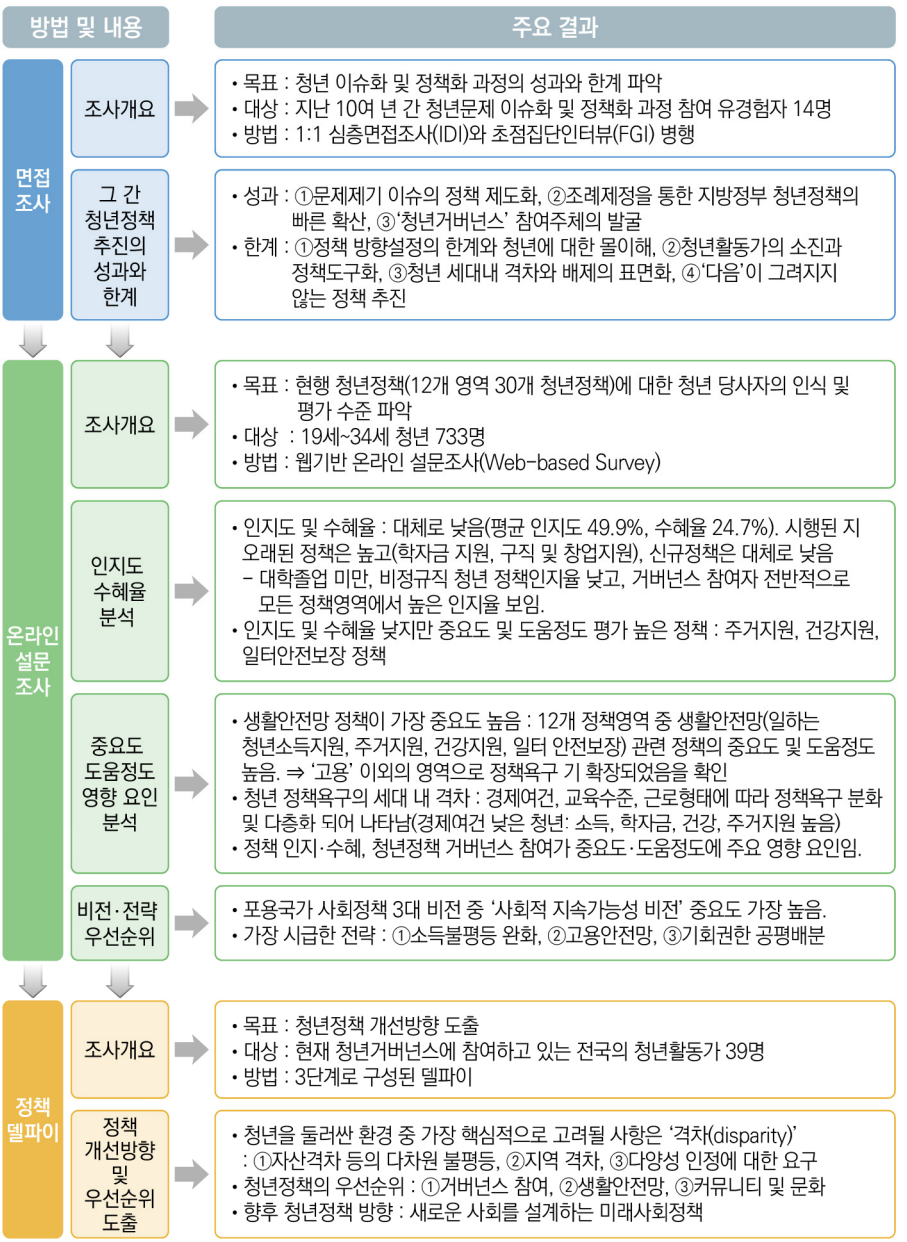


그림 Ⅵ-1 주요 실증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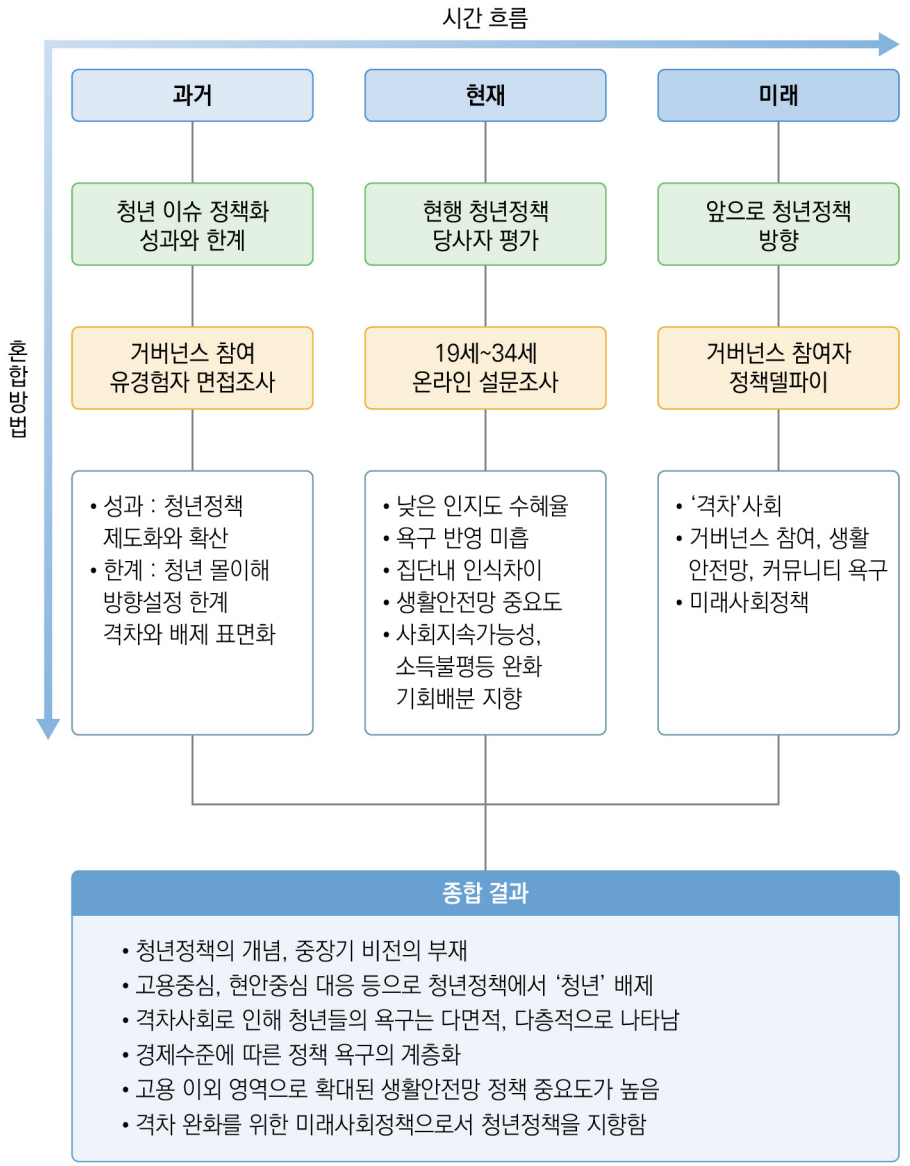


그림 Ⅵ-2 종합결과의 도출

2) 주요 실증 결과에 기초한 정책 개선 방향

여기에서는 앞에서 확인한 단계별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여덟 가지(①청년정책의 개념 부재, ②정책 배제된 청년 집단, ③청년정책의 지역 격차, ④생활안전망에 대한 높은 욕구, ⑤청년 정책욕구의 다층적 분화와 계층화, ⑥정책 인지 및 수혜를 통한 정책 체감도의 향상, ⑦거버넌스 참여자의 높은 정책인지 및 체감도, ⑧사회적 지속가능성, 소득불평등 완화, 기회·권한의 배분 선호로 구분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1) 청년정책의 개념 부재 : 청년정책의 체계화

주요 결과	• 사회구조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청년 세대 내 격차 확대 • 수직적 다층화 수평적 분화된 청년집단의 정책 욕구 대응의 한계 • 청년정책의 합의된 개념의 부재 및 취약한 체계성

정책 ⇓ 개선

개선 방향	• 포용적 사회정책의 핵심대상으로서 청년 및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 수직적 다층화, 수평적 다분화 청년에 대한 이해수준 향상

첫째, 청년정책의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아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육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경제적 불평등 악화, 청년 인구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등 청년이 놓인 사회경제적 환경은 복잡하게 분화하고 고착화 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의 세대 내 격차가 커졌고 청년들의 정책 욕구가 다층으로 분화되었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 청년은 사회정책의 주된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고용정책 위주의 대응을 반복해왔다. 문재인정부는 생애주기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청년'을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편입시켰으나, 기존의 고용정책 중심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청년정책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정책은 고용정

책으로, 청년정책의 대상은 '일하지 못하는(않는) 미취업 구직' 청년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청년이 '주체'가 아닌 '객체', 그리고 정책을 주도하는 '적극적 시민'이 아니라 '약자'로 여겨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제3장)와 정책델파이 조사(제5장)에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들은 청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격차 사회'라고 진단하였으며, 청년정책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 부재와 몰이해로 인해 청년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이 정책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층위에 존재하는 청년의 내적격차와 다양성을 반영하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표 Ⅵ-1 청년정책 개념 부재와 청년에 대한 이해 부족

〈면접조사 결과〉

핵심어	범주	세부 하위범주
청년 개념 사회적 합의 부재	청년에 대한 몰이해	• '청년=약자' 프레임 – '어려운' 청년
		• '연령계층' 단일 집단으로 인식 – 다양한 층위에 복잡하게 위치 집단 내 차이 존재
		• 청년정책 대상의 편향 – 중상층 청년에 쏠림
	정책추진 주체의 이해 부족	• 담당공무원의 역량 부족 – 낮은 이해력, 경직된 인식
		• '생물학적' 청년에 의한 정책 추진 – 청년정책 방향 표류

〈정책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주요 내용
청년을 둘러싼 환경 진단	• 소득 및 자산격차의 심화 •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 •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차이 • 인구구조 변화 • 산업구조 변화
청년정책 평가	• 대체로 낮은 평가 • 일자리 정책의 대상자만 확대된 수준 • 청년을 배제하여 포용적으로 이뤄지지 않음 • 분야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함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청년정책의 체계화는 청년정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하려는 정책인지에 대한 정의, 각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온 청년정책의 재구조화 등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구조적 위험에 놓인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책 배제된 청년집단: 고졸 이하, 비정규직 청년 정책 포용성 강화

주요 결과	• 청년정책에서 배제된 집단 존재 • 세대 내 상당한 정책인지 및 수혜율 격차 확대 가능성 큼 • 욕구수준은 높으나, 실제 정책지원 수혜율은 낮은 정책(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신용회복지원)들 발견

정책 ⇓ 개선

개선 방향	• 고졸이하, 비정규직 청년 정책정보 접근성 및 리터러시 함양 지원 • 수요와 욕구에 기반 정책 수립 강화

둘째, 오랫동안 사회정책에서 배제되어온 청년이 '청년정책'에서조차 배제되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제2장 면접조사에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청년들이 취약계층 청년들의 정책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청년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청년들이 청년정책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정책 대상이 대졸 이상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제도 설계의 편향성),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가 대학(원) 재학생을 중심으로 공유되는 것(정책리터러시 제약)에서 기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정책델파이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청년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에 대한 동의 수준은 3.69점으로 청년정책 평가에 관한 4개 문항 중 가장 낮았다.

표 Ⅵ-2 청년정책으로부터의 배제

〈면접조사 결과〉

핵심어	범주	세부 하위범주
배제	취약계층 배제	• 소수집단의 배제(저학력) - 청년 정책 대상에서 배제 - 정책 리터러시 제약과 이로 인한 접근성 격차

〈정책델파이 조사 결과〉

단계	측정 내용	평균/순위
1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	4.00/2위
	청년 배제하지 않고 포용적으로 이뤄짐	3.69/4위
3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	3.90/2위
	청년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적으로 이뤄짐	3.54/4위

* 주: 4개의 '긍정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로, 순위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발견은 제4장 청년정책의 인지도와 수혜율 분석결과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청년 당사자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수혜율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집단간 차이가 뚜렷했다. 12개 영역 청년정책에 대한 평균 인지도는 49.9%, 수혜율은 24.7%에 그쳤다. 대학졸업 이상 집단, 정규직,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인지도와 수혜율이 높았다. 이는 고졸 이하, 비정규직 취약청년이 청년정책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의 근거가 된다.

인지도와 수혜율에서 나타난 정책의 배제는 두 가지 측면(①정책 대상 편향성으로 인한 정보접근성 제약, ②청년 당사자 욕구와 정책 대응의 미스매치)으로 설명되는데, 첫째로는 정책 대상 편향으로 인한 정보접근성 제약을 들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비정규직의 정책 인지도와 수혜율이 낮았다. 이는 청년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하는 고등학교 졸업 청년, 진학 후 학업을 중단하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게 해 준다[20]. 둘째로는 욕구와 정책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배제이다. 다양한 청년정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청년들이 놓여있는

20)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정책인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센터는 그 이용대상에 지역 청년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학에 위치해 대학생이 아닌 경우 이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양한 상태와 정책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주거지원, 신용회복 정책, 고용안전망 정책은 인지도는 높았지만 수혜율이 낮았다. 이는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증가한 수요만큼 확대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 놓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적 사회정책의 핵심주체로 청년을 상정하는 한편, 청년 모두를 위한 보편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Ⅵ-3 정책 욕구의 불일치와 청년 특성별 분화

〈12개 정책영역별 인지도 및 수혜율〉

범주	인지도	수혜율
50% 이상	학자금 지원 구직 및 창업 지원 **일하는 청년 소득 지원** **주거지원**	학자금 지원
30%~ 50% 미만	**신용회복 지원** 고용기업 인센티브 청년 활동공간 서비스 건강지원 **고용안전망**	구직 및 창업지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청년 활동공간 서비스
30% 미만	청년정책 거버넌스 다양한 역량개발 일터 안전보장	건강지원 **일하는 청년 소득 지원** **신용회복 지원** 다양한 역량개발 **주거지원** **고용안전망**

* 자료: 4장의 〈표 Ⅳ-9〉를 재정리함.

〈인지도 및 수혜율 결정요인 분석결과〉

특성	인지도 높음	수혜율 높음
대학졸업 이상 (고졸이하 대비)	학자금 지원 구직 및 창업 지원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기업인센티브 청년정책 거버넌스 주거정책 신용회복 지원 건강지원 고용안전망	학자금 지원 구직 및 창업지원
정규직 (비정규직 대비)	구직 및 창업지원 일하는 청년 소득 지원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경제여건 인식 낮음		신용회복 지원 고용안전망
경제여건 인식 또는 가구소득 높음	고용기업 인센티브 청년 활동공간 서비스 다양한 역량개발	다양한 역량 개발

* 자료: 4장의 〈표 Ⅳ-10〉부터 〈표 Ⅳ-18〉 결과를 토대로 재정리함.

(3) 청년정책의 지역 격차 : 지역균형을 고려한 청년정책 추진

셋째, 청년정책의 지역 격차를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빠르게 확산·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역할 부재와 청년정책 추진 동력의 차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지역 격차가 발생하였다.

주요 결과	•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방향성 부재와 지방자치단체장 주도에 따른 청년정책의 빠른 확대로 인한 지역 격차 발생 •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과 청년당사자 집단 동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상당한 격차가 기 발생되어 확대되고 있음.

정책 ⇓ 개선

개선 방향	• 중앙정부의 지역 격차 완화 정책 개입 필요 • 지역의 여건과 상황 고려 및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될 시행계획 평가와 연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

제2장 면접조사에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유경험자들은 중앙정부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없이 신규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되지 못해왔음을 지적하였다. 지역의 동력(청년 이슈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당사자와 정책 추진 주체의 역량)도 지역간 차이가 커서 지자체의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안정화 수준에도 지역격차가 발생하였다. 이는 제5장 정책델파이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었다. 청년정책 평가에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청년들은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4장의 정책 전략 우선순위에 대한 다항로짓모형 분석에서는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소득보장제도보다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표 Ⅳ-70).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가 중장기 청년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함에 있어서 지역의 상황과 여건 고려가 반드시 요구된다.

표 Ⅵ-4 청년정책의 지역 격차

〈면접조사 결과〉

핵심어	범주	세부 하위범주
지역 격차	중앙정부 조정 미흡	• 중앙정부 장기플랜 부재 – 구조보다 사업 위주 확장 • 지역특성을 고려 미흡 – 신규사업 양적 확대 치중
	지역 동력 차이	• 청년정책 당사자, 추진 주체 역량 – 청년정책 확장, 안정화 격차

〈정책델파이 조사 결과〉

단계	측정 내용	평균/순위
2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	7.00/2위
3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	7.36/2위

* 주: 4개의 '부정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로, 순위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4) 생활안전망에 대한 높은 욕구 : 청년 생활안정보장 강화

주요 결과	• 청년들이 인식하는 생활안전망의 범위는 기존의 일 또는 소득과 같은 측면이 중심이 된 사회안전망의 개념 범위를 초과하여 일터안전과 같은 일상생활 전반의 안전을 포괄하는 범위로 이미 확장되었음. • 생활안전망과 관련된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이나 주거지원, 건강지원, 일터안전 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도움정도 인식 수준이 높음.

정책 ⇓ 개선

개선 방향	• 시대변화를 고려한 청년대상 사회안전망 정책을 '생활안전망' 정책으로 대응해야 함. • 일터에서의 갑질 문화나 위계에 의한 부당행위 등 생활환경 여건 조성에 대한 정책도 청년정책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져야 함.

넷째, 청년들의 생활안전망에 대한 정책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인 소득위주의 사회안전망을 넘어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안전망의 개념이 확장되었음이 발견되었다.

제3장 면접조사에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들은 오늘날 청년이 '돈을 버는 일', 즉 경제중심으로 생활했던 과거세대와 달리 다양한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고, 청년정책 추진 주체들이 청년의 변화와 그로 인한 다층적, 다면적 정책 욕구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청년의 욕구 변화와 확장된 생활안전망은 제5장 정책델파이 조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들은 경제적 생활안정(주거, 부채, 소득)과 더불어 일터에서의 안전,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체 형성과 소통을 청년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4장의 청년정책 당사자 인식 및 평가조사 결과,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주거지원, 그리고 일터 안전보장, 건강지원정책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청년을 위한 생활안전망은 경제적 사회보장을 넘어, 다양한 삶의 안정성을 포괄하는 생활 안전망 범위의 확장과 보장 강화가 요구된다.

표 Ⅵ-5 생활안전망 정책의 필요성

〈면접조사 결과〉

핵심어	범주	세부 하위범주
변화된 욕구	청년 특성 반영 미흡	• 20대의 변화 - 다면적 삶의 안정성을 추구 • 청년정책의 한계 - 다층적 욕구 대응 미흡 - 하나의 정책을 전혀 다른 욕구 가진 청년에게 적용 - 중상층 청년 중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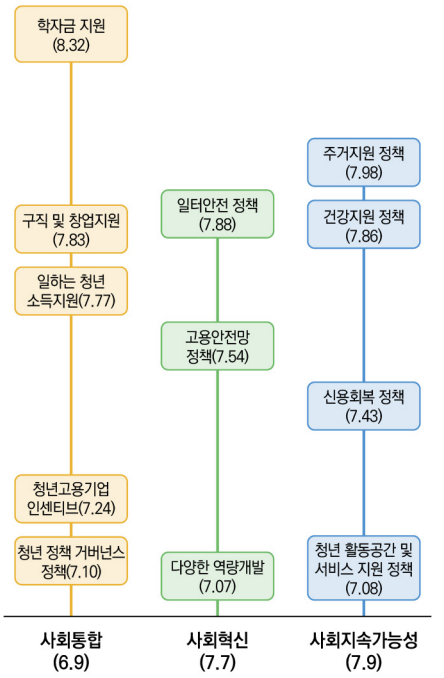
〈정책델파이 조사 결과〉

단계	청년정책 핵심 고려사항 1순위~3순위
1	참여, 생활안정(주거, 부채, 소득) 주거, 권리보호, 커뮤니티
2	거버넌스 참여, 생활안전망, 생활환경 및 일터에서의 안전
3	거버넌스 참여, 생활안전망, 커뮤니티 및 문화 (4순위: 생활환경 및 일터에서의 안전)

표 Ⅵ-6 생활안전망 관련 정책의 높은 중요도와 도움 정도

8점 이상	중요도	도움 정도
60% 이상	학자금 지원 **주거지원** **일터 안전보장** **건강지원** **일하는 청년 소득 지원** 구직 및 창업지원	-
30%~60% 미만	고용안전망 신용회복 지원 고용기업 인센티브 청년정책 거버넌스 다양한 역량개발 청년 활동공간 및 서비스	**건강지원** 학자금 지원 **일터 안전보장** **주거지원** **일하는 청년 소득 지원** 구직 및 창업지원 고용안전망 신용회복 지원 고용기업 인센티브
30% 미만	-	청년 활동공간 서비스 청년정책 거버넌스 다양한 역량개발

(단위: 점)



〈그림〉 12개 정책영역의 중요도 인식수준

* 자료: 표는 Ⅳ장의 〈표 Ⅳ-19〉와 〈표 Ⅳ-35〉를 토대로 재정리, 그림은 Ⅳ장의 [그림 Ⅳ-50]을 발췌함.

(5) 청년 정책욕구의 다층적 분화와 계층화 : 다양한 층위를 포괄하는 정책 추진

주요 결과	• 청년 특성에 따라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름. • 재학생은 일터안전보장정책, 미취업자는 건강지원과 구직 및 창업지원, 취업자는 주거지원과 일하는 청년소득지원에 대한 욕구 수준이 높음. • 경제적 여건 수준에 따라 낮은 청년들은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학자금, 소득, 주거, 신용회복, 일터안전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만, 경제적 여건 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고용안전망이나 다양한 역량개발에 대한 중요도 평가가 더 높음.

정책 ⇓ 개선

개선 방향	•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욕구가 분화되어 나타나므로, 상태중심의 청년정책 추진의 강화 • 경제적 여건 수준에 따라 다층화 되어 나타나는 정책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시, 목표 집단 설정 및 설계 강화하고 시행계획 평가에 반영 검토

다섯 번째로 확인된 실증 결과는 청년의 정책 욕구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청년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고착화로 인해 매우 이질적인 성인이행기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청년들의 정책 욕구가 다양한 영역과 층위로 분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특성에 따른 정책 중요도와 도움정도 수준의 차이를 통해 정책 욕구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제4장에서 서열로짓모형을 적용하여 12개 정책영역의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현재 상태, 교육수준, 성별, 경제여건 인식과 소득에 영향을 받아 청년정책 사업의 중요도와 도움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이 어릴수록 구직 및 창업지원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고, 대학졸업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보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일터 안전보장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미취업자는 재학생, 취업자보다 정책 중요도와 도움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계층화 경향도 확인되었다. 경제여건 인식이 낮은 청년은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주거지원, 신용회복, 건강지원, 일터 안전보장, 고용안전망에 대한 중요도 수준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청년은 다양한 역량개발에 대한 중요도 인식 수준이 높았다.

표 Ⅵ-7 청년 특성별 중요도, 도움 정도가 높은 정책

특성	중요도 높음	도움 정도 높음
여성	신용회복, 일터안전보장을 제외한 모든 정책	건강지원, 다양한 역량개발
연령 낮음	구직 및 창업지원, 고용기업 인센티브	구직 및 창업지원,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고용기업 인센티브,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공간 및 서비스
대학졸업 이상	청년정책 거버넌스, 일터 안전보장	주거지원, 일터 안전보장
재학생 (미취업자 준거집단)	학자금 지원, 구직 및 창업지원,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주거지원, 신용회복 활동공간 및 서비스, 다양한 역량개발 일터안전보장, 고용안전망	청년정책 거버넌스, 주거지원 일터안전보장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
거버넌스 참여	학자금 지원, 구직 및 창업지원을 제외한 모든 정책	학자금 지원, 구직 및 창업지원,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외한 모든 정책
경제여건 인식 낮음	학자금 지원,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주거지원, 신용회복, 건강지원, 일터 안전보장, 고용안전망	주거지원, 신용회복, 일터 안전보장
가구소득 높음	다양한 역량개발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 자료: 4장의 〈표 Ⅳ-51〉부터 〈표 Ⅳ-65〉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리함.

한편,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전반적인 정책 중요도 인식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유경험자들은 청년 집단 내의 욕구 차이가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정책 인식 차이에서도 드러난다고 보고하였다.

청년정책이 이러한 정책 욕구 분화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 평가는 부정적이다. 정책델파이 조사에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들은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으나,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견수렴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영역별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청년이 놓인 사회구조의 다중격차(multiple disparities)[21]를 고려할 때 청년의 정책욕구는 더 복잡하게 분화될 수 있다. 결혼 후 경력단절 상태인 청년 여성과 결혼을 미루고 취업을 준비 중인 여성, 고졸 비정규직과 대학졸업 비정규직은 여성과 비정규직이라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지만 각자의 정책욕구는 매우 이질적이다. 이는 정책 영역의 단순 확장만으로는 청년의 분화된 욕구를 반영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년의 정책 욕구에 관한 정교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확대 혹은 조정해야 할 청년정책의 내용과 대상을 식별하여 정책의 대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표 Ⅵ-8 면접조사와 정책델파이조사에서 발견된 청년의 욕구 분화

〈면접조사 결과〉

핵심어	범주	세부 하위범주
분화된 욕구	당사자 간 욕구 분화	• 내적격차에 비롯되는 욕구 분화 – 사회구조적 계층 고착화로 인해 다층적으로 나타나는 욕구 반영 어려움
		• 거버넌스 확대에 따른 욕구 분화 – 거버넌스 참여자와 일반청년 욕구 차이

〈정책델파이 조사 결과〉

단계	측정 내용	평균/순위
1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음	4.10/1위
	청년들의 의견 수렴이 잘 이뤄지고 있음	3.85/3위
2	(부정)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함	7.49/1위
3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음	4.08/1위
	청년들의 의견 수렴이 잘 이뤄지고 있음	3.67/3위
	(부정)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함	7.69/1위

* 주: 1단계는 4개의 '긍정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로, 순위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
2단계 및 3단계는 '부정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로, 순위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

21) 다중격차는 불평등의 영역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중첩, 교차, 상호작용을 통해 재생산되는 별도의 구조이다(황규성, 2016, pp.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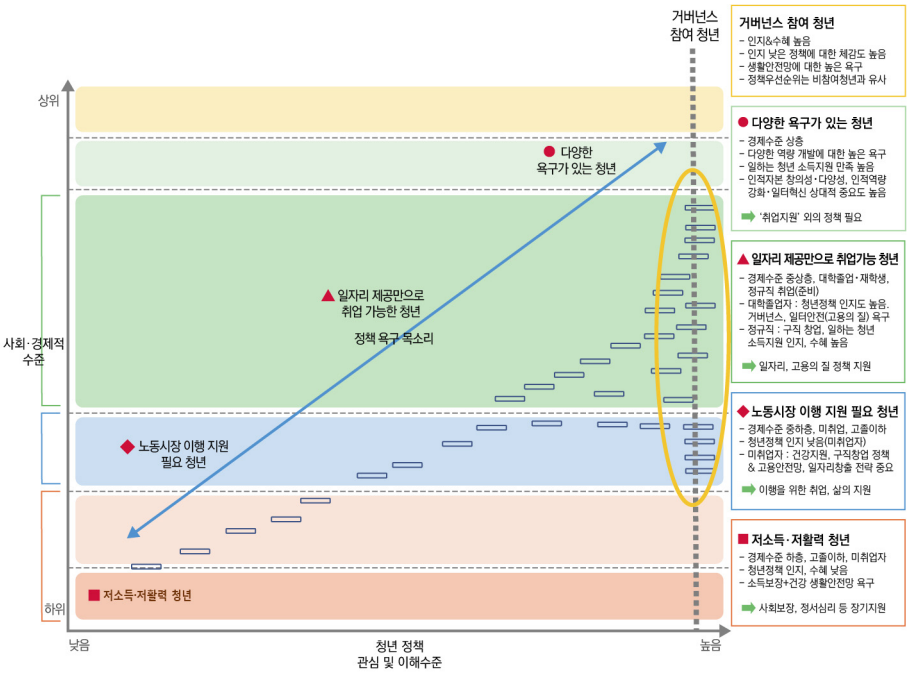


그림 Ⅵ-3 청년 특성별 정책욕구의 분화

(6) 정책 인지 및 수혜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 대상자 확대

주요 결과	•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도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정책인지와 수혜경험 여부임. • 정책인지 여부가 정책지원의 수혜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두 요인이 청년당사자가 인식하는 정책의 중요도와 도움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됨.

정책 ⇓ 개선

개선 방향	• 정책인지가 지원 수혜의 전제가 되며, 정책 체감과 효능감 향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조를 확인 • 확대 가능한 정책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 및 수혜자 규모 확대 검토

여섯째, 청년 당사자들 청년정책 체감도는 정책 인지와 수혜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2개 정책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도움 정도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확인하였으며, 중요도와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정책의 인지와 수혜의 영향력이 그 어느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령 해당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정책이 중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1.4배~1.9배 크고, 수혜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개별 청년정책이 중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1.4배~5.5배 높다. 이에 대해 청년정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책 인지수준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고, 동시에 수혜자 범위 확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표 Ⅵ-9 중요도 및 도움정도 영향요인 및 인지여부, 수혜경험의 영향력

정책	중요도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인지 (Odds)	수혜 (Odds)	영향 요인	인지 (Odds)	수혜 (Odds)
학자금 지원	여성, 재학, 경제여건(-), 수혜	-	1.68	수혜	-	5.46
구직 및 창업지원	여성, 연령(-), 재학+(취업기준), 인지, 수혜	1.78	1.41	연령(-), 수혜	-	1.95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여성, 연령(-), 재학, 참여, 경제 여건(-), 인지	1.61	-	연령(-), 가구소득(+), 수혜	-	1.55
기업 인센티브	여성, 연령(-), 재학+(미취업 기준), 대졸(+), 참여, 경제여건(-), 인지	1.41	X	연령(-)	-	X
청년정책 거버넌스	여성, 대졸, 재학, 참여, 수혜	-	3.28	연령(-), 재학+(미취업 기준), 참여, 인지	1.52	-
주거 지원 (월세지원)	여성, 재학, 참여, 경제여건(-).가구소득, 인지, 수혜(-)	1.37	0.10 (-90.%)	대졸, 재학+(미취업 기준), 참여, 경제여건(-), 가구소득, 기혼(-)	-	-

정책	중요도			도움 정도		
	영향 요인	인지 (Odds)	수혜 (Odds)	영향 요인	인지 (Odds)	수혜 (Odds)
신용회복 (햇살론)	미취업-(재학기준), 참여, 경제여건(-), 가구소득, 인지	1.94	-	참여, 가구소득, 수혜	-	4.22
활동공간 및 서비스	여성, 재학+(미취업기준), 참여, 인지, 수혜	1.76	1.90	연령(-), 참여, 인지, 수혜	1.39	4.36
건강지원	여성, 참여, 경제여건(-), 독거, 인지	1.75	-	여성, 참여, 인지	1.62	-
다양한 역량개발 (행자부 지역주도)	여성, 재학+(취업기준), 참여, 가구소득, 인지	1.69	-	여성, 참여, 인지	1.53	-
일터 안전보장 (갑질규제)	미취업, 참여, 경제여건(-), 가구소득	-	-	연령(-),참여, 가구소득	-	-
고용안전망 (한국형 실업부조)	여성, 재학+(취업기준), 참여, 경제여건(-)	-	X	참여	-	X

* 자료: 4장의 〈표 Ⅳ-51〉부터 〈표 Ⅳ-65〉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리함.

(7) 거버넌스 참여자의 높은 정책인지 및 체감도 : 청년당사자 정책리터러시 함양

주요 결과	• 전반적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율 및 수혜율이 비참여 청년들에 비해 높음. • 특히 정책사업이나 제도가 도입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서 그 격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정책 ⇓ 개선

개선 방향	• 일반 청년들의 정책인지 함양이 이루어져야 정책 체감도 파악이나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참여와 운영도 정책인지가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년당사자 정책리터러시 함양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 필요

표 Ⅵ-10 인지도 및 수혜율이 낮은 정책의 거버넌스 참여여부에 따른 도움 정도 차이

인지도 및 수혜율이 낮은 정책	도움 정도 8점 이상 응답률		거버넌스 참여 → 도움 정도 영향력(Odds)
	거버넌스 참여	거버넌스 비참여	
다양한 역량개발 (모두 낮음)	46.7%	23.9%	2.26 (행정자치부 지역주도일자리)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인지도 낮음)	38.7%	30.2%	2.59
일터 안전보장 (인지도 낮음)	56.0%	37.5%	2.12 (현장실습 산업안전)
건강지원 (수혜율 낮음)	62.7%	42.1%	2.47
주거지원 (수혜율 낮음)	66.7%	36.2%	2,85 (월세지원)
고용안전망 (수혜율 낮음)	52.0%	33.1%	2.09 (한국형 실업부조)

* 자료: 4장의 〈표 Ⅳ-51〉부터 〈표 Ⅳ-65〉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리함.

일곱 번째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와 일반청년과의 차이는 정책 인지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4장의 청년정책 당사자 인식 및 평가조사 결과,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정책 욕구 차이는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 영역이 아닌, 정책 인지수준에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와 비참여자는 모두 동일하게 생활안전망 관련 정책에 대한 중요도, 도움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거버넌스 참여자가 인식하는 중요도, 도움 정도 점수가 비참여자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인지 혹은 수혜율이 낮은 정책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8) 사회적 지속가능성, 소득불평등 완화, 기회·권한의 배분 선호: 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 추진

주요 결과	• 포용국가 사회정책 3가지 비전(사회통합,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회혁신) 중 청년들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비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음. • 포용국가 사회정책 9가지 전략 중 ①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②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정책, ③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이 상위 우선순위로 응답

정책 ⇓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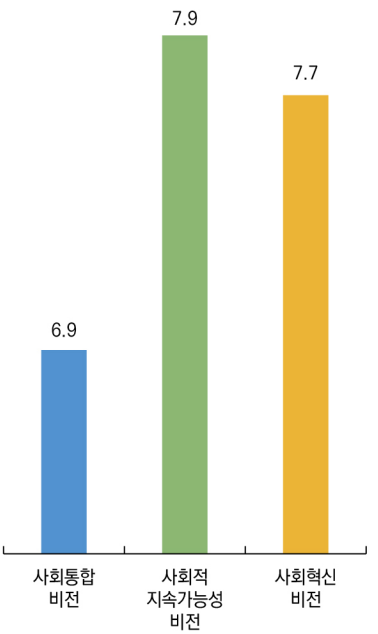
개선 방향	• 단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청년들이 이행기에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기회불평등 해소 방향으로 정책 추진 •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그리는 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 추진'과 같은 명확한 비전 제시 필요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청년정책이 소득불평등 완화하고, 불균등한 기회와 권한을 배분하는 정책으로 기능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2개 정책영역에 대한 욕구가 분화한 것과 대조적으로 청년정책의 전략, 비전에 대해서는 청년 특성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청년들은 청년정책의 중장기 비전이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포용적 사회정책 9대 전략 중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정책,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Ⅵ-11 청년 특성별 가장 중요한 청년 정책 비전과 전략 순위

(단위: 점)



〈그림〉 사회정책 3대 비전의 중요도 인식

청년 특성		9개 정책전략 중 우선순위 상위3개(8점 이상 응답률)
성별	여성	고용안전망(21.8%), 소득보장(18.6%), 기회배분(15.1%)
	남성	소득보장(26.0%), 고용안전망(19.1%), 기회배분(13.3%)
교육수준	고졸이하	고용안전망(25.2%), 소득보장(23.7%), 기회배분(14.5%)
	대학(원)재학	소득보장(21.7%), 고용안전망(15.7%), 기회배분(15.2%)
	대학(원)졸업	소득보장(22.0%), 고용안전망(21.8%), 기회해분(15.3%)
현재상태	미취업	고용안전망(27.1%), 소득보장(19.3%), 기회배분(15.6%)
	재학	소득보장(21.7%), 고용안전망(15.7%), 기회배분(15.2%)
	취업	소득보장(24.9%), 고용안전망(19.3%), 기회배분(14.7%)
거버넌스	참여	소득보장(28.0%), 고용안전망&일자리창출(13.3%), 일상생활안전과 생명존중(10.7%)
	미참여	소득보장(21.6%), 고용안전망(21.3%), 기회배분(16.0%)

* 자료: 4장의 〈표 Ⅳ-66〉을 도식화함.

* 자료: Ⅳ장의 〈표 Ⅳ-69〉 결과를 토대로 재정리함.

제3장의 면접조사에서 청년정책 제도화 과정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청년정책에 대해 '다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증앙정부는 장기적 플랜 없이 구조보다는 사업위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였고, 빠른 속도로 청년정책이 확대된 지자체도 단체장 주도의 서울지역 청년정책 복제가 주를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정책델파이 조사에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들은 청년정책이 미래사회정책, 보편정책, 사회통합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년정책 당사자 인식 및 평가조사의 결과(사회적 지속가능성, 소득불평등 완화, 기회권한 불균등 해소, 고용안전망 확보 중요성 높음)와 맥을 같이 한다.

표 Ⅵ-12 청년정책의 방향성

〈면접조사 결과〉

핵심어	범주	세부 하위범주
다음이 없는 정책	청년 정책 비전 부재	• '구조'보다는 '사업' – 장기플랜이 없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 자치단체장 주도 빠른 복제, 구색만 갖추려는 지방정부 청년정책

〈정책델파이 조사 결과〉

단계	청년정책의 지향 1~3순위
1	자치정책=미래사회정책, 보편정책
2	미래사회정책, 보편정책, 사회통합정책
3	미래사회정책, 보편정책, 사회통합정책

그간 청년정책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 없이 단편적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한 단기적 또는 사후적 대응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청년정책이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체감은 여전이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실증결과는 청년정책의 추진이 중장기적 비전과 방향 토대로 이뤄져야 함을 보여준다. 청년들의 인식을 고려해 청년정책을 미래사회정책으로 상정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그에 기반한 부처별 청년정책의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표 Ⅵ-13 주요 실증결과에 기초한 정책 개입 방향

구분	실증결과	정책 개입 방향
1 청년정책의 한계	①청년정책의 개념 부재	청년정책의 체계화
	②청년을 포용하지 못하는 청년정책	보편적 정책 추진
	③청년정책의 지역 격차	지역균형 지향
2 청년의 정책욕구 특성	④생활안전망에 대한 높은 욕구	생활보장 확충
	⑤청년 정책욕구의 다층적 분화	대상효율성 강화
3 정책 체감도 향상 체계	⑥정책 인지 및 수혜를 통한 정책 체감도의 향상	대상 확대
	⑦거버넌스 참여자의 높은 정책 체감도	당사자 참여 보장
4 청년정책 추진 방향	⑧사회적 지속가능성, 소득불평등 완화, 기회와 권한의 배분 선호	미래사회정책 추진

2. 청년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설정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실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정책 개입 점을 통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을 위한 정책 목표를 현행 정책의 개선과 미래사회정책으로의 안착' 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 및 국가 미래사회정책으로의 안착'**으로 설정함.
- 설정된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5장에서 도출된 청년정책의 성격 및 지향점과 국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를 통해 여·야 합의로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에 담긴 기본이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 방향이자,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을 크게 네 가지(①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 ②청년의 삶을 지지하는 보편정책, ③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정책, ④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시민정책)로 설정함.
- 네 가지 개선 및 추진 방향에 따라 각 방향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추진 목표 네 가지 (①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 재정립 및 재구조화, ②이행기 청년세대 특성과 욕구기반 정책의 보편성 강화, ③세대 내 다양한 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통합 강화, ④민주시민정책으로서 당사자 참여·주도성 강화)를 설정함.ㅋ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1)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 목표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 • 국가 미래사회정책으로의 안착

여기에서는 앞서 요약된 실증결과들을 현행 청년정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비전으로 발표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하나로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의가 본격화된 「청년기본법안」이 연내에 제정된다면,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중앙정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행할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제까지 각 부처 소관의 개별법에 의해 지원되었던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은 '청년'이라는 대상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정책 주관처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 논의가 안착되지 못하고 개별 사안 형태로 부유(浮遊)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7월 30일 대통령령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제24조에 '청년정책추진단' 규정 내용이 신설되었고, 국무조정실 제2차장 하에 조직이 신설됨으로써(국가법령정보센터, 2019.10.22. 검색), 이제까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종합적으로 총괄·조정되고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는 기본적인 발판이 마련된 상태이다.

이에 더하여, 지난해 국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야 합의로 법률안이 발의된 이래, 국회 여러 상임위를 같은 모양새로 부유(浮遊)했던 「청년기본법안」도 정무위원회로 회부되면서 지난 9월 2일 전체회의에서 검토된 이래 법안소위에서 후속 검토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9.10.22. 검색).

이와 같은 변화된 정책 환경 하에서,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국가 정책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정책은 이제까지와 같은 방식, 즉 개별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수준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나 사업운영의 방식을 개선하는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의 제1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정립되는 청년정책은 국가 사회정책 비전으로 제시된 '포용'과 '혁신'의 정책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현안 대응 정책이 아닌 현재의 청년세대가 앞으로의 청년세대가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미래사회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나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미래사회정책으로의 안착'이다.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향의 설정

앞서 두 가지로 설정된 청년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5장 정책델파이에서 도출된 '청년정책의 성격 및 지향점'을 중심으로 제4장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평가, 그리고 제3장 그간의 청년이슈 정책화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 분석을 통해서 파악된 내용들을 종합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여·야 합의 발의 「청년기본법안」에 담긴 기본이념의 내용을 반영하여 네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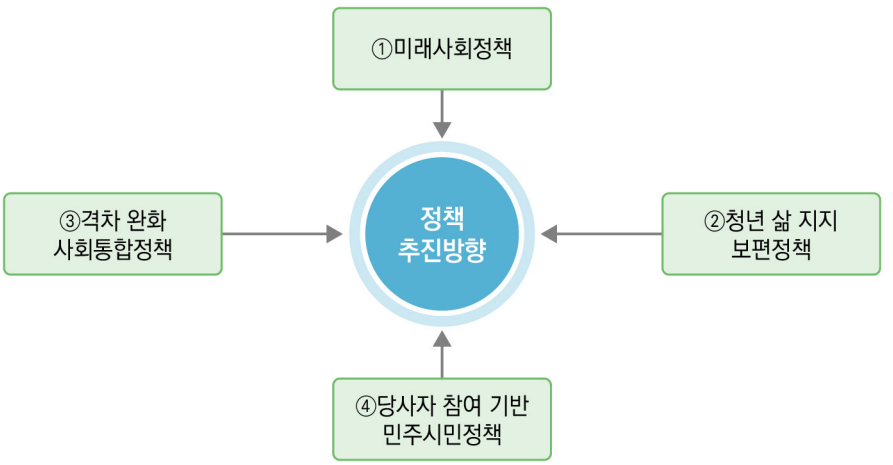


그림 Ⅵ-4 4가지 정책 추진 방향

먼저 청년정책이 '미래사회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방향의 설정은 제5장의 정책델파이 단계별 분석결과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이제까지 교육이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정책의 성격을 규정한다거나,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청년을 단지 '수혜자'로 간주하여 지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가 앞으로의 사회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미래사회정책으로 안착하는데 있어 현재 우리사회, 그 중에서도 자립기반이 없는 청년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다양한 격차의 심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면서 기본적인 청년의 삶을 지지하는 보편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안착되어야 한다는 현행 정책 추진에 대한 개선 방향의 의미도 포괄한다.

이들 정책의 추진은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이에 기반 하는 민주시민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이 현행 청년정책의 한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 설정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회혁신을 이끌어 나아갈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의 문제에 한정된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들의 능동적 삶의 실현과 청년들의 참여, 사회·경제적 격차 및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한 건강한 삶의 환경 조성 등 추진 방향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현재 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안」 제2조 기본이념의 내용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청년기본법안」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사회 환경 마련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http://likms.assembly.go.kr/. 2019.10.22. 검색).

2) 4가지 방향에 따른 추진 목표

(1)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

추진 목표1	• 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 재정립 및 재구조화

앞서 네 가지 추진 방향 논의와 더불어 이제까지 추진되었던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 추진되는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청년정책이 총괄적으로 관리되어 추진될 것이며, 정책들 간의 내용도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상황에 발맞추어 나아가면서, 향후 청년정책은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국가 정책비전 달성을 위한 미래사회정책으로 재정립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이제까지 개별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상태에서 확장되어온 정책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여 재구조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청년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동시에 향후 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 재정립 및 재구조화'를 추진 방향에 따르는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다.

(2) 청년세대의 기본적인 삶을 지지하는 보편정책

추진 목표2	• 이행기 청년세대 특성과 욕구기반의 정책 보편성 강화

한 사회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사회에서 청년이 한 시점의 정적인 상태(a static state at one point)로서 단순히 '젊은이'라고만 이해하는지, 아니

면 생애과정으로서 누구나 거쳐 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청년정책의 성격은 달라진다. 가령 북유럽 복지국가 중의 하나인 덴마크에서는 청년을 '개인 생애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일종의 생애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시기'로 정의하면서 청년을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는 존재로서 인식 한다(서울시 청년허브, 2019.10.16.).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이라는 존재가 생애과정 중 '이행기(transition period)'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국가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갖는 성격은 물론 청년정책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그 지향하는 바를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컨대 2019년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정책을 수립한 트뤼도 총리가 발표한 캐나다 청년정책(Canada's Youth Policy)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대상인 '청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장 최근에 수립된 캐나다 정책에서도 '청년'이 한 시점의 정적인 상태로서의 정책대상이 아니라, 이행기 청년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발전을 이루는 것임을 정책의 기본 원칙(Principle)으로 명확하게 제시한다(캐나다정부 공식 홈페이지, 2019.09.18. 검색).

표 Ⅵ-14 캐나다 청년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

기본 원칙 1	기본 원칙 2	기본 원칙 3
• 청년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 청년은 동등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청년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은 모든 캐나다 국민을 이롭게 한다.
(Youth have the right to be heard and respected.)	(Youth have the right to equal access to opportunities and supports.)	(When youth reach their full potential, it benefits all Canadians.)

* 출처: 캐나다정부 공식 홈페이지(the Government of Canada). Canada's Youth Policy. https://www.canada.ca/en/youth/programs/policy.html.(2019.09.18. 검색).

이와 같이, 덴마크나 캐나다 사회에서 정책대상자로 청년을 이해하는 바를 이행기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된다면,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우리사회의 구성원들과 대립되거나 갈등을 야기하는 선별적 지원정책으로 왜곡되어 인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청년정책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그로인한 불필요한 세대갈등을 야기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생애 이행기의 특성을 세밀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 정책은 청년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원보다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것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정책추진 방향인 '청년세대의 기본적인 삶을 지지하는 보편정책'을 따르는 추진 목표로서 '이행기 청년세대 특성과 욕구에 기반한 정책으로서 보편성 강화'의 내용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추진 목표는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된 이해와 기본원칙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이 갖추어야 할 기본 적인 사항이라 볼 수 있다.

(3) 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정책

추진 목표3	• 세대 내 다양한 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통합 강화

우리사회가 그 간의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소득과 자산 중심의 경제적 격차는 물론이고 사회적 자본의 격차 또한 심화되면서, 교육과 고용, 그리고 소득과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사이클 속에서 청년들은 중첩된 격차와 기회의 불평등을 겪어내고 있음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 및 추진계획'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 정책수립의 배경으로 설명되어 왔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은 청년 세대 내 격차, 그 중에서도 청년문제 및 정책이슈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정책의제 설정의 과정에서도 일부 청년층이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 간 청년정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확대되어 오는 과정에서 일부 한정된 청년만의 정책 욕구가 청년의 목소리로 정책에 반영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중요한 사항은 이미 경제적 여건에 따라 수직적으로 다층화되고, 욕구의 내용이 수평적으로 분화된 청년집단이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수준과 정책에 대한 중요성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청년 세대 내의 격차를 만드는 수직적 다층화와 수평적 분화가 매우 빠르게 더 좁은 범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분화가 세대 안에서의 작은 차이와 배려조차도 어려울 만큼 '공정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의 발전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확산된 청년정책의 지역 간 격차는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들이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지방정부의 청년보다 늦은 시점에서 출발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이 기계적 일괄성을 가져서는 반드시 실패할 수 있다는 제약점도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장들에서 분석된 내용들에서 현 시점의 청년정책에 있어 가장 고려할 사항으로 공통적으로 '다양한 격차와 불평등 심화'가 꼽힌 만큼 세대 내 격차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회통합 정책수단의 강화를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다.

(4) 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시민정책

추진 목표4	• 민주시민 정책으로서 당사자 참여·주도성 강화

그 간 청년이슈가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청년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던 각 부처의 노력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3장 면접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청년정책에 대한 한계점으로 다른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다음'이 그려지지 않는 내용의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의미의 도출은 그리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이들에게는 뼈아픈 지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되짚어 보면, 붉어져 나오는 일명 청년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극히 현상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물량적 공급에만 몰두하였던 것에 대한 지적이며, 그러한 정책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직면한 당사자만큼의 이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문제해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간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청년들의 거버넌스 참여 기회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제까지는 소수의 청년활동가들이 소진되고 정책도구화 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청년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실제 기회의 장(場)을 보다 확대하고, 소수의 청년활동가들이 아닌, 다수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당사자 집단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리터러시가 요구된다. 정책 추진 방향으로 설정된 바와 같이, 앞으로의 청년정책이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시민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한다면, 이를 위한 '당사자 참여 및 주도성 강화'가 추진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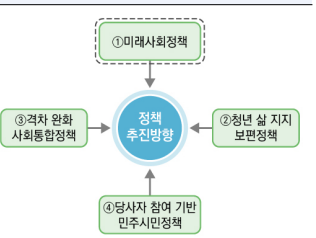
3.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설정된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추진방향(①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 재정립 및 재구조화, ②이행기 청년세대 특성과 욕구기반의 정책 보편성 강화, ③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 강화, ④민주시민 정책으로서 당사자 참여·주도성 강화)을 중심으로 총 12개의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제안함.
- '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 재정립 및 재구조화'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로, ①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 개념 설정 및 체계화, ②정책 개념에 기초한 중앙정부 청년정책 분류·관리 체계성 강화, ③정책 체계성 및 효율성에 기초한 예산사업 추진을 제안함.
- '이행기 청년세대 특성과 욕구기반의 정책 보편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④청년세대 사회안전망 개념 재설정 및 지원 강화, ⑤청년집단 특성 이해에 기초한 정책설계 강화, ⑥다층의 다분화된 청년욕구 대응 지원 강화를 제안함.
- '세대 내 다양한 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⑦정책 배제 청년층 사회적 연계를 위한 지원 강화, ⑧지역 간 청년정책 추진 기반 및 운영 내용 격차 완화, ⑨소득 및 자산격차 영향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제안함.
- '민주시민 정책으로서 당사자 참여·주도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⑩당사자 정책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지원 추진, ⑪청년정책 입안 및 집행 담당자 교육·연수 실시, ⑫'청년거버넌스' 운영 기반 및 실효성 강화를 제안함.

1) 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 재정립 및 재구조화

(1) 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 개념 설정 및 체계화

〈추진 과제1〉	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 개념 설정 및 체계화
■ 주요 제안 내용	■ 추진 방향
• 「청년기본법안」 제3조의 규정 내용과, 본 연구의 실증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미래 사회 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개념을 정의함. • 청년정책이란, – 19세 이상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전반적인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사회·경제적 지원	

■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안」 제3조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 국무조정실	• 법령 제·개정 ( )
■ 예산 증감	• 비예산 사업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 추진 체계	• 국조실 개념화 → 각 부처 사업 대상 및 목적 정비 → 국조실 총괄·관리	• 신규 사업 도입 ( ) • 제도 및 추진 업무 정비 (○)

① 과제 제안 배경

2000년대 후반, 매년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대학등록금 부담'이라는 다수의 청년을 둘러싼 문제가 가계경제 부담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발전하고, 정부의 학자금지원 제도로 정책화된 이래로 청년들을 둘러싼 문제는 다양한 범주로 확대되었고, 청년세대 전반의 삶의 영역으로 정부개입이 요구되는 영역은 빠르게 확장되었다. 이제까지 붉어지는 현안 문제에 대응하는 하는 방식으로 청년정책이 확장되고 발전되어 오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임과 동시에 정책 추진의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청년정책의 정의, 즉 어떠한 정책이 청년정책이며 과연 청년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갖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본 연구의 제3장에서 분석된 과거 청년문제가 이슈화되고 정책화되는 과정에 참여했던 지난시절의 청년거버넌스 참여자들의 경험 속이나, 제5장에서 2019년 현재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책델파이의 내용 속에서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행 청년정책의 뚜렷한 한계이다.

그러한 탓에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을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청년정책을 취합한 자료(국무조정실 협조 비공개 내부자료, 2019.09.17.)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자의 연령대와 상태 또는 어떠한 조건 하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이 적지 않다. 또한 정책의 초점이 '청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이나 대상에 '청년'이 포함되면 청년정책이라고 간주되는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정의가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정책이 확장된데 따른 결과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조정 업무가 기 착수된 현 시점에서 청년정책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미래사회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정책과업으로서 청년정책을 개념화하고 체계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국가 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야 합의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안」의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 및 청년정책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본 연구의 실증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청년정책을 개념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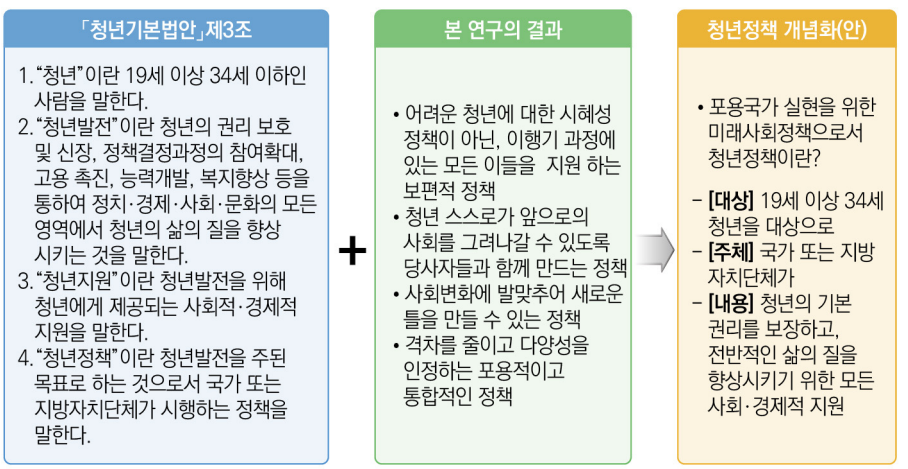


그림 Ⅵ-5 청년정책 개념화(안)

본 연구에서 제안된 '청년정책 개념화(안)'을 국무조정실에서 검토 후 각 부처에 가이드를 제시하면, 각 부처에서는 청년정책 정의에 따라 기존의 정책사업의 대상자 정의 및 범주, 그리고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재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어 재정비된 내용은 국무조정실에 제출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비된 사항을 검토 한 후 연계되는 정책 사업들을 총괄·관리 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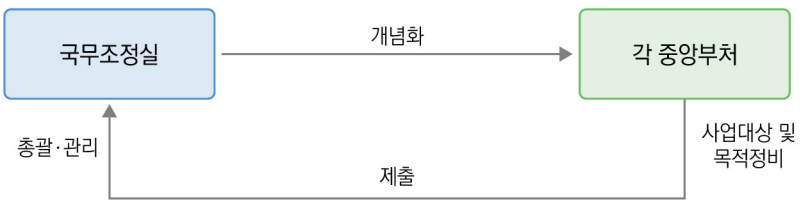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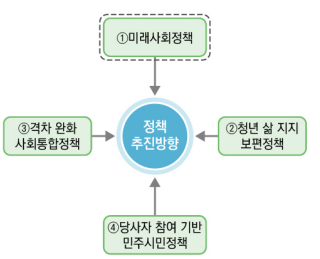


그림 Ⅵ-6 청년정책 개념화 작업 이후 정책업무 반영 체계(안)

(2) 정책 개념에 기초한 청년정책 분류·관리 체계성 강화

<table>
<tr><th colspan="2">〈추진 과제2〉 정책 개념에 기초한 청년정책 분류·관리 체계성 강화</th><th></th></tr>
<tr><td colspan="2">■ 주요 제안 내용</td><td>■ 추진 방향</td></tr>
<tr><td colspan="2">• 청년정책 개념에 기초하여 정책 분류 및 관리의 틀을 3단계의 'Core-Layer1-Layer2'와 같은 방식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하고, 각 부처에서는 마련된 안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고, 다시 국무조정실에서 총괄·관리할 것을 제안함.
- 'Core'에는 19세~34세를 대상 청년정책 개념 내용 해당 사업, 'Layer1'에는 기존사업을 청년지원을 위해 확장한 사업, 'Layer2'에는 다른 성격을 갖지만 지원 대상에 청년이 일부 포함된 사업을 위치시키는 분류 체계임.</td><td>
</td></tr>
<tr><td>■ 근거 법령</td><td>• 「청년기본법안」 제2조 및 제3조</td><td rowspan="4">■ 과제 추진 유형
• 법령 제·개정 (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업무 정비 (○)</td></tr>
<tr><td>■ 소관 부처</td><td>• 국무조정실</td></tr>
<tr><td>■ 예산 증감</td><td>• 신규예산 확보 (분류체계 개발 연구용역)</td></tr>
<tr><td>■ 추진 체계</td><td>• 국조실 분류·관리체계 마련 → 각 부처 청년정책 분류 관리 → 국조실 총괄·관리</td></tr>
</table>

① 과제 제안 배경

앞서 제안한 〈추진과제1〉에 따른 개념화 작업이 완료되면, 이 개념에 기초하여 이제까지 부재했던 정부의 종합적인 청년정책 분류 및 관리 체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와 같이,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은 기존의 정책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청년 연령층으로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 왔고, 2017년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정책대상자로서의 청년의 연령을 19세~34세로 합의한 이후에 새롭게 도입된 사업들은 이 연령을 목표 집단으로 설정하고, 그간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의 정책을 마련하였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청년정책을 취합한 183건의 사업자료(국무조정실 협조 비공개 내부자료, 2019.09.17.)를 살펴보면,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사업은 11건에 불과하다. 또한 사업대상자를 어떠한 상태에 있는 이들로 모호하게, 예컨대 '대학생' 또는 막연하게 '청년층'으로 표기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다. 현행 정책 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이와 같이 관리되고 있다면, 이는 앞서 제안했던 정책의 개념화와 더불어 분류 및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정책으로 청년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의 하나로 청년정책 분류·관리의 체계성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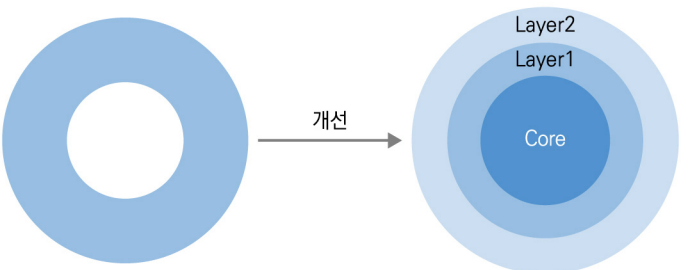
② 주요 제안 내용

〈추진 과제1〉에서 제안된 개념을 토대로 정책을 분류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분류의 틀(frame)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청년정책사업의 분류를 우선 세 단계, 즉 'Core-Layer1-Layer2'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Core'층은 19세~34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앞에서 정의한 청년정책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을, ②'Layer1'에는 각 부처에서 기존부터 해오던 사업이나 제도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확장된 형태의 사업을, 그리고

③‘Layer2’에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 상 청년정책 개념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청년이 지원 대상 범주 안에 일부 포함되는 사업을 위치시키는 분류이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자료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 및 예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된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 158건 중 19세~34세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18개로 매우 적은 수치를 보인다(더불어민주당, 2019.08.27.).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정책이라고 추진하는 정책사업은 많지만,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 사업은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현행 청년정책의 추진 사업들은 본 연구에서 분류 체계로 제안하는 일명 ‘Core’에 위치시킬 수 있는 정책이 그다지 많지 않아 가운데 중심이 비어있는 ‘도너츠’ 형태라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도너츠’ 형태가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발견된 현행 청년정책의 개선사항들을 추진방향에 따라 성공적으로 이행한다면, 향후 ‘Core’ 영역으로 청년정책들이 집중되고, 기존의 확장되거나 포괄적으로 청년정책이라 간주되었던 ‘Layer2’에 위치하는 사업들은 점차 감소함으로써 청년들의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청년정책 사업의 분포 (‘도너츠’ 형태에서)

개선 후 청년정책사업의 분포 (‘과녁’ 형태로)

그림 Ⅵ-7 청년정책 분류·관리 체계를 통한 사업관리 개선안

이와 같은 방식의 청년정책 분류·관리의 체계성 강화는 국가 청년정책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세단계의 틀을 고려하여 분류체계의 기준을 마련하고, 코드화한 후 각 부처에서도 이에 따르는 관리를 한다면 체계적 정책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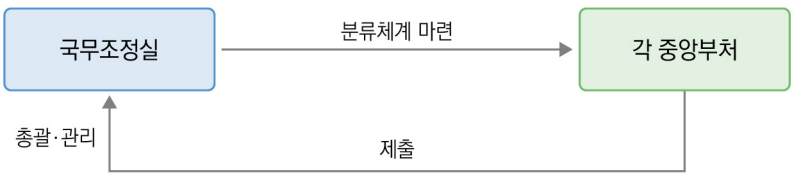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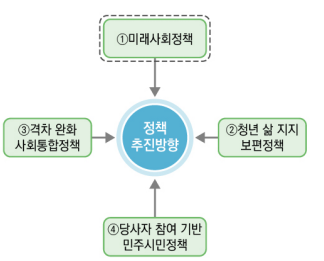


그림 Ⅵ-8 정책사업 분류·관리 체계 마련 및 업무 반영(안)

(3) 정책 체계성 및 효율성에 기초한 예산사업 추진 강화

<table>
<tr><th>〈추진 과제3〉</th><th colspan="2">정책 체계성 및 효율성에 기초한 예산사업 추진 강화</th></tr>
<tr><td colspan="2">■ 주요 제안 내용</td><td>■ 추진 방향</td></tr>
<tr><td colspan="2">• 「청년기본법안」 제9조와 제13조의 근거를 활용하여, 각 부처와 시·도 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예산사업의 경우 그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분석·평가 요소로 반영
• 총 예산 규모 중 청년정책예산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금액을 타당한 논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산출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이 또한 분석·평가 대상 요소로 반영
• ‘청년조정위원회’의 점검과 개선권고를 통해 보완 환류체계 마련</td><td>
</td></tr>
<tr><td>■ 근거 법령</td><td>• 「청년기본법안」 제9조 및 제13조</td><td rowspan="4">■ 과제 추진 유형
• 법령 제·개정 (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업무 정비 (○)</td></tr>
<tr><td>■ 소관 부처</td><td>• 국무조정실</td></tr>
<tr><td>■ 예산 증감</td><td>• 신규예산 확보(청년정책 분석·평가 사업)</td></tr>
<tr><td>■ 추진 체계</td><td>• 각 부처 사행계획 수립 및 이행 → 국조실 분석·평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점검 → 각 부처 보완 제출</td></tr>
</table>

① 과제 제안 배경

앞에서 제안된 〈추진 과제1〉과 〈추진과제2〉에 이어, 청년정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 예산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청년정책의 명확한 개념과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청년지원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미래연석회의' 자료의 일환으로 분석한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 및 예산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청년정책 예산이 20조 7,918억 원으로 산출하였지만, 이 또한 정확한 집계는 아니다(더불어민주당, 2019.08.27.).

다시 말해, 청년정책이 실효성 높고 당사자들의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 청년정책들이 앞서 제안된 개념화 작업과 분류·관리 체계가 마련된 후, 그에 따라 분류된 바대로 사업의 성격을 구분한 후 각 사업들을 일명 '코드화' 하고, 그 코드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전제된 후에야 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작동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후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될 수립될 시행계획이 수립 및 분석·평가의 과정을 통해 예산 사업들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청년기본법안」 제9조 제1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 지사의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국무총리가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거에 기초하여, 각 부처와 시·도 지사가 시행계획에 예산사업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할 때, 수립된 시행계획에 기본 요건으로 예산 산출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제안한다.

앞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3단계 청년정책 분류체계를 통해 'Core'가 아닌, 'Layer'층에 있는 그 중에서도 'Layer2'에 위치하는 정책사업, 즉 정책사업의 일부에 청년이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 총예산 중 일부만이 청년정책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준에서는 이 사업 예산 전체가 청년정책예산으로 간주되어 산정되는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의 20조가 넘는 청년정책예산 분석의 결과가 정확한 집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사업의 지원 대상의 일부로 청년을 포함하고 있는 각 부처의 다수의 사업들은 사업 총예산에서 지원사업의 신청자, 또는 이용자 또는 수혜자 수와 수혜율을 고려한 기준 등을 반영하여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예산금액을 청년정책예산으로 반영해야만 현실적인 예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Ⅵ-9 정책사업 분류 'Layer'층 사업 청년정책예산 산정방식(안)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체계적인 기준과 타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청년정책 예산이 산정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리적 타당성이 동반되어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시행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를 활용하여 각부처와 시·도지사가 제출한 계획과 실적을 분석·평가한 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단순히 전달하고 위원회가 점검하는 것을 넘어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고, 그것을 각 처와 시·도지사는 보완된 정책설계를 하여 예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청년정책 예산사업이 명확한 근거 하에 확대·강화 될 수 있으며, 수정·보완될 수 있는 근거기반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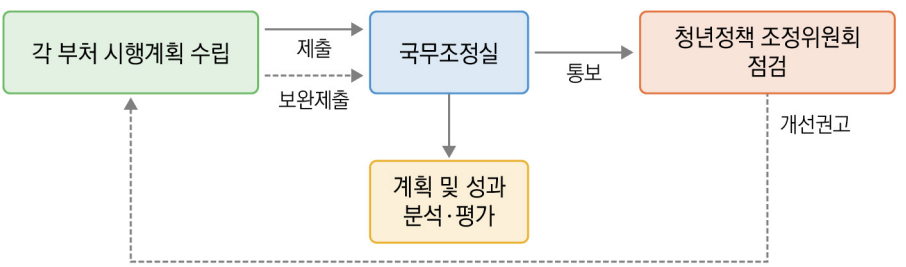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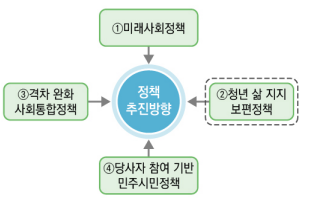


그림 Ⅵ-10 정책사업 분석·평가를 활용한 예산사업 추진 체계성 강화 절차(안)

2) 이행기 청년세대 특성과 욕구기반의 정책 보편성 강화

(1) 청년세대 사회안전망 개념 재설정 및 지원 강화

<table>
<tr><td>〈추진 과제4〉</td><td colspan="2">청년세대 생활안전망 개념 재설정 및 지원 강화</td></tr>
<tr><td colspan="2">■ 주요 제안 내용</td><td>■ 추진 방향</td></tr>
<tr><td colspan="2">• 변화된 청년특성 및 욕구에 기반 한 ‘생활안전망’ 지원 정책의 개념 및 범주의 재설정
• [포용국가 사회정책 계획]으로 기 수립된 ‘조직문화 개선을 중심으로 한 일터혁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td><td rowspan="2">
</td></tr>
<tr><td>■ 근거 법령</td><td>• 「청년기본법안」 제8조 제2항 3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76조의3</td></tr>
<tr><td>■ 소관 부처</td><td>•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td><td rowspan="4">■ 과제 추진 유형
• 법령 제·개정 (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 제도 및 추진 업무 정비 ( )</td></tr>
<tr><td>■ 예산 증감</td><td>• 비예산 사업</td></tr>
<tr><td>■ 추진 체계</td><td>•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td></tr>
</table>

① 과제 제안 배경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한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일상의 생활과 삶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주거, 건강, 부채, 소득과 같은 일명 ‘생활안전망’에 대한 지원 욕구가 아주 크다는 것이며, 이것이 전통적인 복지정책에서 대응해왔던 정책의 범위와 다른 고용과 문화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정책이슈들까지 확장된 형태의 개념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청년세대가 필요하다고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안전망의 개념과 범위는 기존 정책에서 정의했던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나 소득을 보장하거나 지원하는 일반적 사회안전망의 개념보다 더 넓은 영역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생활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하더라도, 청년

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정책지원의 개념과 범위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설계한다는 정책입안자들이 상정하는 개념과 범위와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청년들의 다른 '생활안전망'의 개념과 그에 대한 높은 욕구는 본연구의 제3장 지난 과거 기간에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했던 이들의 면접조사에서, 제4장의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면접조사에서도, 그리고 현재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델파이에서도 공통적으로 포착되고 실증적으로 분석된 결과이다.

소득과 부채, 주거문제와 건강에 대한 지원 욕구는 전통적인 복지정책 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생각하는 '생활안전망'에는 노동현장의 안전이라고 생각되는 '일터에서의 안전', 그리고 일터에서의 안전에는 일명 '갑질'이나 비합리적 '위계적 문화' 같은 직장 내 문화로 다루어졌을 사항들이 일상의 안전망의 범위로 흡수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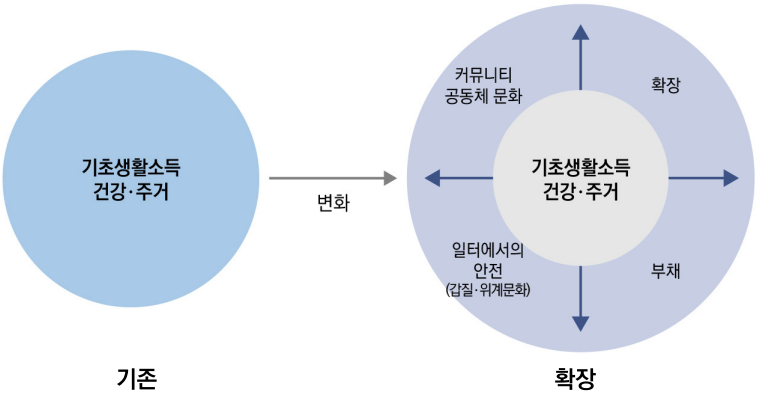


그림 Ⅵ-11 변화된 청년세대 '생활안전망' 개념 및 범위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요구수준이 높은 생활안전망을 청년정책 안에서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에서 의미하는 '생활안전망' 정책의 개념

과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범위에 있던 소득, 건강, 주거 지원 정책을 넘어 새롭게 확인된 사항들, 즉 청년세대 '생활안전망'으로 인식되는 영역에 새롭게 편입된 사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이전까지 청년정책으로 고려되지는 않고, 일터의 조직문화 개선이나 근로여건 등 '노동정책'으로 한정하여 보았던 '일터에서의 안전'을 실증분석에서 확인된 청년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확장된 '생활안정망'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청년들이 '생활안전망'이라고 인식하는 '일터에서의 안전'은 비단 산업재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이보다 더 보편적인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갑질'이나 위계를 활용한 괴롭힘 등과 관련된다.

지난 2월에 발표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서 '일'과 관련된 정책의 하나로 '조직문화 개선을 중심으로 한 일터혁신'을 제시한 바 있다. 즉 기업문화 개선으로 근로자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고, 일터에서의 학습 기회도 늘어나게 하겠다는 목표이다(관계부처 합동, 2019.02.19., p.12). 아직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청년들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기 발표된 일터혁신은 성과 관리를 통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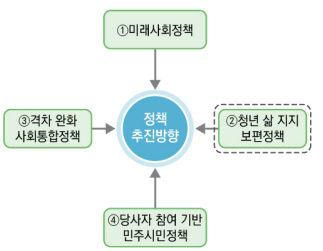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 조항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신설하였고, 7월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9.10.23. 검색).

물론 법률 개정이 청년정책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지지대가 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제까지 청년정책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영역의 정책들이 청년정책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이러한 정책을 통해 확인되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터의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일터 혁신 측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안한다.

(2) 청년집단 특성 이해에 기초한 정책설계 강화

<table>
<tr><td colspan="2">〈추진 과제5〉</td><td>청년집단 특성 이해에 기초한 정책설계 강화</td></tr>
<tr><td colspan="2">■ 주요 제안 내용</td><td>■ 추진 방향</td></tr>
<tr><td colspan="2">• 기 수립된 '청년 희망 사다리'계획(2019.07.17.)에 포함된 주거, 소득, 부채관련 정책의 이행 수준 점검
• 건강관련 청년세대 보편적 문제로 드러나는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체계의 마련
-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닌, 중증정신질환자가 아닌 일상적인 심리·정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특화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법률 개정 필요성 검토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 근로복지프로그램(EAP)활용 청년지원 확대·강화
-「정신건강복지법」 제13조2호에서 규정하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정신건강서비스 부처 간 협의로 현실화 방안 마련</td><td>
</td></tr>
<tr><td>■ 근거 법령</td><td>•「청년기본법안」 제8조 제2항 3호
•「정신건강복지법」 제13조
•「고용보험법」 제25조,「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td><td rowspan="4">■ 과제 추진 유형
• 법령 제·개정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업무 정비 (○)</td></tr>
<tr><td>■ 소관 부처</td><td>•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td></tr>
<tr><td>■ 예산 증감</td><td>• 예산 증액</td></tr>
<tr><td>■ 추진 체계</td><td>• 보건복지부 → 지자체 → 청년특화심리상담센터 지정</td></tr>
</table>

① 과제 제안 배경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 영역과 관련된 소득과 주거, 건강,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확대되면서 이들 세대가 다수가 안고 있는 부채 등에 대한 지원 요구는 지속적으로 되어 왔고, 그 간의 정책들도 소득 보전, 주거공급량 확대, 건강검진 확대, 저리 대출이자 제공 및 신용회복 지원 등으로 확대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들의 요구는 이들 기본 영역으로 집중되는데, 이전과 달라진 양상은 이제까지의 정책이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어떠한 일정 상태에 있는 이들만을 한정해서 지원하는 선별적인 성격의 지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은 보편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욕구가 크다는 점이다. 단, 그 보편성이 의미하는 것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청년의 다수가 경험하는 일이라는 의미의 보편성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청년과 청년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주거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제공의 양적 증가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확대 등 국토교통부의 기존 정책 사업에서 확장된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더하여, 지난 7월에 발표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에서는 교통 요지에 저렴한 주거지 공급을 확대한다거나, 역세권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공급한다거나,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도 도입되었다(기획재정부, 2019.07.17., pp.9-10).

또한 소득과 관련해서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는데,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이어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고, 임금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을 확대

하고 활성화 하는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금리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9.07.17., p.8, pp.13-15).

또 건강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부터 그 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대~30대 미취업 청년들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새롭게 청년 수요에 맞는 건강분야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자 하는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이 시작되기도 하였다(국무조정실 내부자료, 2019.09.17.).

이와 같이 기본적인 청년의 주거, 건강, 소득, 그리고 부채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통해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연구 결과에 기초해 볼 때,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으며 이미 청년세대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갖는 문제로 드러나는 새로운 문제, 즉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지원에 관한 욕구라는 청년세대의 보편적 문제에 대응하는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청년세대, 특히 20대의 정신건강이 다른 세대에 비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발표된 연구(김지경·이윤주, 2018)에 의해 실증적으로 규명된 바 있으며, 새롭게 요구되는 청년정책의 영역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정서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12년 183개소 → 18년 243개소)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는 확충해 왔으나(국무조정실 내부자료, 2019.09.17.), 이들 센터의 업무는 조현병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과 보건서비스가 우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심리·정서 상담지원을 원하는 청년들의 욕구에 다소 빗나가는 측면이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청년 정신건강센터로 특화된 광주지역의 '마인드링크'를 추가 5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기는 하나, 여전히 청년들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도 원하기는 하지만, 전체 청년을 중심으로 보았을 대 증상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일명 '위험군'에 속하는 이들 이외에도 지극히 '정상'이지만, 일상적으로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싶은 욕구가 큰 청년들 다수가 심리·정서지원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이러한 욕구는 전통적으로 가족 안에서 또는 또래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서적 지지가 매우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심리·정서지원의 욕구를 정신보건 서비스 정책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는 위험수준의 청년들의 의료서비스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담지원서비스로 위치시키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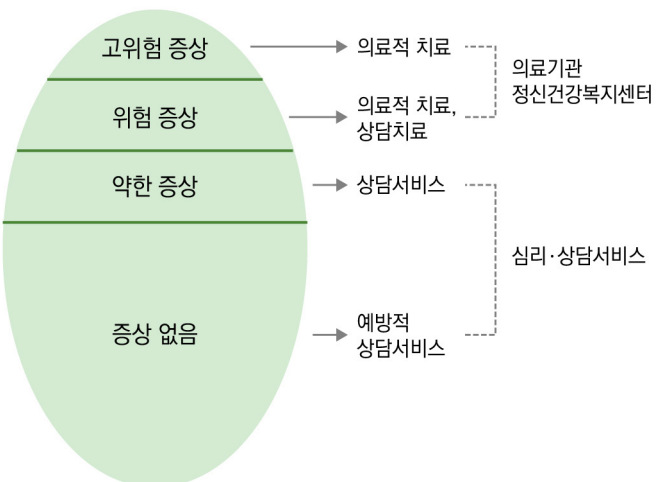


그림 Ⅵ-12 정신건강 증상 수준별 청년 심리·정서 지원사업의 배치(안)

이와 같은 제안에 기초한다면,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6개 지역에 '마인드링크' 사업을 단순히 확대할 것이 아니라, 6개 '마인드링크'는 지역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부여 하고, 거점을 기준으로 근거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특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2018년과 2019년의 1억 5천 만원의 1개소 시범사업의 예산을 근거로 전국에 6개소로 확대하고, 9억의 예산 증액 방식의 단순 양적 확산은 보편성을 갖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지원 정책으로서 적절치 않다.

물론 청년들의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 문제가 기본생활지원으로 발견되어 드러나고, 정부의 정책개입의 필요성이 실증적 근거에 기반하여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논의된 바와 같이 청년들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의제가 설정되고 정책이 설계되어야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의 2020년 '마인드링크사업'의 계획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아쉬운 점이 많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지역의 거점센터로서의 '마인드링크'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면,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운영과의 연계, 그리고 위험증상을 보이는 청년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계획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이 현재 중증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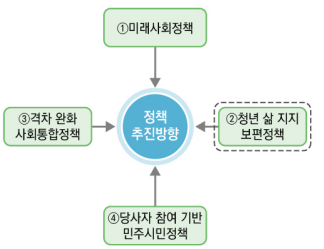
2020년 마인드링크(mind link)사업 계획	조정 → 필요	마인드링크(mind link)사업 계획 수정 제안
• 대상: 14세~34세 • 내용: 정신건강서비스센터 • 예산: ('20)국비 1억5천만원 × 6개소=9억 ('20)지방비 1억5천만원 × 6개소=9억 • 근거법령: 「정신건강복지법」 • 비고: '18~'19 시범사업 운영		• 대상: 19세~34세 • 내용: 지역 청년특화심리정서지원센터 지원 거점 센터 기능 필요 • 예산: 국비 예산 증액 필요 • 근거법령: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이 중증정신질환장애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추후 근거 신설 또는 개정 검토 필요

* 자료: 국무조정실 취합 내부자료(2019.09.17.). 보건복지부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자료.

보건복지부의 '마인드링크' 사업 이외, 청년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전국의 56개 고용센터, 총24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고(고용노동부, 2018.12.05.), 「근로복지기본법」제83조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근로자복지프로그램(EAP)'를 활용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3조 2호에서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19.10.23.검색)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2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대학의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적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즉 신청자가 많아 3월에 상담 신청을 하면 7월이나 되어야 상담을 받을 수 있거나, 아예 대학에 상담지원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라는 점은 이미 연구(김지경·이윤주, 2018)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대학에 따른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3) 다층의 다분화된 청년욕구 대응 지원 강화

<table>
<tr><td colspan="2">〈추진 과제6〉</td><td colspan="2">다층의 다분화된 청년욕구 대응 지원 강화</td></tr>
<tr><td colspan="2">■ 주요 제안 내용</td><td colspan="2">■ 추진 방향</td></tr>
<tr><td colspan="2">• 청년정책 관련 각 부처의 실태조사 다층의 다분화 청년실태 파악 가능한 내용인지 조사내용 설계 전반적 검토 후 보완 방안 마련
• 시행계획 수립 시, 각 부처는 정책의 목적과 대상을 다층의 다분화된 청년을 전제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제출
• 국무조정실 시행계획 분석·평가에 해당 요소 포함 및 청년정책 예산사업 심의에 해당 사항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기재부 협의 방식으로 추진</td><td colspan="2">
</td></tr>
<tr><td>■ 근거 법령</td><td>• 「청년기본법」 제9조 및 제12조</td><td rowspan="4">■ 과제 추진 유형
• 법령 제·개정 (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업무 정비 ( )</td></tr>
<tr><td>■ 소관 부처</td><td>• 국무조정실, 통계청, 각 중앙부처</td></tr>
<tr><td>■ 예산 증감</td><td>• 신규예산 확보(연구예산, 분석·평가 사업)</td></tr>
<tr><td>■ 추진 체계</td><td>• 각 부처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검토 → 사행계획 수립 → 국조실 분석·평가 → 기재부 예산심의 협의</td></tr>
</table>

① 과제 제안 배경

청년세대가 하나의 동질적인 성격을 갖는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로 분화된 작은 집단의 결합체와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책대상자로서 '청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다분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청년들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간 청년이슈가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로서의 응집력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본 연구의 제3장 면접조사에서 발견되고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제4장 설문조사에서는 다층의 수직적 분화는 주로 경제적 수준에 따라, 그리고 수평적 분화는 청년문제 또는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에 따라 큰 간극을 보인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층의 다분화된 청년들

의 존재 상태는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욕구를 갖는다. 앞에서 주요 결과로 요약한 바와 같이, 주관적 경제인식이 낮은 청년들은 기본적인 생활안전망과 범주의 정책을,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청년들은 역량개발이나 일터안전과 같이 청년세대 특성으로 새롭게 드러나는 정책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이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경제적 계층에 따라 다른 인식을 보이는 것이 실증모형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예컨대 경제적 여건을 낮게 인식하는 청년들은 '고용안전망의 구축'보다는 '소득보장제도의 개혁'을 더 시급한 과제로 꼽았지만, 경제적 여건을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소득보장제도 개혁'보다는 하나의 범위로 묶여지지 않는 다양한 내용(①창의성과 다양성의 증진, ②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③역량강화와 일터 혁신, ④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사회시스템)의 정책이 각각 더 시급하다고 인식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수준과 그에 따른 지원 욕구의 내용도 경제적 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된다. 가령 경제적 여건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이들은 기본적인 생활안전망과 관련된, ①학자금지원, ②신용회복지원, ③고용안전망 정책을 인지하고 수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경제적 여건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청년들은 ①청년 활동 공간 및 서비스 정책, ②역량개발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청년집단 자체의 특성과 상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이 설계된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확보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청년정책을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청년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층의 다분화된 청년집단의 특성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욕구 차이에 기반한 정책이 지원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현행 청년정책의 한계를 넘어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삶을 지지하고 체감도 높은 포용국가 사회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책설계의 단계에서 청년집단의 다층화되고 다분화된 특성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정책욕구의 차이를 전제로 정책의 목적과 지원 목표 집단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청년집단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한 정책설계의 기초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근거기반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수 요소이다.

그렇다면, 먼저 현재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수집되고 있는 각 부처의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가 수직적 다층과 수평적 다분화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청년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수행되고 있는 연구들이 청년이라는 정책대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한다. 검토 후 실증적 자료와 실태 파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가 「청년기본법안」 제12조에 근거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와 같은 기초자료 측면의 사항들이 점검이 된 이후, 각 부처는 「청년기본법안」 제9조 규정에 의해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해당 자료들을 근거하여 정책목표와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한 내용을 담아 계획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국무조정실은 시행계획에 분석·평가의 요소로 이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사업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사업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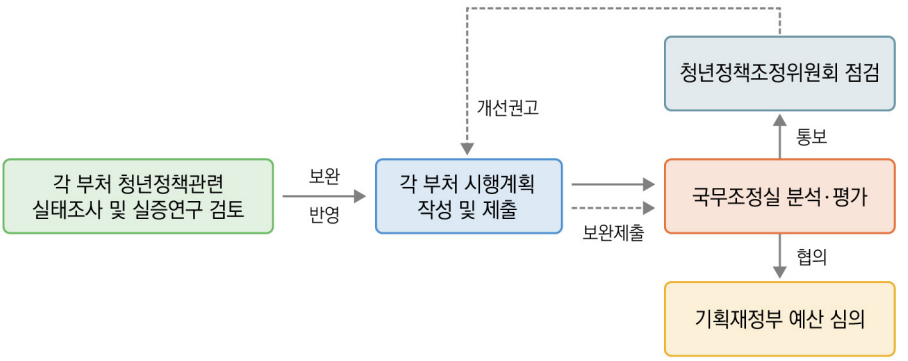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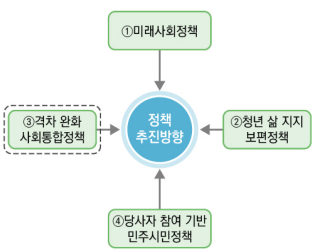


그림 Ⅵ-13 다층의 다분화된 청년특성 및 욕구기반 정책 추진 강화(안)

3) 세대 내 다양한 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통합 강화

(1) 정책 배제 청년층 사회적 연계를 위한 지원 강화

〈추진 과제7〉	정책 배제 청년층 사회적 연계를 위한 지원 강화	
■ 주요 제안 내용		■ 추진 방향
• 취약계층 청년대상 서비스 제공을 '단일서비스' 제공에서 '결합서비스' 방식으로, 다양한 제공 방식 중에서 수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 -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적 연계성 강화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 '20 고용노동부가 추진 예정인 '청년희망멘토링' 사업이나 기본의 보건복지부의 '청년희망통장' 사업 등 취약계층 청년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결합서비스 방식으로 제공 확대		
■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안」 제5조, 제4조, 제8조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법령 제·개정 ( )
■ 예산 증감	• 예산 증액(청년센터, 청년희망멘토링)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16개 청년센터 •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 신규 사업 도입 ( ) • 제도 및 추진 업무 정비 ( )

① 과제 제안 배경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 중의 하나는 청년 세대 내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와 인지수준의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제3장의 면접조사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 제4장의 설문조사에서도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주요 결과로 요약된 바와 같이, 대체로 대졸 이상의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수혜율이 전반적으로 높고, 대졸 미만의 상대적 저학력 청년들, 그리고 비정규직 청년들이 정책인지와 지원 수혜에 있어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그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배제된 청년집단의 또 다른 문제는 정작 취약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정부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 대상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의 존재가 청년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 쉽게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청년집단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나,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하지는 않을지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내지 못하는 비활력(inactive) 청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간 추진되어온 청년정책에는 적극적으로 이들의 존재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의 청년정책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미래사회정책'으로 추진되고 안착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추진되어온 청년정책에 더하여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취약한 청년들이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사회통합의 접근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세대 내 배제된 청년층의 사회적 연계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청년정책을 통해 지원되는 지원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고, 정책 욕구에 대한 의견 개진에서 비활력층에 있는 청년들이 대체로 취약계층 청년들이 다수라고 한다면, 정책 배제 청년층을 위한 정책은 결국 취약계층 청년들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 즉 ①취약계층 청년들이 지원정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방법으로 제공 받고, ②청년수당과 같은 경제·사회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③자신 또한 청년세대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비롯한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현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단일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다른 연계 정보나 또래, 지역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예컨대 서울시와 전주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단 상담과 생활자립에 필요한 강좌, 또래활동 프로그램을 청년수당 수혜자 중에서 희망하는 자에 한해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실시했고, 그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김지경·이윤주, 2018, pp.60-61)를 고려해 본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사업들 중 취약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의 제공 형태를 '단일방식'에서 다양한 '결합방식'으로 확대되고, 확대된 형태에서 수혜자가 지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전환 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아이디어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청년정책TF 소득·일자리분과의 논의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예시〉

현행: 단일 지원		개선(안): 결합지원 (유형 중 선택 가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확대 ⇒ 전환	A형: 청년희망키움통장 단일 지원
		B형: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자리, 주거, 소득, 부채, 건강 상담 및 연계
		C형: 청년희망키움통장 + 지역 청년커뮤니티 사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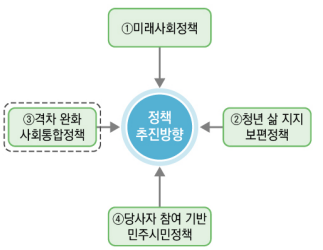
현행: 단일 지원		개선(안): 결합지원 (유형 중 선택 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확대 ⇒ 전환	A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단일 지원
		B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진로 및 심리·정서 상담서비스
		C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생활종합상담
		D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사업 참여

* 출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실행위원회(2019).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연구」 부록1. 〈정책기획위원회 청년정책TF 소득·일자리 분과〉 '청년의 공평한 출발기회와 안전한 이행을 보장해주는 소득일자리 정책' p.68에서 일부 발췌.

따라서 이미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계획되거나 지원되고 있는 정책사업의 내용 또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미 시행을 통해 효과가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청년수당 사업의 결합방식의 추진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향후 추진될 취약계층 청년대상 정책지원은 지원 방식에 있어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결합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정책 설계단계에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청년 희망 사다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부터 전국의 16개 청년센터를 전달체계로 하여, 장기구직자나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단위의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는 '청년 희망 멘토링'을 계획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9.07.17.).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밀착'이라는 방식과 함께 다양한 결합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제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취약계층 청년 대상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비스 결합방식의 제공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계획할 것을 제안한다.

(2) 지역 간 청년정책 추진 기반 및 운영 내용 격차 완화

<table>
<tr><td colspan="2">〈추진 과제8〉</td><td colspan="2">지역 간 청년정책 추진 기반 및 운영 내용 격차 완화</td></tr>
<tr><td colspan="2">■ 주요 제안 내용</td><td colspan="2">■ 추진 방향</td></tr>
<tr><td colspan="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담당자, 청년당사자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협력
• 중앙에서 기초연구와 지역 청년정책 분석에 기초하여 지역 청년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청년정책지원단’ 구성·운영
– 「청년기본법안」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는 ‘청년정책연구센터’를 설치·활용하여, 각 시·도 수립 시행계획과 성과의 분석·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하는 ‘지역 청년정책 컨설팅 지원단’을 연구센터의 조직으로 구성하여 지역협의체를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td><td colspan="2">
</td></tr>
<tr><td>■ 근거 법령</td><td>• 「청년기본법안」 제5조제3항, 제12조</td><td rowspan="4">■ 과제 추진 유형
• 법령 제·개정 (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업무 정비 ( )</td></tr>
<tr><td>■ 소관 부처</td><td>•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td></tr>
<tr><td>■ 예산 증감</td><td>• 신규예산 확보(청년연구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비)</td></tr>
<tr><td>■ 추진 체계</td><td>• 국무조정실→청년연구센터→지원단
↓
(지역협의체)</td></tr>
</table>

① 과제 제안 배경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한계로 발견된 사항 중 하나는 지역 간 청년정책의 추진 기반이나 운영 내용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서울시가 2015년 1월에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9년 현재 청년 광역시·도 100%, 기초자치단체의 대략 65%가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된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19.10.23. 검색).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할지라도 청년정책이 운영되는 내용과 실제에 있어서의 지역 간 차이는 상당하다. 일예로 지역의 청년센

터를 설치해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광역시·도는 5개로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07.30a).

본 연구의 제3장의 면접조사에서도 지역 간 격차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난점으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특히 지역의 청년거버넌스가 작동이 원활하고, 그 간의 청년정책 추진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자체와 조례제정만 추진될 뿐 기반조차 갖추지 못하여 동력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지역과의 격차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제5장의 정책델파이 결과에서도 현 시점에서 청년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역 간 격차 심화'가 '자산 격차 등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에 이어 두 번째 우선 고려사항으로 꼽힌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청년정책의 추진 기반의 상황과 실제 운영 내용, 이에 더하여 성과의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대응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확대되고 있는 지역 간 청년정책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평가 기초하여 앞서가는 지역의 선도 요인과 기반 확충과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의 문제 요인을 분석하고, 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담당자로 구성된 이들과 청년 당사자 집단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협력해야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기초 연구와 지역 청년정책 분석·평가에 기초하여 지역 청년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일명 '지역 청년정책 지원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단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청년기본법안」 제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거주 지역을 포함하여 청년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기본이념에 따르면서 실제 국가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하는 문제의 현실 가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안」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정책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연구과 각 시·도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성과의 분석·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하는 '지역 청년정책 컨설팅 지원단'을 연구센터의 하나의 조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률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되면, 국무조정실은 청년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설치되는 연구시설을 '청년연구센터'로 지정하고 그 하위에 ①기초연구와 ②시행계획 분석·평가 그리고 ③지역청년정책 지원단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 격차 완화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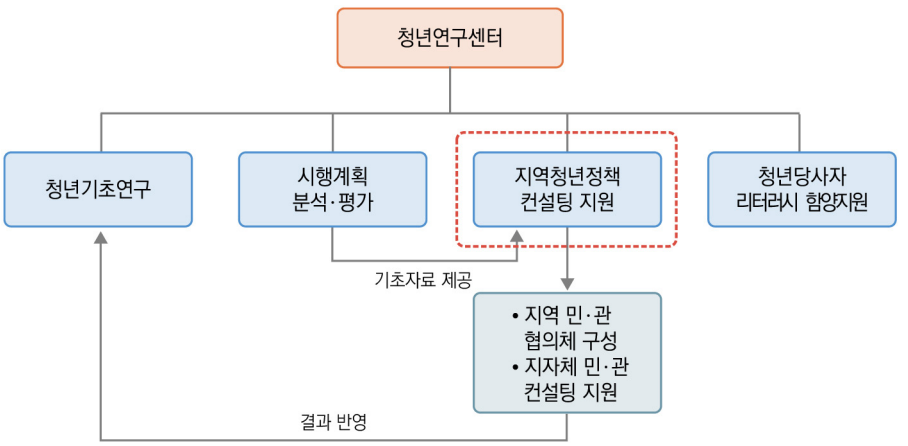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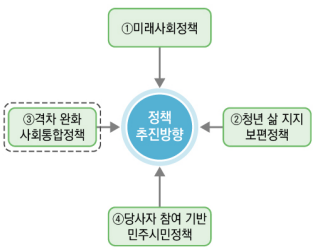


그림 Ⅵ-14 지역별 청년정책 질적 격차 완화 방안(안)

(3) 소득 및 자산격차 영향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

<table>
<tr><td colspan="2">〈추진 과제9〉</td><td colspan="2">소득 및 자산격차 영향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td></tr>
<tr><td colspan="2">■ 주요 제안 내용</td><td colspan="2">■ 추진 방향</td></tr>
<tr><td colspan="2">• 현행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20년 시행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현재의 청년’에 집중하는 대응 정책으로서 지속 강화
• 보완적으로 ‘미래의 청년’으로 까지 정책의 시선을 확장하여, 미래사회정책으로서 취약계층 청년의 기회보장을 강화한다는 사회통합정책의 성격인 생애주기 연계 ‘사회출발자본형성’ 제도 마련
– 아동수당지급이 끝나는 7세부터 20세가 되는 시점까지 정부와 부모 기여를 전제로 매칭·적립한 후 20세가 되는 시점에 지급</td><td colspan="2">
</td></tr>
<tr><td>■ 근거 법령</td><td>• 「청년기본법안」 제4조제3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td><td colspan="2" rowspan="2">■ 과제 추진 유형
• 법령 제·개정 (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업무 정비 ( )</td></tr>
<tr><td>■ 소관 부처</td><td>•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td></tr>
<tr><td>■ 예산 증감</td><td>• 신규예산 확보(생애주기연계 매칭)</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 추진 체계</td><td>• 국무조정실 → 보건복지부 → 지자체</td></tr>
</table>

① 과제 제안 배경

활용된 연구방법에 상관없이 본 연구의 실증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현시점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정책 환경은 이른바 ‘격차(disparity)’이다. 제4장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 평가 및 의견조사에서도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개혁이 우선순위 항목으로 선택되었으며, 제5장 정책델파이에서는 ‘자산 격차 등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가 1순위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이미 구조적으로 우리사회에 심화된 ‘소득-자산-교육’의 불평등 재생산 고리를 끊는 사회정책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근로소득을 보전하고 자산

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들이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들 중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19년 341,402원) 이상인 청년들의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매월 근로 또는 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 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후 15백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2018년 4월부터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9.10.23. 검색; 국무조정실 내부자료, 2019.09.17.).

또한 2020년 상반기에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여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본인 저축 시(10만원) 근로소득 장려금(30만원)을 매칭 하여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기획재정부, 2019.07.17.). 이와 같은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청년들, 즉 절대 빈곤하에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2020년부터는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수급가구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 청년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즉 격차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산형성 정책이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한계가 있는데, 우선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생활과 가족의 부양, 그리고 부채 등으로 인하여 본인 저축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즉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점이 그 한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구 선진국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 즉 이행과정에 있는 이들이며 청년들이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미래사회정책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단기적 현안 대응이 아닌, 보다 긴 기간의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새로운 제도를 보완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우리나라는 2018년 9월에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9년 9월 현재 7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9.10.25. 검색).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여·야 합의 「청년기본법안」에 규정된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 19세~34세에 해당한다. 학령기를 마치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진학하거나 노동시장으로의 사회진출을 선택하든 어떠한 경로를 선택 하던지, 사회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출발자산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일명 '사회출발자산'의 개념이 생애주기 사회정책의 하나로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청년정책TF 소득·일자리 분과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으로서 '기회의 균등 보장' 차원에서도 사회출발자본 형성이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사회출발자본을 설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재의 청년'에게 집중하는, 즉 현 시점의 사회출발을 앞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청년'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계로, 정부와 부모의 기여를 전제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매칭·적립하여 사회로의 이행 시점에 지급을 하는 방식이다(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실행위원회, 2019, pp.71-72).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설계를 모두 고려하여 취약계층 '현재의 청년'에 대해서는 확대 추진되고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대응하고, '미래의 청년'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 끝나는 만 7세 시점부터 매칭·적립하는 방식으로 사회출발자본 형성의 제도를 보완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즉, 7세부터 20세가 되는 시점까지 정부와 부모가 매칭·적립을 하는데 취약계층 부모의 매칭비율은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0~50% 수준에서 확정하는 방식이며, 20세가 되는 시점에 청년이 적립된 자산을 사회출발준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을 보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현재의 청년만이 아닌, 미래의 청년으로까지 정책의 시선을 확장하고, 미래사회정책으로서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정책으로 청년정책이 안착될 수 있는 설계를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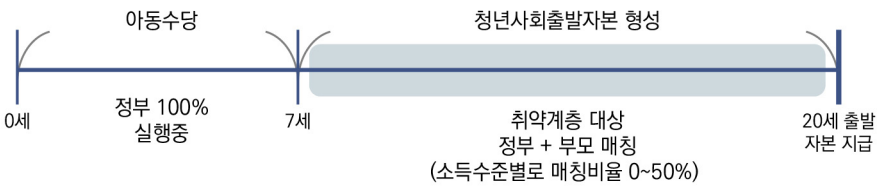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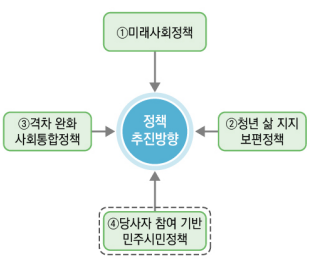


그림 Ⅵ-15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제도 보완제도 설계(안)

4) 민주시민정책으로서 당사자 참여·주도성 강화

(1) 당사자 정책 리터러시(literacy) 함양을 위한 지원 추진

〈추진 과제10〉	당사자 정책 리터러시(literacy) 함양을 위한 지원 추진	
■ 주요 제안 내용		■ 추진 방향
• 「청년기본법안」 제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사업 내용에 당사자 정책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추진 • 국무조정실은 시행계획 및 성과 분석·평가의 요소로 정책 리터러시 함양의 사항을 반영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가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향후 설치될 청년연구센터에 '청년 정책리서터리 함양 지원' 업무 조직을 신설하여 각 부처와 지자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안」 제4조 제5항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 국무조정실	• 법령 제·개정 ( )
■ 예산 증감	• 신규예산 확보(청년정책 교육·홍보비)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 국무조정실 → 각 부처 → 지자체 ↓ 청년연구센터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업무 정비 ( )

① 과제 제안 배경

본 연구의 제4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도의 수준은 청년 특성에 따라 그리고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도 그 간극이 크다. 예컨대 총 12개 청년대상 정책사업의 인지도의 범위는 최하 19.5%부터 최고 99.0%까지 꽤 넓다. 인지도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50%를 초과하는 정책 사업들은 시행된 지 오래된 학자금 지원 사업이나 구직 및 창업지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그렇지 않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대한 소득보전 정책이다. 이와는 달리, 정책인지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책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정책 사업들로, 역량개발이나 일터 안전, 청년거버넌스, 고용안전망 확대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청년 당사자들의 특성과 욕구에 기초해 본다면 이들 정책인지도가 낮은 사업들이 청년들의 지원욕구에 부합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낮은 체감도의 적지 않은 부분은 청년들의 낮은 인지와 이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한편, 청년거버넌스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 사이에 의견 개진이 다른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의 원인도 궁극적으로는 이 정책 인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청년거버넌스 참여자들에 대해 정치적 의도와 색깔을 갖는 정치지망생이 아니냐 하는 편견의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실증적으로 분석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석한다면, 청년거버넌스 참여자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편향보다는 얼마나 정책의 내용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는가의 격차가 청년거버넌스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차이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당사자 정책 리터러시(literacy)의 함양이 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정책 추진에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음을 실증 분석을 통해 발견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청년기본법안」 제4조 제5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청년발전, 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이 청년정책에 바람직한 법률적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방적인 정보의 확산 목적의 홍보나 교육이 아닌, 청년정책을 만들어가는 주체의 양성, 더 나아가서는 민주시민 양성의 과정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다수의 청년들이 왜곡된 정책인지, 그리고 정보가 제공되어도 그것이 무엇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리터러시 부족을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청년 당사자 측면에서 청년정책의 입안과정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청년활동가에 의존하는 정책 참여가 아닌, 보다 다양한 층위의 청년들이 그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집단의 정책 리터러시 수준을 높이고 함양해야 하는 과제가 당사자들에게도 부여된다.

또한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청년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기에는 그들의 수준이 낮다'는 편견을 앞세우는 것 보다는 정책파트너로서 함께 정책인지 및 이해의 수준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안」 제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사업 내용에 당사자 정책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국무조정실은 정책시행계획 및 성과 평가에 요소로 반영하며, 향후 설치될 청년연구센터에 '청년 정책 리터러시 함양 지원' 업무 조직을 신설하여 각 부처와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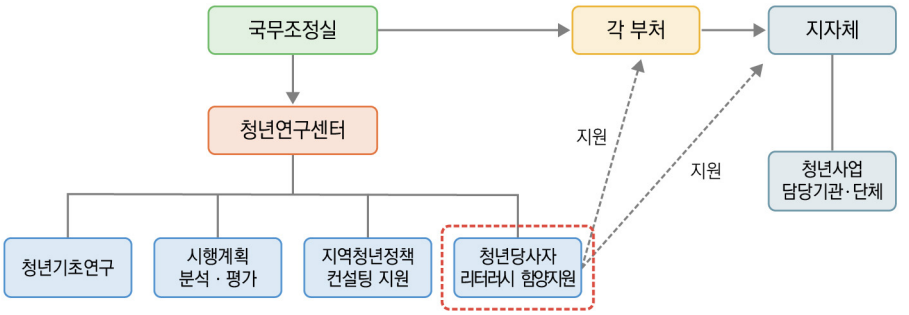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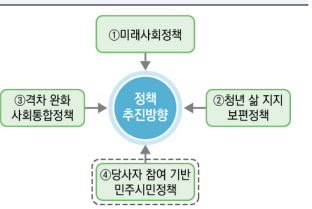


그림 Ⅵ-16 청년정책 리터러시 함양 지원 체계(안)

(2) 청년정책 입안 및 집행 담당자 교육·연수 실시

〈추진 과제11〉	청년정책 입안 및 집행 담당자 교육·연수 실시	
■ 주요 제안 내용		■ 추진 방향
• 「국가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와 제10조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 추진 담당 공무원의 청년정책 교육 및 연수과정을 신설 추진함. - 현행 시행되고 있는 직무/전문성교육과정 중 '국정시책과정'에 [청년정책과정]을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		
■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안」 제4조제5항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제10조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 법령 제·개정 ( )
■ 예산 증감	• 예산증액(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공무원인재개발원	• 신규 사업 도입 ( ) • 제도 및 추진 업무 정비 ( )

① 과제 제안 배경

〈추진 과제 10〉의 과제 제안 배경과 같이, 청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당사자 뿐만 아니라,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리터러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3장의 면접조사에서는 그 간의 청년정책이 추진되어 오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부재하고, 체감도 낮은 정책이 다수 추진되었으며, 그러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정책입안자들을 비롯한 청년정책 추진의 주체들이 청년 집단에 대한 이해 수준이 매우 낮았다는데 있다. 이는 결국 건강한 청년거버넌스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다음'이 그려지는 미래사회정책으로서 그리고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안착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청년 당사자만을 향하는데 있지 않고, 추진 주체인 정부 안으로 향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청년정책 담당자들이 청년 당사자와 더불어 정책인지의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인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가 시행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공무원의 교육 및 연수는 대체로 「공무원인재개발법」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원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법 제3조와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①기본교육, ②공적 가치교육, ③공적 리더십교육, ④글로벌교육, ⑤직무/전문성교육) 중에서 직무/전문성 교육과정에 청년정책 업무 담당자 교육프로그램을 신설 제안하고자 한다.

2019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무/전문성교육과정은 크게 ①국정시책과정, ②공통핵심직무과정, ③정보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년정책' 과정을 신설한다면, '국정시책과정'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의 신설은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가 협의하고, 국가인재개발원이 시행하는 절차로 추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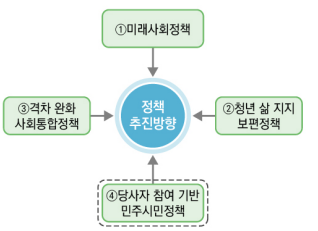
것을 제안한다. 우선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을 추진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지방공무원 교육의 과정도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표 Ⅵ-15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직무/전문 교육과정에 청년정책과정 추가 신설(안)

직무/전문성 교육과정	세부 교육과정 내용
국정시책과정	규제혁신과정, 국민안전정책과정, 일자리경제과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정, 사회적감수성실천과정,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역량 향상과정, 양성평등 실천과정, **청년정책과정(신설 추가)**
공통핵심직무과정	인사혁신역량향상과정, 갈등관리분야 정책관리전문가과정(AMP), 인문융합역량향상과정, 기획역량향상과정, 문제해결역량향상과정, 소통역량향상과정, 면접과 역량향상과정, 교육운영자과정, 강의역량향상과정
정보화과정	SW·보안(정보화)

* 출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www.nhi.go.kr, 2019.10.25. 검색).

(3) '청년거버넌스' 운영 기반 및 실효성 강화

〈추진 과제12〉	'청년거버넌스' 운영 기반 및 실효성 강화	
■ 주요 제안 내용		■ 추진 방향
•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법률 제정 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정비 • 청년거버넌스 운영 기반 및 운영의 실효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자체 청년기본조례에 청년참여기구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 반영 - 국무조정실 현황 총괄 파악 → 행안부 추진 모니터링 → 지자체 조례 반영 추진		
■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안」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제15조제2항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지자체	• 법령 제·개정 ( )
■ 예산 증감	• 비예산사업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지자체	• 신규 사업 도입 ( ) • 제도 및 추진 업무 정비 (○)

① 과제 제안 배경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청년정책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기회가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참여기구의 수도 증가한 것은 분명하다.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은 17개 광역시·도의 경우 100%, 정책심의기구가 설치된 곳은 16개 지역, 청년참여기구가 설치된 지역은 14개 지역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반 마련이 된 상태이다(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07.30a). 그러나 참여기구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시된 비율은 8개 지역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현재 조례에 반영하는 과정에 있을 수는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년거버넌스의 운영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체계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 분석되고 논의된 바와 같이, 청년정책의 빠른 확산에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정책의 빠른 도입과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기도 하지만, 정책의사결정자에 의해 청년거버넌스 기반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부정적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행 지방정부의 청년거버넌스의 법률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본연구의 제3장과 제5장의 정책델파이 결과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색 갖추기나 정책도구화로서 청년거버넌스가 활용되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제의 설정과 설계를 위한 하나의 제도적 기구로 기능을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청년거버넌스의 운영기반 강화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보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기본법안」이 조속히 제정이 되면, 중앙정부의 법률보다 먼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들이 제정 법률에 따라 정비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비 또한 지역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지방정부의 조례정비를 제안하고자 한다. 즉 현재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청년참여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한 추진 성과를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의 격차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라도 이에 대한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업무 추진을 제안한다.

표 Ⅵ-16 지자체 청년참여기구 조례 반영 달성률 목표(안)

2019년 3월 기준 광역시·도	2020년 9월 기준 목표
47.06%	90.0% 이상



그림 Ⅵ-17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기본체계

표 Ⅵ-17 정책 추진 과제 요약

추진 과제	과제 추진 유형 ①법령 제·개정 ②기존 사업 보완·확대 ③신규 사업 도입 ④제도·추진업무정비	근거 법령 ①있음 ②없음 ③법안 발의	추진 기간[주] ①단기 ②중기 ③장기	소관부처
1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				
1. 미래사회정책으로서 청년정책 개념 설정 및 체계화	④	③	①	국무조정실
2. 정책 개념에 기초한 중앙정부 청년정책 분류·관리 체계성 강화	③, ④	③	①	국무조정실
3. 정책 체계성 및 효율성에 기초한 예산사업 추진 강화	③, ④	③	①	국무조정실
2 청년세대의 기본적인 삶을 지지하는 보편정책				
4. 청년세대 사회안전망 개념 재설정 및 지원 강화	②	①, ③	①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5. 청년집단 특성 이해에 기초한 정책 설계 강화	①, ②, ③, ④	①, ③	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6. 다층의 다분화된 청년욕구 대응 지원 강화	②, ③	③	①	국무조정실, 통계청, 각 중앙부처
3 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정책				
7. 정책 배제 청년층 사회적 연계를 위한 지원 강화	②	③	①, ②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8. 지역 간 청년정책 추진 기반 및 운영 내용 격차 완화	③	③	②, ③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9. 소득 및 자산격차 영향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	②, ③	①, ③	①, ③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추진 과제	과제 추진 유형 ①법령 제·개정 ②기존 사업 보완·확대 ③신규 사업 도입 ④제도·추진업무정비	근거 법령 ①있음 ②없음 ③법안 발의	추진 기간[주] ①단기 ②중기 ③장기	소관부처
4 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시민정책				
10. 당사자 정책 리터러시(literacy) 함양을 위한 지원 추진	②, ③	③	①	국무조정실
11. 청년정책 입안 및 집행 담당자 교육·연수 실시	②	①, ③	①, ②	국무조정실
12. '청년거버넌스' 운영 기반 및 실효성 강화	②, ④	③	①, ②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지자체

* 주: 단기(1~2년 이내), 중기(3~5년 내), 장기(5년 이상) * 주: 단기(1~2년 이내), 중기(3~5년 내), 장기(5년 이상)

참고문헌

참고문헌

[논문과 저서]

강순희, 안준기 (2010).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 **한국경제연구, 28**(2), 201-231.

구인회 (2019) **21세기 한국의 불평등-급변하는 시장과 가족, 지체된 사회정책**.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김기헌 (2017).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7**(2), 54-68.

김기헌, 이윤주, 유설희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낙년 (2017).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4. **경제사학, 41**(2), 127-160.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민수, 김병권, 김선기, 신윤정, 임경지 (2018). **서울청년정책 평가 및 발전전망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서울시 청년허브.

김석호 (2018).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공정성. **지식의 지평, 25**, 1-19.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김연아, 정원오 (2016).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 부모세대의 직업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비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9**, 173-196.

김유빈 (2017). 청년고용의 현실, 그 해결의 실마리. **노동리뷰, 2017**(3), 15-21.

김종성, 이병훈 (2014).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296-330.

김종진 (2018). 지자체 청년지원기관 프로그램 사례 분석 및 시사점. **2018 청년센터 포럼-지역 청년 공간 운영과 협력적 발전 모색 자료집.** pp.41-48.

김지경, 정연순 (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이상호 (201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이윤주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하영 (2018). 저임금 근로자 현황. **고용동향브리프. 2018**(12), 18-23.

남궁근 (1994).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형성, **고시계 30**(7), 37-47.

_____ (2017). **행정조사방법론** 제5판. 경기: 법문사.

남재욱, 김영민, 한기명 (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221-262.

남재욱, 반가운 (2019). **혁신적 포용국가와 사회정책 주요 이슈**. 이슈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남춘호, 남궁명희 (2012).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경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성인기 이행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 91-128.

노승용 (2006).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전문적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국토,** 2006.9, 53-62. 국토연구원.

문혜진 (2010). 생애과정 관점에 대한 고찰과 적용: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349-378.

박미희, 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박원익, 조윤호 (2019). **공정하지 않다 : 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 서울: 지와인.

변금선 (2018a).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변화: 1960-1980년대 청년 코호트의 노동 궤적(work trajectory)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_____ (2018b).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한국사회복지학, 70**(3), 113-137.

_____ (2019). 한국 청년의 결혼, 출산, 육아의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한국의 청년은 행복한가?**, 33-52.

변금선, 김기헌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46**(2), 257-258.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실행위원회 (2019).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연구.** 서울: 정책기획위원회.

서인석, 윤병섭 (2017). 정책의제, 주도자, 그리고 '문지기': 헌법소원과 그 판결에 기초한 Cobb, Ross & Ross 의제설정모형의 확장. **지방정부연구 21**(1), 25-52.

양재진 (2003). 노동시장유연화와 한국 복지국가의 선택, **한국정치학회보, 37**(3). 403-428.

이경희 (2017), 소득계층 이동성 실태와 동적 변화, **노동리뷰 , 147**: 77-91.

이병희 (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 1-18.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Ⅰ: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32.

이상호 (2018.07.). 한국의 지방소멸 2018. **고용동향브리프. 2018**(7). 한국고용정보원.

이종성 (2001). **델파이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임완섭, 강신욱, 김태완, 여유진, 최현수, 김현경, 류정희, 오미애, 황도경, 황덕순, 우선희, 이주미, 최준영, 신재동, 김진희, 정혜란 (2015). **2014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희정 (2018).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학, 52**(3), 119-164.

임성근, 김기헌, 정지운, 최윤정, 김문길, 이용관, 장민선, 도수관, 조세현, 탁현우, 문국경, 서원석, 정서화, 임인선, 이다솜, 최유미, 김명아, 홍다연, 이지희, 유진아, 이윤주, 최정원, 유설희, 배진우, 강일규, 류지영 문찬주, 강민정, 장희영, 홍예슬, 이태진,김태완, 최준영, 연수현, 이성민, 오현아, 최현영, 심지은 (2018).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장민선, 최환용, 김기헌, 하형석, 유민상, 조성호 (2017).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전병유, 강병구, 강신욱, 김연명, 김영순, 김예원, 신정완, 양재진, 윤윤규, 이일영, 정건화, 조성재, 조영철, 정무권, 채창균 (2006).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전병유, 신진욱 (2016).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서울: 페이퍼로드.

정이환, 김유선 (2011). 노동시장 유형분류와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성격. **경제와 사회**, 275-304.

최영준, 윤성열 (2018). **사회정책과 혁신.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홍민기 (2017). 보정 지니계수. **경제발전연구, 23**(3): 1-22.

황규성 (2016). 다중격차: 다차원적 불평등에 관한 개념화 시론. **한국사회과학연구회, 97**, 9-44.

Böheim, R., & Taylor, M. P. (2002). *The search for success: do the unemployed find stable employment?*. Labour economics, 9(6), 717-735.

Byun, G. (2018). *School-to-work transition in South Korean young adults: Stratified or Individualized?*.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2(3), 169-182.

_____ (2019). *Changes in household poverty among South Korean young adults: Decomposition analysis for 1995, 2006 and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Online published.

Cobb Roger, Ross Jennie-Keith and Ross M. H. (1976). *Agenda-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1), 126-138.

Corak, M. (2013).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79-102.

Creswell, John W (2014). *A Concise Introduction to Mixed Methods Research*. Los Angeles: SAGE.

Easton, David (1965).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Inc.

Emmenegger, P., Häusermann, S., Palier, B., & Seeleib-Kaiser, M. (Eds.). (2012).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UP USA.

Gangl, M. (2004). *Welfare States and the Scar Effects of Unemploy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and West Germany1*.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6), 1319-1364.

Goos, M., Manning, A., & Salomons, A. (2014). *Explaining job polarization: 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and offshoring*. American Economic Review, 104(8), 2509-26.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O'Rand, A. M. (1996). *The precious and the precocious: Understanding cumulative disadvantage and cumulative advantage over the life course*. The Gerontologist, 36(2), 230-238.

Settersten, F. F. Furstenberg, & R.G. Rumbaut (2005).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pp. 3-25). Chicago: Univ. Chicago Press.

Topel, R. H., & Ward, M. P. (1992). *Job mobility and the careers of young me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2), 439-479.

[국내정책자료]

고용노동부 (2018). 2018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_____ (2018.08.07.). '특고종사자 예술인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보도자료.

_____ (2018.09.11.). '현장실습생 22만명에 산재보험 적용' 보도자료.

_____ (2018.12.05.). 2019년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합동 공모 공고.

_____ (2019.04.25.) 2018년 6월 기준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2017.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보도자료.

_____ (2017.12.20.).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_____ (2018.03.15.). 청년 일자리 대책 종합 자료.

_____ (2018.07.05.).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_____ (2018.07.18.). '직장등 괴롭힘 근절대책' 보도자료.

_____ (2019.02.19.).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발표자료.
교육부 (2019.02.07.). 2019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2019.09.17.). 중앙부처 추진 청년정책 취합 비공개 내부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0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토교통부 (2018.12.11.). 행복주택 설명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09). 역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 정책, 실적의 조사·분석.
금융위원회 (2019.05.22.).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방안 보도자료.
_____ (2019.09.20.).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포용금융 2.0」 추진 보도자료.
금태섭의원실 (2017.10.17.). 개인파산 줄고있지만 20대만 유독 증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5.12.04.). 2060년 장기재정전망.
_____ (2018.12.28.).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_____ (2019.07.17.)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보도자료(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노동부 (2001.07.). 실업대책백서 - 1998~2000년까지.
대한민국국회 (2018.05.21.). 청년기본법안(의안번호: 13684).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법안.
더불어민주당 (2019.08.27.) 청년미래연석회의 자료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 및 예산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19.06.05.). 작은 변화를 이끄는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공모전 실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2008년~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conn_path=I3에서 2019.05.21. 인출.
_____ (2018.07.19.). 내년(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보도자료.

_____ (2018.07.24.).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_____ (2018.08.10.).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보도자료.

_____ (2018.12.17.). 2019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보도자료.

_____ (2019.02.1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서울시·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8.11.20.). 2018 국제청년보장포럼: 포용적 사회와 청년정책 자료집.

서울시 청년허브 뉴스레터 #10 (2019.10.16.). 덴마크의 청년정책 1부.

윤소하의원실 (2019.10.04.). 건강검진 수검률 분석 “청년건강검진 제도시행 8개월, 4명 중 1명만 검진받아” 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02.08.).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07.30a). 2019년 광역지방정부 청년정책자료 현황 (2019년 3월 기준) 내부자료. https://youthpolicy.kr/32에서 2019.10.17. 검색 및 인출.

_____ (2019.07.30b). 2019년 기초지방정부 청년정책자료 현황 (2019년 6월 기준) 내부자료. https://youthpolicy.kr/32에서 2019.10.17. 검색 및 인출.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09.11.).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발표자료.

정책기획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18.09.06.).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 개최 보도자료.

통계청 (2017.12.15.).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보도자료.

_____ (2018.09.28.).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도자료.

_____ (2019.01.30.).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 보도자료.

_____ (2019.07.16.). 2019년 5월 경제활동 부가조사 :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산업단 (2019.02.). 2019년 관광두레 청년 프로듀서 선정계획(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11.15.). 2019년 청년취업아카데미 모집공고문.
행정안전부 (2019.07.31.). 17개 시·도, 지난 한해 주민을 위해 뛰었다!-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보도자료.

[국외정책자료]

OECD (2014).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_____ (2015).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Update of Employ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dicators, OECD Publishing.
_____ (2018.05.15.). OECD Ministerial Meeting on Social Policy, Issue Brief No.2. Stronger Together: Policies to Promote Diversity and Social Inclusion. https://www.oecd.org/social/ministerial/Issues-notes.pdf에서 2019.10.16. 검색 및 인출.
_____ (2018a). 2018 Education at a Glance. https://doi.org/10.1787/eag-2018-en에서 2019.07.29. 인출.
_____ (2018b).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OECD Publishing.
_____ (2019a).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soc_glance-2019-en.pdf?expires=1571624797&id=id&accname=guest&checksum=47FBA79BCE13506549617632B113ECE1에서 2019.05.21. 인출.

_____ (2019b). Youth unemployment rate (indicator). doi: 10.1787/c3634df7-en에서 2019.05.21. 인출.
World Economic Forum (2018.01.22.). The Inclusive Development Index 2018: Summary and Data Highlight. https://www.weforum.org/reports/the-inclusive-development-index-2018에서 2019.01.14. 검색 및 인출.

[데이터 원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질병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MfrnIntrsIlnsInfo.do에서 2019.09.30. '우울증'으로 검색 및 인출.
국토교통부 (2016). 2016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국토교통부 (2017). 2017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07,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2S&conn_path=I2 에서 2018.07.02. 검색 및 인출.
_____ (각 연도). 2014~2017 지역별고용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G02S&conn_path=I3에서 2019.05.20. 검색 및 인출.
_____ (2017a).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_____ (2017b).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06&conn_path=I3에서 2018.07.09. 검색 및 인출.
_____ (2019). 장래인구추계 : 2017~2067년. 2019.07.27. 검색 및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 1990~2018 교육기본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

520에서 2019.05.20. 검색 및 인출.
ILO (2018). ILO STAT. ILO. http://www.ilo.org/ilostat에서 2019.10.17. 검색 및 인출.
OECD (2018c). "SF2.1 Fertility rates", OECD Family Database, http://oe.cd/fdb.에서 2019.05.21. 검색 및 인출.
_____ (2018d). "Table A3.2 - Trends in employment rates of 25-34 year-olds,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gender (2007 and 2017): Percentage of employed 25-34 year-olds among all 25-34 year-olds", in The Outpu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Impact of Learn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ag-2018-table33-en에서 2019.10.17. 검색 및 인출.
_____ (2019c). OECD STAT.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4197#에서 2019.07.29. 검색 및 인출.

[기사]

KBS (2018.03.16.). "돈 때문에 중소 안가나?" 경력 관리는 어떡하라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19919&ref=A,에서 2019. 10.10. 검색 및 인출.
고함20 (2016.08.23.). 청년정책의 그 '청년' 찾습니다. http://www.goham20.com/52271에서 2019.01.16. 검색 및 인출.
교육부 공식블로그 (2011.06.17.).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https://if-blog.tistory.com/1210에서 2019.10.17. 검색 및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11.12.)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핵심 내용. http://www.korea.kr/news/graphicsView.do?newsId=148855429에서 2019.06.10. 검색 및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06.04.).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 고용안전망 완성된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1348에서 2019.06.10. 검색 및 인출

서울대학교 교지「관악」 (2013.08.02). 반값등록금, 그렇게 끝낼 수 없는 이야기.
https://kwanak.tistory.com/290에서 2019.10.17. 검색 및 인출.

정책브리핑 위클리공감 (2019.01.07.). 세계는 이미 '포용성장론' 으로 선회,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JAJzVwDGJMP000에서 2019.01.11. 검색 및 인출.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19.02.19.). 혁신적 포용국가.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1에서 2019.01.17. 검색 및 인출.

한겨레 (2018.02.05.). 노력해도 결과 보장 안되는 사회…시험이라도 있어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816.html#csidx419a4a9355f65b1a8a5a6dc6c7f647f에서 2019.10.10. 검색 및 인출.

[온라인 정책자료 참고]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2.do에서 2019.06.09. 검색 및 인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개요.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에서 2019.06.09. 검색 및 인출.

두루누리 사회보험.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에서 2019.06.11. 검색 및 인출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청년희망키움통장).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4&searchCtgId=011&welInfSno=16438&pageGb=1&domainName=&firstIndex=1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에서 2019..06.10. 검색 및 인출.
부산청년플랫폼 부산광역시 청년위원회 사업개요.
https://www.busan.go.kr/young/join21에서 2019.06.13.검색 및 인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
http://www.ccfs.or.kr/support01.do에서 2019.06.10. 검색 및 인출.
서울청년포털 청년청 소개.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field_intro에서 2019.06.13. 검색 및 인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대학생·미취업청년지원).
https://www.ccrs.or.kr/debt/program/university/info.do에서 2019.06.10. 검색 및 인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정보.
https://www.mss.go.kr/site/smba/supportPolicy/supportPolicyDetailDiv.do?cmm_code=BB020200&searchSeq=ST_000000001066125에서 2019.06.10. 검색 및 인출.
한국장학재단 한눈에 보는 학자금 대출.
http://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2에서 2019.06.09. 검색 및 인출.
행정자치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에서 2019.06.11. 검색 및 인출.

[참고사이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nhi.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www.ihappy.or.kr/info/intro.php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blutouch.net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http://youthzone.kr/

서울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https://youthpolicy.kr/about

캐나다정부 공식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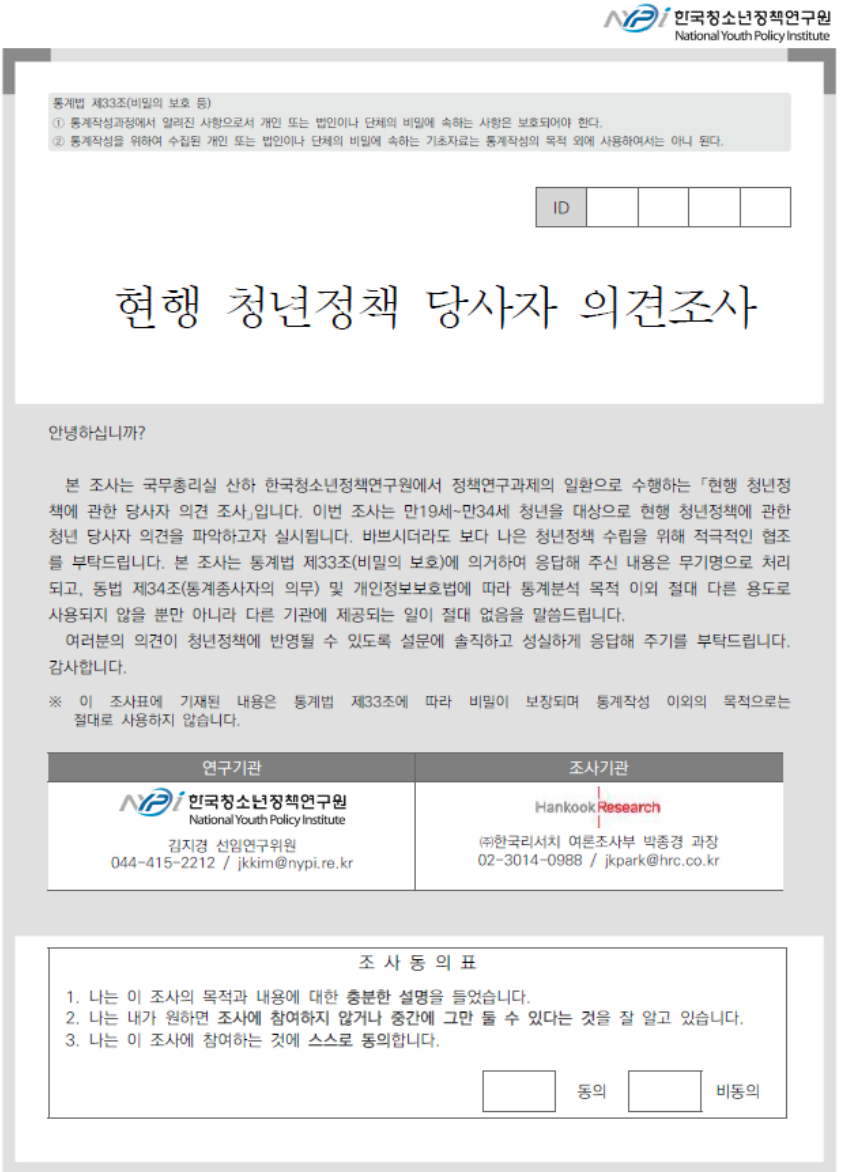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동행카드 https://card.kicox.or.kr/

OECD http://www.oecd.org/

부 록

1. 현행 청년정책 당사자 의견 조사(온라인)
2. [1단계] 청년정책 개선방향 연구를 위한 청년활동가 정책델파이
3. [2단계] 청년정책 개선방향 연구를 위한 청년활동가 정책델파이
4. [3단계] 청년정책 개선방향 연구를 위한 청년활동가 정책델파이

1. 현행 청년정책 당사자 의견조사(온라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D

현행 청년정책 당사자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현행 청년정책에 관한 당사자 의견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만19세~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현행 청년정책에 관한 청년 당사자 의견을 파악하고자 실시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보다 나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해 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동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통계분석 목적 이외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이 절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	조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김지경 선임연구위원 044-415-2212 / jkkim@nypi.re.kr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박종경 과장 02-3014-0988 / jkpark@hrc.co.kr

조 사 동 의 표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응답자 특성

문1 귀하의 현재 만 나이는 몇 세 입니까?

만 [ ] 세

//만 19세~34세 해당자만 설문 진행//

문2 귀하의 <u>성별</u>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③ 그 외의 성

문3 현재 귀하의 <u>학적 상태</u>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학교를 졸업한 상태임 → 문3-1
②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임 → 문3-2

문3-1 현재 귀하의 <u>최종 학력</u>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문3-3
② 고등학교 졸업 → 문3-1-1
③ 검정고시 및 대안학교로 고졸학력 취득 → 문3-3
④ 전문대학(2-3년제) 졸업 → 문3-3
⑤ 4년제 대학 졸업 → 문3-3
⑥ 대학원 졸업 → 문3-3

문3-1-1 귀하는 <u>어떤 형태의 고등학교</u>를 졸업하셨습니까?

① 일반고등학교 졸업 → 문3-3
② 특수목적고등학교 졸업 → 문3-3
③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 문3-3
④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졸업 → 문3-3

문3-2 현재 귀하의 <u>최종 학력</u>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전문대학(2-3년제) 재학 중
② 4년제 대학 재학 중
③ 대학원 재학 중

문3-3 귀하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u>학교의 소재지</u>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① 강원
② 경기
③ 경남
④ 경북
⑤ 광주
⑥ 대구
⑦ 대전
⑧ 부산
⑨ 서울
⑩ 세종
⑪ 울산
⑫ 인천
⑬ 제주
⑭ 전남
⑮ 전북
⑯ 충남
⑰ 충북

문4 귀하는 현재 <u>취업하여 일하고 있거나 자신의 일(프리랜서, 자영업 등)을 하고 있는 상태</u>입니까?
※ 일시 휴직 및 일시적 중단은 "그렇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그렇다 → 문4-1
② 아니다 → 문4-4

문4-1 귀하의 <u>현재 취업형태</u>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2개 이상의 일을 하는 경우 <u>더 많은 시간을 쓰는 일을 기준으로 응답</u>해 주십시오.

① 정규직 임금근로자(무기계약직 포함)
②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③ 고용주, 자영업자, 프리랜서 형태의 비임금근로자

문4-2 귀하가 일하는 직장(사업체)의 <u>종사자 수</u>는 몇 명 정도 됩니까?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99명
⑤ 100~299명
⑥ 300~499명
⑦ 500명 이상

문4-3 귀하가 현재 직장(사업체)에서 일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1개월 미만의 경우 1개월로 응답해 주십시오.

[ ][ ] 년 [ ][ ] 개월

//응답 후 문5로 이동//

문4-4 귀하가 <u>최종학교 졸업 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에 있었던 기간</u>은 얼마나 됩니까?
※ 2018년 2월에 졸업 후 2019년 6월까지 계속 미취업 상태라면, 1년 4개월로 입력
※ 미취업 상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개월로 입력

[ ][ ] 년 [ ][ ] 개월

문4-5 귀하는 <u>지난 4주 동안 직장(일자리)을 구하는 구직활동</u>을 하였습니까?
※ 구직활동 제외사항
공무원(7/9급 일반, 경찰, 소방, 임용 등) 및 공공기관 시험 준비, 입사시험(인적성, 영어 시험 등) 준비 등은 "아니오"로 응답해 주십시오.
※ 직장(일자리)을 구해보는 구직활동은 구직사이트에 등록, 입사지원(필기, 면접 등), 일자리 부탁, 창업 준비 등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①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 하였음 ➔ 문4-5-1
②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 하지 않았음 ➔ 문4-5-2

문4-5-1 귀하가 <u>최종학교 졸업 이후로 2019년 현재까지 구직활동을 한 기간</u>은 얼마나 됩니까? ※ 2018년 8월에 졸업하고 2019년 6월까지 계속 구직활동을 했다면 11개월로 입력
※ 1개월 미만일 경우 1개월로 입력

[ ][ ] 년 [ ][ ] 개월

//응답 후 문5로 이동//

문4-5-2 귀하는 지난 4주 동안 행정고시, 7급 및 9급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교원임용 및 공공기관 입사를 위한 시험 등과 같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였습니까?

① 지난 4주 동안 준비한 적 있음
② 지난 4주 동안 준비한 적 없음

문5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① 강원
② 경기
③ 경남
④ 경북
⑤ 광주
⑥ 대구
⑦ 대전
⑧ 부산
⑨ 서울
⑩ 세종
⑪ 울산
⑫ 인천
⑬ 제주
⑭ 전남
⑮ 전북
⑯ 충남
⑰ 충북

문6 귀하의 혼인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미혼
② 비혼 (향후 혼인 계획 없음)
③ 기혼이며 배우자 있음
④ 혼인신고하지 않은 동거자 있음
⑤ 기혼이나 배우자 없음 (사별 등)

문7 귀하는 현재 <u>누구와 함께</u> 살고 있습니까?

① 나 혼자
② 부모님과 형제 또는 자매와 함께
③ 조부모님과 부모님, 형제 또는 자매와 함께
④ 형제 또는 자매와 함께
⑤ 친구 또는 선후배와 함께
⑥ 배우자 또는 연인과 함께
⑦ 배우자 또는 연인과 자녀와 함께
⑧ 기타(　　)

문8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10개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u>귀하 가구의 경제적 여건</u>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낮음 ←								→ 가장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9 귀하의 <u>월평균 총 소득</u>은 얼마나 됩니까?

구분	계산	월평균 금액
1) 내가 일해서 버는 소득	+	세후 (　　) 만원
2) 부모님에게 받는 소득	+	(　　) 만원
3) 그 외 생기는 소득 (예: 부모 이외 다른 사람에게 받는 소득, 임대료 자산소득 등)	+	(　　) 만원
합계 월평균 총 소득	=	총 (자동 합계 산출) 만원

문10 귀하는 현재 <u>생활비</u>를 주로 어떻게 마련합니까?

① 나의 소득으로
② 그 동안 저축해 놓은 돈으로
③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④ 배우자의 수입으로
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⑥ 청년수당 등 정부지원금으로
⑦ 장학금으로
⑧ 기타(　　)
//문6의 ①과 ② 응답자는 문10의 ④보기 노출 안 함//



청년정책 당사자 의견

문11-1부터 문22-3은 현행 청년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설명 내용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주십시오.

[학자금 지원]
정부는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대학생은 연간 최대 520만원, 그 외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소 67.5만원~ 39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만35세 이하 청년들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150만원)를 낮은 이자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11-1 다음은 학자금지원 제도의 인지도와 이용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응답해주십시오.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해당 지원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알고 있음' 응답자만]	
국가장학금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학자금 대출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문11-2 귀하는 이와 같은 학자금 지원 정책이 우리나라 청년들(19~34세)의 삶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1-3 귀하는 이와 같은 학자금 지원정책이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안 됨 ←									→ 매우 도움 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직지원 및 창업]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일자리센터와 창업사관학교,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상담과 구직활동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전문컨설턴트가 진로·취업·창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사관학교는 최대 7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공간,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을 지원합니다. 또한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상담·훈련·취업알선이 연계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50만원씩, 6개월 지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12-1 다음은 구직지원 및 창업 관련 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응답해주십시오.

	해당 지원을 알고 계십니까?		해당 지원을 이용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알고 있음' 응답자만]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창업사관학교를 통한 창업 지원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활동 및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문12-2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 취업지원 정책이 <u>우리나라 청년들(19~34세)의 삶</u>에 어느 정도 <u>중요</u>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2-3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 취업지원 정책이 <u>귀하의 삶</u>에 어느 정도 <u>도움</u>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안 됨 ←									→ 매우 도움 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정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3년간 200~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대응 지원을 하여 총1,600~3,000만원을 마련(청년내일채움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이 월10만원을 저축하면 3년간 1,440~2,106만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연150만원~30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근로장려세제)를 보완하였습니다. 그 외 산업단지 중소업체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월 5만원의 교통카드(청년동행카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13-1 다음은 일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수혜 경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응답해주십시오.

	해당 지원을 알고 계십니까?		해당 지원을 이용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알고 있음' 응답자만]	
청년내일채움공제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청년희망키움통장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근로장려세제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청년동행카드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문13-2 귀하는 이와 같은 일하는 청년의 소득지원 정책이 <u>우리나라 청년들(19~34세)의 삶</u>에 어느 정도 <u>중요</u>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3-3 귀하는 이와 같은 일하는 청년의 소득지원 정책이 <u>귀하의 삶</u>에 어느 정도 <u>도움</u>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안 됨 ←									→ 매우 도움 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청년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청년 추가고용 장려금)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의 세금을 기업에 부과하지 않는 방식(청년고용기업 세금감면)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14-1 다음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응답해주십시오.

	해당 지원을 알고 계십니까?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청년고용기업 세금감면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문14-2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고용촉진 정책이 <u>우리나라 청년들(19~34세)의 삶</u>에 어느 정도 <u>중요</u>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4-3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고용촉진 정책이 <u>귀하의 삶</u>에 어느 정도 <u>도움</u>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안 됨 ←									→ 매우 도움 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청년 정책 참여기구]
여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들이 당사자로서 정책 결정 및 이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15-1 다음은 청년 당사자 참여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응답해주십시오.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참여기구와 네트워크 각 활동에 참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알고 있음' 응답자만]	
조례에 청년정책 참여기구 설치 근거 마련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지역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 지원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지역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 지원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문15-2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 당사자 참여지원 정책이 <u>우리나라 청년들(19~34세)의 삶</u>에 어느 정도 <u>중요</u>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5-3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 당사자 참여지원 정책이 <u>귀하의 삶</u>에 어느 정도 <u>도움</u>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안 됨 ←									→ 매우 도움 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청년 주거지원 정책]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최대 7천만원)과 월세(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 2년간 총 1,200만원)를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으며, 무주택 청년들이 6년~10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공급 및 공공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16-1 다음은 일하는 청년 주거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지원 받은 경험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응답해주십시오.

	해당 지원을 알고 계십니까?		해당 지원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알고 있음' 응답자만]	
전월세보증금 지원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월세 지원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공공임대주택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공공기숙사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문16-2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우리나라 청년들(19~34세)의 삶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6-3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안 됨 ←									→ 매우 도움 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청년 신용회복 지원정책]
정부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로 낮은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대학생·청년 햇살론)과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및 대학 졸업 시까지의 상환유예(청년 신용회복지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17-1 다음은 청년 신용회복 지원정책 사업의 인지도와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응답해주십시오.

	해당 지원을 알고 계십니까?		해당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알고 있음' 응답자만]	
대학생·청년 햇살론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대출금 상환유예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문17-2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 신용회복지원 정책이 <u>우리나라 청년들(19~34세)의 삶</u>에 어느 정도 <u>중요</u>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7-3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 신용회복지원 정책이 <u>귀하의 삶</u>에 에 어느 정도 <u>도움</u>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안 됨 ←									→ 매우 도움 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청년 사회서비스 및 청년 공간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을 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그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사업(심리상담, 문화 공연 및 강연, 네트워크사업, 공간대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18-1 다음은 청년 사회서비스 및 청년 공간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험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응답해주십시오.

	해당 지원을 알고 계십니까?		해당 지원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알고 있음' 응답자만]	
청년 활동 공간 지원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활동 공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사업 (상담, 문화, 강연, 공간댕, 네트워크 등)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문18-2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 사회서비스 및 공간 지원 정책이 우리나라 청년들(19~34세)의 삶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8-3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 사회서비스 및 공간 지원 정책이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안 됨 ←									→ 매우 도움 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청년 건강검진]
정부는 청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세대주가 아닌 경우(세대원, 피부양자)에는 만40세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연령을 낮춰 20~30대 청년도 국가검진을 받도록 하고 20세와 30세에 우울증 검사를 추가하는 등 청년대상 건강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청년들이 스스로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신건강자가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19-1 다음은 청년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험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응답해주십시오.

	해당 지원을 알고 계십니까?		해당 지원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알고 있음' 응답자만]	
청년대상 국가건강검진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정신건강온라인 자가검진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문19-2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 건강검진 지원 정책이 <u>우리나라 청년들(19~34세)의 삶</u>에 어느 정도 <u>중요</u>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9-3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 건강검진 지원 정책이 <u>귀하의 삶</u>에 어느 정도 <u>도움</u>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안 됨 ←									→ 매우 도움 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다양한 활동 지원]
정부는 청년들의 창의성과 다양한 역량을 개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와 실천 활동을 지원하며(100개팀, 지원금 200만원), 청년이 직접 지역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월 활동비 180만원 지급).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청년들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역기반에서 일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2년간 연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20-1 다음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 지원 사업의 인지도와 참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응답해주십시오.

	해당 지원을 알고 계십니까?		해당 지원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알고 있음' 응답자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사회 활동 지원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행정안전부 지역기반 일자리 지원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문20-2 귀하는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 지원 정책이 <u>우리나라 청년들(19~34세)의 삶</u>에 어느 정도 <u>중요</u>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0-3 귀하는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 지원 정책 우리나라 <u>귀하의 삶</u>에 어느 정도 <u>도움</u>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안 됨 ←									→ 매우 도움 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일터의 안전 보장]
정부는 일터에서의 안전과 공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숙련 청년을 위한 산재보험 적용의 확대, 직장 내 갑질 규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계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의 현장실습생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비숙련 청년의 산업 안전을 보장하고, 직장동료나 사장님이 지위(위계)를 이용해 업무 이외의 일을 강요하거나,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문21-1 다음은 일터의 안전보장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응답해주십시오.

	해당 정책을 알고 계십니까?	
비숙련 청년을 위한 직장 내 갑질 규제 방안 마련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현장실습, 비숙련 청년 노동자의 산업안전 보장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문21-2 귀하는 이와 같은 일터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이 <u>우리나라 청년들(19~34세)의 삶</u>에 어느 정도 <u>중요</u>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1-3 귀하는 이와 같은 일터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이 <u>귀하의 삶</u>에 어느 정도 <u>도움</u>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안 됨 ←									→ 매우 도움 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고용안전망 확충]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이들(구직자, 영세사업장, 비전형 근로자 등)을 위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인 퀵서비스, 예술인, 요식업을 산재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창업 후 5년 이내로 확대 하는 등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구직자에게 구직활동금(6개월, 월50만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22-1 다음은 고용안전망 확충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지원 받은 경험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응답해주십시오.

	해당 정책을 알고 계십니까?		해당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알고 있음' 응답자만]	
1인 영세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고용보험 미가입 구직자 구직활동금 지원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문22-2 귀하는 이와 같은 고용안전망 확충 정책이 <u>우리나라 청년들(19~34세)의 삶</u>에 어느 정도 <u>중요</u>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2-3 귀하는 이와 같은 고용안전망 확충 정책이 <u>귀하의 삶</u>에 어느 정도 <u>도움</u>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안 됨 ←									→ 매우 도움 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3과 문24는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고 귀하의 생각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23 귀하는 다음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매우 중요함	
청년정책은 사회통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청년정책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청년정책은 개인 및 기업과 사회의 혁신 능력을 길러 더 나은 사회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4 귀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청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내용 중 **우선되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세 가지만**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②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③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④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⑥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 존중
⑦ 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⑧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⑨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문 25부터 문 25-3은 청년정책거버넌스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5 귀하는 현재 **청년정책거버넌스(참여기구, 위원회, 네트워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예 ➔ 문25-1
② 아니오 ➔ 설문종료

문25-1 귀하는 현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의 회원이십니까?

① 예 ➔ 문25-2
② 아니오 ➔ 문25-2

문25-2 귀하가 **청년정책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 ][ ] 년 [ ][ ] 개월

문25-3 귀하는 주로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주요 활동분야를 아래에 써주십시오.
※ 예시: 도시재생, 일자리, 창업, 청년 공간, 환경, 복지, 지자체 청년정책, 중앙 청년정책 등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 [1단계] 청년정책 개선방향 연구를 위한 청년활동가 정책델파이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D				

청년정책 개선방향 연구 관련 청년활동가 델파이조사(1차)

바쁘신 와중에도 본 전문가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는 오늘날 한국사회 청년문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과 현행 청년정책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발전 전망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청년활동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델파이 조사지에 대한 회신은 7월 31일(수) 정오(12:00)까지 이메일(강보배 연구원: youthpolicynet@gmail.com)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응답내용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청년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구진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010-****-**** youthpolicynet@gmail.com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44-415-**** jkkim@nypi.re.kr

응답자 성명		소속(학교/직위 등)	
		연락처	
수당 지급 관련	주소: 주민번호: (은행명)계좌번호: * 여기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델파이조사 참여 수당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조 사 동 의 표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질문1-2-1.]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문1. 귀하는 다음 제시된 청년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들 중 청년정책 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4차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
② 가족 기능의 약화와 사회 전반의 개인화
③ 기대수명 신장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④ 기후변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위기
⑤ 남한과 북한의 관계 변화
⑥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
⑦ 성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⑧ 소득 및 자산격차의 심화
⑨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차이
⑩ 신자유주의적 경제 기조의 부작용
⑪ 기타(적을 것: _____)

문1-1. 위에서 선택한 바와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순위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 이유:

문2. 앞의 문1. 에서 귀하가 응답한 청년정책 설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 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중앙정부 청년정책이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생각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질문3-4.] 청년기본법 제정 및 중앙정부 청년정책 수립이 준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문3. 청년기본법 제정과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체계적 수립이 준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 으로 청년정책 수립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생각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 의견:

문4. 아래 제시된 청년정책 영역 중, 귀하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청년 참여
② 청년 교육
③ 청년 고용
④ 청년 주거
⑤ 청년 부채
⑥ 청년 생활안정
⑦ 청년 문화
⑧ 청년 권리보호
⑨ 청년 가치관 및 정서
⑩ 청년 커뮤니티 및 관계
⑪ 청년 국내외 교류
⑫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질문5-7-1.]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문5. 귀하는 현행 청년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래의 각 내용에 대한 동의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현행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② 현행 청년정책은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③ 현행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의견 수렴이 잘 이뤄지고 있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③ 현행 청년정책은 모든 청년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문5-1. 위의 문5.와 같이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생각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 의견:

문6. 현행 청년정책 중, 귀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긍정 평가 우선순위로 3가지만 적어주십시오.
→ 1순위 긍정 정책: 2순위 긍정 정책: 3순위 긍정 정책:
문6-1. 위의 문6.의 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생각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문7. 현행 청년정책 중, 귀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부정 평가 우선순위로 3가지만 적어주십시오.
→ 1순위 부정 정책: 2순위 부정 정책: 3순위 부정 정책:
문7-1. 위의 문7.의 각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생각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질문8-문9-1.] 청년정책의 성격 및 지향점

문8. 귀하는 앞으로의 청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가치지향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들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① 청년정책은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비하는 인구정책이어야 한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② 청년정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③ 청년정책은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살아갈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이어야 한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④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선택권과 자율성, 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치정책이어야 한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⑤ 청년정책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분배정책이어야 한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문8-1. 위의 문8.과 같이 동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생각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문9. 귀하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청년정책을 나름대로 정의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은 _____(하는)

_____정책이어야 한다.

문9-1. 위의 문9.와 같이 정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생각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3. [2단계] 청년정책 개선방향 연구를 위한 청년활동가 정책델파이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D				

청년정책 개선방향 연구 관련 청년활동가 델파이조사(2차)

바쁘신 와중에도 본 전문가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는 오늘날 한국사회 청년문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과 현행 청년정책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발전 전망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청년활동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2차 델파이 조사지에 대한 회신은 8월 19일(월) 정오(12:00)까지 이메일(강보배 연구원: youthpolicynet@gmail.com)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응답내용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청년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구진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010-****-**** youthpolicynet@gmail.com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44-415-**** jkkim@nypi.re.kr

응답자 성명		소속(학교/직위 등)	
		연락처	
수당 지급 관련	주소: 주민번호: (은행명)계좌번호: * 여기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델파이조사 참여 수당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조 사 동 의 표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질문1-1-1.]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문1. 귀하는 다음 제시된 청년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들 중 청년정책 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4차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응답 ☐

② 가족 기능의 약화와 사회 전반의 개인화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응답 ☐

③ 기대수명 신장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응답 ☐

④ 기후변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위기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응답 ☐

⑤ 자산 격차 등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응답 ☐

⑥ 다양성 인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응답 ☐

⑦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차이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응답 ☐

⑧ 지역 간 격차의 심화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응답 ☐

문1-1. 위의 문1.와 같이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생각을 서술해 주십시오.

→ 의견:

[질문2-2-1.] 청년기본법 제정 및 중앙정부 청년정책 수립이 준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문2. 청년정책 영역 중, 귀하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거버넌스 참여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응답 [ ]

② 교육 및 역량개발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응답 [ ]

③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응답 [ ]

④ 청년 생활 안전망(주거, 부채, 소득지원)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응답 [ ]

⑤ 정서 및 정신건강 지원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응답 [ ]

⑥ 커뮤니티 및 문화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응답 [ ]

⑦ 생활환경 및 일터에서의 안전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응답 [ ]

문2-1. 위의 문2.와 같이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생각을 서술해 주십시오.

→ 의견:

[질문3-3-1.]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문3. 귀하는 현행 청년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래의 각 내용에 대한 동의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현행 청년정책은 당사자들의 체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귀하의 생각을 기술해 주십시오

→ 의견:

② 현행 청년정책은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귀하의 생각을 기술해 주십시오

→ 의견:

③ 현행 청년정책은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귀하의 생각을 기술해 주십시오

→ 의견:

④ 현행 청년정책은 간접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귀하의 생각을 기술해 주십시오

→ 의견:

문3-1. 이외에도 청년정책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안과 그 방안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기술해 주십시오.

→ 의견:

[질문4-문4-1.] 청년정책의 성격 및 지향점

문4. 귀하는 앞으로의 청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가치지향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들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① 청년정책은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비하는 인구정책이어야 한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② 청년정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③ 청년정책은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살아갈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이어야 한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④ 청년정책은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정책이어야 한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⑤ 청년정책은 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보편정책이어야 한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⑥ 청년정책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분배정책이어야 한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⑦ 청년정책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정책이어야 한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응답 [ ]

문4-1. 위의 문4.과 같이 동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생각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4. [3단계] 청년정책 개선방향 연구를 위한 청년활동가 정책델파이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D				

청년정책 개선방향 연구 관련 청년활동가 델파이조사(3차)

바쁘신 와중에도 본 전문가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는 오늘날 한국사회 청년문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과 현행 청년정책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발전 전망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청년활동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3차 델파이 조사지에 대한 회신은 9월 4일(수) 정오(12:00)까지 이메일(강보배 연구원: youthpolicynet@gmail.com)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응답내용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청년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구진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010-****-**** youthpolicynet@gmail.com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44-416-**** jkkim@nypi.re.kr

응답자 성명		소속(학교/직위 등)	
		연락처	
수당 지급 관련	주소: 주민번호: (은행명)계좌번호: * 여기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델파이조사 참여 수당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조 사 동 의 표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질문1-1-1.]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진단

문1. 다음은 1단계, 2단계의 청년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다른 응답자들의 주관식 응답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① 4차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

평균	7	표준편차	1.85	이전 본인응답	3	최종 응답	

② 가족 기능의 약화와 사회 전반의 개인화

평균	7.46	표준편차	1.57	이전 본인응답	6	최종 응답	

③ 기대수명 신장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평균	7.15	표준편차	1.66	이전 본인응답	7	최종 응답	

④ 기후변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위기

평균	6.26	표준편차	1.92	이전 본인응답	6	최종 응답	

⑤ 자산 격차 등 다차원적 불평등 심화

평균	8.79	표준편차	1.44	이전 본인응답	9	최종 응답	

⑥ 다양성 인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평균	7.62	표준편차	1.57	이전 본인응답	9	최종 응답	

⑦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차이

평균	7.67	표준편차	1.44	이전 본인응답	9	최종 응답	

⑧ 지역 간 격차의 심화

평균	7.56	표준편차	1.47	이전 본인응답	8	최종 응답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에 기술해 주십시오.(특히, 응답이 바뀌었거나, 평균에서 먼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

[질문2-2-1.] 청년기본법 제정 및 중앙정부 청년정책 수립이 준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문1. 다음은 1단계, 2단계의 청년정책의 있어서 중요한 영역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다른 응답자들의 주관식 응답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전혀 중요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중요함)

① 거버넌스 참여

평균	8.59	표준편차	1.27	이전 본인응답	8	최종 응답	

② 교육 및 역량개발

평균	7.31	표준편차	1.54	이전 본인응답	6	최종 응답	

③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

평균	6.92	표준편차	1.61	이전 본인응답	6	최종 응답	

④ 청년 생활 안전망(주거, 부채, 소득지원)

평균	8.46	표준편차	1.31	이전 본인응답	6	최종 응답	

⑤ 정서 및 정신건강 지원

평균	7.62	표준편차	1.5	이전 본인응답	6	최종 응답	

⑥ 커뮤니티 및 문화

평균	7.69	표준편차	1.45	이전 본인응답	8	최종 응답	

⑦ 생활환경 및 일터에서의 안전

평균	7.72	표준편차	1.47	이전 본인응답	6	최종 응답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에 기술해 주십시오.(특히, 응답이 바뀌었거나, 평균에서 먼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

[질문3-3-1.]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문3. 다음은 1단계, 2단계의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다른 응답자들의 주관식 응답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① 현행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평균	4.10	표준편차	1.59	이전 본인응답	6	최종 응답	

② 현행 청년정책은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평균	4	표준편차	1.34	이전 본인응답	4	최종 응답	

③ 현행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의견 수렴이 잘 이뤄지고 있다.

평균	3.85	표준편차	1.60	이전 본인응답	3	최종 응답	

④ 현행 청년정책은 모든 청년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평균	3.69	표준편차	1.58	이전 본인응답	2	최종 응답	

⑤ 현행 청년정책은 당사자들의 체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평균	5.97	표준편차	1.98	이전 본인응답	7	최종 응답	

⑥ 현행 청년정책은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평균	7	표준편차	2.09	이전 본인응답	8	최종 응답	

⑦ 현행 청년정책은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평균	7.49	표준편차	1.86	이전 본인응답	8	최종 응답	

⑧ 현행 청년정책은 간접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

평균	6.05	표준편차	2.36	이전 본인응답	4	최종 응답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에 기술해 주십시오.(특히, 응답이 바뀌었거나, 평균에서 먼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

[질문4-문4-1.] 청년정책의 성격 및 지향점

문4. 다음은 1단계, 2단계의 청년정책의 성격 및 지향점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다른 응답자들의 주관식 응답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① 청년정책은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비하는 인구정책이어야 한다.

평균	5.77	표준편차	2.32	이전 본인응답	3	최종 응답	

② 청년정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평균	5.64	표준편차	2.10	이전 본인응답	2	최종 응답	

③ 청년정책은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살아갈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이어야 한다.

평균	8.67	표준편차	1.46	이전 본인응답	8	최종 응답	

④ 청년정책은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정책이어야 한다.

평균	7.74	표준편차	1.76	이전 본인응답	8	최종 응답	

⑤ 청년정책은 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보편정책이어야 한다.

평균	8.51	표준편차	1.47	이전 본인응답	10	최종 응답	

⑥ 청년정책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분배정책이어야 한다.

평균	8.08	표준편차	1.83	이전 본인응답	9	최종 응답	

⑦ 청년정책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정책이어야 한다.

평균	8.18	표준편차	1.83	이전 본인응답	9	최종 응답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에 기술해 주십시오.(특히, 응답이 바뀌었거나, 평균에서 먼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

문5. 앞선 평가와 방향을 바탕으로 해결해야할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서술하여 주십시오.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Youth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Inclusive Nation

At this point in the run-up to the enactment of the Basic Youth 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to play a role in achieving the national vision of 'realizing the inclusive nation' by helping to systematize the law further after its enactment as a social policy and enhance the effects based on the individual laws so far on practical level for the youth.

Specifically, this study began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youth policies to be establish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Basic Youth Act need to be set under systematic analysis of limitations and achievements of the past youth policies in order for them to be established as the comprehensive youth policy encompassing all areas of youth's life. Based on such recognition, over the past decade or so, youth issues have been raised and formulated into social policies, achieving successes in some areas and revealing limitations in others during the process. On such threshold, the need to establish the correct direction for youth policies is being recognized. To come up with some answers, the study was conducted, structured and its methodology set in the frame of past, present and future of youth policy.

The major empirical research in this study was based on a study of literature linking the youth policies to the vision of 'inclusive nation'. Through interviews with 14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making youth issues a policy agenda for the past decade or so, the successes and limitations of youth policies have been identified. The study also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young people aged 19-34 on current major youth policies to identify possible improvements. In addition, through a policy delphi survey of 39 current Youth Policy Governance participants, the study drew up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current youth policies as well as the direction for establishing future ones.

Through interview, the study identified the following three achievements and four limitations in the course of policy making concerning the youth issues:

Achievement

① Institutionalization of raising youth issues
② Fast spread of youth policy making among municipal governments
③ Discovery of participants for Youth Policy Governance

Limitation

① Limitations in setting the direction of policy and ignorance about youth
② Exhaustion and policy tooling of young activists
③ Wealth disparity and exclusion within the youth generation
④ Promotion of impractical policies

The limitations revealed by the interview were found to have more specific empirical evidence than the survey which was the interested party's assessment of the current youth policy. For example, the assessment of the importance and level of help for a youth policy is heavily dependant upon awareness of that policy. The level of policy awareness was high among young women with college degrees or higher, and for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Youth Policy Governance. In particular, it was analyzed that participation in Youth Policy Governance was highly influential in the assessment of policies with low overall recognition or low benefit rates. It was also revealed that among the young people, there exists a gap between the economic classes and their corresponding thinking. Young people in relatively poor economic conditions had a high desire for student aid, recovery of credit rating, and employment safety net policies with high rates of benefits. On the other hand, young people in relatively fair economic conditions were found to have a high desire for policies focused on youth activities, services or self-development. But despite the existence of multiple economic classes among the young people, the policies that all young people perceive as basically the most important are as follows:

① Income support for working youth
② Housing support
③ Safety from 'job hazards'

The concept of 'job hazards' goes beyond mere safety issues at work to include harrassment or unfair treatment young people might receive at work or school from people in the position of greater power and authorities.

As for the three-tier policy delphi conducted to identify the improvement points of current youth policies and to set the direction of future ones, the result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point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t this time when the Basic Youth Act is about to be enacted are 'disparity' and the concept of 'youth as a principal being'. It was concluded that youth policies after the enactment should be pursued in terms of 'future social policy to design a new society'.

Based on these empirical analyses, this study found that policy intervention could be supplemen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youth policy implementation, and based on that, the goals and basic direction of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at should be follow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Basic Youth Act" were established. The goal of youth policy set out in this study is the "improvement of current youth policies to realize inclusive nation and infusing them into future social policies," and the four policy directions to achieve this goal are as follows:

① Future society policy to design a new society
② Universal policy that supports the basic life of youth generation
③ Social unification policy to close various social gaps and disparities
④ Democratic citizen policy based on participa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The goal of youth policy set out in this study is the "improvement of current youth policies to realize inclusive nation and infusing them into future social policies," and the four policy directions to achieve this goal are as follows:

① Future society policy to design a new society
② Universal policy that supports the basic life of youth generation
③ Social unification policy to close various social gaps and disparities
④ Democratic citizen policy based on participa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a total of 12 initiatives under the following four strategic goals of policy implementation:

① Reestablishment and restructuring of youth policy as future society policy
② Enhancement of the universality of policy based on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current youth generation
③ Strengthening of social unification efforts to ease various social gaps and disparities
④ Strengthening of self-initiative of the interested parties as democratic citizen policy

Keyword: Inclusive nation, Social policy, Youth policy, Basic Youth Act, Improvement plan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최정원·강정한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 / 김경준·김정숙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성윤숙·김승보·장현진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황세영·김도영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변금선·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이경상·노법래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이정민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서정아·권일남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I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I / 오해섭·문호영·염유식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김희진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성은·이용해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김준엽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고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헌·유민상·김창환·정지운 (자체번호 19-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헌·유민상(자체번호 19-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임희진·백혜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연·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적립금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헌·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수 시 과 제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수 탁 과 제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24종) / 성윤숙·김현수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균희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혜정·류정희·이상정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헌·김형주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헌·하형석·이용해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1.11)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당 워크숍(8.13~14)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방안(11.7)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12.6)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이중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험(12.16)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 '중추지원조직 기능·추진사항' 개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8-89-7816-917-2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보고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2322 93330
ISBN 979-11-5654-232-2 93330